

ISSN 1975-6607

# 금융안정보고서

2023. 6



한국은행  
BANK OF KOREA

## 한국은행 중장기 발전전략(BOK 2030)

- 비전            국가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이끄는 한국은행
- 전략방향    Agility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  
                  Collaboration    협업과 시너지, 대내외 협력  
                  Expertise        전문성, 준비된 정책역량

# BANK OF KOREA

## 금융안정보고서

2023. 6

---

금융안정이란 금융회사들이 정상적인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신뢰가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인프라가 잘 구비되어 있어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금융안정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물가안정이나 경제성장과 함께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정책목표의 하나로서, 각국의 정책당국은 이를 이루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거시건전성정책 수행의 일환으로 금융시스템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분석·평가하고 관련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금융안정보고서를 2003년부터 연 2회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개정된 한국은행법(제96조)에서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금융안정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의 질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는 2023년 5월까지 부각된 금융안정 잠재위험요인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금융안정보고서가 금융시장 참가자, 정책당국 등이 금융시스템에 내재해 있는 위험요인을 조기에 인지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한국은행법>

### 제96조(국회보고 등)

- ①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재는 국회 또는 그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합니다.

2023년 6월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금융통화위원회

의장 이창용

위원 조윤제

위원 서영경

위원 이승헌

위원 신성환

위원 박춘섭

위원 장용성



<b>차례</b>	<b>[개 관]</b>	<b>1</b>
	<b>[금융안정 상황]</b>	<b>9</b>
	<b>I. 신용시장</b>	<b>11</b>
	1. 신용 레버리지	11
	2. 가계신용	13
	3. 기업신용	17
	<b>II 자산시장</b>	<b>29</b>
	1. 채권시장	29
	2. 주식시장	32
	3. 부동산시장	34
	<b>III. 금융기관</b>	<b>38</b>
	1. 은행	38
	2. 비은행금융기관	42
	3. 상호연계성	45
	<b>IV. 자본유출입</b>	<b>55</b>
	<b>[복원력]</b>	<b>63</b>
	<b>I. 금융기관</b>	<b>65</b>
	1. 은행	65
	2. 비은행금융기관	69
	<b>II. 대외지급능력</b>	<b>79</b>
	<b>III. 금융시장인프라</b>	<b>82</b>
	<b>[종합평가]</b>	<b>85</b>
	<b>[주요 현안 분석]</b>	<b>99</b>
	<b>I. 주택시장 관련 주요 금융안정 리스크 점검</b>	<b>101</b>
	<b>II.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잠재리스크 점검</b>	<b>111</b>
	<b>III. 기업 부문 잠재 신용리스크 점검 및 국내은행 스트레스 테스트</b>	<b>122</b>

---

## 참고 차례

참고 1. 최근 가계대출 연체율 상황 점검	21
참고 2. 자영업자 부채의 취약요인 및 연체가능성 점검	25
참고 3.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 현황 평가 및 시사점	47
참고 4. 신 회계기준 도입이 보험회사 재무현황에 미치는 영향 및 평가	51
참고 5. 최근의 글로벌 은행 불안이 달러화 자금 흐름에 미친 영향	58
참고 6. 바젤Ⅲ 규제체계 하의 주요국 완충자본제도 운용사례 및 시사점	71
참고 7. 국내 금융기관의 자본성증권 발행 현황 및 잠재리스크 점검	75
참고 8. SVB·CS 사태의 주요 내용과 정책당국 대응 사례 및 시사점	91
참고 9. 수출산업 내재 탄소배출량 현황 및 기업 취약요인	95

---

## 부록 차례

부록 1. 그림 및 통계표	135
부록 2. 부문별 담당 부서 및 집필자	141

---

## URL 및 QR코드 이용 안내

□ 「금융안정보고서」를 비롯한 용어해설 및 그림 데이터 등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URL 및 QR 코드를 이용하시면 관련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파일 이용자

아래 URL을 클릭

[한국은행>조사·연구>주요 보고서>금융안정보고서](#)

보고서 책자 이용자

스마트폰으로 아래 QR코드를 촬영



---

# 개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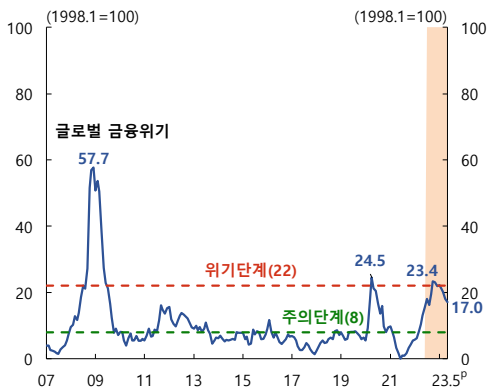


## 금융안정 상황 및 리스크 평가

### 금융안정 상황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금년 상반기중 글로벌 은행 불안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였다. 금융시장은 주요국 통화긴축 속도조절 기대 등으로 금리가 하락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등 안정세를 보였고, 금융기관의 양호한 손실흡수력을 바탕으로 금융중개기능도 원활하게 작동하였다. 다만 무역수지 적자 등 성장세가 둔화되고 가계 및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저하되고 있다. 단기적인 금융시스템 불안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 Financial Stress Index)는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위기단계까지 상승(23.4)하였으나 금년 2월 주의단계로 하락한 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 금융불안지수(F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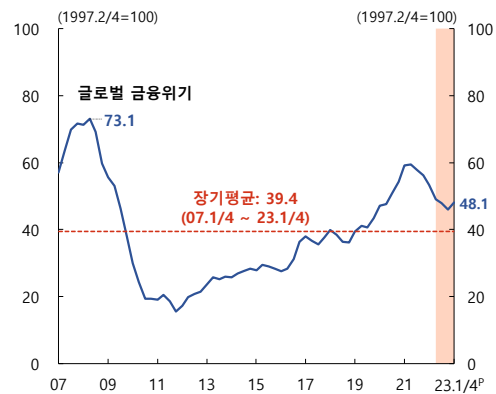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금융시스템 내 잠재 취약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기준금리 인상, 경제주체의 위험선호 약화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하락하는 등 그간 누증된 금융불균형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금년 들어 국내외 통화정책 긴축기조 완화 기대 등에 영향을 받아 주시가격이 상승하고 부동산가격 하락폭이 축소되는 가운데 4월 이후 가계대출이 다시 늘고 있어 금융불균형 누증의 축소가 제약되는 모습이다. 이를 반영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반적인 금융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 Financial Vulnerability Index)가 금년 들어 소폭 상승하였다.

### 금융취약성지수(FVI)



자료: 한국은행

### 부문별 상황

신용시장에서는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민간신용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명목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한편 4월 이후 주택시장 부진이 완화되고 주택관련 가계대출이 다시 늘고 있어 금융불균형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가계 및 기업 부채 연체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향후 높은 금리수준이 지속되고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취약 차주 및 자영업자, 한계기업 등을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산시장에서는 주식 및 채권 가격이 글로벌 은행 불안 등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였으나 국내외 통화 긴축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정부의 시장안정화대책 등으로 신용경계감이 완화되면서 큰 폭 축소되었다. 주택가격은 기초경제여건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인 가운데 금년 들어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다. 향후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부동산 정책 등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보면 자산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자산건전성이 저하되었다. 은행의 경우 대출 증가세 완화 등으로,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증권사 투자자 예치금 감소, 보험회사 신 회계기준 적용의 영향 등으로 자산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자산건전성은 대출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모든 금융업권에서 악화되었다. 향후 높아진 금리가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가계와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조치가 정상화되면서 자산건전성이 추가로 저하될 수 있다.

자본유출입 상황을 보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주식 및 채권 모두 순유입되었으나 국내외 신용이벤트 발생, 주요국 통화정책 방향 등에 따라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금융시스템 복원력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대내외 충격 감내 능력을 의미하는 금융시스템 복원력은 자본적정성 비율과 유동성 비율이 규제기준을 상회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였다. 다만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복원력이 다소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들 기관은 향후 대내외 여건 변화와 외부 충격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 및 자본확충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금융기관들은 최근 비대면 디지털 거

래가 크게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하여 기관간 수신자금 이동이 빠른 속도로 발생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순대외채권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명목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이 상승하였으나 외환보유액은 전년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편, 지급결제시스템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한은금융망 등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결제 규모가 금융기관의 증권결제, 개인기업의 전자자금이체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결제리스크도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 주요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높은 가계부채 수준, 주택가격 조정, 기업 재무건전성 및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저하 등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취약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다. 향후 높은 금리수준 유지, 실물경기 회복 지연, 부동산시장 부진 지속, 국제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등은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금번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 점검하였다.

먼저 현재까지는 지난해 하반기 중 주택시장 부진으로 인해 실제 현실화된 대출관련 부실 규모가 크지 않고 금융기관의 복원력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금융안정 리스크가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 19 이후 부동산시장 호황으로 크게 확대된 공적보증은 주택시장의 조정에 따른 충격을 일부 완화하고 있으나 부실 발생시에는 대위변제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주택가격이 질서있게 조정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임차기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전세대출 수요 둔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점진적 축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택시장의 부진이 지속될 경우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부담 증대, 미분양주택 물량 증가, 부동산PF 부문의 부실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실리콘밸리 은행(SVB) 사태를 계기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잠재리스크를 점검한 결과,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중앙회의 양호한 유동성 지원 여력 등을 고려할 때 유동성 부족과 같은 잠재리스크가 현재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여타 금융권과의 상호연계성도 높지 않아 일부 금융기관의 부실 발생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도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최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비대면 경로를 통한 수신 증가하면서 예금 유출입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내은행의 기업여신 관련 건전성 지표가 아직까지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 금융지원조치 등으로 인해 기업의 잠재 신용리스크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기업여신의 잠재 신용위험을 점검한 결과, 개별 기업이 실제 위험 대비 낮은 금리를 적용받음으로써 기업의 신용위험이 실제에 비해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은 향후 금융지원조치 종료, 예상밖의 경기회복 지연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 정책 대응 방향

우선 높은 금리수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가

계·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가계와 기업 취약처주에 대한 채무재조정 및 필요한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다만 채무상환능력이 있는 가계·기업 처주의 경우 대출 상환을 유도하여 부채누증 압력을 축소해 나가야 한다.

부동산경기 부진은 가계부채 누증압력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대출 부실화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책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하면서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동산PF와 관련하여서는 사업장별 미시적 대응책을 통해 사업진행을 지원하거나 신속한 정리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자의 과도한 위험 및 수익 추구 성향이 완화될 수 있도록 PF 관련 규제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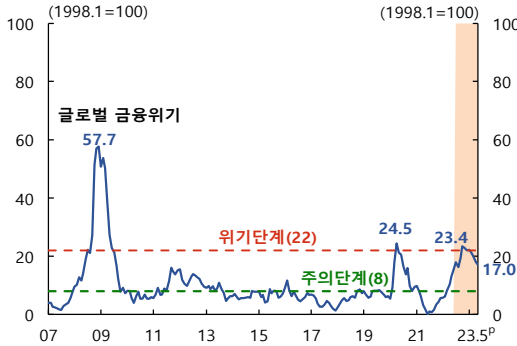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리스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자본확충 등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 등 수신을 기반으로 하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경우 부실우려 부각시 건전성 악화는 물론 수신이탈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안정적인 수신구조를 유지하고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이들 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책당국은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간 정책공조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바일뱅킹 등 새로운 금융환경하에서 디지털 뱅크런에 대응한 금융기관들의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긴급상황에 대비한 유동성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고 유사시 신속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시장에 과도한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 【 금융안정 주요 지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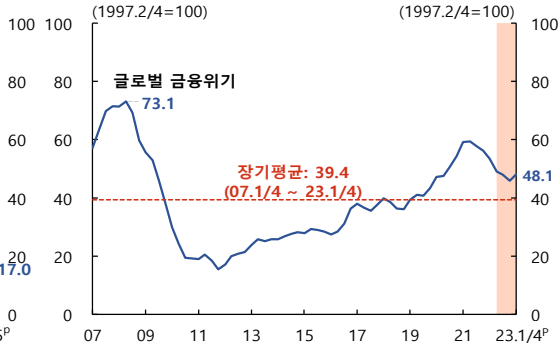
1 금융안정 상황 종합평가 단기적 금융불안(FSI) 완화, 중장기적 취약성(FVI) 소폭 상승

금융불안지수(FSI)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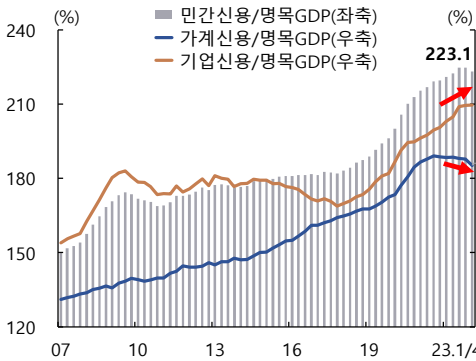
금융취약성지수(FVI)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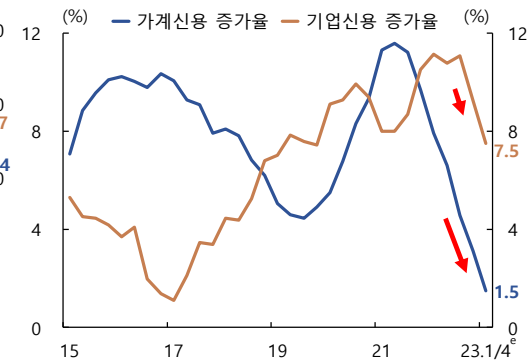
2 신용 레버리지 민간신용 레버리지 높은 수준 지속, 가계신용 증가세 둔화, 기업신용 증가세 지속

민간신용/명목GDP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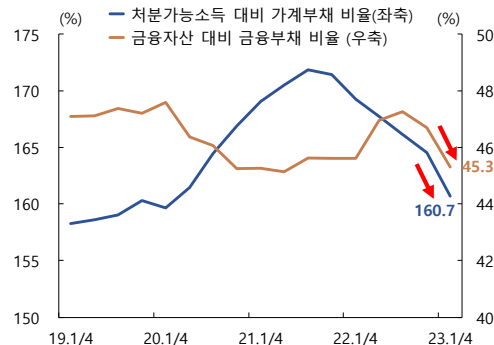
부문별 신용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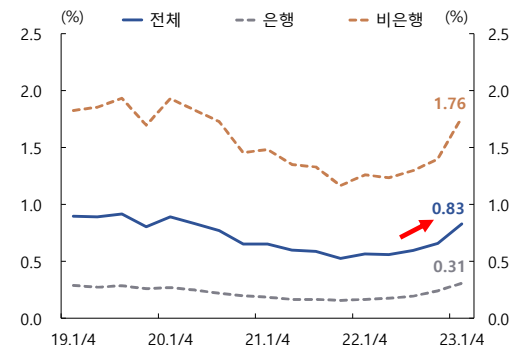
3 가 계 가계 재무건전성 양호, 연체율 상승

채무상환부담 지표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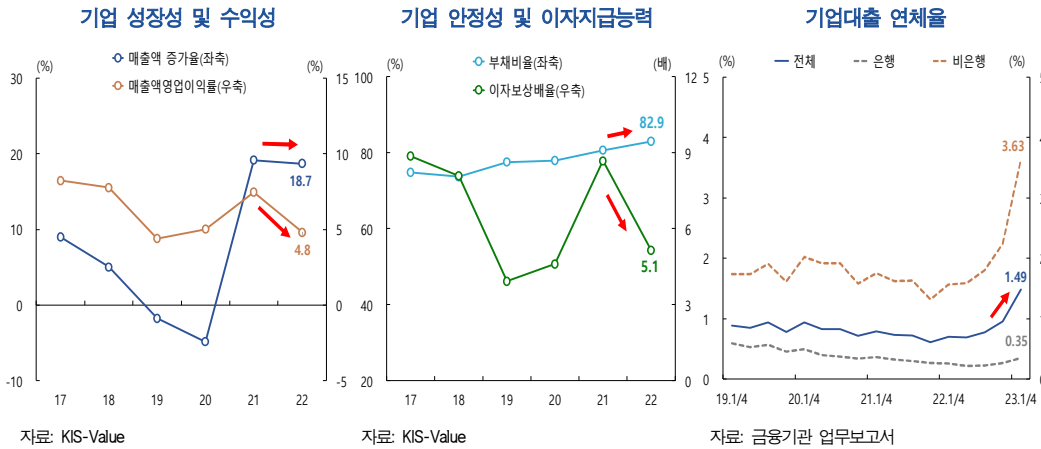
가계대출 연체율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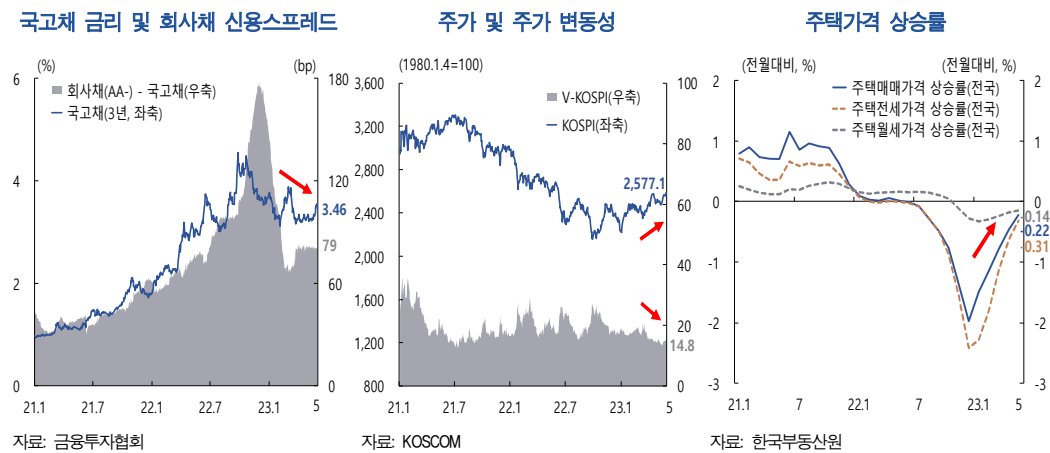
4 기업

기업 수익성 및 이자지급능력은 **악화**, 기업대출 연체율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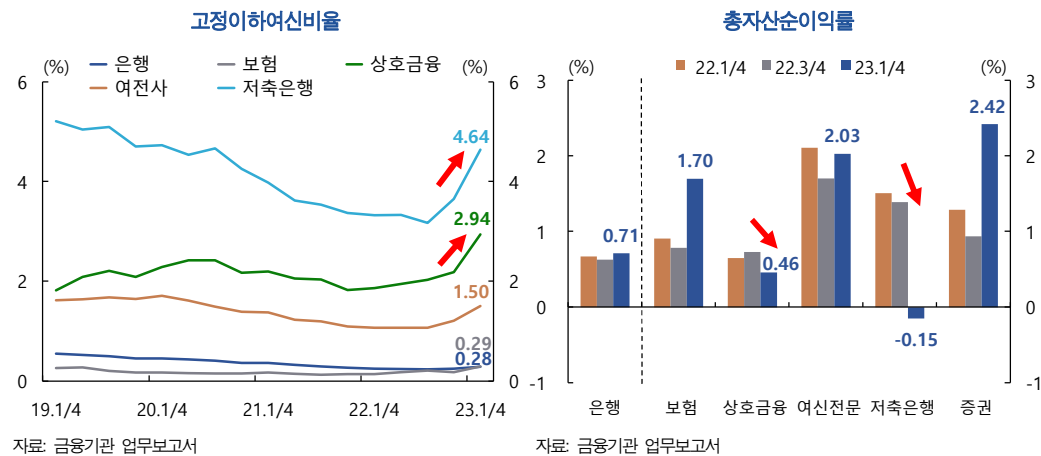
5 자산시장

국고채 금리 **하락**, 주가 **상승**, 주택가격 **하락세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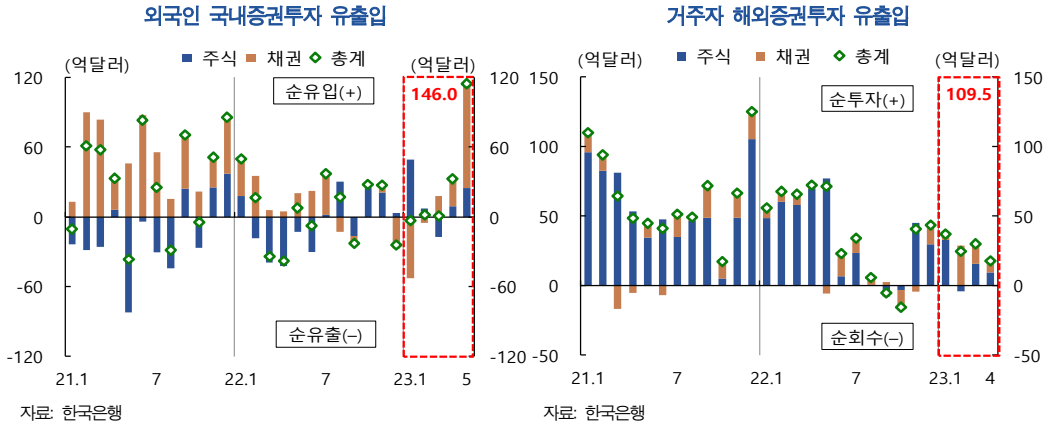
6 금융기관 건전성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저하**, 일부 비은행금융기관 수익성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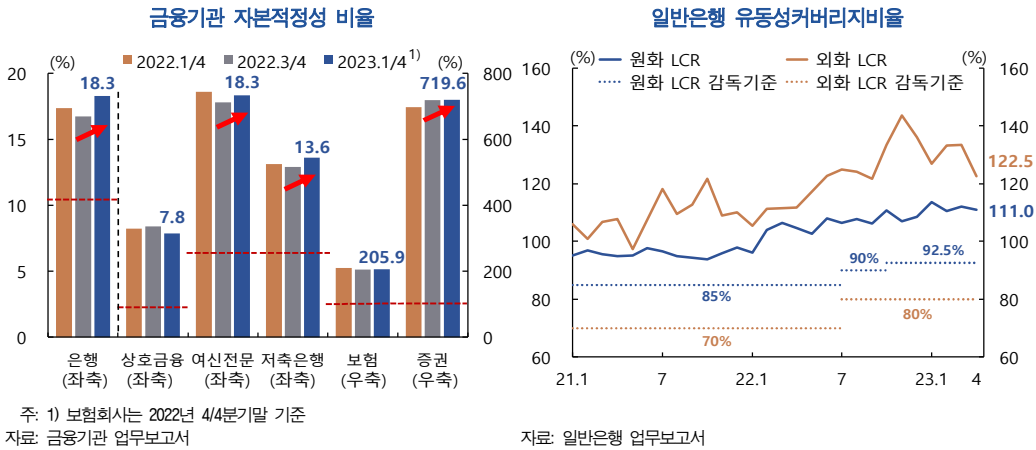
7 자본유출입

외국인 국내증권투자 **순유입**, 거주자 해외증권투자 **증가폭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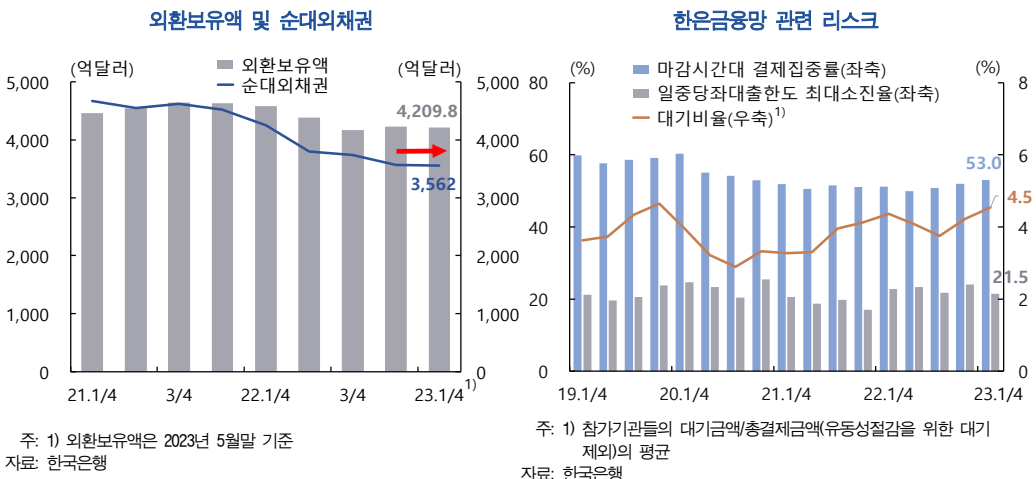
8 금융기관 복원력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복원력 **양호**



9 대외지급능력 및 지급결재시스템

대외지급능력 대체로 **양호**, 결제리스크 **안정적** 관리



---

# 금융안정 상황

I. 신용시장	11
II. 자산시장	29
III. 금융기관	38
IV. 자본유출입	55



# I. 신용시장

민간신용/명목GDP 비율<sup>1)</sup>은 가계신용<sup>2)</sup>을 중심으로 민간신용 증가세가 크게 축소되면서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가계신용은 1/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였으나 4월 들어 늘어나고 있으며, 가계대출 연체율은 소폭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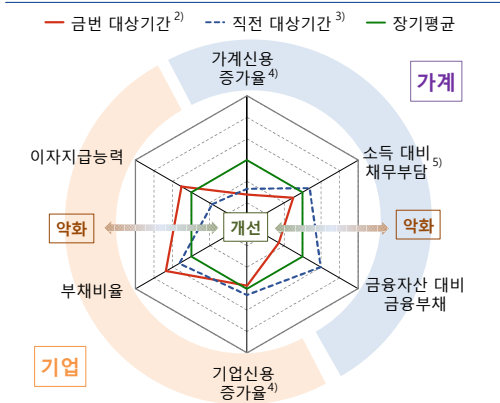
기업신용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며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된 가운데 부채비율은 상승하고 이자지급능력은 악화되었다(그림 I-1).

# 1. 신용 레버리지

## 민간신용 레버리지 높은 수준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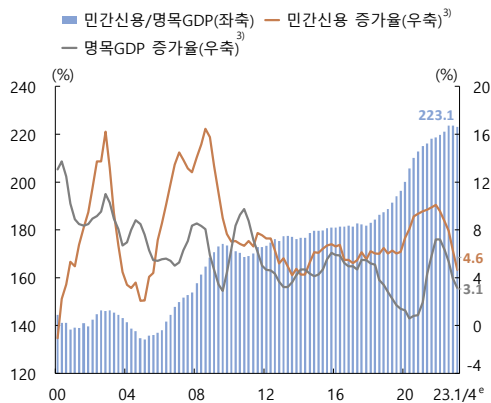
민간신용<sup>3)</sup> 레버리지(민간신용/명목GDP 비율)는 2023년 1/4분기말 223.1%(추정치)<sup>4)</sup>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22년 3/4분기말(223.6%) 대비해서는 0.5%포인트 하락하였다. 이는 명목GDP<sup>5)</sup>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이 2022년 3/4분기말 5.4%에서 2023년 1/4분기말 3.1%로 둔화되었으나, 민간신용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이 같은 기간중 7.9%에서 4.6%로 줄어들면서 명목GDP 증가율에 비해 더 크게 하락한 데 기인한다(그림 I-2).

그림 I-1. 신용시장 상황 변화 지도<sup>1)</sup>



주: 1) 각 지표별 장기 평균(5년)을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금번 대상기간과 직전 대상기간 지표의 상대적 수준을 지도에 도시  
2) 2023년 1/4분기말(부채비율과 이자지급능력은 22년말(중))  
3) 2022년 3/4분기말(부채비율과 이자지급능력은 21년말(중))  
4) 명목GDP 대비 가계 및 기업 신용 비율 기준  
5) 가계부채/처분가능소득  
자료: 한국은행 시산

그림 I-2. 민간신용<sup>1)</sup>/명목GDP<sup>2)</sup> 비율



주: 1) 자금순환통계 기준(2023년 1/4분기는 추정치)  
2) 해당 분기 및 직전 3분기 명목GDP의 합  
3)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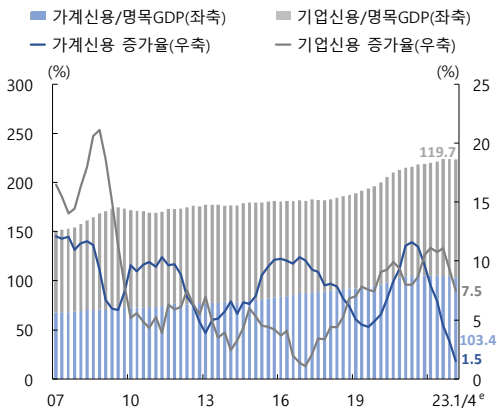
1) 민간부문의 레버리지 수준 평가 시 민간신용 부문별 증가율, 가계 및 기업의 채무상환부담, 주택가격 수준, 은행 레버리지 등 다양한 금융·실물지표가 활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비젤은행감독위원회(이하 'BCBS', 2010)가 권고한 글로벌 공통 참고지표(common reference guide)인 민간신용/명목GDP 비율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2) 가계신용과 가계부채는 모두 가계가 보유한 채무를 의미하나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측면에서 볼 때는 가계신용으로 가계 측면에서는 가계부채로 사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민간신용 하위 항목으로서 가계신용 및 기업신용이라고 분류하였다.  
3) BCBS(2010)는 민간신용을 '가계 및 비금융기업에 공급하는 모든 형태의 채무(debt funds)' 로 넓게 정의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민간신용 지표는 자금순환통계 기준 가계(대출금, 정부용자) 및 기업(대출금, 채권, 정부용자) 부채의 합을 이용하였다.  
4) 2023년 1/4분기 자금순환통계 기준 가계 및 기업신용은 가계신용 증가율(가계신용통계 기준), 예금취급기관의 기업 부문 신용 증가율 등을 설명변수로 한 선형회귀모형을 통해 각각 추정하였다.  
5) 해당 분기 및 직전 3분기 명목GDP의 합으로 해당 분기 명목GDP 성장률과 차이가 있다.

## 가계신용 레버리지는 축소된 반면 기업신용 레버리지는 확대 지속

부문별로 보면, 가계신용 레버리지는 축소된 반면 기업신용 레버리지는 계속 확대되는 모습이다. 2023년 1/4분기말 가계신용/명목GDP 비율은 103.4%로 2022년 3/4분기말 104.8%에서 1.4%포인트 하락하였으나, 기업신용/명목GDP 비율은 같은 기간중 118.7%에서 119.7%로 1.0%포인트 높아졌다.

가계신용은 부동산경기 둔화,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나, 기업신용은 은행들의 대출 확대 노력 및 회사채 순발행 지속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갔다(그림 I-3).

그림 I-3. 부문별 신용 레버리지 및 신용 증가율<sup>1)2)</sup>



주: 1) 자금순환통계 기준(2023년 1/4분기는 추정치)

2)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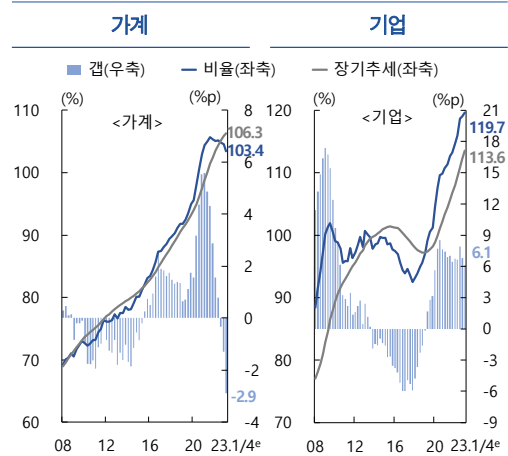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가계신용 레버리지 장기추세 하회 폭 확대

가계신용 레버리지가 장기추세를 하회하는 폭이 확대되었다. 가계신용/명목GDP 값은 2022년 3/4분기 마이너스로 전환(-0.3%포인트)된 이후 2023년 1/4분기에 -2.9%포인트로 확대되었다.

한편 기업신용 레버리지는 장기추세를 웃도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상회하는 정도는 축소되었다. 기업신용/명목GDP 값은 2023년 1/4분기 +6.1%포인트로 2022년 3/4분기(+7.9%포인트)에 비해서 줄어들었다(그림 I-4).

그림 I-4. 부문별 민간신용/명목GDP 비율 및 갭<sup>1)</sup>



주: 1) 부문별 신용/명목GDP 비율과 HP필터에 기반한 장기추세치(추정기간: 75년 1/4분기~23년 1/4분기,  $\lambda=25,000$ ) 간 차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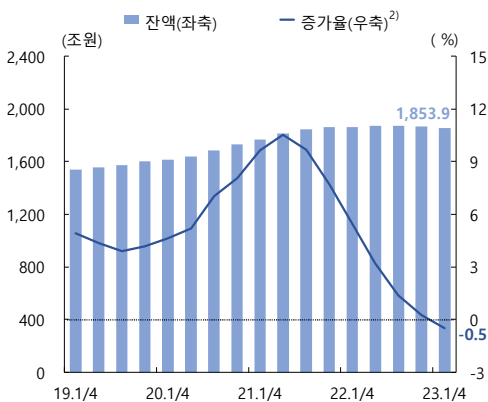
6) 다만 우리나라 가계신용 레버리지는 여타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IIF(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신용 레버리지는 2023년 1/4분기말 102.2%로 세계 34개국 중(홍콩 95.1%, 영국 81.6%, 미국 73.0%, 일본 65.2% 등) 가장 높았으며,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통계 기준으로도 2022년 3/4분기말 105.3%를 기록해 스위스(128.9%), 호주(113.6%)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가계신용

### 가계신용 전년동기대비 감소 전환

2023년 1/4분기말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은 1,853.9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5% 줄어들면서 감소<sup>6)</sup> 전환하였다<sup>7)</sup>(그림 I-5). 항목별로는 가계대출이 1,739.5조원(가계부채 중 93.8%)이며, 재화나 서비스 판매자가 제공하는 외상거래인 판매신용은 114.4조원(6.2%)이다. 다만 4월 들어서는 가계대출이 다시 늘고 있어 2/4분기중에는 1/4분기에 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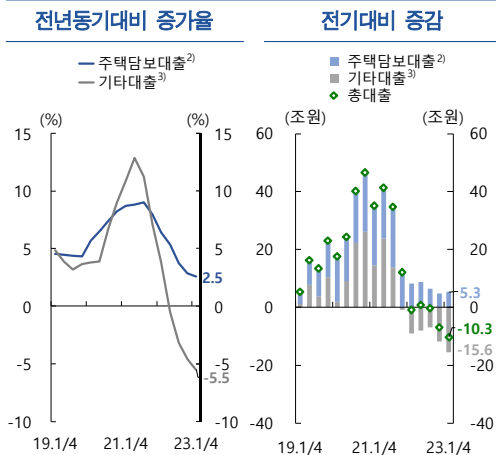
그림 I-5. 가계신용<sup>1)</sup>



주: 1) 가계신용통계 기준  
2)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대출유형별로 보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주택담보대출은 2023년 1/4분기말 1,017.9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5% 증가하였다. 주택시장 부진 등으로 2021년 4/4분기말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둔화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기타대출의 감소세는 더욱 가팔라졌다. 기타대출은 721.6조원으로 대출금리 상승<sup>9)</sup>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5.5% 감소하였다. 대출증감액(전기대비)으로 보면 2023년 1/4분기중 주택담보대출은 5.3조원 증가하였으나, 기타대출은 15.6조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sup>10)</sup>(그림 I-7).

그림 I-6. 가계대출<sup>1)</sup> 대출유형별 변동



주: 1) 가계신용통계 기준  
2)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3) 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보증대출 등  
자료: 한국은행

- 6) 2023년 1/4분기말 현재 가계신용은 2002년 통계 편제 이후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한 2022년 3/4분기말 1871.1조원 대비 17.2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디레버리징 정도는 주요국에 비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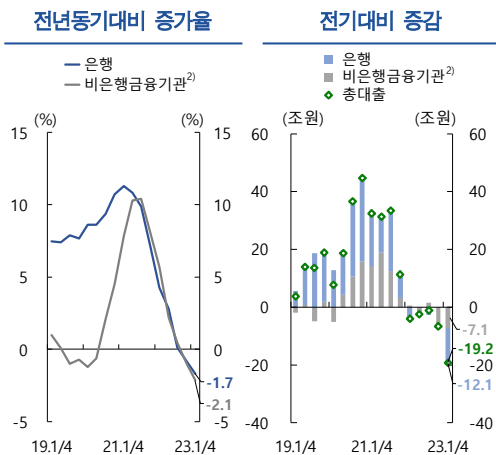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호주	일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sup>1)</sup> 디레버리징 <sup>2)</sup> 발생 분기 수(개)	2	22	9	0	13	0	20

주: 1) 2007년 1/4~2022년 3/4분기중(62개 분기) 2) 전기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감소한 경우 자료: BIS

- 8) 2023년 4-5월중 가계대출은 3월말 대비 3.0조원 증가하였으며, 증가폭도 4월 +0.2조원에서 5월 +2.8조원으로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3년 6월 9일).  
9) 예금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가중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020년 12월 3.5%에서 2021년 12월 5.1%, 2022년 12월 8.0%, 2023년 3월 6.4%의 변동 추이를 보이고 있다.  
10) 2023년 4-5월중 가계대출 유형별로 보면 기타대출 규모는 2.5조원 줄었으나(4월 -1.7조원, 5월 -0.8조원), 주택담보대출은 정책모기지 등의 영향으로 3월(+1.0조원)에 이어 5.4조원(4월 +1.8조원, 5월 +3.6조원)늘어났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3년 6월 9일).

금융업권별로 보면, 2023년 1/4분기말 기준 모든 업권에서 가계대출이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은행대출(890.5조원)은 전년동기대비 1.7% 감소하였으며, 비은행금융기관대출(639.1조원)<sup>11)</sup>도 전년동기대비 2.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증감액(전기대비) 변화를 보더라도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모두 2021년말까지 늘어났으나, 2022년 1/4분기말부터 규모가 줄어들고 있으며 감소폭도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2023년 1/4분기중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대출은 전기대비 각각 12.1조원, 7.1조원 감소하였다(그림 I-7).

그림 I-7. 금융업권별 가계대출<sup>1)</sup>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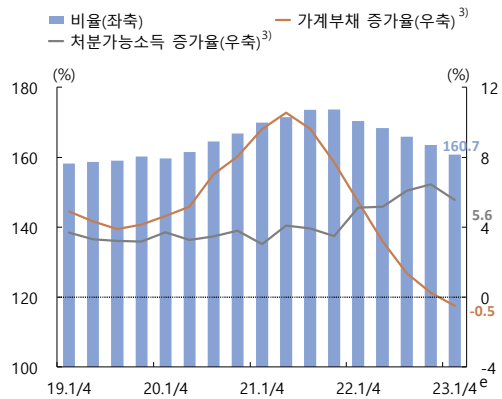


주: 1) 가계신용통계 기준  
 2)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및 기타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 등 제외)  
 자료: 한국은행

## 가계 전반의 소득 및 자산 대비 채무부담은 감소<sup>12)</sup>

2023년 1/4분기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신용통계 기준)은 160.7%(추정치)로 2022년 3/4분기(165.8%)에 비해 5.1포인트 하락하였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둔화세가 확대되는 데 반해 처분가능소득은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소득 측면에서의 가계 전반의 채무상환부담은 2022년 1/4분기 이후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그림 I-8).

그림 I-8. 처분가능소득<sup>1)</sup> 대비 가계부채<sup>2)</sup> 비율



주: 1) 2023년 1/4분기 처분가능소득은 직전 3개년의 연간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 처분가능소득 비율 평균치를 이용하여 추정  
 2) 가계신용통계 기준  
 3)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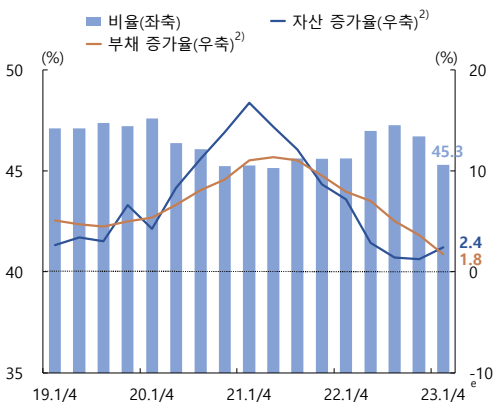
11) 비은행금융기관중에서는 2023년 1/4분기 기준 전년동기대비로 저축은행 대출(+4.3%)은 증가하였으나 상호금융 대출(-6.7%)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2)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부채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가계 전체의 부채 및 소득, 자산간 비율로 일반적으로 부채보유가구의 부채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원리금상환부담(DSR, Debt Service Ratio)의 움직임과는 다를 수 있다.

한편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자금순환통계 기준)은 2023년 1/4분기말 45.3%(추정치)로 2022년 3/4분기말(47.3%) 대비 하락하여 자산측면에서의 채무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시장 부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금융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반면 주식 평가액 증가 등으로 자산 증가세는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한다<sup>13)</sup>(그림 I-9).

## 취약차주 비중 유지

전체 가계부채 보유 차주 중에서 채무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차주의 비중은 전년말과 비슷한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sup>14)</sup>인 취약차주 수가 전체 차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1/4분기말 6.3%로, 2022년 1/4분기말 전기대비 0.3%포인트 상승한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취약차주가 보유한 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1/4분기말 5.1%(2022년말 5.0%)를 보이고 있다(그림 I-10).

그림 I-9.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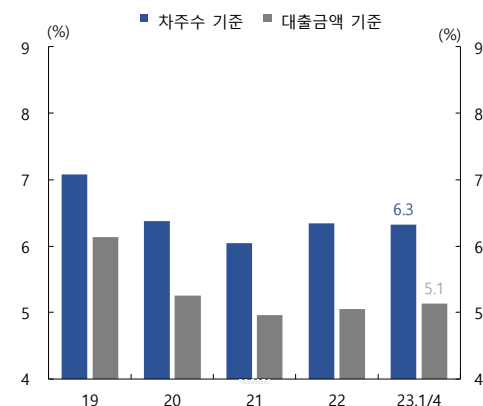


주: 1) 자금순환통계 기준(2023년 1/4분기는 추정치)

2)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그림 I-10. 취약차주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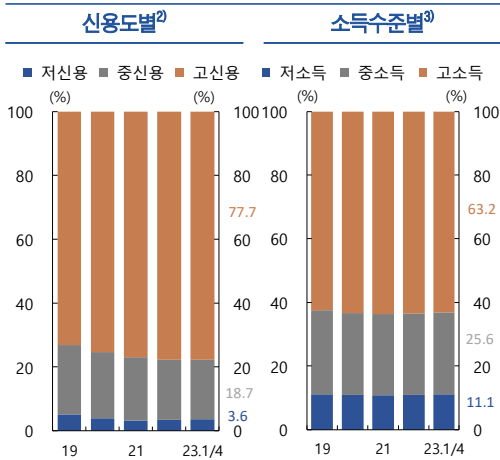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13) 22년도 수신금리 상승의 여파로 현금 및 예금이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부진하였던 주식시장의 점진적인 회복에(KOSPI 지수 2,155(22.3/4분기말) → 2,477(23.1분기말)) 힘입어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등의 평가액이 상승하였다.

14) 2021년부터 개인의 신용평가제도가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전환됨에 따라 고신용을 신용점수 840점 이상(NICE신용정보 신용점수 기준, 이하 동일), 중신용을 신용점수 665점 이상 839점 이하, 저신용을 신용점수 664점 이하로 각각 설정하였다. 취약차주 특성에 근접해 있는 잠재 취약차주(다중채무자이면서 중소득 또는 중신용, 이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차주)의 비중은 2023년 1/4분기말 기준 17.0%를 기록하고 있다.

차주의 신용도 및 소득수준별 분포를 보면, 고신용 차주의 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23년 1/4분기말 고신용 차주의 대출 비중은 77.7%로 2022년 3/4분기말(77.6%)보다 0.1%포인트 상승하였다. 한편 고소득 차주의 대출 비중은 63.2%로 2022년 3/4분기말(63.4%)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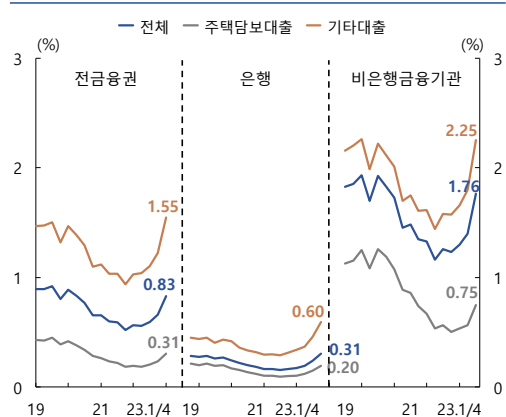
그림 I-11. 신용도 및 소득수준별 가계대출 구성비<sup>1)</sup>



주: 1) 대출금액 기준  
 2) 고신용 신용점수 840점 이상, 중신용 665-839점, 저신용 664점 이하  
 3) 고소득 상위 30%, 중소득 상위 30-70%, 저소득 하위 30%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가계대출 연체율<sup>15)</sup>은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모두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23년 1/4분기말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각각 0.31%, 1.76%로 2022년 3/4분기말 대비 각각 0.12%포인트, 0.46%포인트 상승하였다. 한편 대출유형별로는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모두 기타대출의 연체율이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도 상대적으로 더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I-12).

그림 I-12.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sup>12)</sup> 가계대출 연체율<sup>3)</sup>



주: 1)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2)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약관대출 제외  
 3)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상호금융조합 및 저축은행은 1일 이상 원금 또는 1개월 이상 이자 연체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15) 최근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 신규연체 상황 및 향후 연체율 전망에 대해서는 <참고 1> 「최근 가계대출 연체율 상황 점검」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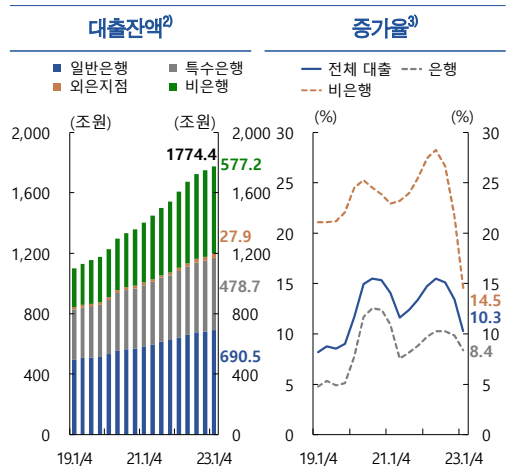
### 3. 기업신용

#### 기업대출 증가세 지속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은 2023년 1/4분기말 현재 1,774.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3% 증가하였다. 기업대출은 수출 부진에 따른 업황 저조, 대출금리 부담, 부동산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비은행금융기관 및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나,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자영업자 대출은 연 7.6%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sup>16)</sup>

금융업권별로 보면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기업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은행 기업대출은 2023년 1/4분기말 1,197.1조원(일반은행 690.5조원, 특수은행 478.7조원, 외은지점 27.9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4%(일반은행 7.7%, 특수은행 8.5%) 증가하였다. 비은행금융기관<sup>17)</sup>의 기업대출은 577.2조원<sup>18)</sup>으로 전년동기대비 14.5% 증가하였는데, 리스크 관리, 유동성 확보 등을 위해 대출태도가 강화<sup>19)</sup>되면서 모든 비은행 업권에서 기업대출 증가율이 전년말보다 큰 폭 둔화<sup>20)</sup>되었다(그림 I-13).

그림 I-13. 금융기관<sup>1)</sup> 기업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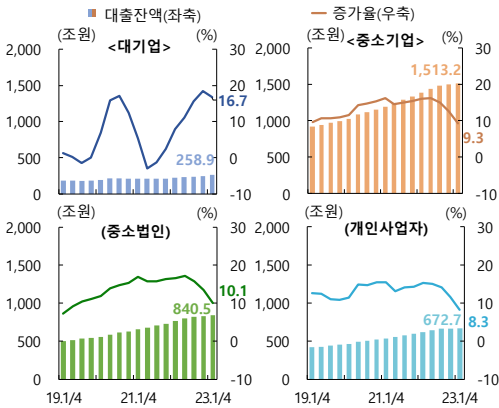


주: 1) 은행은 일반은행, 특수은행 및 외은지점, 비은행금융기관은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보험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기준  
 2) 기말 기준, 금융 및 보험업 제외 기준  
 3) 전년동기대비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기업규모별<sup>21)</sup>로 보면 개인사업자 등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대출 증가율이 하락하였다. 대기업대출(258.9조원, 전년동기대비 16.7%)은 운전 자금 수요로 인해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반면, 중소기업대출(1,513.2조원, 9.3%)은 부동산경기 둔화, 높은 대출금리 등으로 중소기업인(840.5조원, 10.1%)과 개인사업자(672.7조원, 8.3%) 모두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그림 I-14).

16) 자세한 내용은 <참고 2> 「자영업자 부채의 취약요인 및 연계가능성 점검」을 참조.  
 17) 비은행금융기관 기업대출은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및 새마을금고), 보험회사(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합계 기준이다. 다만 자료 제약으로 인해 일부 업권은 기업대출에 금융보험업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18) 업권별 기업대출 규모는 상호금융조합 350.9조원(비은행 기업대출 중 60.8%), 보험회사 100.2조원(17.4%), 여신전문금융회사 69.5조원(12.0%) 저축은행 56.7조원(9.8%)이다.  
 19)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상호저축은행(22년 4/4분기 -57 → 23년 1/4분기 -35 → 2/4분기(전망) -33), 신용카드회사(-44 → -14 → -7), 상호금융조합(-48 → -25 → -22), 생명보험회사(-22 → -12 → -20) 등 조사대상 비은행금융기관 모두 대출태도 강화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한국은행 보도자료, 2023년 4월 26일)를 참고.  
 20) 업권별 기업대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상호금융조합 22년말 29.6% → 23년 1/4분기말 22.9%, 보험회사 4.4% → 1.3%, 여신전문금융회사 16.6% → 6.6% 저축은행 19.2% → 4.1%이다.  
 21) 자료의 제약으로 기업규모별 대출 분석 시 기업규모가 구분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 일부는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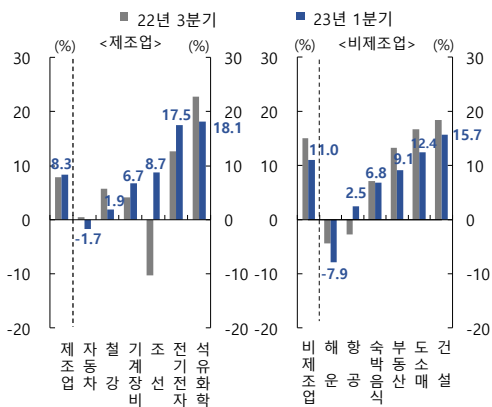
그림 I-14. 기업규모별 기업대출<sup>1)2)3)</sup>



주: 1)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합산 기준(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자료 제약으로 일부 업권 및 기간에 금융보험업 대출을 포함)  
 2) 기말 기준.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3)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중소기업을 의미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업종별<sup>2)</sup>로 보면 제조업 기업대출은 석유화학, 전기전자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전년동기대비 8.3%)를 지속하였다. 반면, 비제조업의 경우 건설, 도소매, 부동산 등을 중심으로 대출 증가세(11.0%)가 둔화되었다(그림 I-15).

그림 I-15. 주요 업종별 금융기관 기업대출<sup>1)</sup> 증가율<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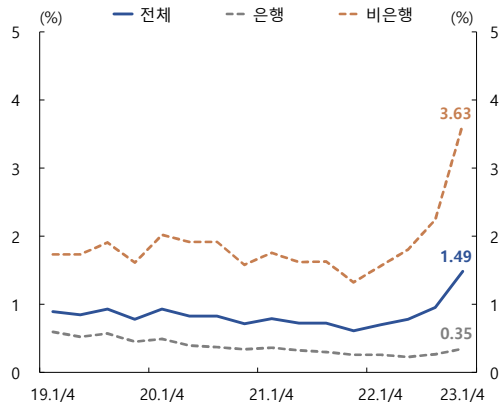


주: 1) 업종별 분류가 가능한 은행 및 일부 비은행금융기관 합산 기준  
 2) 전년동기대비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

기업대출 연체율은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모두 상승하였다.<sup>2)</sup> 2023년 1/4분기말 현재 은행 기업대출 연체율은 0.35%로 2022년 3/4분기말 대비 0.12%포인트 상승하였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3.63%로 동기간 1.83%포인트 상승하였다(그림 I-16).

그림 I-16. 은행<sup>1)</sup> 및 비은행금융기관<sup>2)</sup> 기업대출 연체율<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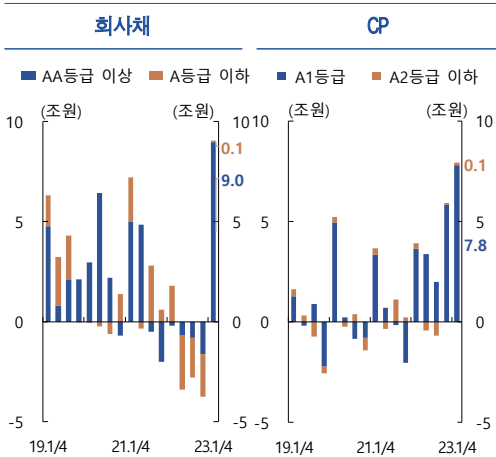
주: 1) 국내은행 기준  
 2)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보험회사(보험약관대출 제외), 여신전문금융회사 기준  
 3)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상호금융조합 및 저축은행은 1월 이상 원금 또는 1개월 이상 이자 연체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2)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기업대출은 업종별 분류가 되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다만,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2009-19년중 분기별 기업대출 연체율 평균 기준, 은행 0.93%, 비은행 6.1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 회사채 및 CP 순발행

직접금융시장에서 회사채는 신용경계감 완화와 투자수요 회복에 따른 발행여건 개선 등으로 우량물을 중심으로 2023년 1/4분기중 순발행되었다. CP 역시 우량물과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순발행되었다(그림 I-17).

그림 I-17. 기업의 직접금융시장 조달<sup>1)</sup>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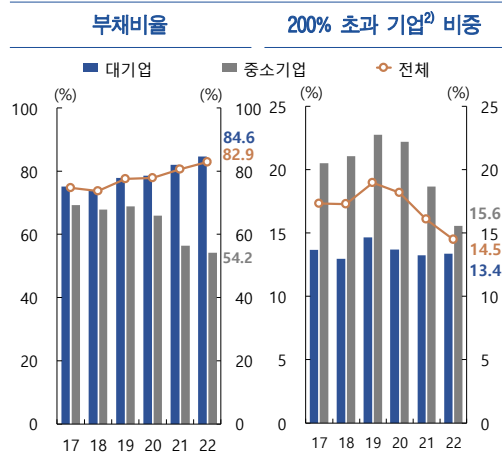
주: 1) 금융지주회사, 유동화회사(SPC) 발행분 제외, 순발행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국에탁결제원, 연합인포맥스

### 부채비율 상승

기업<sup>24)</sup>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은 2022년말 82.9%로, 2021년말(80.6%)에 비해 상승하였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21년말 82.0% → 22년말 84.6%)은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56.5% → 54.2%)은 하락하였다.

한편,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기업(과다부채 기업)의 비중은 2022년말 14.5%로 전년말(16.1%)보다 하락하였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21년말 13.2% → 22년말 13.4%)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 반면, 중소기업(18.6% → 15.6%)은 하락하였다(그림 I-18).

그림 I-18. 기업규모별 부채비율<sup>1)</sup>



주: 1) 부채/자기자본, 기말 기준  
 2) 완전자본잠식 기업 포함  
 자료: KIS-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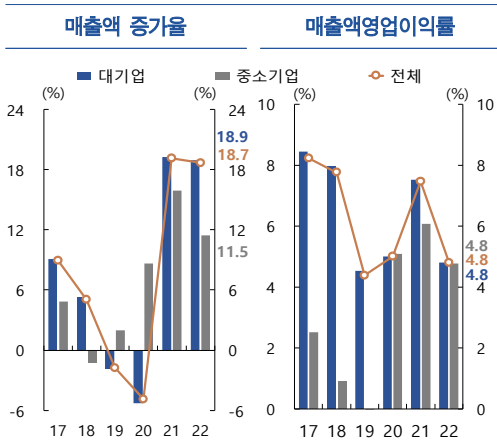
24) 이하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4/4분기말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상장기업 및 일부 비상장기업 중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총 2,786개 기업(대기업 1,360개, 중소기업 1,426개)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속보성 있는 분석을 위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분석 결과가 외감기업 등 더 큰 표본을 활용한 분석 결과와 차이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높은 성장세 지속, 수익성은 다소 저하

기업의 성장성을 보여주는 매출액 증가율(전년 대비)은 2022년 18.7%로, 2021년(19.1%)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21년 19.3% → 22년 18.9%)은 높은 매출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중소기업(15.9% → 11.5%)은 둔화되었다.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은 2022년 4.8%로, 전년(7.5%)에 비해 하락하였다. 업종별로는 영업실적이 저조한 일부 수출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액영업이익률이 하락하였다.<sup>25)</sup>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21년 7.5% → 22년 4.8%)과 중소기업(6.1% → 4.8%) 모두 수익성이 저하되었다(그림 I-19).

그림 I-19. 기업규모별 매출액 증가율<sup>1)</sup> 및 매출액영업이익률<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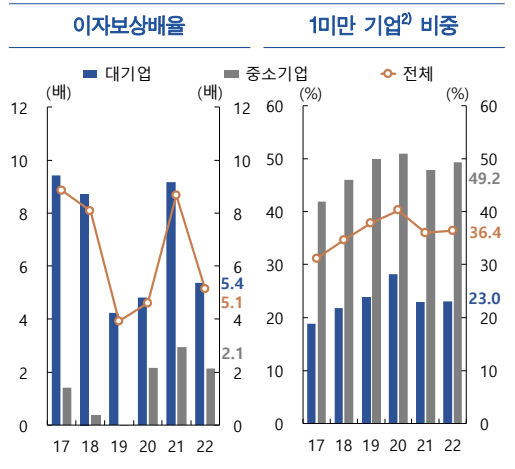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2) 영업이익/매출액  
자료: KIS-Value

이자지급능력 약화

기업의 이자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sup>26)</sup>(영업이익/총이자비용)은 2022년 5.1배로, 수익성 저하에 시장금리 상승 영향이 더해지면서 2021년(8.7배) 대비 하락하였다.<sup>27)</sup>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21년 9.2배 → 22년 5.4배)과 중소기업(2.9배 → 2.1배) 모두 하락하였다.

이자보상배율이 1을 하회하는 이자보상배율 취약기업 비중은 2021년말 36.0%에서 2022년말 36.4%로 소폭 상승하였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21년말 22.9% → 22년말 23.0%)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중소기업(47.8% → 49.2%)은 상승하였다(그림 I-20).

그림 I-20. 기업규모별 이자보상배율<sup>1)</sup>



주: 1) 영업이익/총이자비용  
2) 영업손실 기업 포함  
자료: KIS-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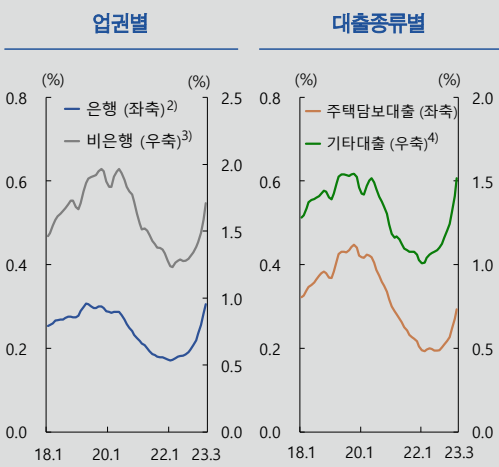
25) 수익성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기가스공급업(21년말 -2.8% → 22년말 -13.9%)에서 영업적자 폭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철강(12.8% → 5.2%), 전기전자(12.5% → 8.8%), 석유화학(8.1% → 5.7%) 등 업종에서도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다소 하락하였다.  
26) 이자보상배율 계산시 분자는 영업이익을, 분모는 회사채이자 등을 포함한 총이자비용을 활용하였다.  
27) 이자보상배율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기가스공급(21년말 -1.4배 → 22년말 -7.0배), 조선(-9.5배 → -7.5배), 숙박음식(-0.2배 → 0.4배) 등의 업종에서 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전기전자(36.5배 → 19.1배), 철강(17.4배 → 8.8배), 석유화학(13.8배 → 8.9배), 건설(8.2배 → 4.7배), 부동산(3.5배 → 2.4배) 등 업종에서는 영업실적 부진 및 이자부담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하락하였다.

## 참고 1.

### 최근 가계대출 연체율 상황 점검<sup>1)</sup>

코로나19 위기중 낮은 수준을 지속하던 가계대출 연체율이 2022년 하반기 이후 금융권 전반에서 높아졌으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연체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연체율 상승은 신규대출 취급이 둔화된 가운데 기존대출 연체잔액이 증가한 데 기인<sup>2)</sup>하고 있어 가계대출 부실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최근 연체율 상황과 빈티지(취급시기별) 연체율 점검을 통해 가계대출 연체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가계대출 연체를 추이<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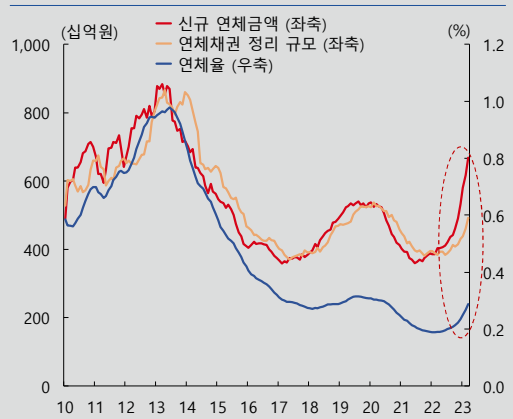


주: 1) 3개월 이동평균 기준  
 2) 국내은행 기준 (이하 동일)  
 3)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동일)  
 4) 신용대출, 기타담보대출, 보증대출 포함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 최근 가계대출 연체율 및 신규연체 상황

그간 가계대출 연체 규모는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왔으며, 최근에도 금리 상승에 따른 채무상환부담 증대로 신규연체 채권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금융기관이 연체채권 정리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신규 연체금액이 정리 규모를 상회함에 따라 가계대출 연체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 은행 가계대출 신규연체 및 연체정리<sup>1)</sup> 규모<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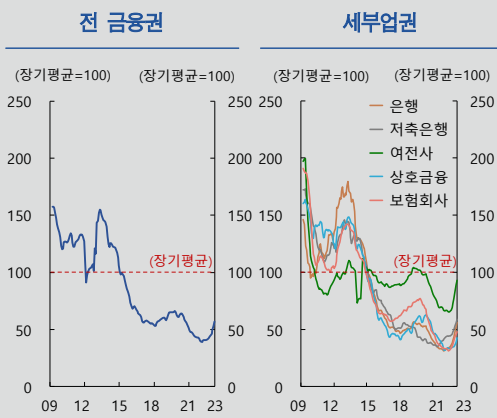
주: 1) 매·상각, 정상화, 회수 등  
 2) 월중 신규연체 및 연체정리 규모  
 3) 6개월 이동평균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다만 아직 각 업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및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2009~19년 중)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3년 3월말 현재 0.31%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0.8% 내외) 및 장기평균(0.54%)을 하회하고 있다.<sup>3)</sup> 비은행금융기관중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3년 3월말 현재 각각 5.6%, 2.8%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장기평균 수준(9.3%,

1) 본고는 노유철·이도홍·이해인(안정총괄팀)이 작성, 박구도(금융안정기획부장)·임광규(안정총괄팀장)·김정훈(통화금융부장)이 검토하였다.  
 2) 2022년 하반기중 연체율 분석 대상 가계대출 잔액이 0.9% 감소하는 동안 가계대출 연체잔액(1개월 이상 연체 기준)은 16.4% 증가하였으며, 특히 2022년 12월과 2023년 1월에는 연체잔액이 전월대비 20% 이상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3) 은행중 지방은행은 가계대출 연체율이 최근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여 2023년 3월말 기준 0.55%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3.2%)을 하회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5.8%, 6.3%)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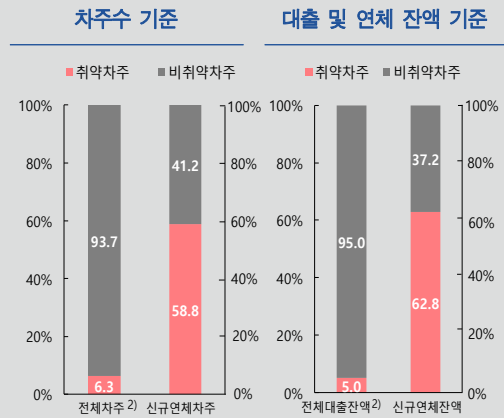
가계대출 연체를 수준<sup>1)</sup>의 장기평균과 비교<sup>2)</sup>



주: 1) 장기평균(2009-19년중 월별 연체율의 평균)을 기준치 100으로 하고 각 시점별 연체율을 장기평균 대비 수준으로 환산  
2) 3개월 이동평균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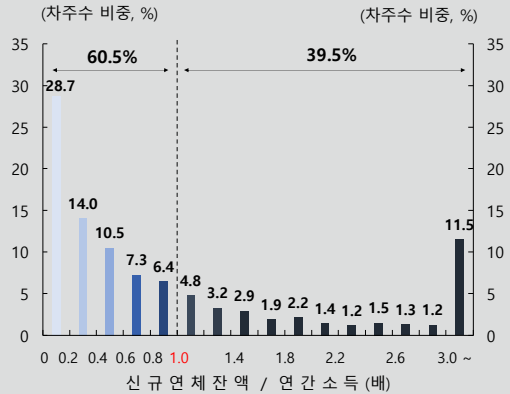
한편 최근 늘어난 가계대출 연체채권은 저소득 또는 저신용이면서 3개 이상의 기관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 취약차주로부터 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말 기준 취약차주는 전체 가계대출 차주수 및 대출잔액의 각각 6.3%, 5.0%에 불과하나, 2022년 하반기중 신규연체차주와 신규연체잔액을 대상으로 보면 취약차주가 각각 58.8%, 62.8%를 차지하는 것으로 시산되었다. 더욱이 이러한 신규연체 취약차주중 39.5%는 신규연체잔액이 차주의 연간소득 액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근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늘어난 연체채권의 상당 부분이 상환에 의한 정상화보다는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으로 귀결되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및 자본비율에 부정적인 영향<sup>4)</sup>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신규연체 차주<sup>1)</sup> 현황 : 취약 및 비취약 차주



주: 1) 2022년 2/4분기말 연체잔액 대비 4/4분기말 연체잔액이 증가한 차주  
2) 2022년 4/4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 DB)

신규연체 취약차주<sup>1)</sup>의 신규연체잔액 / 연간소득 비율 분포



주: 1) 2022년 2/4분기말 기준 취약차주이면서 2022년 하반기중 가계대출 연체잔액이 증가한 차주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 DB)

빈티지 연체율을 통한 향후 연체율 흐름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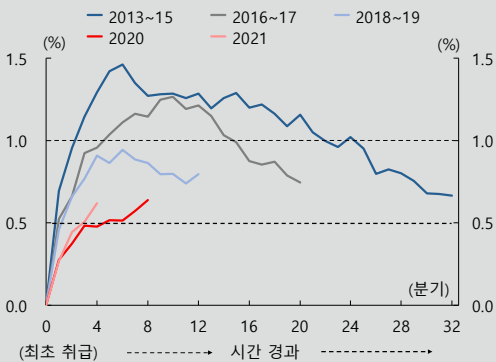
이러한 가운데 가계대출 연체율은 당분간 오름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른바 빈티지(vintage) 연체

(0.8% 내외)에는 못 미치나 장기평균(0.40%)보다 높은 상황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아직 장기평균과의 비교는 어렵지만 2023년 3월말 현재 가계대출 연체율이 0.77%로 시중은행(0.30%) 및 지방은행(0.55%)보다 높으며 상승속도가 빠른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예컨대, 은행의 경우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요주의여신에 대해서는 해당 여신의 7%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 적립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3개월 이상 연체로 이어질 경우 고정이하여신(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으로 분류되어 연체 기간에 따라 20~100%의 대손충당금 적립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율의 개념을 활용하여 가계대출을 취급시기별로 나누고<sup>5)</sup>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체율 변화를 살펴보면, 2013~19년중 취급된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공통적으로 취급 직후 약 6-8개 분기에 걸쳐 가파르게 상승한 후, 1.0~1.5% 수준을 정점으로 완만하게 우하향하는 경향을 보여왔다.<sup>6)</sup> 그러나 2020년 이후 취급된 가계대출의 경우 낮은 금리 수준과 코로나19 관련 정책지원 등에 힘입어 연체율의 오름세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완만해졌고 연체율 수준도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20년 이후 취급된 대출의 경우 대출금리 상승과 정책지원 축소 등으로 인해 그간 이연되어 온 연체가 일부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고, 이는 한동안 가계대출 연체율을 높이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이후 비은행금융기관이 취급한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크게 늘려있는 데다, 앞서 보았듯이 코로나19 대응 정책지원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아왔던 취약차주의 대출을 중심으로 최근 신규연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취약차주의 빈티지 연체율을 보면, 2020년 이후 취급된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최근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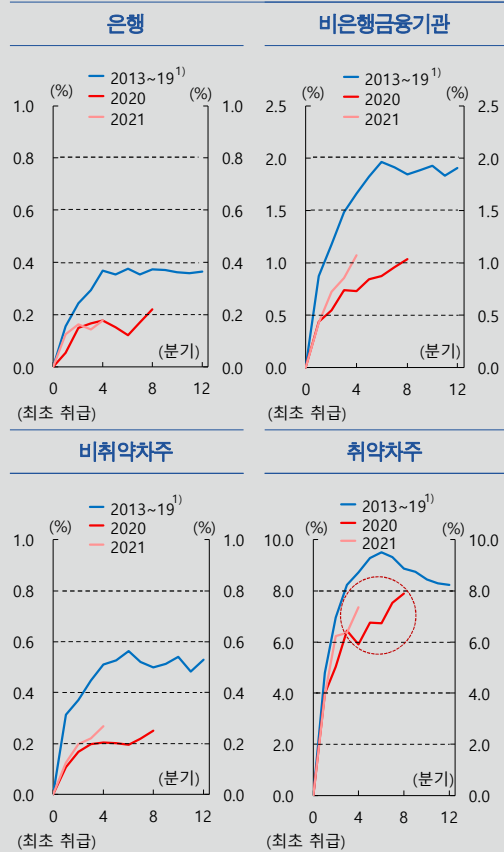
가계대출 빈티지 연체율 추이<sup>1)</sup>



주: 1) 분기별 빈티지 연체율을 이용하여 연도별 빈티지 연체율을 시산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 DB)

한편 2020년 이후 취급된 가계대출 연체율의 상승 압력은 특히 취약차주 및 비은행금융기관<sup>7)</sup>에서 클

빈티지 연체율의 업권별·차주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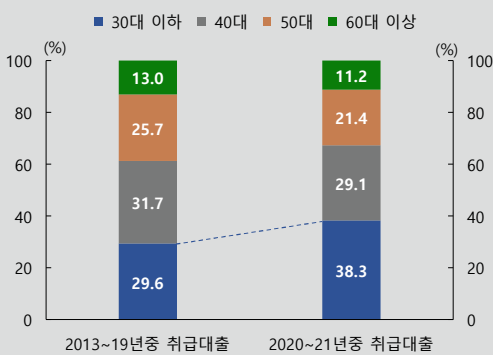


주: 1) 2013-19년중 분기별 빈티지 연체율을 바탕으로 시산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 DB)

5) 가계대출의 취급시기를 분기별로 나누고 각각의 빈티지 연체율을 계산해 본 결과, 연중 분기별 빈티지 연체율의 흐름이 서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분기별 빈티지 연체율을 이용하여 연도별 빈티지 연체율을 시산하였다.  
6) 2013년 이후 대출금리가 점차 낮아지는 상황 속에서 빈티지 연체율은 그 오름세가 점차 완만해지고 정점에서의 연체율 수준도 2013-15년중 1.5% → 2016-17년중 1.3% → 2018-19년중 0.9%로 점차 낮아지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실제 금융기관 업무보고서를 통해 집계한 금융권 전체 대상 가계대출 연체율(2013-19년중 평균 1.2%) 또한 같은 기간중 완만하게 하락해 왔다.  
7) 2022년말 기준 취약차주가 보유한 가계대출중 비은행금융기관에서 받은 가계대출이 60.8%를 차지하여 취약차주의 대출은 은행보다는 비은행금융기관에 보다 집중되어 있다.

또한 2020년 이후 취급된 가계대출중 30대 이하 차주 가계대출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 높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3~19년중 취급된 가계대출은 30대 이하 차주의 대출이 전체의 29.6%였으나 2020~21년중 취급된 가계대출의 경우 동 비중이 38.3%로 상당폭 확대되었다. 해당 차주들의 소득기반이 여타 연령에 비해 다소 취약<sup>8)</sup>한 만큼, 한동안 30대 이하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2020년 이후 취급된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예상보다 높게 상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가계대출 차주의 연령대별 비중<sup>9)</sup>



주: 1) 취급시기별 가계대출잔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 DB)

### 평가 및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앞으로 취약차주와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연체가 늘어

날 수 있어 가계대출 연체율도 당분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sup>9)</sup> 특히 2020~21년중 저금리 환경 및 각종 정책지원 조치로 인해 잠재되어 있던 가계대출 부실이 점차 현재화되고 누적되어 가면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그간 금융기관들이 높아진 신용위험에 대응하여 대손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해 온 만큼, 가계대출 연체 확대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복원력은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sup>10)</sup> 다만 신규연체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은 부실채권 정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는 동시에 자본확충 노력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정부와 감독당국은 코로나19 관련 조치의 정상화 과정에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가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계대출 연체채권 발생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약차주들이 필요에 따라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sup>11)</sup>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연체관리 부담을 경감시켜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금리상승시 채무상환부담의 급격한 증대로 부실채권이 일시에 늘어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고정금리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8) 2020~21년중 가계대출을 받은 30대 이하 차주중 저소득(전체 가계대출 차주 중 소득 하위 30%) 차주의 비중은 약 9.1%로 동 기간중 가계대출을 받은 40~50대 차주중 저소득 차주의 비중인 7.0%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다만 30대 이하 차주중 저소득 차주의 비중은 2.9%로 나타나 40~50대 차주의 4.0%에 비해 낮은 모습을 보였다.

9) 다만 신규연체 규모가 확대되더라도 금융기관들이 그에 상응하여 매·상각 등을 통한 부실여신 정리 규모를 크게 확대할 경우 사후적으로 나타나는 가계대출 연체율의 상승세는 예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가계대출 부실위험 추이를 보다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계대출 연체율뿐 아니라 신규연체 발생 규모를 함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10) 은행들이 부실여신 확대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를 늘려온 결과, 대손충당금적립비율(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은 일반은행 기준 2022년 1/4분기말 199.7% → 2/4분기말 219.8% → 3/4분기말 228.1% → 4/4분기말 231.0%로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또한 비은행금융기관내 각 업권 역시 최근의 고정이하여신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비율과 자본비율 모두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1) 최근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파산 신청이 늘어나고 있으나 다중채무자, 기초수급자, 고통자 등 취약계층은 상대적으로 동 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취약계층이 본인에게 적합한 채무조정수단을 비교해보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상담 기획 확대와 비용부담 절감 등 세심하고 정교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참고 2.

### 자영업자 부채의 취약요인 및 연체가능성 점검<sup>1)</sup>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대출<sup>2)</sup>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고금리, 경기 둔화 등 경제여건 악화로 그동안 낮은 수준을 유지하던 연체율이 상승 전환함에 따라 자영업자 부문의 누적된 잠재부실이 단기간내 현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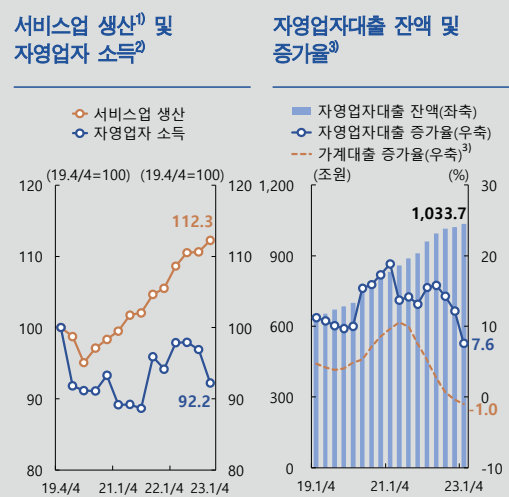
이하에서는 가계부채DB 등의 미시자료를 바탕으로 자영업자 부채의 취약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부동산가격 하락, 높은 원리금 부담 및 경기 둔화시 관련 대출의 연체위험을 살펴본 후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자영업자 업황 및 대출 동향

서비스업 생산은 방역조치가 해제된 작년 2/4분기 이후 빠르게 반등하면서 2019년말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 소득은 대출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더디게 개선되면서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대출은 가계대출과 달리 여전히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2023년 1/4분기말 현재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1,033.7조원<sup>3)</sup>으로 전년동

기대비 7.6% 증가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말(684.9조원) 대비 50.9% 늘어난 규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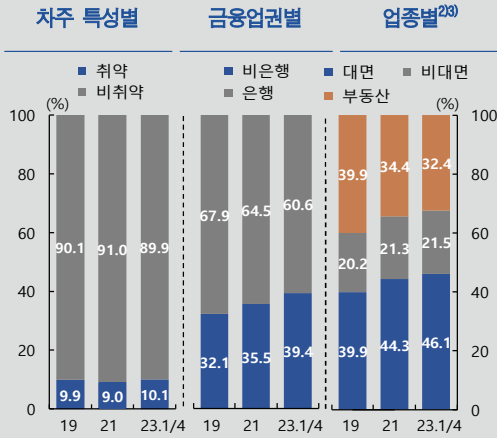


주: 1) 서비스업 생산지수(실질, 계절조정) 기준  
 2) 자영업 가구의 사업소득·근로소득(실질, 계절조정) 합산 기준  
 3) 전년동기대비  
 4) 가계신용통계 가계대출(판매신용 제외) 기준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서비스업동향조사, 가계동향조사)

지난해 자영업자 부채가 취약차주<sup>4)</sup>·비은행권·대면서비스업 위주로 늘어난 점에 비추어 자영업자 부채의 전반적인 질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이후 감소하였던 취약차주의 대출 비중이 2021년말 9.0%에서 2023년 1/4분기말 10.1%로 상승하였다. 또한,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 비중이 2021년말 35.5%에서 2023년 1/4분기말 39.4%로 늘어났으며, 경기에 민감한 영세업종 위주인 대면서비스업에 대한 대출 비중 또한 44.3%에서 46.1%로 확대되었다.

1) 본고는 김재영·신정후(안정분석팀)가 작성, 박구도(금융안정기획부장)·이정연(안정분석팀장)·이정현(시장총괄팀장)·한경철(검사총괄팀장)이 검토하였다.  
 2) 한국은행은 가계부채DB(약 100만 차주로 구성된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자영업자로 식별하고 이들이 보유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합산하여 자영업자대출 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3) 2023년 1/4분기말 자영업자대출(1,033.7조원, 차주 수 313.3만명)은 개인사업자대출 680.2조원, 가계대출 353.5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4)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차주를 취약차주로 분류하였다. 다만, 데이터 제약 등으로 본고에서는 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차주를 다중채무자로 정의하였다. 한편, 다중채무자 대출 비중(21년말 69.3% → 23년 1/4분기말 71.3%) 역시 취약차주와 마찬가지로 확대되었다.

자영업자대출 구성 비중<sup>1)</sup>



주: 1) 전체 자영업자대출 잔액 대비  
 2) 업종이 식별된 자영업 차주의 대출잔액 대비  
 3) 대면업종: 도소매, 숙박음식, 개인서비스, 여가서비스  
 비대면업종: 대면서비스업, 부동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한편, 그동안 하락세를 보였던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전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기준)은 2023년 3월말 현재 1.00%로 과거 장기평균(2012~19년중 평균 1.05%)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작년 하반기부터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상승 전환되는 등 대출 건전성이 점차 저하되고 있는 모습이다.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작년 하반기 이후 4.30%포인트 상승한 반면, 비취약차주는 같은 기간중 0.09%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sup>5)</sup> 금융업권별로 보면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이 작년 하반기 이후 1.25%포인트 상승하였으나, 은행은 0.21%포인트 상승하였다. 업종별로는 대면서비스업의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이 0.38%포인트 상승하여 여타 업종에 비해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대출 연체율<sup>1)</sup>

(%, %포인트)

	12~19년 평균	19년말	22.6월말 (A)	23.3월말 (B)	B-A
▶ 전체 <sup>2)</sup>	1.05	0.76	0.47	1.00	+0.53
▶ 차주 특성별 <sup>3)</sup>					
- 취약	11.16	10.27	5.70	10.00	+4.30
- 다중채무	1.85	1.43	0.75	1.42	+0.67
- 비취약	0.24	0.09	0.08	0.17	+0.09
▶ 금융업권별 <sup>2)</sup>					
- 은행	0.48	0.29	0.16	0.37	+0.21
- 비은행	6.10	2.47	1.27	2.52	+1.25
▶ 업종별 <sup>4)</sup>					
- 대면	0.58	0.38	0.22	0.60	+0.38
- 비대면	0.53	0.42	0.19	0.37	+0.18
- 부동산	0.33	0.13	0.09	0.16	+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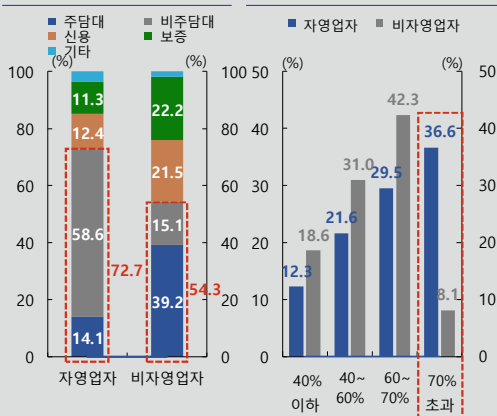
주: 1)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2) 개인사업자대출 기준  
 3) 가계부채DB 상 자영업 차주 대출 기준  
 4) 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 기준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자영업자 부채 관련 취약요인 점검

자영업자대출 중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72.7%로 임금근로자 등 비자영업자(54.3%)에 비해 상당히 높아<sup>6)</sup> 부동산가격 하락에 취약할 수 있다. 특히 LTV 규제가 느슨<sup>7)</sup>한 데다 경기변동에 민감한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이하 '비주택대') 비중이 58.6%에 달하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 비주택대(상호금융 기준<sup>8)</sup>)를 LTV 구간별로 보면 LTV 70%를 초과하는 고LTV 대출 비중이 36.6%(비자영업자는 8.1%)에 이른다. 최근 상업용부동산가격이 하락 전환<sup>9)</sup>한 가운데 주택에 비해 낙찰가율<sup>10)</sup>이 낮은 상가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자영업자대출 특성상 부실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

5) 한편, 다중채무자 연체율의 경우 취약차주와 비교해 낮은 상승폭(0.67%포인트)을 기록하면서 복수의 대출을 받았더라도 소득수준이나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차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실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자영업자의 경우 상가 등 영업기반을 갖추고 있어 실물자산 비중이 높지만 소득흐름이 불규칙해 담보 없이 대출받기가 어렵다.  
 7) 가계 비주택담대의 경우 금융당국이 2022년 9월부터 LTV 한도를 70%로 규제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의 비주택대에 대해서는 별도의 LTV 규제 없이 통상 80% 내에서 금융기관별로 자체 내규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8) LTV 구간별 비주택대 비중은 자료 제약 등으로 상호금융(전체 자영업자대출 잔액의 29.7%, 23년 1/4분기말 기준)만을 포함하였다.  
 9) 전국 중대형 상가 가격(자본수익률, 한국부동산원 기준)은 2022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4/4분기부터 하락 전환되고 하락폭도 확대되고 있다(22년 1/4분기 0.83% → 3/4분기 0.70% → 4/4분기 -0.01% → 23년 1/4분기 -0.15%).

대출유형별 비중<sup>10)</sup>

주: 1) 2023년 1/4분기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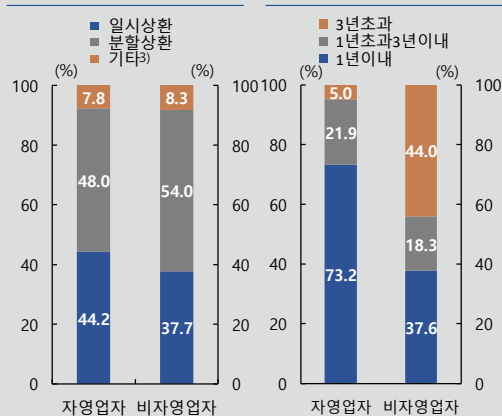
2) 전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기준

3) 상호금융의 개인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차입이 많아 비자영업자보다 대출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자영업 가구의 원리금상환비율(DSR)과 이자비용도 비자영업 가구에 비해 높은 수준<sup>11)</sup>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 부채는 일시상환대출과 만기 1년 이내 단기대출 비중이 높아 차환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2023년 1/4분기말 현재 자영업자대출의 일시상환방식 비중은 44.2%로서, 비자영업자(37.7%)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 대출 비중이 73.2%에 달하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대출이 만기연장<sup>12)</sup>되고는 있으나, 부동산가격 하락 지속시 대출한도가 일부 축소되거나 재연장이 제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분할·일시상환 대출 비중<sup>12)</sup> 대출만기별 비중<sup>14)</sup>

주: 1) 2023년 1/4분기말 기준

2) 자영업자 및 비자영업자의 가계대출 기준

3) 한도대출, 리볼빙 등

4) 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기준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 향후 자영업자대출의 연체위험 전망

기존 연체를 지표보다 연체위험을 광범위하게 포착하기 위해 연체가 시작(5영업일 이상)되었거나 세금을 체납한 자영업자가 보유한 대출잔액 모두를 연체위험대출로 간주하였다.<sup>13)</sup> 동 대출이 전체 자영업자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자영업자대출 연체위험률로 정의하여 산출해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반등하는 모습이다. 전체 자영업자대출의 연체위험률은 2022년 2/4분기말 1.3%에서 2022년말 2.0%로 높아졌으며, 이중 취약차주의 연체위험률은 9.5%에서 14.4%로 상승하였다. 향후 높은 대출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예상 밖의 경기회복 지연, 상업용부동산 부진 등이 발생할 경우 취약차주 위주로 연체위험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10) 전국 상가 낙찰가율(낙찰가액/감정가액, 법원경매정보 기준)은 2022년 1/4분기(71.8%)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3년 1/4분기 현재 66.2%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아파트(73.2%)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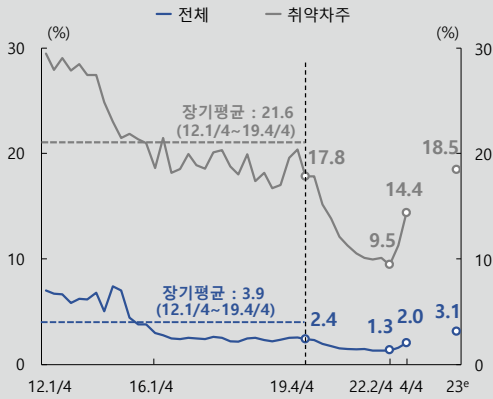
11) 2023년 1/4분기말 기준 자영업자의 1인당 대출액(가계부채DB)은 3.3억원으로 비자영업자(0.9억원)의 3.7배 규모이다. DSR(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자영업 가구의 2021년 DSR이 33.7%로 비자영업 가구의 DSR(27.8%)을 상회하고 있다. 가계동향조사에서도 2023년 1/4분기중 자영업 가구의 월평균 이자비용(14.4만원)이 비자영업 가구(12.5만원)를 상회하였다.

12) 2023년 1-3월중 개인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률(8개 은행 기준)은 96.7%(2012-22년중 월평균 96.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13) 통상 대출건전성 지표로 사용되는 연체를 지표는 1개월 이상 연체된 계좌의 대출잔액만을 반영하기에 부실가능성이 높은 차주의 신용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복수의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대출 비중(23년 1/4분기말 71.3%)이 높아 특정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동일 차주가 보유한 다른 대출도 연쇄적으로 부실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대출 연체위험률 모형<sup>14)</sup>을 통해 경기부진, 상업용부동산가격 하락, 높은 대출금리 지속 시 자영업자대출의 연체위험률 변화를 추정해 보았다. 우선, 금년중 서비스업 생산이 작년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sup>15)</sup>되고, 상업용부동산가격이 최근 추세대로 소폭 하락<sup>16)</sup>하며, 대출금리<sup>17)</sup>는 2023년말까지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sup>18)</sup> 추정 결과, 금년말 자영업자대출의 연체위험률이 3.1%(12~19년중 장기평균 3.9%)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취약차주의 연체위험률은 18.5%(장기평균 21.6%)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금년말 자영업자대출의 연체위험률<sup>1)</sup> 추정**



주: 1) 연체 시작(5영업일 이상) 및 세금체납 차주의 대출잔액 / 전체 대출잔액  
 자료: 한국은행 시산

**시사점**

아직까지는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이 양호한 모습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근로자 등 비자영업자에 비해 부동산가격 하락에 취약, 높은 원리금 상환부담, 단기 및 일시상환 중심의 부채구조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다. 향후 높은 대출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예상 밖의 경기회복 지연, 상업용부동산 부진 등이 발생할 경우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연체 규모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 다만, 앞서 추정한 연체위험대출이 전체 자영업자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아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자영업자대출 중 잠재부실위험이 높은 대출에서 연체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연체우려가 높은 취약차주에 대해서 새출발기금<sup>19)</sup> 등을 통한 채무재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소득이 회복된 정상차주의 경우 자발적인 대출 상환을 유도하고 자영업자 부채구조를 단기에서 장기로,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의 경우 비주택부동산 담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상업용부동산가격 변화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급격한 자금애로를 겪지 않는 선에서 자영업자의 비주담대에 대한 규제체계도 점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14) 2012년 1/4분기 ~ 2022년 4/4분기중 서비스업생산지수 증가율(전년동기대비), 상업용부동산가격 상승률(전년동기대비), 중소기업 대출금리(잔액 기준, 기간중 월평균), 전기 연체위험률이 포함된 선형회귀모형을 구축하여 추정하였다.  
 15) 금년중 서비스업 생산은 한국은행 경제전망치(1.4%, 23.5월 기준) 및 작년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6.0%, 경제성장률 2.6%) 등을 고려하여 3.7% 증가한다고 전제하였다.  
 16) 상업용부동산가격(중대형 상가의 자본수익률 기준)의 경우 최근의 하락세(23.1/4분기중 -0.15%, 전분기대비)를 반영하여 금년중 0.5% 하락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17) 2023년 1/4분기중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잔액 기준, 기간중 월평균)는 5.3%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18) 금융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액(85.3조원, 23.3월말 기준) 중 92%(78.8조원)를 차지하는 만기연장은 3년(25.9월까지) 이용 가능하며, 8%(6.5조원)인 상환유예는 유예조치 종료(23.9월말) 이후 거치기간(1년)과 최대 60개월(28.9월까지)의 분할상환을 이용할 수 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3.6.8일). 본고에서는 상환유예 이용차주의 대부분(98%)이 상환계획서를 작성한데다, 원리금 상환기간이 충분히 주어진 점을 고려하여 유예조치 종료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19)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022년 10월 4일부터 최대 3년간 30조원 규모로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채무조정 신청액이 4.2조원(23.5월말 누계 기준)에 그치고 있어 신청요건을 완화하거나 신청시 불이익(신용패널티 부과, 신규 금융거래 제약 발생 등)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II. 자산시장

자산시장에서는 국고채 금리가 국내외 통화긴축에 대한 기대 변화, 글로벌 은행 불안 등의 영향으로 등락을 보이면서 큰 폭 하락하였으나 5월 들어 반등하였다.

주가는 주요국 금리인상 속도조절 기대, 국내 전기전자 업황 반등 기대 등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큰 폭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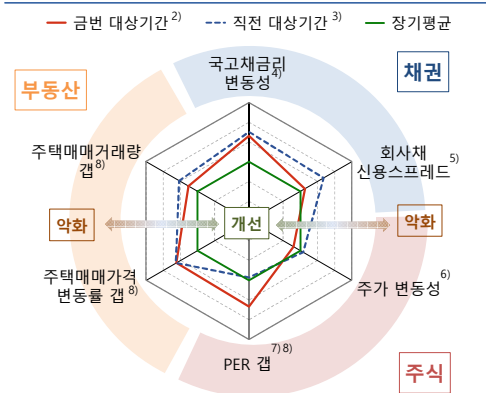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은 금년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완화되었다. 반면 상업용부동산 자본수익률은 하락세를 지속하였다(그림 II-1).

## 1. 채권시장

### 장기시장금리 큰 폭 하락 후 반등

국고채 금리는 국내외 통화긴축 기대 및 물가·경기지표 추이, 3월 중순 실리콘밸리 은행(이하 'SVB')·크레디트 스위스(이하 'CS') 사태 등에 따른 글로벌 위험회피심리 변화 등에 영향을 받아 큰 폭 하락하였다가 반등하였다. 시기별로 보면, 국고채 금리는 연초 기관들의 투자 재개,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기조 완화 기대<sup>1)</sup> 등으로 큰 폭 하락하여 1월 중순 이후 기준금리를 하회하였다. 다만 2월 들어 미국의 견조한 고용지표, PCE 물가 예상치 상회 등으로 긴축기조 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큰 폭 반등하였다. 그러나 3월 중순 이후 미국 및 유럽 은행 부실 우려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고 미 연준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가 약화<sup>2)</sup>되면서 국고채 금리는 기준금리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재차 하락하였다. 4월 금통위 이후에는 낮아진 금리 수준에 대한 부담, 미 지역은행 불안 완화<sup>3)</sup>, 미 부채한도 협상 타결 기대 등 상승요인과 5월 FOMC 결과가 예상보다 완화적이라는 평가, 미 물가지표 예상치 하회 등 하락요인이 엇갈리며 비교적 제한된 범위(3년물, 3.20~3.34%)에서 등락하였다. 그러나 5월 중순 이후 미 물가·고용지표 예상치 상회, 미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등으로 국내외 조기 금리인하 기대가 약화되고 세수부족 등에 따른 국고채 수급우려<sup>4)</sup>가 부각되면서 상당폭 반등하였다(그림 II-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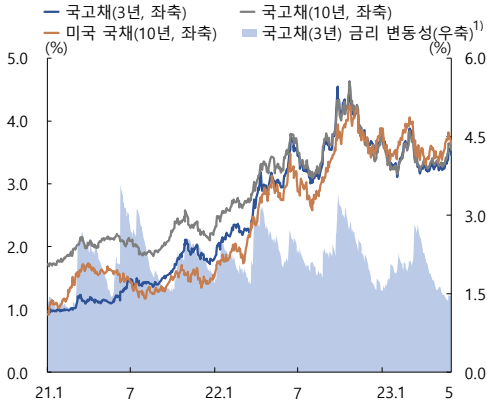
그림 II-1. 자산시장 상황 변화 지도<sup>1)</sup>



주: 1) 각 지표별 장기 평균(5년)을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금번 대상기간과 직전 대상기간 지표의 상대적 수준을 지도에 도시  
 2) 2023년 1-5월중(주택매매거래량 겹은 2023년 1-4월중)  
 3) 2022년 6-12월중  
 4) 국고채(3년) 금리의 월별 변동성 평균 기준  
 5) 회사채(A-등급) 금리 - 국고채(3년) 금리 기준  
 6) 일별 V-KOSPI의 평균 기준 7) MSCI 기준(12개월 선행 PER)  
 8) 겹은 각 지표의 장기 평균 대비 격차를 의미  
 자료: 한국은행 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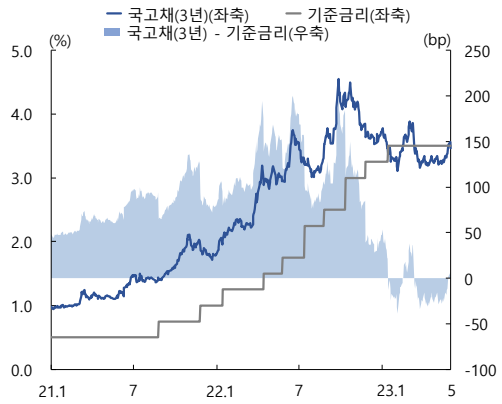
1) 일본은행(BOJ)의 수익률곡선 관리정책(YCC, Yield Curve Control) 유지 결정(1.18일), 캐나다 중앙은행(BOC)의 금리인상 중단 가능성 시사(1.25일), 파월 의장의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 언급(2.1일), 라가르드 ECB 총재의 더 균형 잡힌 인플레이션 리스크 언급(2.2일) 등에 기인하였다.

그림 II-2. 국고채 및 미국 국채 금리



주: 1) 지수가중이동평균(EWMA)에 의거 일별 변동성 산출  
 자료: 금융투자협회, Bloomberg

그림 II-3. 기준금리 및 국고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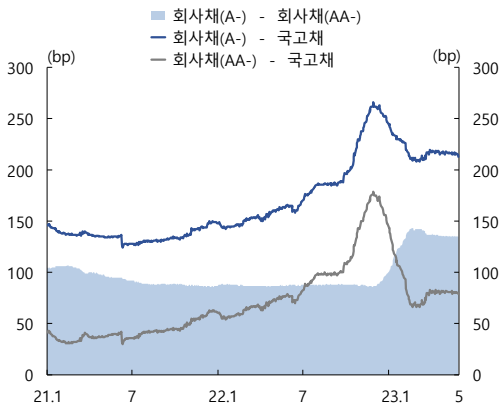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국고채 3년물 금리와 기준금리 간 스프레드는 1월 중순 이후 한달 남짓 역전되었다가 2월 중순 이후 해소되었다. 3월 중순 들어 SVB·CS 사태 등으로 재차 역전되었으나 5월 금통위 이후 국고채 금리가 반등하면서 역전현상이 대부분의 만기에서 해소)되었다(그림 II-3).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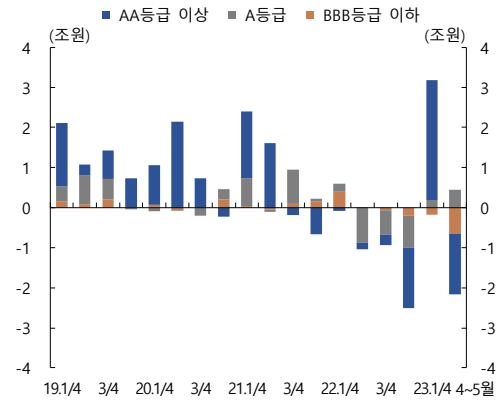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정부의 시장안정대책 등으로 신용경계감이 완화된 가운데 연초 기관들의 투자가 재개되고 국고채 대비 금리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큰 폭 축소되었다. 그러나 3월 중순 이후 위험회피심리 강화, 금리 변동성 확대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다소 확대되었다. 4월 이후에는 일부 취약부문에 대한 신용경계감 지속에도 금리 변동성 축소, 금리 메리트 부각 등으로 3월말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다. 한편 신용등급간 스프레드(AA- 및 A- 기준)는 연초 비우량물에 대한 신용경계감 등으로 상당폭 확대되었다가 3월 하순 이후 소폭 축소)되었다(그림 II-4).

2) 3월 FOMC 기자회견담회에서 파월 미 연준 의장은 SVB 사태 등 은행 불안에 따른 신용위축이 금리인상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으며 상당수 FOMC 참석자들이 이를 전망(SEP)에 반영하였다고 발언하였다.  
 3) 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First Republic Bank)의 1/4분기 대규모 예금 인출 발표 및 추가 폭락(4.25일) 등으로 미국 지역은행 관련 우려가 재확산되었으나, JP모건 체이스 은행이 자산 및 예금 전액을 인수하기로 결정(5.1일)하면서 관련 불안이 진정되었다.  
 4) 2023년 1~4월중 국세수입(134조원)은 수출 부진, 자산가격 둔화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33.9조원 감소하였다.  
 5) 5.26일 이후 모든 만기에서 역전이 해소되었다가 이후 국고채 금리가 다소 조정받으면서 5.31일 기준 3·5년물만 소폭 역전된 상황이다.  
 6) 회사채 신용등급간(AA- - AA-) 스프레드(bp): 2023년 1월말 129 → 2월말 142 → 3월말 137 → 4월말 136 → 5월말 134

그림 II-4. 회사채 신용스프레드<sup>1)</sup> 및 신용등급 간 스프레드

주: 1) 3년물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

한편 상반기중 회사채 발행은 기업들이 신용경계감 완화 등으로 자금조달에 나서고 기관들의 투자 수요가 확대되면서 3월까지 상당폭 순발행되었다. 다만 3월 중순 이후 금리 불확실성 확대, 계절요인 등으로 순발행 규모가 축소된 이후 4월 중에는 일부 기업의 대규모 만기도래 등으로, 5월에는 계절요인, 만기도래 규모 확대 등으로 상당폭 순상환되었다(그림 II-5).

그림 II-5. 회사채<sup>1)</sup> 순발행<sup>2)</sup>

주: 1) 공모기준, 금융회사 발행분 제외  
2) 월평균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회사채 수요예측참여율은 신용경계감이 완화되면서 우량물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3월 중순 이후 SVB·CS 사태의 영향으로 수요예측참여율이 다소 낮아졌으나 일부 취약업종 기업을 제외하면 높은 수준을 지속하며 양호한 투자수요를 나타내었다(그림 II-6).

그림 II-6. 회사채<sup>1)</sup> 등급별 수요예측참여율<sup>2)</sup>

주: 1) 공모기준, 금융회사 발행분 제외  
2) 수요예측참여액/발행예정액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 2. 주식시장

### 주가 큰 폭 상승

주가는 연초부터 주요국 금리인상 속도조절 기대,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및 전기전자 업황 반등 기대 등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크게 유입되며 상승하였다. 3월 들어서는 미 고용지표 호조, 연준 인사의 매파적 발언 등으로 미 연준의 긴축 장기화 우려가 재차 부각된 데다 SVB·CS 사태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크게 하락하였다. 그러나 주요국의 신속한 정책 대응과 연준의 통화긴축 기대 완화, 국내 전기전자 업황 개선 기대 등으로 3월 중순 이후 큰 폭 반등하였다가 4월 말 이후 미국 지역은행 불안 및 부채한도 협상 지연 우려, 일부 과열 종목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조정을 받았다. 이후 5월 하순에는 미 부채한도 협상 타결 기대 강화, 반도체 업황 반등 기대 등으로 상승하였다(그림 II-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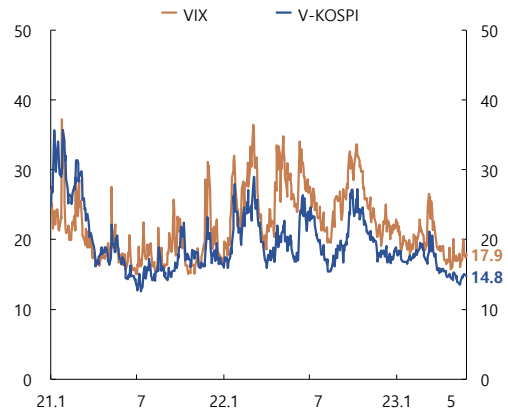
그림 II-7. 코스피 및 글로벌 주가<sup>1)</sup>



주: 1) 미국은 S&P500 지수,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은 MSCI 기준  
자료: KOSCOM, Bloomberg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대가 완화되면서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에서 움직이다가 3월 들어 글로벌 은행 불안 우려가 확산되면서 일시 상승하였다. 이후 주요국의 정책 대응 등으로 시장불안이 진정되면서 3월말 이후에는 대체로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는 모습이다(그림 II-8).

그림 II-8. 주가 변동성 지수<sup>1)</sup>



주: 1) S&P500 및 KOSPI200 지수의 옵션 가격으로부터 산출된 변동성지수  
자료: KOSCOM, Bloomberg

7) 일부 증권사들이 2023년 1/4분기중 큰 폭 상승했던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해 단기과열을 경고한 가운데 SG증권 창구를 통해 삼천리·다우데이터 등 8개 종목에 대한 대규모 매물 출회(4.24일)로 해당 종목의 주가가 급락세를 지속함에 따라 시장 경계감이 강화되었다.

PER 및 PBR 상승

주가수익비율(8)(PER)은 반도체 등 주요 업종의 업황 반등 지연으로 예상이익이 낮아지는 가운데 주가가 큰 폭 상승함에 따라 5월말 기준 14.2배 수준까지 높아져 장기평균(9.85배, 2010년 이후)을 크게 상회하였다. 주가순자산비율(PBR)도 작년말 기준 0.85배에서 5월말 현재 0.95배로 상승하였다(그림 II-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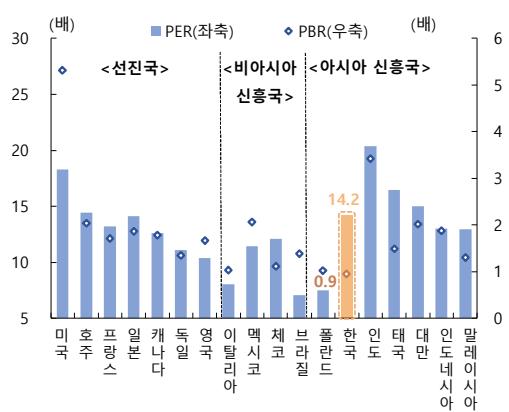
그림 II-9. PER<sup>1)</sup> 및 PBR<sup>2)</sup>



주: 1) MSCI 기준(12개월 선행 PER)  
2) 코스피 종목 기준  
자료: Bloomberg, Refinitiv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국내 주식시장의 PER은 선진국 및 주요 신흥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승한 반면 PBR은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다(그림 II-10).

그림 II-10. 주요국의 PER<sup>1)2)</sup> 및 PBR<sup>1)</sup>



주: 1) 2023년 5월 기준  
2) MSCI 기준(12개월 선행 PER)  
자료: Bloomberg, Refinitiv

한편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sup>9)</sup>은 금년 들어 투자자들의 위험선호가 강화되면서 빠르게 낮아져 5월 기준 3.5%포인트로 장기평균(2010년 이후 7.52%포인트)을 큰 폭 하회하고 있다(그림 II-11).

그림 II-11.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sup>1)</sup>



주: 1) 수익주가비율(MSCI 기준 12개월 선행 PER의 역수) - 국고채(10년)수익률  
자료: Bloomberg, Refinitiv

8) MSCI 기준 12개월 선행 PER을 활용하였으며 동 지수는 MSCI지수 편입기업들의 현재 시가총액 합계를 향후 1년간 예상되는 순이익(국내외 증권회사 전망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9) 수익-주가 비율(MSCI 기준 12개월 선행 PER의 역수)과 국고채(10년)수익률 간의 차이로 산출한다. 무위험자산(국고채) 대비 주식의 초과수익률이 과거평균에 비해 낮아도 주식을 보유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선호 경향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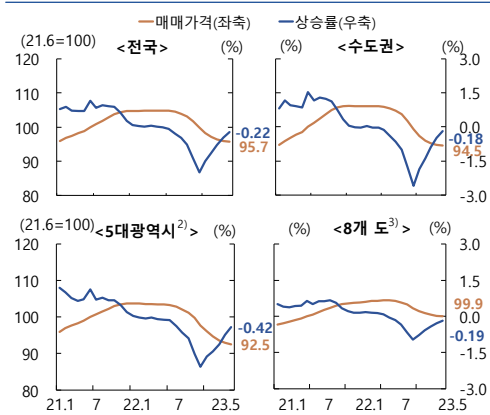
### 3. 부동산시장

#### 주택매매가격 하락세 완화

주택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 이후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sup>10)</sup> 및 가격 저점 인식 등으로 하락폭이 축소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및 수도권을 비롯하여 5대 광역시와 8개 도 모두 하락폭이 축소되는 모습이다.

특히 수도권은 하락폭이 2022년 12월 전기대비 -2.60%에서 2023년 5월 -0.18%로 빠르게 축소되었다. 5대 광역시 역시 -2.05%에서 -0.42%로 하락폭이 줄어들었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8개 도 지역의 경우에도 -0.96%에서 -0.19%로 축소되었다(그림 II-12).

그림 II-12. 주택매매가격 추이 및 상승률<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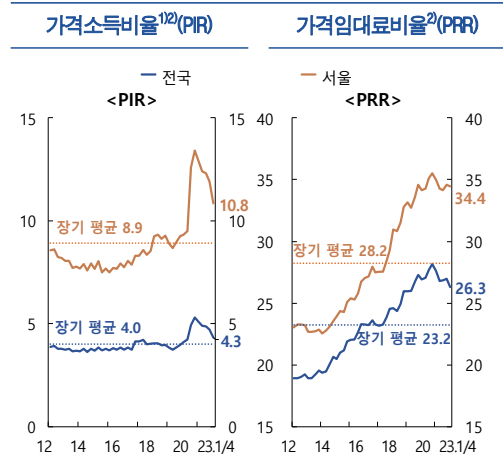


주: 1)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기준, 전월대비  
2)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및 울산  
3)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및 제주  
자료: 한국부동산원

소득 대비 주택가격을 나타내는 가격소득비율(PIR, Price to Income Ratio)과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을 나타내는 가격임대료비율(PRR, Price to Rent Ratio)은 모두 하락하였다.

2023년 1/4분기중 가격소득비율(전국 기준)은 4.3으로 2022년 3/4분기(4.9) 대비 0.6 하락하였다. 가격임대료비율(전국)도 2021년 4/4분기 고점(28.2) 이후 하락세<sup>11)</sup>를 지속하고 있다. 2023년 1/4분기중 가격임대료비율은 26.3으로 2022년 3/4분기 대비 0.5 하락하였다.(그림 II-13).

그림 II-13. 가격소득비율 및 가격임대료비율



주: 1) 주택가격(3분위)/연간 가구소득(3분위)  
2) 주택가격/연간 임대료  
자료: 한국은행 시산, 한국부동산원

10) 2023년 1월 3일 정부는 규제지역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기간 완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중도금대출보증 기준 폐지 등 부동산시장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11) 2022년 중 PRR 하락은 전월세전환율 상승에 따른 임대료(추정) 하락폭 감소에 주로 기인한다.

2022년 하반기 이후 크게 위축되었던 주택매매 거래량도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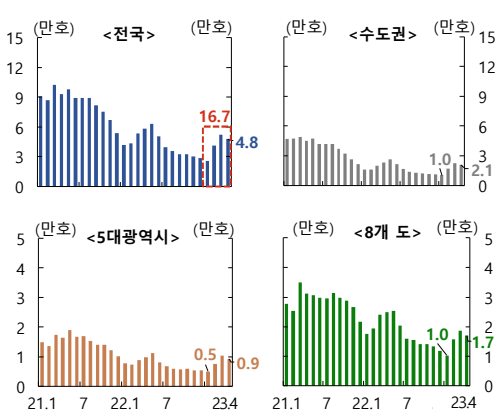
2023년 1~4월중 주택매매거래량은 16.7만호로 전년동기(19.7만호)에 비해 15.2% 감소하였으나 2022년 하반기(-56.4%)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특히 2~4월의 경우 특례보증자리론<sup>12)</sup> 등 정부 정책영향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sup>13)</sup>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경우 매매거래량이 1월중 1.0만건에 그쳤으나 4월에는 2.1만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5대 광역시는 같은 기간 0.5만건에서 0.9만건으로, 8개 도지역에서 1.0만건에서 1.7만건으로 증가하였다. 매수심리도 2월 이후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sup>14)</sup>(그림 II-14).

### 전월세가격 하락세 완화

주택임대차시장에서는 전월세가격의 하락세가 완화되는 모습이다.<sup>1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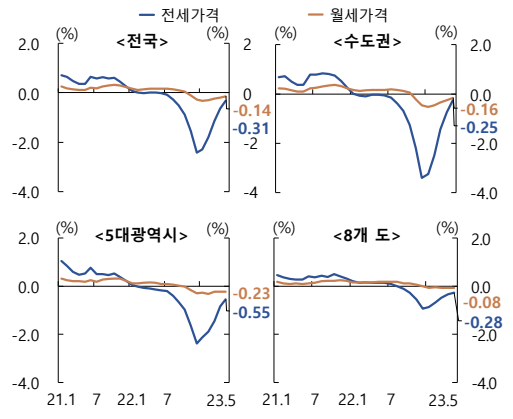
전세가격은 2022년 12월 전월대비 -2.4%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가 완화되면서 2023년 5월에는 전월대비 0.31% 하락하였다. 2022년 하반기 주택가격 급락과 입주물량 증가로 하락세가 심화되었던 전세가격은 2023년 들어 주택가격 하락폭이 완화되고 입주물량도 감소하면서 하락폭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sup>16)</sup>(그림 II-15).

그림 II-14. 월별 주택매매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그림 II-15. 주택전월세가격 상승률<sup>1)</sup>



주: 1) 전월대비  
자료: 한국부동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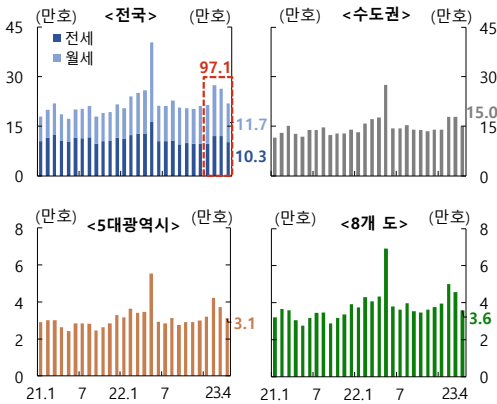
12) 특례보증자리론은 금리상승기 서민주택 실수요층이 이자상승 불안 없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 금융위원회 보증자료)으로 공급되었으며 특례보증자리론 신규 수요가 가계부채의 점진적 축소를 제약하면서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13) 주택매매거래량: 2022년 12월 2.9만호 → 2023년 1월 2.6만호 → 2월 4.1만호 → 3월 5.2만호 → 4월 4.8만호  
14) 매수우위지수(KB국민은행): 2023년 1월 17.9 → 2월 21.1 → 3월 21.9 → 4월 22.3 → 5월 24.8  
15) 전세가격상승률(전월대비): 2023년 1월 -2.29% → 2월 -1.80% → 3월 -1.13% → 4월 -0.63% → 5월 -0.31%  
월세가격상승률(전월대비): -0.33% → -0.29% → -0.24% → -0.18% → -0.14%  
16) 월평균 입주물량(만호): 2022년 상반기 2.4 → 2022년 하반기 3.1 → 2023년 1-5월 2.6

전·월세 거래량은 2023년 1~4월중 97.1만호로 전년동기(95.4만호) 대비 1.85% 증가하여 2022년 하반기(5.9%)보다 증가세가 축소되었다. 임차유형별로 보면 전세거래량이 44.2만호로 전년동기(49.0만호) 대비 9.8% 감소한 반면, 월세거래량은 53.0만호로 전년동기(46.4만호) 대비 14.2%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전월세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4월중 54.5%로 전년동기(50.6%) 대비 3.9%포인트 상승하였다(그림 II-16).

2023년중 아파트 신규 입주물량<sup>17)</sup>은 36.2만호로 전년(33.0만호)에 비해 증가하면서 예년 수준(13~22년중 연평균 33.2만호)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23년중 아파트 분양물량은 23.6만호로 전년(36.8만호)보다 대폭(35.9%) 감소할 전망이다(그림 II-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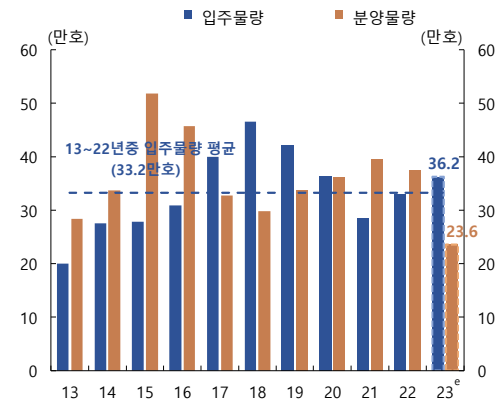
한편 미분양주택 물량은 2023년 4월말 기준 7.1만호<sup>18)</sup>(수도권 1.1만호, 비수도권 6.0만호)로 전년말(6.8만호)에 비해 4.7% 증가하였다<sup>19)</sup>.

그림 II-16. 월별 주택전월세거래량<sup>17)</sup>



주: 1) 2021년 6월 이후 집계범위가 확정일자 신고자료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자료로 확대  
 2) 22.5월중에는 전월세신고 계도기간 만료로 일시적으로 신고건수가 증가  
 자료: 국토교통부

그림 II-17. 아파트 입주 및 분양 물량<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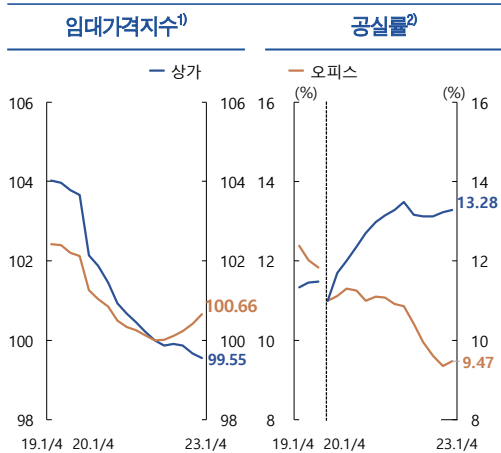
주: 1) 2023년 6월 16일 기준(단, 23년은 월별계획물량 합산 기준)  
 자료: 부동산R114

17) 지역별로 보면 2023년중 수도권(17.9만호 → 18.7만호)과 비수도권(15.1만호 → 17.5만호) 모두 전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8) 미분양주택 물량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2001년)한 이래 2021년 9월 최저수준(1.4만호)을 기록하였다가, 2021년 10월 이후 증가하고 있다. (21년말 1.8만호 → 22년말 6.8만호 → 23.4월말 7.1만호)  
 19) 미분양주택 관련 자세한 내용은 <현안 1> 「주택시장 관련 주요 금융안정 리스크 점검」을 참조.

## 오피스 임대가격 상승 지속, 상가는 하락

2023년 1/4분기말 오피스의 임대가격은 신규공급 제한, 주요 업무지구에 대한 견고한 입차 수요 등으로 2022년 3/4분기(100.23) 대비 0.43% 상승(100.66)하였으나, 상가 임대가격은 내수회복 지연, 소비심리 위축<sup>20)</sup> 등으로 2022년 3/4분기(99.87) 대비 0.32% 하락(99.55)하였다. 공실률의 경우 2023년 1/4분기말 기준 오피스 9.47%로 2022년 3/4분기(9.61%) 대비 소폭(0.13%) 하락한 반면, 상가는 13.28%로 2022년 3/4분기(13.12%) 대비 0.16% 상승하였다(그림 II-18).

그림 II -18. 상업용부동산 임대가격지수 및 공실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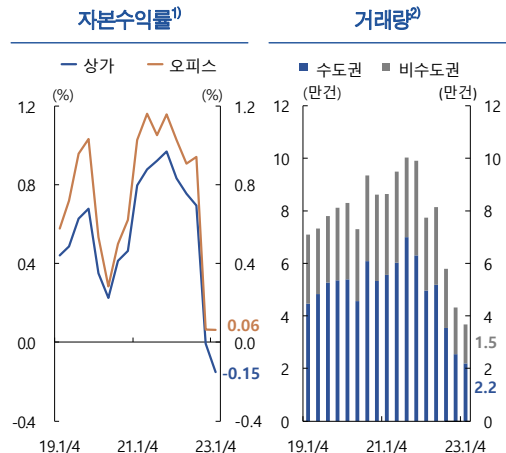


주: 1) 2021년 4/4분기=100. 상가는 중대형 기준  
 2) 2020년 1/4분기 표본개편으로 시계열 단절. 상가는 중대형 기준  
 자료: 한국부동산원

## 자본수익률 오피스·상가 모두 급격한 하락세

상업용부동산 자본수익률은 오피스와 상가 모두 급격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2023년 1/4분기중 오피스의 자본수익률은 0.06%로 2022년 3/4분기(0.94%) 대비 0.88%포인트 하락하였으며, 상가의 자본수익률은 -0.15%로 2022년 3/4분기(0.70%) 대비 0.85%포인트 하락하여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상업용부동산의 거래량은 2023년 1/4분기중 3.7만건으로 전년동기(7.7만건) 대비 큰 폭(52.7%) 감소하였다(그림 II-19).

그림 II -19. 상업용부동산 자본수익률 및 거래량



주: 1) 토지와 건물의 가격 변동을 반영한 금분기 자산가치의 전분기 대비 상승률로, (현재 자산가치 - 전분기 자산가치) / 현재 자산가치로 정의. 상가는 중대형 기준  
 2) 상업업무용(오피스텔 포함) 기준. 매매 목적 이외 분양, 증여, 교환 등도 포함  
 자료: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20) 소비자심리지수는 22.9월 91.6 → 22.12월 90.2 → 23.3월 92.0로 100을 하회(비관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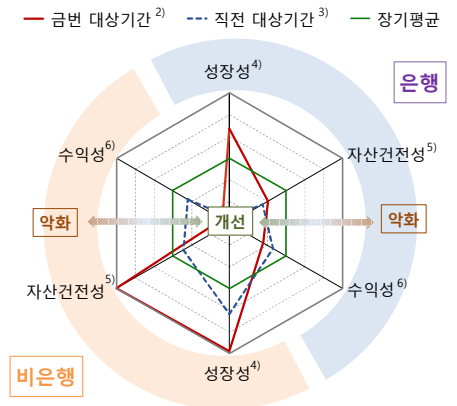
### Ⅲ. 금융기관

일반은행<sup>1)</sup>은 자산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자산건전성이 저하되었으나, 수익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자산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되고 자산건전성도 저하되었다. 다만 수익성은 업권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가 확대되면서 금융업권 간 부실전염 리스크도 소폭 증가하였다(그림 III-1).

그림 III-1. 금융기관 건전성 상황 변화 지도<sup>1)</sup>



주: 1) 각 지표별 장기 평균(5년)을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금번 대상기간과 직전 대상기간 지표의 상대적 수준을 지도에 도시  
 2) 2023년 1/4분기말  
 3) 2022년 3/4분기말(수익성은 2022년 1/4분기말)  
 4) 총자산증가율  
 5) 고정이하여신비율  
 6) 총자산순이익률(ROA)  
 자료: 한국은행 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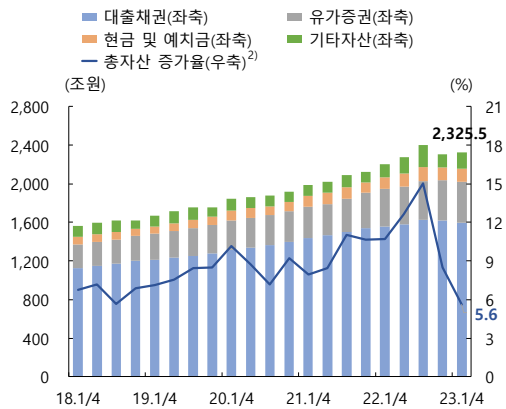
### 1. 은행

#### 자산 증가세 둔화

일반은행의 총자산은 2023년 1/4분기말 2,326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6% 증가하였으나 2022년 3/4분기(15.0%)에 비해 증가세는 둔화되었다.

자산항목별로 살펴보면, 대출채권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2.6%에 그쳐 2022년 3/4분기(8.1%) 대비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년대비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 지속의 영향으로 차주 부담이 가중되면서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은 각각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sup>2)</sup>로 전환되었다. 아울러 유가증권(8.1%), 현금 및 예치금(12.8%)도 작년 3/4분기(각각 17.4%, 24.7%) 대비 증가율이 낮아졌다(그림 III-2).

그림 III-2. 일반은행 총자산 규모<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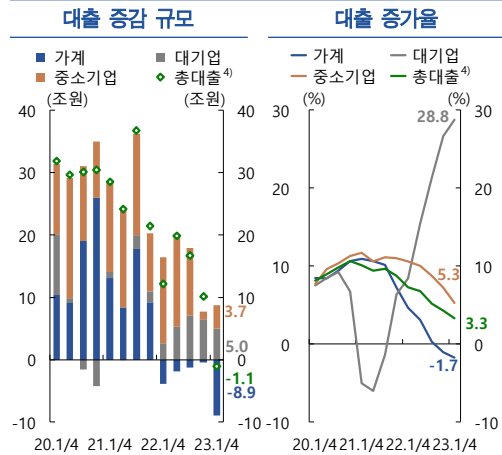
주: 1) 은행계정 기말 잔액 기준  
 2) 전년동기대비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1) 금융안정보고서의 은행부문은 일반은행(시중·지방은행)을 분석대상으로 하며, 영업모델이 상이한 특수은행(산업, 기업, 수출입, 농협 및 수협은행)은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및 토스뱅크는 시중은행에 포함된다.  
 2) 4월 이후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4분기중에는 증가 전환이 예상된다.

차주별 대출채권(원화대출금 기준)을 보면 가계 대출이 2023년 1/4분기중 전기대비 8.9조원 감소한 가운데 기업대출 증가 규모도 8.7조원에 그쳐, 금년 1/4분기말 일반은행의 전년동기대비 총대출 증가율(3.3%)이 2013년 3/4분기(3.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특히 가계대출은 전년동기대비 높아진 대출금리<sup>3)</sup>, 전세자금 수요 감소<sup>4)</sup> 등의 영향으로 1999년 1/4분기(-34.5%) 이후 가장 크게 감소(-1.7%)하였다.

한편, 대기업대출 증가율은 가계대출 축소에 대응한 대기업 고객 유치 노력, 회사채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 악화<sup>5)</sup> 등의 영향으로 금년 1/4분기 28.8%로 확대되었다. 중소기업 대출은 높은 대출금리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리스크관리를 위한 보수적 대출 취급 등의 영향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증가세가 둔화(22.3/4분기 8.8% → 23.1/4분기 5.3%)되었다(그림 III-3).

그림 III-3. 일반은행 대출<sup>1)</sup> 증감<sup>2)</sup> 규모 및 대출 증가율<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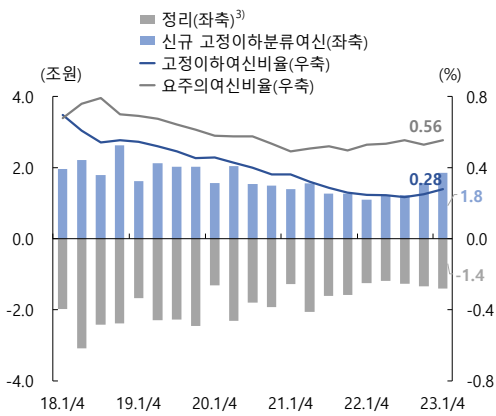
주: 1)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기준  
 2) 전기대비  
 3) 전년동기대비  
 4) 가계, 기업, 공공 및 기타자금대출금을 포함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3) 2023년 1/4분기 예금은행의 분기평균 잔액기준 가계대출금리는 4.93%로 전년동기(3.17%)대비 1.76%포인트 상승하였다.  
 4) 2023년 1/4분기 전세자금대출은 전년동기대비 3.4% 감소하면서 집계를 시작한 2020년 1/4분기 이후 첫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5) 2023년 1-3월중 주식 및 회사채를 통한 대기업 자금 조달(금융채, ABS 제외)은 20.5조원으로 전년동기(24.7조원) 대비 17.0% 감소하였다.

### 자산건전성 저하

일반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3년 1/4분기말 0.28%로 2022년 3/4분기(0.23%) 대비 0.05%포인트 상승하였다<sup>6)</sup>(그림 III-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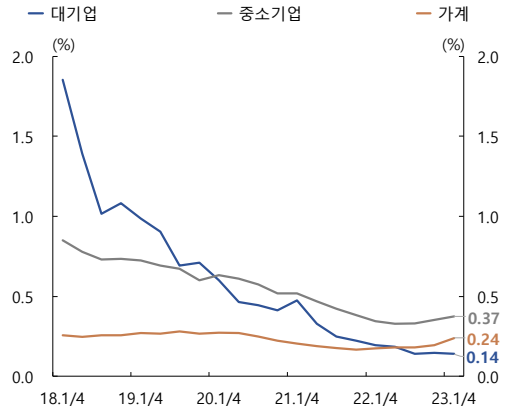
그림 III-4. 부실채권 발생정리 실적<sup>1)</sup> 및 고정이하여신비율<sup>2)</sup>



주: 1) 기간중 기준 2) 기말 기준  
3) 회수, 대손상각, 매각, 건전성재분류, 채권재조정 등 포함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차주별로 살펴보면 가계 및 중소기업 여신은 2023년 1/4분기말 각각 0.24%, 0.37%로 2022년 3/4분기말 대비 각각 0.04%포인트, 0.06%포인트 상승하였으나, 대기업여신은 0.14%를 기록하여 2022년 3/4분기말 수준을 유지하였다(그림 III-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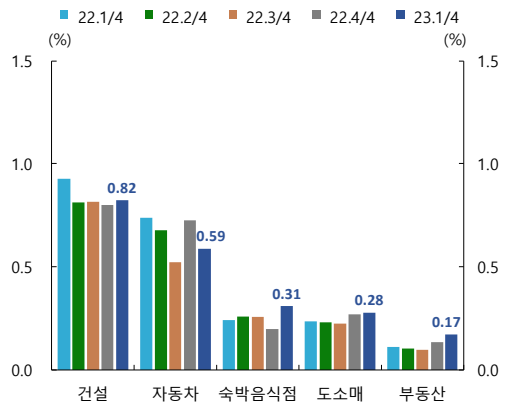
그림 III-5. 일반은행 차주별 고정이하여신비율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기업여신 고정이하여신비율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자동차(22년 3/4분기 0.52% → 23년 1/4분기 0.59%), 부동산(0.10% → 0.17%), 도소매(0.22% → 0.28%), 숙박음식점(0.26% → 0.31%)은 상승하였고, 건설(0.82% → 0.82%)은 지난 3/4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그림 III-6).

그림 III-6. 일반은행 주요 업종 고정이하여신비율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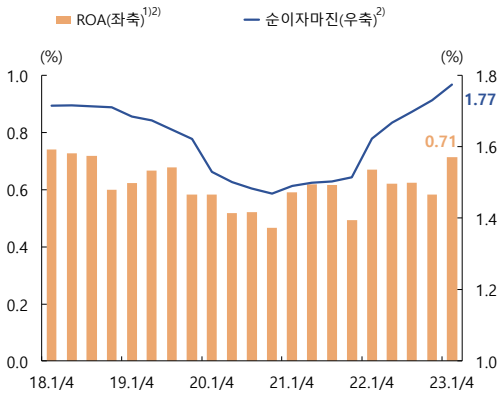
6) 한편, 2023년 1/4분기말 요주의여신비율은 2022년 3/4분기 대비 0.01%포인트(0.55% → 0.56%) 상승하였다. 차주별 요주의여신비율을 보면, 가계는 2022년 3/4분기 대비 0.07%포인트(0.29% → 0.36%) 상승한 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0.16%포인트(1.30% → 1.14%), 0.01%포인트(0.58% → 0.57%) 하락하였다.

## 수익성 양호

일반은행의 수익성은 전년동기에 비해 개선되었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2023년 1/4분기 0.71%(연율환산)로 2018년 3/4분기(0.7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순이자마진(NIM)은 예대금리차 확대<sup>7)</sup>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1.62%)대비 상승한 1.77%로 2014년 4/4분기(1.8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그림 III-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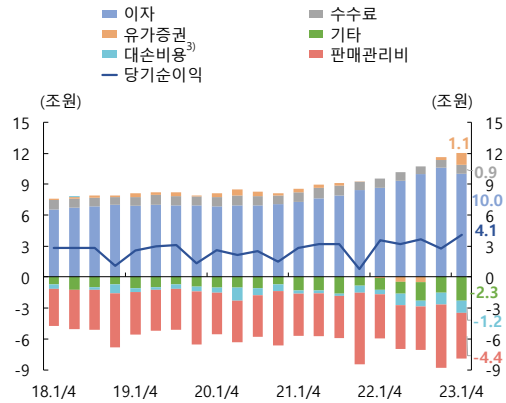
일반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023년 1/4분기중 4.1조원으로 전년동기(3.6조원)대비 0.5조원 증가하였다. 순이익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대출자산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예대금리차 확대의 영향으로 이자이익이 전년동기(8.7조원)대비 1.3조원 증가하였다. 유가증권관련이익은 매매이익을 중심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조원 늘면서 당기순이익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손충당금<sup>8)</sup>을 적립하면서 대손비용은 1.2조원으로 전년동기(0.4조원)대비 0.8조원 증가하였다(그림 III-8).

그림 III-7. 일반은행 수익성



주: 1) 대손준비금 전입전 금액 기준  
 2) 누적 분기 실적을 연율로 환산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그림 III-8. 일반은행 당기순이익 구성요소<sup>1)2)</sup>



주: 1) 대손준비금 전입전 금액 기준      2) 기간중 기준  
 3) 대손상각비, 총당금 순전입액 및 대출채권 매매손익 포함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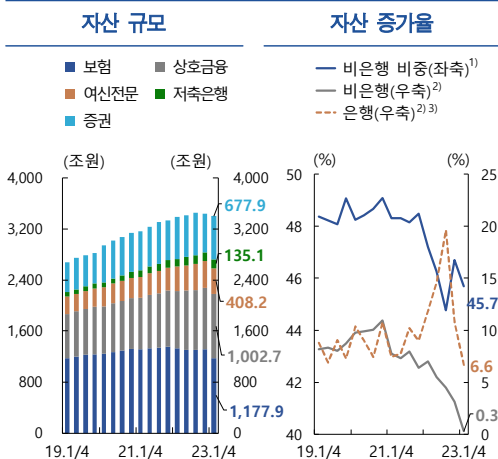
7) 예금은행의 분기평균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2023년 1/4분기 2.59%포인트로 전년동기(2.28%포인트) 대비 확대되었다.  
 8) 2023년 1/4분기말 대손충당금적립비율(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은 224.3%로 전년동기(199.7%) 대비 24.6%포인트 상승하였다.

## 2. 비은행금융기관

### 자산 증가세 둔화

비은행금융기관의 총자산은 2023년 1/4분기말 3,401.7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3% 증가에 그쳐 성장세가 가파르게 둔화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권<sup>9)</sup> 전체 총자산(7,446.7조원)에서 비은행금융기관 총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1/4분기말 45.7%로 하락하였다<sup>10)</sup>(그림 III-9).

그림 III-9. 비은행금융기관 총자산 규모 및 증가율



주: 1) (비은행금융기관 총자산) / (은행+비은행금융기관 총자산)  
 2) 전년동기대비  
 3) 일반은행 외에 특수은행 및 외은지점 포함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업권별로는 보험회사 총자산이 새로운 보험회계 기준 적용의 영향<sup>11)</sup>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1.5% 감소하였으며, 증권회사의 경우 주식투자 관련 투자자예치금 감소<sup>12)</sup> 등으로 총자산이 전년동기 대비 1.2% 증가하는데 그쳤다.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조달금리 상승 및 자산건전성 저하 등에 따른 대출 증가세 둔화에 기인하여 전년동기대비 8.3% 늘며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캐피탈사의 대출 증가세 둔화<sup>13)</sup> 등에 기인하여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8.2%로 하락하였다.

반면 상호금융조합 총자산은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11.5% 증가하여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였다(그림 III-10).

9)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을 포괄하며, 은행은 일반은행 외에 특수은행과 외은지점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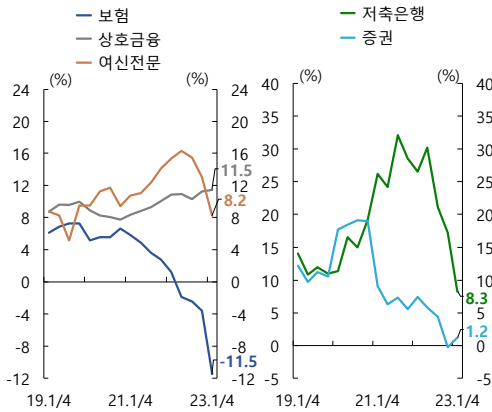
10) 2022년 3/4분기중 비은행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시적으로 큰 폭 하락하였는데, 이는 은행이 LCR 규제비용 정상화(당초 2022년말까지 92.5%로 상승 예정이었으나 2022년 10월말 정상화를 6개월간 유예)를 앞두고 은행채 발행을 큰 폭 확대한 데 기인한다.

11) 2023년부터 금융자산 분류 및 측정기준이 기존 IAS39에서 IFRS9으로 대체되면서 기존에 원가평가 대상이었던 금융자산의 일부가 시가평가 대상으로 변경되어 간의 금리상승으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이 반영되었다. 아울러 보험계약 관련 회계기준이 기존 IFRS4에서 IFRS17로 대체되면서 기존 자산항목인 미상각신계약비(2022년말 기준 총자산의 1.0% 차지)가 자산항목에서 제외되고, 보험계약대출(총자산의 4.7% 차지)이 보험부채 차감항목으로 변경되어 장부상 부채가 감소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4> 「신 회계기준 도입이 보험회사 재무현황에 미치는 영향 및 평가」을 참조.

12) 증권회사 고객예탁금은 2022년중 금리상승, 경기둔화 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3년 들어 다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전년동기대비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2023년 1/4분기말 -20.0%)이다.

13) 캐피탈사는 그동안 할부리스 영역에서의 경쟁 심화 등으로 가계 및 기업대출을 확대(2018-22년중 연평균 증가율 각각 3.4%, 17.1%)하며 높은 자산 성장률을 시현하였으나, 2022년 들어 조달금리 상승, 하반기 이후 부동산경기 둔화 본격화 등의 영향으로 대출 취급을 자제하면서 2023년 1/4분기중 가계대출 증가율이 감소(-12.2%)하고 기업대출 증가율은 큰 폭 둔화(4.2%)되었다.

그림 III-10. 비은행금융기관 업권별 총자산증가율<sup>14)</sup>



주: 1) 전년동기대비 2) 증권회사는 미수금 제외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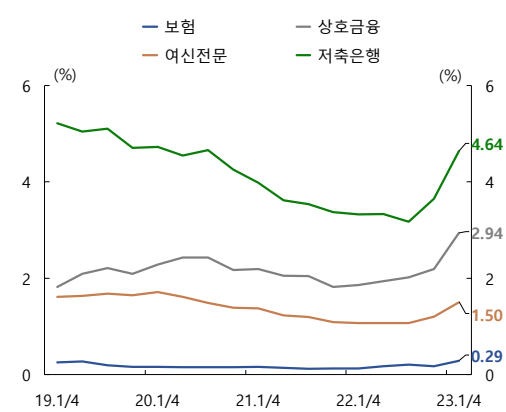
### 자산건전성 저하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은 모든 업권에서 저하되는 모습을 보였다.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3년 1/4분기말 4.64%로 2022년 3/4분기 이후 대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고정이하여신금액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2022년 3/4분기를 저점으로 상승 전환하였다.<sup>14)</sup> 상호금융조합의 경우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고정이하여신금액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94%로 상승하였으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1.50%로 2022년 3/4분기말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회사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29%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그림 III-11).

이와 같이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저하된 데는 그간의 금리상승에 따른 차주의 채무상환부담 증대, 부동산경기 부진에 따른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의 연체율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I-11. 비은행금융기관 고정이하여신비율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14) 저축은행의 2023년 1/4분기말 총여신은 2022년 3/4분기 대비 4.1% 감소한 반면, 고정이하여신잔액은 40.2% 증가하였다. 고정이하여신 증가액을 차주별로 살펴보면 가계대출이 13.3%, 기업대출이 70.5% 늘어나 기업대출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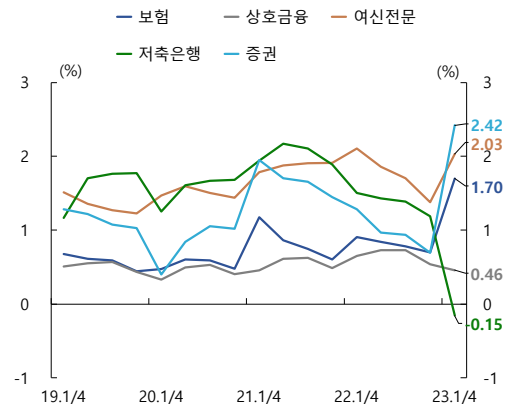
## 수익성 업권별로 상이

보험회사와 증권회사는 수익성이 개선되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전년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의 경우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2023년 1/4분기중 보험회사 총자산순이익률(ROA)은 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기준 변경<sup>15)</sup>, IFRS9 도입으로 늘어난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의 평가이익 확대 등의 영향으로 1.70%를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0.80%포인트 상승하였다. 증권회사 총자산순이익률은 유가증권 평가이익 및 배당금 수익<sup>16)</sup>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13%포인트 상승한 2.42%를 기록하였다. 여신전문금융회사 총자산순이익률은 이자비용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제도 변경의 영향으로 신용카드회사에서 대손준비금 환입이 발생<sup>17)</sup>하면서 전년동기(2.11%)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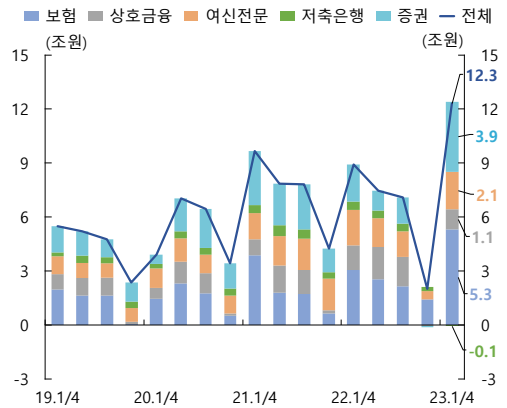
반면 상호금융조합 총자산순이익률은 2023년 1/4분기중 0.46%로 연체율 상승에 따른 대손비용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0.19%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저축은행의 경우 예금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이익 축소, 연체율 상승에 따른 대손비용 증가<sup>18)</sup> 등의 영향으로 총자산순이익률(-0.15%)이 2014년 3/4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그림 III-12, 그림 III-13).

그림 III-12. 비은행금융기관 총자산순이익률(ROA)<sup>1)</sup>



주: 1) 누적 분기 실적을 연율로 환산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III-13. 비은행금융기관 당기순이익<sup>1)</sup>



주: 1) 분기중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15) 2023년부터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보험계약 회계기준이 기존 IFRS4에서 IFRS17로 변경되면서 보험수익 인식 기준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경되고 신계약비의 상각기간이 기존 최대 7년에서 전체 보험계약기간으로 변경되었다.  
16) 2023년 1/4분기중 일부 증권회사에서 일회적으로 대규모의 배당금 수익(1.7조원)이 발생하였다  
17) 신용카드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 산정시 적용되는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약정에 대한 신용환산율이 은행, 보험 등 타 업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향 조정(기존 50% → 40%)되면서 감독규정 기준 총당금 필요 적립 규모가 감소해 대손준비금 환입이 발생하였다.  
18)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2023년 1/4분기말 기준 5.06%로 전년동기대비 2.48%포인트 증가하였다. 차주별로는 가계대출 연체율이 5.58%로 전년동기대비 1.49%포인트 증가하였으며, 기업대출 연체율은 5.07%로 전년동기대비 3.21%포인트 증가하여 기업대출의 연체율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손비용은 2023년 1/4분기중 1.0조원으로 전년동기(0.7조원) 대비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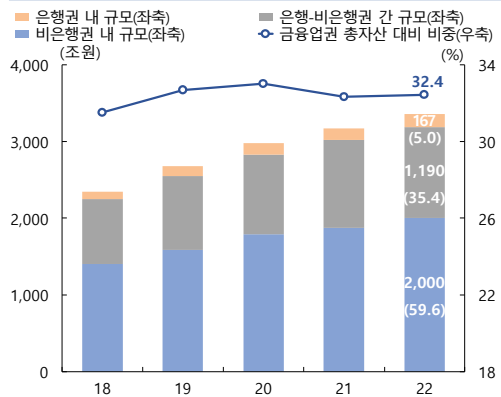
### 3. 상호연계성

#### 상호거래 증가세 확대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sup>19)</sup>는 2022년말 3,357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8% 늘어났으나, 증가율은 소폭 하락하였다.<sup>20)</sup> 이는 지난해 금융시장 변동성 증대에 따라 은행 및 외은지점의 파생상품 거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 등으로 보험 및 증권사 등의 채권운용 규모가 감소<sup>21)</sup>한 데 주로 기인한다. 다만 금융부문의 총자산(1경 347조원, 자금순환통계 기준)에서 상호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말 32.4%로 2021년말(32.3%)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를 권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은행<sup>22)</sup> 간 거래(167조원)는 일반은행의 특수은행채권 매입량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1.4%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비은행권 내 거래(2,000조원)는 보험회사의 투자펀드 운용액 및 신탁의 증권사 운용액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6.6% 증가하였다. 은행·비은행 간 상호거래(1,190조원)는 서민금융기관의 對은행 운용금액 증가<sup>23)</sup> 등으로 3.8% 증가하였다(그림 III-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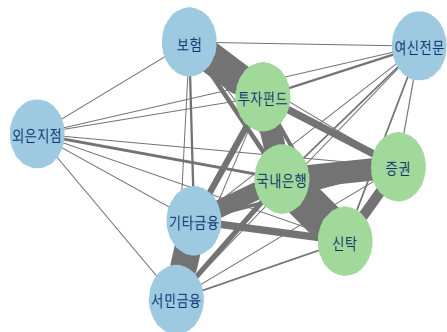
그림 III-14. 금융기관·업권 간 상호거래 현황<sup>1)2)</sup>



주: 1) 상호거래 규모는 자금순환통계 기말 기준  
 2) ( ) 내는 전체 상호거래 규모 대비 비중  
 자료: 한국은행

금융업권별로 보면 국내은행, 증권, 신탁 및 투자펀드가 업권간 상호거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22년 금융업권별 상호거래 규모는 은행·신탁 간 거래(270.7조원), 보험·투자펀드(241.7조원), 증권·은행(207.6조원) 등의 순으로 많다(그림 III-15, 표 III-1).

그림 III-15. 금융업권 간 상호연계 구조<sup>1)2)3)</sup>



주: 1) ●은 상호거래(업권간) 규모 기준 상위 4개 업권  
 2) 네트워크 시각화 분석기법을 활용하였으며, 업권 간 상호거래 규모에 비례하여 선 굵기가 크게 나타남  
 3) 2022년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19) 자금순환통계의 금융자산부채 잔액표, 현금 및 예금 명세서, 차입금 명세서, 유가증권 보유명세서 등 주요 조사표를 활용하여 예금, 대출, 파생상품 등이 포함된 48개 금융상품, 34개 금융업권 및 9개 기타 부문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2016년 12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금융안정 현안 분석> 「Ⅲ. 은행시스템 상호연계성 분석 및 횡단면 시스템 리스크 측정」을 참고  
 20)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 규모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2020년말 11.2% → 2021년말 6.5% → 2022년말 5.8%이다.  
 21) 2021년 및 2022년중 채권운용 증감 규모는 보험회사 +1.5조원 → -15.5조원, 증권회사 +6.0조원 → -15.2조원이다.  
 22)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을 포함하는 국내은행 기준이며 외은지점은 비은행권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23) 서민금융기관의 對은행 운용 규모는 2021년말 62.4조원 → 2022년말 74.1조원으로 증가하였다.

표 Ⅲ-1. 금융업권 간 업권별 상호거래 규모

(조원)

업권	은행	외은지점	신탁	투자펀드	보험	증권	기타 <sup>2)</sup>
은행	167.5	44.7	257.9	130.6	81.5	159.4	188.2
외은지점	29.8	36.3	6.7	7.3	4.4	11.9	8.8
신탁	12.8	5.3	60.4	15.7	19.0	18.9	86.8
투자펀드	73.0	1.7	70.2	43.1	235.3	60.1	70.3
보험	13.2	4.8	6.7	6.4	19.4	5.5	10.9
증권	48.2	16.2	123.5	59.2	25.6	109.7	42.5
기타	150.5	11.8	142.5	121.4	83.8	98.9	349.0

주: 1) 행 업권은 열 업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을, 열 업권은 행 업권을 통한 자금운용을 의미  
 2) 여신전문금융회사, 서민금융기관 등  
 자료: 한국은행

금융업권 간의 상품별 상호거래 현황을 보면, 주로 파생 및 주식 등의 상호거래가 증가하였다. 특히 외은지점 및 은행의 외환스왑거래 증가<sup>24)</sup> 등으로 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대폭 증가(60.1조원 → 131.0조원)하였다(표 Ⅲ-2).

표 Ⅲ-2. 금융업권 간 상품별 상호거래 규모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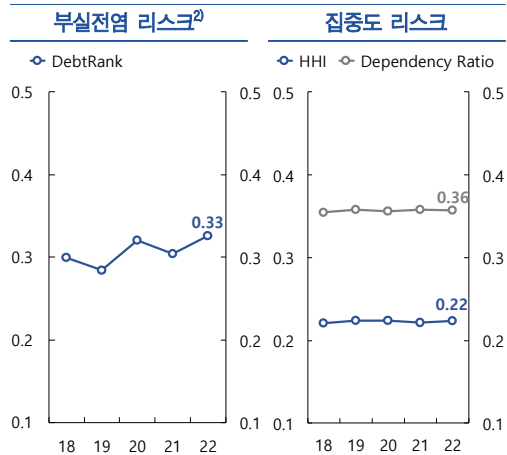
상품	2021년		2022년		B-A
	규모(A)	비중	규모(B)	비중	
예금	778.1	24.5	803.0	23.9	24.9
채권	716.3	22.6	709.6	21.1	-6.7
주식 <sup>1)</sup>	657.1	20.7	706.0	21.0	48.9
대출	153.6	4.8	195.4	5.8	41.8
RP	172.8	5.4	178.4	5.3	5.6
파생	60.1	1.9	131.0	3.9	70.9

주: 1) 주식에는 투자펀드지분, 주가연계증권(ELS) 등이 포함  
 자료: 한국은행

### 부실전염 리스크는 전년동기대비 소폭 상승

금융업권간 부실전염 리스크 지표인 DebtRank<sup>25)</sup>는 외은지점의 외환스왑거래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한편 금융업권 간 상호거래에서 집중도 리스크를 나타내는 HHI지수<sup>26)</sup> 및 단일 거래상대방 의존율(Dependency Ratio)<sup>27)</sup>은 전년동기와 대체로 비슷하였다(그림 Ⅲ-16).

그림 Ⅲ-16. 금융업권 간 상호거래 관련 부실전염 및 집중도 리스크<sup>1)</sup>



주: 1) 기말 기준  
 2) 특정 업권의 도산에 따른 손실 합계가 전체 금융권 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평균으로 숫자가 클수록 부실전염 리스크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 24) 22년말 예금취급기관의 파생상품 잔액은 195조원으로 21년말(81조원) 대비 2.4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환율 급등(21년말 1185원/달러 → 22년말 1267원/달러) 및 시장금리 급등(국고채 3년물 기준 21년말 1.80% → 22년말 3.73%)으로 스왑 수요가 증대된 데 주로 기인한다.
- 25) 특정 업권의 도산에 따른 충격이 거래상대방에게 상호거래 익스포저를 통해 순차적으로 확산되어 나타나는 손실 합계가 전체 금융권 내 운용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업권별로 계산하고 이를 단순 평균한 값이다. 예컨대, DebtRank 0.05는 특정 업권의 도산에 따른 상호거래 관련 손실이 평균적으로 업권 전체 운용자산 대비 5%의 손실을 초래함을 의미한다(Battiston et al., "DebtRank: Too Central to Fail? Financial Networks, the Fed and Systemic Risk", 2012).
- 26) 각 업권단위로 여타 업권과의 거래비중 제곱 합을 산출한 후 가중평균한 값으로, 소수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의존도를 의미한다.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비중과 가중치는 자금운용 거래기준으로 산출하였다.
- 27) 각 업권단위로 거래 규모가 가장 큰 업권과의 거래비중을 산출한 후 가중평균한 값으로, 단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의존도를 의미한다.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비중과 가중치는 자금운용 거래기준으로 산출하였다.

## 참고 3.

### 인터넷전문은행의

### 경영 현황 평가 및 시사점<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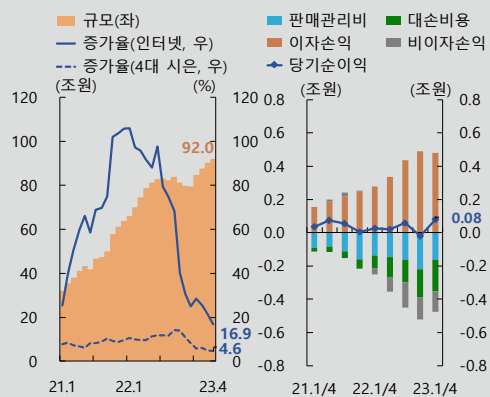
국내 인터넷전문은행<sup>2)</sup>은 2017년 출범 이후 고객 수가 560만명(17년말)에서 2022년말 3,430만명으로 급증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은 비대면채널의 편의성 및 비용 절감에 따른 금리경쟁력을 바탕으로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에 기여하였으나,<sup>3)</sup>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이하 'SVB') 파산 사태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 현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전반적인 경영 현황과 자금 조달·운용 상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기로 한다.

#### 일반 현황

2023년 4월말 인터넷전문은행의 총자산 규모는 92.0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9% 증가하였다. 2021년 토스뱅크 출범 영향이 줄어들면서 자산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여타 4대 시중은행(4.6%)보다 높은 수준이다. 작년 상반기까지는 BIS 자기자본비율 제고, 유동성 확보 등을 위해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중심으로 자산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하반기부터는 대출이 총자산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sup>4)</sup>

수익성 측면을 보면, 작년 하반기 이후 예대마진<sup>5)</sup>이 확대되면서 이자이익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영업 초기의 IT기술투자 비용, 대손비용 및 유가증권 관련 손실, 다변화되지 않은 수익기반 등으로 인해 당기순이익 규모(23년 1/4분기중 800억원)는 여전히 낮은 모습이다. 이에 따라 총자산순이익률(23년 1/4분기 0.51%)도 여타 시중은행(0.74%) 대비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 총자산 규모 및 증가율<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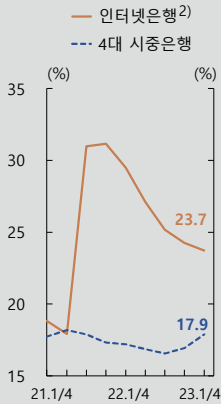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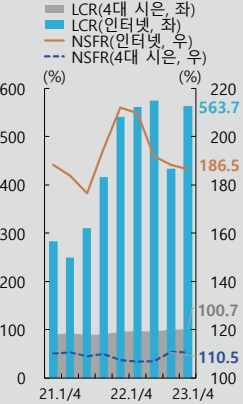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은 양호한 손실흡수 및 유동성 대응능력을 유지하고 있다.<sup>6)</sup> 2023년 3월말 인터넷전문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23.7%로 여타 4대 시중은행(17.9%) 및 최저규제(10.5%) 수준을 큰 폭 상회하고 있다. 또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및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은 각각 563.7% 및 186.5%로 규제수준(LCR, 22년 10월~23년 6월 92.5%)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 1) 본고는 김자혜·홍준의·박서정(은행리스크팀)·임영주(인터넷전문은행팀)가 작성, 이종한(금융리스크분석부장)·박장호(은행리스크팀장)·이장욱(인터넷전문은행팀장)이 검토하였다.
- 2) 2017년에는 케이뱅크(4월)와 카카오�뱅크(7월)가, 2021년에는 토스뱅크(10월)가 은행업 신규 인가를 받고 출범하였다. 본고는 인터넷전문은행 전체 합산 데이터를 바탕으로 업계 전반의 상황을 점검하였으므로, 분석결과가 개별은행 상황과는 상이할 수 있다.
- 3)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효과 및 정책과제」(김미루·오윤해·임상빈, 2021)를 참고하길 바란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이 여타 시중은행의 경쟁자가 되기에는 아직 영업 규모가 작아 실질적인 경쟁 촉진 효과는 크지 않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금융위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2022).
- 4) 유가증권 증가율이 2022년 6월말 311.5%(전년동기대비)에서 2023년 4월말 6.1%로 크게 하락한 가운데, 원화대출금은 같은 기간 동안 40% 안팎의 증가율을 지속하였다.
- 5) 순이자마진(NIM)은 2023년 3월말 2.29%로 전년동기대비 0.65%포인트 상승하였다.
- 6) 이는 소매예금을 통한 조달과 국공채 등 고유동성자산 보유 비중이 높은 데 주로 기인한다.

자기자본비율<sup>1)</sup>



유동성 규제비율<sup>1)</sup>



주: 1) 기말 기준(LCR은 평잔 기준)  
 2) 21년중 신규 은행 출범, 기존 은행의 유상증자 등으로 자기자본비율이 큰 폭 상승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자금 조달·운용 상황 점검

우리나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구조를 보면, 여타 시중은행에 비해 조달 측면에서는 예금 비중이, 운용 측면에서는 유가증권 보유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하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금 조달·운용 구조를 중심으로 수신예금의 안정성과 대출, 유가증권 등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점검하였다.

자금 조달·운용 구조<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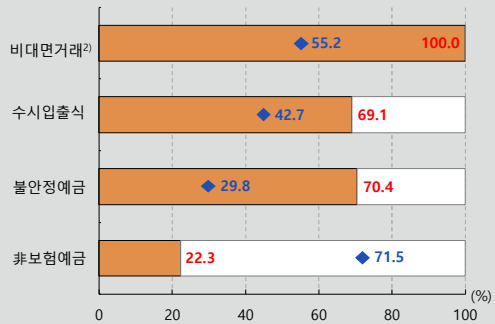
자산		부채 및 자본	
현금 및 예치금	6.9 (5.8)	수시입출식예금	59.6 (28.0)
유가증권	32.6 (18.1)	기타 저축성예금	27.7 (36.2)
대출금	55.9 (62.6)	시장성수신	1.3 (6.6)
유무형 고정자산	0.4 (0.8)	기타부채	1.6 (22.9)
기타자산	4.2 (12.7)	자본금	9.8 (6.3)

주: 1) 2023년 3월말 기준 총자산 대비 비중  
 2) ( ) 내는 4대 시중은행 비중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수신예금의 안정성

인터넷전문은행은 여타 시중은행에 비해 예금 조달 의존도가 매우 높다. 인터넷 기반 은행이라는 태생적 특성상 모든 예금이 비대면 예금인 가운데, 수시입출식예금 비중(총예금의 69.1%)과 비결제 기준 불안정예금<sup>7)</sup> 비중(70.4%)이 여타 4대 시중은행(각각 42.7% 및 29.8%)에 비해 높아 수신예금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금이 소액·소매 예금으로 총예금의 77.7%가 예금보험 대상이고 非보험예금<sup>8)</sup> 비중은 22.3%에 불과하다는 점은 자금 안정성에 대한 예금자들의 우려를 상당폭 낮추는 요인인 것으로 평가된다.

예금의 안정성 평가 지표<sup>1)</sup>



주: 1) 2023년 3월말 기준 총예금 대비 비중 ( ◆는 4대 시중은행의 값을 의미)  
 2) 인터넷, 모바일, 폰뱅킹, CD/ATM 거래의 합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예금보험공사

대출 건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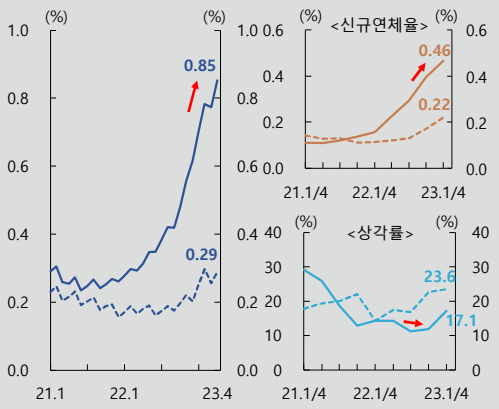
인터넷전문은행 대출이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39.7%, 2023년 4월말)를 이어가는 가운데, 대출 연체율은 여타 시중은행보다 2배 이상 높은 0.85%로 2022년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

7) LCR 규제 체계는 소매예금 중 전액 부보 대상이고 급여자통예치계좌 등 거래계좌에 연계되어 있거나, 예금주가 은행과 긴밀한 관계(established relationship)인 예금의 경우 안정예금으로 분류하여 5%의 이탈률을, 그 외 소매예금은 불안정예금으로 10%의 이탈률을 적용한다.  
 8) 부보 예금 중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 및 비부보예금을 포함한다(이하는 2023년 3월말 非보험예금 규모, 예금보험공사).

부보예금		비부보예금(B)	총예금	非보험예금(A + B)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A)			
61.4조원	17.4조원	0.2조원	78.9조원	17.6조원

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sup>9)</sup>, 신규 은행 영업 초기에 취급한 대출의 연체 발생,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의 이자부담 증가 등의 영향으로 신규연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데다, 최근 연체차주의 채무조정 신청 증가 등으로 연체채권의 대손상각이 지연된 데 기인한다.

대출 연체율<sup>12)</sup>      신규연체율<sup>13)</sup> 및 상각률<sup>1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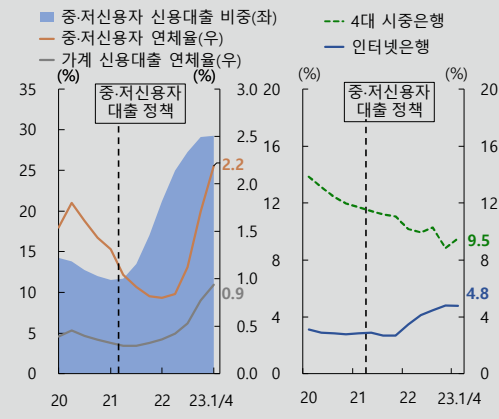


주: 1) 실선은 인터넷전문은행, 점선은 4대 시중은행을 의미  
 2)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3) 분기중 신규연체액/전기 원화대출 잔액  
 4) 분기중 상각액/전기 연체채권 잔액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는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개선 및 포용금융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대출 건전성에는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가계 신용대출 기준) 대출 비중(96.1%)이 여타 4대 시중은행(80.2%)보다 높고 최근 중·저신용 및 저소득 차주에 대한 신용대출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 하반기 이후 중·저

신용자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sup>10)</sup>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sup>1)</sup> 저소득<sup>3)</sup> 차주 대출 비중  
 대출 비중 및 연체율<sup>2)</sup>



주: 1) KCB 기준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에 대한 대출  
 2)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3) 연소득 2천만원 이하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은행연합회, 개별 은행 자료

**유가증권 연계 금리위험<sup>1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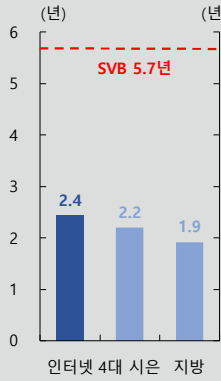
인터넷전문은행의 유가증권 보유 비중(총자산의 32.6%, 4대 시중은행 18.1%)이 높은 상황에서, 수시 입출식예금으로 조달한 자금을 장기채권으로 운용할 경우 시장금리 상승시 순자산가치 하락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sup>12)</sup>

이러한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보유 유가증권의 평균 듀레이션<sup>13)</sup>을 시산해 본 결과 2023년 4월말 2.4년으로 여타 시중은행(1.9~2.2년)과 큰 차이가 없으며 미국 SVB(5.7년)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금리 변동으로 인한 보유 유가증권의 가치변화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추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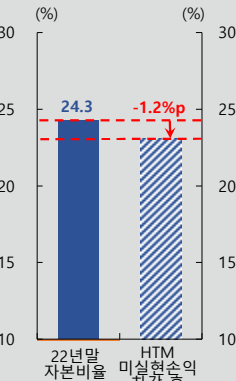
9)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 계획」(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년 5월)에 따라 감독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2023년말 30%를 상회하도록 확대할 예정인 가운데, 카카오뱅크는 30%, 케이뱅크는 32%, 토스뱅크는 44%를 각각 목표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10) 다만 혁신 기반 포용금융 확대라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높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인터넷전문은행 제도가 정착된 미국의 경우 연체율이 대략 3% 수준이다.  
 11) 본고에서의 금리리스크는 금리 변동으로 보유 유가증권의 가치가 하락하는 리스크를 의미한다.  
 12) 최근 파산한 미국 SVB의 경우 저원가성예금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장기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과도한 만기변환(maturity transformation)으로 인해 시장금리 상승 국면에서 평가손실이 확대되었다.  
 13) 은행이 매입한 채권의 원리금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 기간으로 채권의 실효만기를 의미한다.

작년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 보유 유가증권의 미실현손실은 총 자기자본의 8.7%이고, 만기보유증권(HTM, Held to Maturity)의 만기 이전 매도시 예상손실을 모두 반영하더라도 자본비율은 1.2%포인트 하락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유가증권 평균 듀레이션<sup>1)</sup>



채권평균손실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하락<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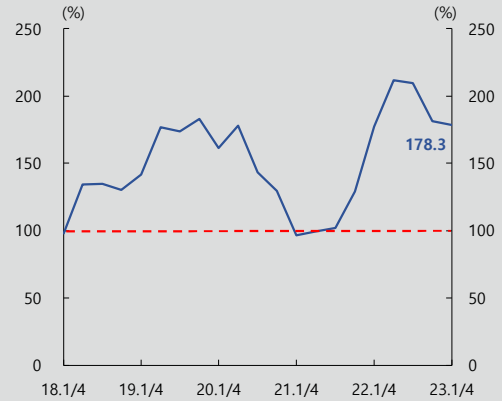


주: 1) 2023년 4월말 기준  
 2) 2022년중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만기보유증권(HTM)의 미실현손실을 반영한 자기자본비율 변동분(매도가능증권 미실현손실은 22년말 자기자본비율에 기 반영)  
 자료: 에탁결제원,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개별 은행 자료

### 예금 이탈 대응력

예금자들의 불안심리 확산으로 단기간에 예금이 급속히 이탈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이 고유동성자산 처분을 통해 대응 가능한지 점검하기 위해 非보험예금 대비 고유동성자산<sup>14)</sup> 비율을 산출하였다. 2023년 3월말 동 비율은 178.3%로 작년 하반기 가 파른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하락에도 불구하고 100%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非보험예금이 전액 이탈되더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은 고유동성자산을 활용하여 예금지급 요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非보험예금 대비 원화 고유동성자산<sup>1)</sup> 비율



주: 1) 시가평가된 유가증권 잔액에 LCR 고유동성자산 인정비율(50~100%)을 적용하여 산출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예금보험공사

### 평가 및 시사점

우리나라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 현황 및 자금 조달운용 상황을 점검한 결과, 미국 SVB 등과 같은 대규모 예금 이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가운데, 위기시 대응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술적으로 이탈이 용이한 비대면 예금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인터넷전문은행은 긴밀한 관계(established relationship)의 예금을 적극 확보<sup>15)</sup>하는 등 수신예금의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의 경우 자금 조달·운용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유동성 스트레스 상황의 상시적 점검이 긴요하다.

한편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취지에 따른 본연의 역할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만, 향후 부실 확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연체채권 대손상각 및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 노력을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 역량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14) LCR 분자의 구성 항목중 하나인 원화 고유동성자산(평잔)으로, 시가평가된 유가증권 잔액에 고유동성자산 인정비율(50~100%)을 적용하여 산출됨에 따라 작년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유가증권(만기보유증권 포함)의 미실현손실이 반영되어 있다.  
 15) 예를 들어, 급여자동예치계좌나 신용/체크카드 사용 및 자동이체 등록 예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참고 4.

### 신 회계기준 도입이 보험회사 재무 현황에 미치는 영향 및 평가<sup>1)</sup>

국내 보험업계는 2023년부터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9, IFRS17이 전면 도입됨에 따라 재무관리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sup>2)</sup>를 맞이하게 되었다. 신 회계기준은 당초 2021년 도입 예정<sup>3)</sup>이었으나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보험회사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2년 간 연기되었다가 금년부터 모든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이하에서는 신 회계기준의 주요 내용과 동 기준 도입이 보험회사 재무현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였다.

#### 신 회계기준 주요 내용

먼저 신 회계기준 중 금융자산에 대한 기준서인 IFRS9은 금융자산의 범주를 조정하였으며 자산분류 및 가치측정을 개별 보험회사 결정(IAS39)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에 따르도록 변경하였다. 다음으로 보험계약에 대한 기준서인 IFRS17은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특히 보험부채를 최선추정부채,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의 3개 요소<sup>4)</sup>로 구분하여, 미래 현금유출 및 수익성에 대한 정보가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 2023년부터 도입되는 회계기준 주요 내용

구분	기존	신규	
	IAS39	IFRS9	
분류기준	보유목적 및 의도	객관적 기준 (계약상 현금흐름 사업모형)	
금융 자산 범주	-당기손익인식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sup>1)</sup>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sup>2)</sup> -상각후 원가측정(AC) <sup>3)</sup>	
손상인식	발생손실 모형	기대신용손실 모형	
보험 계약	부채평가	원가평가	시가평가
	부채 구성요소	책임준비금	최선추정부채,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
	수익인식	현금주의	발생주의
		IFRS4	IFRS17

주: 1)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2) 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3) Amortized Cost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한국회계기준원

#### 보험회사 재무현황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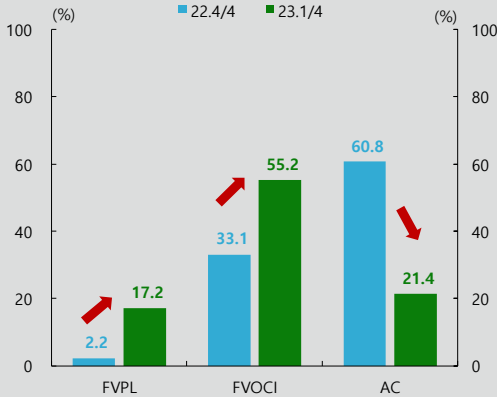
##### 시가평가대상 자산 비중 대폭 확대

IFRS9 적용으로 보험회사 금융자산 중 상당 규모가 시가평가 대상으로 전환되었다. 2023년 1/4분기말 현재 2022년말 대비 보험회사의 금융자산 분류 비중 변화를 보면, 시가로 평가해야 하는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금융자산의 비중은 각각 15.0%포인트, 22.1%포인트 확대된 반면 시가로 평가하지 않는 상각후 원가측정(AC) 자산의 비중은 39.4%포인트 줄어들었다.<sup>5)</sup> 이러한 시가평가대상 자산 비중 확대에는 보험회사들

1) 본고는 이영선·최신·도지윤(금융시장연구팀)이 작성, 김명철(공개시장부장)·한민(금융시장연구팀장)이 검토하였다.  
 2) 신 회계기준에 따른 보험회사 총자산순이익률은 금년 1/4분기중 1.70%로 전년동기(0.91%) 대비 대폭 상승하였다.  
 3) IFRS9(제1109호 기준서)은 2014년에 발행된 금융상품 분류 및 측정에 관한 회계기준으로 2018년부터 국내에 적용되었으나 보험회사의 경우 IFRS17 도입시점인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면제되었다. 다만 보험사업이 비주류인 금융그룹에 속한 일부 보험회사는 2018년부터 그룹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IFRS9을 조기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공시하여 왔다.  
 4) 최선추정부채는 보험계약의 미래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를, 위험조정은 최선추정부채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적용하는 부채를 의미한다. 또한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으로부터 인식할 미래 이익의 현재가치를 의미한다.  
 5) 상각후 원가측정(AC) 자산의 80% 이상이 대출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채권, 주식 등 투자목적의 유가증권은 대부분 시가평가 대상으로 분류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23년 1/4분기말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중 FVPL 비중은 22.2%, FVOCI는 69.6%로 나타났으며, AC자산으로 분류된 경우는 5.0%에 불과하였다. 한편, AC자산 중 대출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81.8%로 나타났다.

이 일상적 유동성 관리 및 이자수취 등을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sup>6)</sup>을 채택하고 있는 점과 지난해 보유자산 가치하락에 대응하여 채권을 재분류<sup>7)</sup>한 효과가 함께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IFRS9 적용에 따른 금융자산 분류 변화<sup>12)</sup>**



주: 1) 특별계정자산 제외  
 2) 2022년 4/4분기 FVPL은 당기손익인식증권, FVOCI는 매도가능증권, AC는 만기보유증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을 의미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수익증권의 당기손익 영향 확대**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금융자산 비중이 수익증권<sup>8)</sup>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금융자산의 가치변화가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졌다. 보험회사는 그동안 수익증권을 주로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량적으로 분류해 오면서 수익증권의 이자(배당)수익만을 당기손익에 반영해왔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IFRS9 하에서 수익증권 항목 중 배당이 발생하는 자산군

이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금융자산 범주에 편입<sup>9)</sup>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익증권 평가손익이 당기손익에 반영된다. 금년 1/4분기중 발생한 평가손익을 별도 공시한 보험회사를 살펴보면 금리하락 등에 힘입어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금융자산 가치가 증가하면서 당기손익이익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기손익 및 FVPL 평가손익 비교**

구분	22.1/4			23.1/4		
	A사	B사	C사	A사	B사	C사
당기손익	3,570	196	263	7,948	1,007	1,054
(평가손익 <sup>11)</sup> )	5	-35	-18	1,841	1,553	1,764

주: 1) 1/4분기중 FVPL로 편입된 금융자산의 평가손익 기준  
 자료: 각 사 분기보고서

**부채의 시가평가로 자본 상황 개선**

보험업권의 자본 상황은 자산만 시가평가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IFRS17 기준에 따라 부채에도 시가평가가 적용되면서 상당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듀레이션 갭(자산-부채)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부채의 가치가 자산의 가치보다 더 크게 감소하면서 2023년 1/4분기 중 부채 감소에 따른 이익인 보험계약 금융손익 규모는 62.9조원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금융자산의 손실 규모(-33.8조원)를 크게 상회하였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자본이 큰 폭 증가(+69.6조원)하면서 지난해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평가손실 확대로 증대되었던 자본관리 부담도 일부 완화된 것으로 판단된다.<sup>10)</sup>

6) IFRS9에서는 ① 일상적 유동성 수요 관리, ② 특정이자수의 유지, ③ 금융자산과 자금조달을 위한 부채의 만기 일치 등을 추구하는 사업모형을 기타포괄손익인식 금융상품(舊 매도가능증권) 보유 사업모형으로 제시한다.  
 7) 지난해 금리 상승으로 보유채권 평가손실이 크게 확대되면서 자본관리 이슈가 부각되자, 국내 보험업권은 이에 대응하여 사상 최고 수준인 163조원 규모의 보유채권을 매도가능증권에서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하였다.  
 8) 수익증권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투자기관인 신탁업자 및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주식, 파생상품, 채권, 콜, CP, RP 등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고 그에 따른 운용성과를 투자자에게 출자비용에 따라 분배해주는 권리증서를 의미하며 통상 배당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9) IFRS9에서는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와 매각을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채무상품을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FVPL)로 분류한다.  
 10) 2021년 하반기 이후 금리 상승에 따른 보험회사 보유 채권의 대규모 평가손실로 RBC비율이 큰 폭 하락한 바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규제 완화(당초 가용자본으로 인정하지 않던 LAT인여액(원가평가 보험부채-시가평가 보험부채)의 40%를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으로 인정, 22.6월)로 자본관리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RBC비를 하락세가 2022년말까지 지속되었다.

**보험회사 자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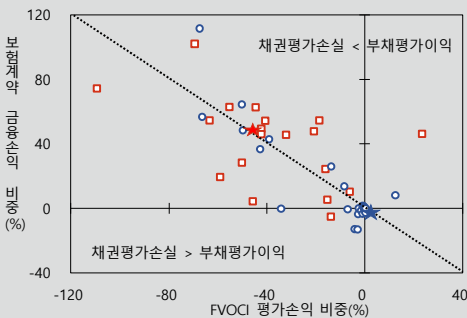
(조원)

구분	전체		생명보험		손해보험	
	22.12	23.3	22.12	23.3	22.12	23.3
자본총계	88.8	158.5	50.0	100.6	38.8	57.9
기타포괄손익 누계	-18.9	32.3	-12.9	28.4	-6.0	3.9
(FVOCI 평가손익)	-15.6	-33.8	-10.1	-20.4	-5.5	-13.4
(보험계약 금융손익)	-	62.9	-	49.0	-	13.9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다만 이를 업권별, 그리고 개별 보험회사별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보유 금융자산과 보험계약의 특성에 따라 신 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영향이 차별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손해보험업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금융자산 평가손익(-13.4조원)과 보험계약 금융손익(+13.9조원)이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개별 회사별로도 45도 선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반면 생명보험업권의 경우 업권 전체로는 부채 감소에 따른 이익이 금융자산의 평가손실을 크게 상회하였으나 개별 회사별로는 분포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일부 생명보험회사들의 경우 금융여건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 관리 부담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권별 자본총계 대비 보험계약 금융손익 및 FVOCI 평가손익 비중 분포<sup>1)</sup>**



주: 1) 파란원은 손보사, 빨간네모는 생보사, 별표는 각 업권별 중위값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보험계약마진은 업권별로 크게 차별화**

IFRS17 적용으로 처음 측정되는 보험계약마진<sup>11)</sup>은 계약시점에는 보험부채로 계상된 후 점진적으로 보험회사의 수익으로 인식되며, 보험계약 보유 특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2023년 1/4분기말 국내 보험회사의 보험계약마진은 117조원으로 전체 보험계약부채의 15.9%를 차지하고 있다. 업권별로는 손해보험회사의 보험계약마진 비중이 30.5%로 생명보험회사(10.3%)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험계약 기간중 보험계약마진이 높게 측정<sup>12)</sup>되는 보장성보험 비중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IFRS17 적용에 따른 보험회사 보험계약부채<sup>12)</sup>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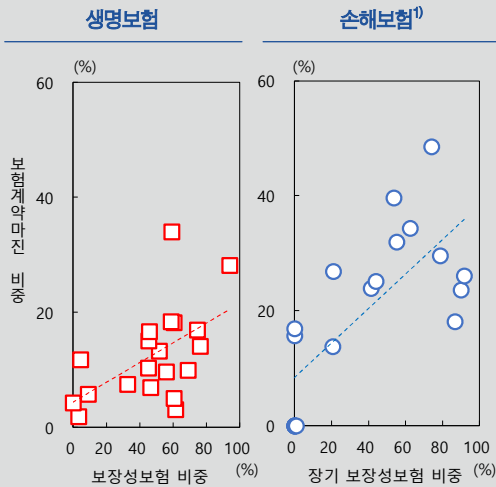
전체	생명보험	손해보험
<b>IFRS 4(22년말)</b>		
책임준비금 (941.7, 100%)	책임준비금 (674.2, 100%)	책임준비금 (267.5, 100%)
↓	↓	↓
<b>IFRS17(23.3월말)</b>		
최선추정부채 (578.0, 78.6%)	최선추정부채 (466.4, 87.7%)	최선추정부채 (111.6, 54.8%)
보험계약마진 (117.0, 15.9%)	보험계약마진 (54.8, 10.3%)	보험계약마진 (62.2, 30.5%)
위험조정 (22.0, 3.0%)	위험조정 (10.7, 2.0%)	위험조정 (11.3, 5.5%)
보험료배분 접근법 (18.8, 2.5%)		보험료배분 접근법 (18.8, 9.2%)

주: 1) 재보험계약부채 포함  
 2) 단위는 조원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이를 개별 보험회사별<sup>13)</sup>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업권의 경우 보험계약마진 비중이 보장성보험 비중과 대체로 양의 관계를 보이며 2%~34% 수준을 나타내었다. 손해보험업권의 경우 대부분의 계약이 보장성보험으로 구성되는 만큼 보험계약마진 비중도 장기형 보유 비중에 따라 14%~49%로 큰 차이를 보였다.

11)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의 미래 현금순유입 현가(예상치)에 불확실성에 따른 조정액(위험조정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IFRS17에서는 보험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험계약마진 상각을 이익으로 인식하므로, 보험계약마진 규모가 클수록 미래 인식되는 수익이 큼을 의미한다.  
 12) 보장성상품은 고객에게 수취한 보험료보다 만기환급금 등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보험계약마진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저축성보험은 수취보험료보다 만기환급금이 더 큰 상품으로 보험계약마진이 작다.

## 업권별 보험계약부채 대비 보험계약자산 비중



주: 1) 보유 보험계약 중 보험계약자산이 높게 측정되는 장기 보장성보험 계약 비중과 비교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 평가 및 시사점

국내 보험회사들의 전반적인 재무상황은 신 회계기준 적용으로 자본 규모가 확대되면서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개별 회사별로는 보유 자산과 보험계약의 특성에 따라 기준 변화의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향후 보험업권은 신 회계기준에 맞추어 기업가치를 재고하고자 자산부채관리(ALM, Asset Liability Management) 전략, 투자 포트폴리오 측면 등에서 새로운 행태변화가 예상된다. 먼저 시가평가가 자산·부채에 모두 적용됨에 따라 듀레이션 갭(자산·부채) 관리의 중요성<sup>14)</sup>이 높아진 만큼, 향후 보험회사의 ALM 전략에

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부채 구조조정을 통한 듀레이션 갭 축소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자산 듀레이션 확대 및 자산·부채 간 현금흐름 매칭에 한층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보험업권이 활용한 장기채권 현물투자 및 채권 선도거래 외에 금리파생상품 활용<sup>15)</sup>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보험회사들은 FVPL 금융자산 비중 확대에 따라 커질 수 있는 당기손익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증권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는 동시에 고수익보다는 안정적인 자산에 대한 투자<sup>16)</sup>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보험회사들의 투자행태 변화가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향후 보험계약자산 관련 지표가 기업가치 제고에 중요한 요소로 대두된 만큼, 보험업권은 외형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그간 보험회사들이 IFRS17 도입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자산이 큰 보장성상품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이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저축성보험 대비 보험료 수입이 적은 보장성상품으로의 영업 쏠림으로 현금유동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험업권의 유동성 사정 등을 꾸준히 점검해 나가야 하겠다.

13) 한편 IFRS17에서는 보험계약자산의 구체적 산출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데다 측정 시 추정요소들도 적지 않아 보험회사별 계리적 가정이 지의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산정기준의 객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3.5.31일)하였으며, 이는 2023년 6월 결산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14) 기존 회계기준에서는 자산은 시가평가, 부채는 원가평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본변동성은 금리부 자산의 듀레이션에 의해 결정되지만 새로운 회계기준에서는 듀레이션 갭에 따라 자본변동성이 결정된다.

15) 금리파생상품은 현물채권 매입 등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듀레이션 확대 및 현금흐름 매칭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동안에는 위험회피회계 미적용, 파생거래 한도제한, 장기 선물시장 미발달 등으로 보험회사의 활용이 제약되어 왔었다. 모니터링 결과 개별 보험회사들은 위험회피회계 미적용에 따른 파생상품 손익의 당기손익 반영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파생거래 활용 유인 중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16) 보험연구원(2023)에 따르면 개별 보험회사들은 수익증권 비중 축소, 주식형에서 대출채권형 수익증권으로 변경, 파생상품을 이용한 헷지 등을 통해 수익증권 투자에 따른 당기손익 변동성 증가에 대응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IV. 자본유출입

2023년 1~5월중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월별로 큰 변동을 보인 가운데 주식 및 채권 모두 순유입되었다. 이는 미 연준의 긴축기조에 대한 기대변화 및 주요국 은행 불안 사태에 주로 기인한다. 채권의 경우 차익거래유인 확대도 유입 요인으로 가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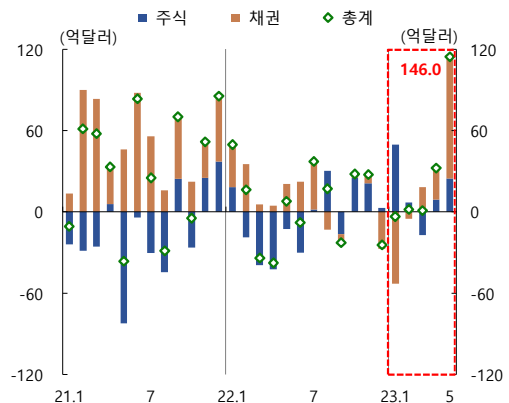
거주자 해외증권투자는 미국 및 유럽 은행권 금융불안,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주식을 중심으로 순투자 규모가 축소되었다.

### 외국인 국내증권투자 순유입

2023년 1~5월중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 자금<sup>1)</sup>은 월별로 큰 변동을 보인 가운데 146.0억달러(주식 73.2억달러, 채권 72.8억달러) 순유입되었다. 외국인 주식자금은 1월에는 미 연준의 긴축 강화 우려 완화,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순유입되었으나 2월 들어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연준 긴축 강화 우려가 확대되며 순유입폭이 축소되었다. 3월에는 SVB·CS 사태 등의 영향으로 위험회피심리가 강화되며 순유출되었다. 4월 이후로는 반도체 업종 등의 업황 개선 기대로 다시 순유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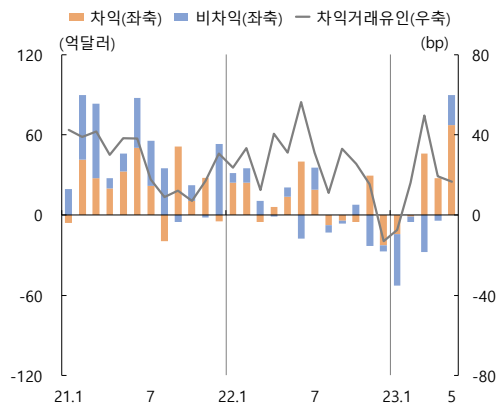
외국인 채권자금은 1월에는 해외 공공기관의 투자 여력 약화, 신흥국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 차익거래유인 축소 등으로 큰 폭 순유출되었다. 그러나 2월 들어 차익거래유인이 다시 확대되면서 동 거래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자금의 투자가 증가하였다. 또한 4월 이후에는 주요 국내채권 투자국의 외환보유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공공자금을 중심으로 순유입을 지속하였다(그림 IV-1, 그림 IV-2).

그림 IV-1.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증감<sup>1)</sup>



주: 1) '+'는 순유입, '-'는 순유출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그림 IV-2. 차익거래자금 유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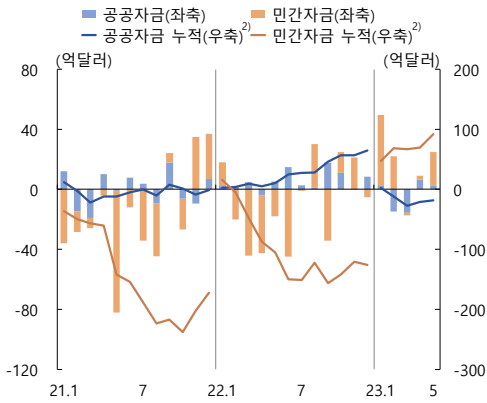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1) 주식은 상장주식(KOSPI·KOSDAQ)의 장내·외거래 및 기업공개(PO)를 포함하며(단, ETF·ELW·ETN 등 제외), 채권은 상장채권의 장내·외거래 기준(PP거래 및 만기도래분 반영)이다.

투자주체별로 보면 주식자금은 민간자금이 순유입을 주도하는 반면, 채권자금은 4월 이후 공공자금의 순유입이 두드러지는 모습이다(그림 IV-3, 그림 IV-4).

그림 IV-3.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투자주체별 증감<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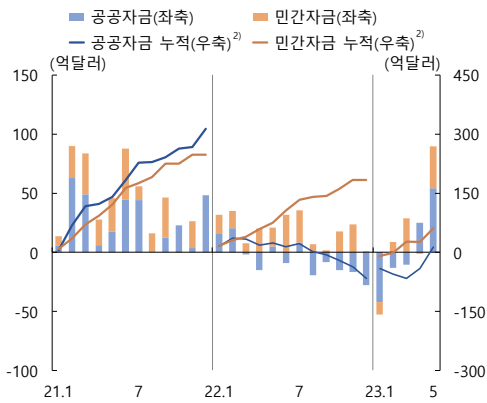


주: 1) '+' 는 순유입, '-' 는 순유출을 의미  
 2) 연도별 1월 이후 누적 순유입액  
 자료: 한국은행

2023년 5월말 외국인 주식투자 잔액은 698조원으로 시가총액<sup>2)</sup>의 28.4%<sup>3)</sup>를 차지하였으며, 전년말(28.0%)보다 0.4%포인트 상승하였다. 한편 외국인 채권투자 잔액은 238조원으로 전체 상장채권잔액의 9.7%를 차지하였으며, 전년말(9.7%)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최근 주요 국내 투자국들의 투자여력 개선, 양호한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유출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차익거래 목적의 자금은 차익거래유인의 등락에 따라 유출입 변동성이 큰데다 선진국 은행권 불안 재부각 가능성,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등이 상존하는 만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흐름을 계속 유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IV-4.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투자주체별 증감<sup>1)</sup>



주: 1) '+' 는 순유입, '-' 는 순유출을 의미  
 2) 연도별 1월 이후 누적 순유입액  
 자료: 한국은행

거주자 해외증권투자 증가폭 축소

거주자 해외증권투자는 2023년 1~4월중 109.5억달러(주식 54.2억달러, 채권 55.2억달러)로 전년동기(총 258.9억달러; 주식 235.3억달러, 채권 23.6억달러)대비 큰 폭 축소(-149.4억달러)되었다(그림 IV-5).

2)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의 합계 기준이다.  
 3) 외국인 주식투자 잔액 중 ETF 등을 제외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주식 보유잔액 기준이다.



## 참고 5.

### 최근의 글로벌 은행 불안이 달러화 자금 흐름에 미친 영향<sup>1)</sup>

금년 3월 이후 실리콘밸리 은행(이하 'SVB') 파산, UBS의 크레디트 스위스(CS) 합병, JP모건 체이스 은행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인수 등으로 글로벌 은행시스템에 대한 불안심리가 크게 높아졌다<sup>2)</sup>. 이러한 은행부문 불안은 미 달러화 자금의 국가간 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의 글로벌 은행들이 미 달러화 자금을 증개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국내은행과 외은지점이 이들 글로벌 은행들로부터 외화를 차입하거나, 글로벌 은행들이 직접 국내 증권투자를 위해 외화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달러화 자금이 유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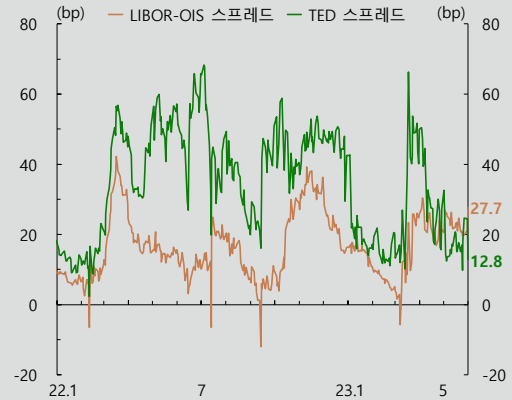
다행히 최근의 은행 불안 사태가 우리나라 외환부문에 미친 충격은 크지 않았지만 글로벌 은행시스템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하에서는 SVB 사태 이후 글로벌 달러화 유동성 사정과 자금흐름을 살펴보고, 국내 외화자금 유출입 상황을 점검하였다.

#### 글로벌 달러화 유동성

SVB 사태 직후 미 달러화 유동성 사정은 빠르게 악화되었다. 달러화 단기자금시장의 유동성 및 신용리스크를 반영하는 TED 스프레드와 Libor-OIS 스프레드가 급등하였다. 또한 유로화 및 엔화를 담보로 미 달러화를 조달하는 비용인 EUR/USD 및 JPY/USD 스

왓베이스도 마이너스 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위기 당시에 비해서는 유동성 악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고, 주요국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불안이 잦아들면서 달러화 유동성 사정이 빠르게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 글로벌 미 달러화 유동성 상황<sup>1)</sup>



주: 1) 3개월물 기준  
자료: Bloomberg

#### 과거 위기 당시와의 비교

	LIBOR-OIS 스프레드 <sup>1)</sup>	TED 스프레드 <sup>1)</sup>	BNP 글로벌 유동성지표 <sup>2)</sup>
GFC('08)	364 ( '08.10.10)	463 ( '08.10.10)	0.90 ( '08.10.20)
코로나 ( '20.3월)	138 ( '20.3.27)	146 ( '20.3.26)	0.94 ( '20.3.24)
<b>SVB사태 ( '23.3-4월)</b>	<b>30 ( '23.4.4)</b>	<b>66 ( '23.3.17)</b>	<b>0.78 ( '23.3.29)</b>

주: 1) 단위는 bp

2) 0-1 사이의 값으로 1에 가까울수록 유동성 악화를 의미  
자료: Bloomberg, BNP Paribas

#### 미 달러화 자금흐름

SVB 사태 직후 미국의 가계와 기업은 중소형은행에서 예금을 대거 인출하여 대형은행(자산 상위 25개) 또는 MMF로 자금을 이전시켰다.<sup>3)</sup> 특히, 중소형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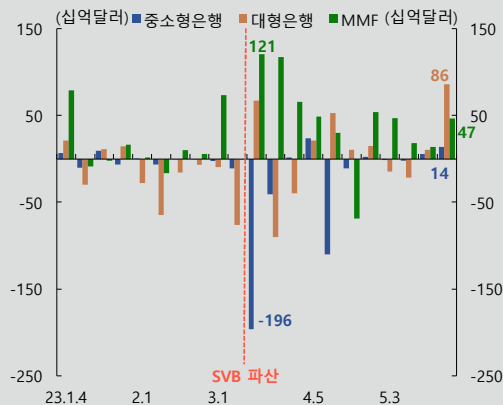
1) 본고는 권나은·김동욱·이한새·김상희(국제총괄팀)가 작성, 성광진(국제기획부장)·양양현(국제총괄팀장)이 검토하였다.

2) SVB 파산·CS 인수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8> 「SVB·CS 사태의 주요 내용과 정책당국 대응사례 및 시사점」을 참조.

3) SVB 사태가 발생한 주(3.9-15일)에만 중소형은행의 예금 잔액이 1,963억달러 감소한 반면 대형은행은 671억달러 증가하였다. 같

가운데 대형지역은행<sup>4)</sup>의 예금이 대규모 인출되었다. 또한, 미국 은행들은 미국내 단기자금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해외에 제공한 달러화 신용을 일시적으로 줄였고 해외은행 미국지점의 경우 예금인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본지점으로부터의 차입을 늘렸다.<sup>5)</sup> 다만 역외에서 미국으로의 자금이동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초기 등 과거 위기시에 비해서는 적었다. 3월 하순 이후 예금유출세가 진정되고, 국경간 달러화 거래도 기존의 흐름을 회복한 반면 MMF로의 자금유입은 지속되었다.<sup>6)</sup>

### 미 은행 규모별 예금 및 MMF 규모<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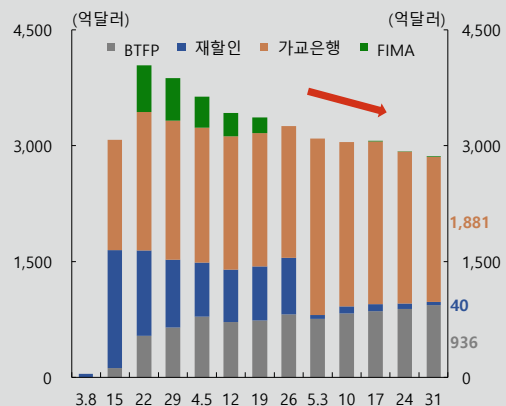


주: 1) 전주 대비 증감액, 예금은 계절조정 기준  
 자료: 미 연준,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미 연준은 예금인출 등으로 인한 은행들의 유동성 수요를 충족하고 불안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시

스템에 단기유동성을 대규모로 공급하였다. SVB 사태 직후 연준의 대출자산은 불과 1주일만에 3,030억달러나 증가하였다. 초기에는 은행들이 재할인창구를 주로 활용했으나 신규 대출제도인 BTFP<sup>7)</sup>(Bank Term Funding Program) 활용이 점차 늘었다. 또한, 은행 파산으로 인한 가교은행에 대한 대출<sup>8)</sup>이 실행됨과 더불어 해외 중앙은행에 대한 FIMA Repo<sup>9)</sup>도 가동됨에 따라 시중의 고유동성 자금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은행의 유동성 스트레스가 점차 완화되면서 연준의 유동성 공급 규모는 줄었다. 그러나 5월 들어서도 중소형은행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은행 부문의 유동성 수요가 지속되면서 연준의 대출잔액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sup>10)</sup>하고 있다.

### 미 연준의 대출자산<sup>1)</sup>



주: 1) FIMA Repo 포함  
 자료: 미 연준

은 기간 MMF 규모도 국채투자 MMF를 중심으로 1,209억달러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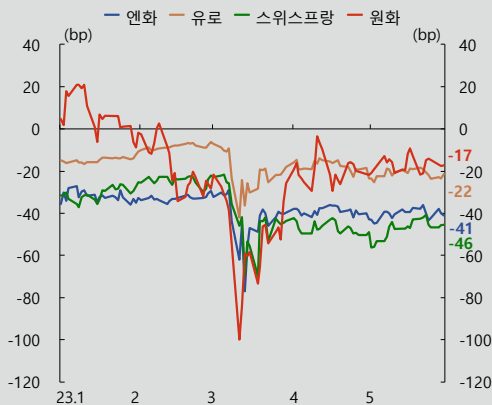
- Luck et al. (2023)은 상업은행 자산부채통계(H.8, 미 연준)의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은행을 소형(자산 50억달러 이하), 지역(50-500억달러 이하), 대형지역(500-2,500억달러 이하), 대형(자산 2,500억달러 초과)의 네 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하였다. 이에 따르면 3월 중 대형지역은행의 예금이 크게 감소(-5,319억달러)한 반면 소형은행(-92억달러)과 지역은행(-700억달러)의 감소폭은 적었다.
- 2023년 3.9-15일중 미국 대형은행은 해외점포 앞 신용을 120억달러 줄였으며, 해외은행의 미국지점은 본지점차입(순액 기준)을 637억달러 늘렸다.
- Afonso et al. (2023)에 따르면, MMF 수익률은 예금이나 CD에 비해 정책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높다. 구체적으로 정책금리 1% 포인트 인상시 MMF 설정액이 2년에 걸쳐 약 6% 증가한다.
- 모든 예금수취기관에 대해 담보증권을 액면가로 평가하여 평가가 내의 금액을 최대 1년 만기로 대출한다.
- 미 연방예금보통공사(FDIC)는 파산은행의 자산 및 부채를 인수하기 위한 가교은행을 설립하고, 미 연준은 이 가교은행에 대한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였다.
- 미 연준이 외국중앙은행 등이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여 미 달러화자금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JP모건 체이스 은행에 인수됨에 따라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대한 연준 대출(BTFP 등)은 가교은행 대출로 이관되었다.

## 국내 외화자금

SVB 사태 직후 국내 외화자금시장에서도 일부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주요 통화의 스왑베이스가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원화의 스왑베이스도 큰 폭의 등락을 나타내었다. 3월 13일 원-달러 스왑베이스(3개월물)는 100bp까지 확대되어 최근 10년간 평균인 35bp를 크게 웃돌았다.<sup>11)</sup> 이는 SVB 사태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가운데 분기말 외화 자금 수요 등 국내요인<sup>12)</sup>도 일부 가세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시적 국내요인이 해소되고, 은행권 불안도 점차 진정됨에 따라 스왑베이스는 빠르게 회복되었고 5월말 현재는 평상시와 비슷한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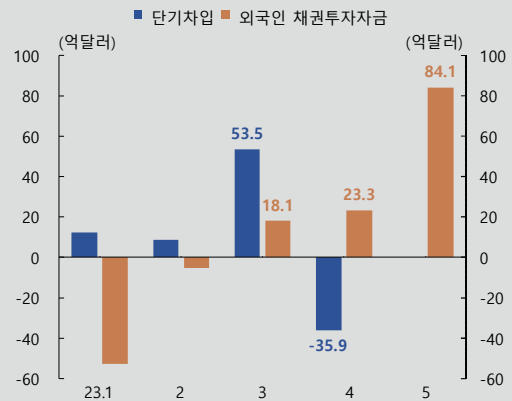
이처럼 외화자금시장에서는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지만 은행부문을 통한 외화자금 유출입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과거 위기때 감소하던 은행부문의 단기차입(국제수지 금융계정의 기타투자)이 3월중 오히려 크게 증가하는 등 은행차입을 통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작동하였다. 다만, 4월에는 외은지점의 외화유동성 사정이 개선됨에 따라 본지점 차입을 축소하며 차입이 줄어들었다. 또한 차익 거래유인 확대 등을 겨냥한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가 해외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늘면서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이 3월 이후 순유입이 지속되었다. 해외 상업은행의 국내채권투자는 스왑자금의 공급 증가로 연결되면서 외화자금시장의 안정에도 기여하였다. 이러한 은행부문의 외화자금 유출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글로벌 은행의 자금회수(deleveraging)로 국내 외화자금사정이 크게 악화되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 3개월물 스왑베이스<sup>1)</sup>



주: 1) 對 미 달러화 기준  
자료: Bloomberg

### 은행부문 단기차입<sup>1)</sup>과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유출입<sup>2)</sup>



주: 1) 국제수지 금융계정의 기타투자 내 예금취급기관 단기차입 기준  
2) 결제일 기준  
자료: 한국은행

11)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982bp, 08.12.5일), 코로나 위기(270bp, 20.3.24일) 등 과거 위기에 비해서는 확대 정도가 크지 않았다.

12) 국고채 대규모 상환에 따른 원화자금 여유, 비거주자의 NDF(차액결제선물환) 매도 등이 영향을 미쳤다. 당시 미 달러화 약세와 함께 비거주자가 NDF를 매도하였는데, NDF를 매입한 은행은 'Buy&Sell FX스왑과 현물환 매도'를 통해 종합포지션을 중립으로 유지함에 따라 스왑레이트가 하락(차익거래유인 또는 스왑베이스 확대) 압력을 받았다.





---

# 목원력

I. 금융기관	65
II. 대외지급능력	79
III. 금융시장인프라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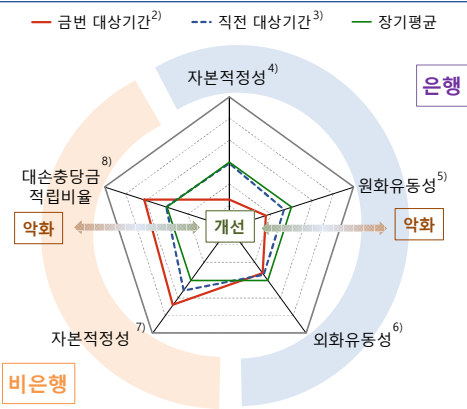


## I. 금융기관

일반은행<sup>1)</sup>의 복원력은 양호한 수준을 지속하였다. 손실흡수능력을 나타내는 자본적정성 비율이 소폭 상승하였으며 자금유출에 대한 대응능력을 나타내는 유동성 비율은 모든 은행이 규제기준을 상회하였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이 하락하였으나 모든 업권에서 자본적정성이 감독기준을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그림 I-1).

그림 I-1. 금융기관 복원력 지표 변화 지도<sup>1)</sup>



주: 1) 각 지표별 장기 평균(5년)을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금번 대상기간과 직전 대상기간 지표의 상대적 수준을 지도에 도시  
2) 2023년 1/4분기말(원화 및 외화유동성은 23.4월말, 비은행 중 보험회사의 자본비율은 2022년 4/4분기말)  
3) 2022년 3/4분기말 4) 바젤Ⅲ 기준 총자본비율  
5)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6) 외화 LCR  
7) 비은행 업권별 자본비율을 총자산 규모에 따라 가중평균  
8) 비은행 업권별(증권회사 제외)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총자산 규모에 따라 가중평균  
자료: 한국은행 시산

## 1. 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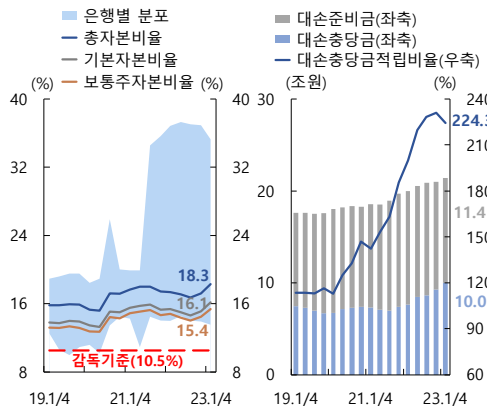
### 손실흡수능력 양호

일반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 기준 총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은 2023년 1/4분기말 각각 18.3%, 15.4%로 2022년 3/4분기말(16.7%, 14.1%) 대비 1.6%포인트, 1.3%포인트 상승하였다. 이는 당기순이익 확대에 따라 자본이 증가한 데다, 환율 하락에 따른 외화표시자산의 원화환산액 감소로 위험가중자산이 축소<sup>2)</sup>된 데 주로 기인한다. 은행별로 보면 모든 은행의 총자본비율이 2023년 감독기준(10.5%, D-SIB 11.5%<sup>3)</sup>)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대부분의 은행에서 자기자본비율이 작년 3/4분기말 대비 상승하였다.

예상손실에 대한 흡수능력을 나타내는 대손충당금적립비율(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은 2023년 1/4분기말 224.3%로 2022년 3/4분기말(228.1%) 대비 3.8%포인트 감소하였다. 이는 정상 및 요주의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증가(+1.3조원)했으나 고정이하여신도 상당폭 증가(+0.7조원)했기 때문이다(그림 I-2, 그림 I-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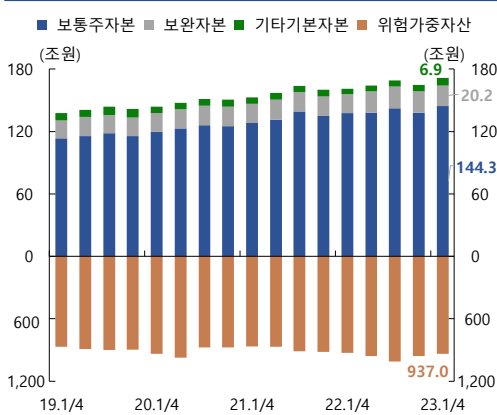
1) 금융안정보고서의 은행부문은 일반은행(시중·지방 은행)을 분석대상으로 하며, 영업모델이 상이한 특수은행(산업, 기업, 수출입, 농협 및 수협 은행)은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및 토스뱅크는 시중은행에 포함된다.  
2) 일반은행의 총자본은 2022년 3/4분기말 대비 1.5% 증가하였으며 위험가중자산은 7.2% 축소되었다.  
3)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로 신한은행(신한지주), 하나은행(하나지주), 국민은행(KB지주), 농협은행(농협지주) 및 우리은행(우리지주)이 해당한다.

그림 I-2. 일반은행 바젤III 기준 자본비율<sup>1)23)</sup> 및 대손충당금적립비율<sup>1)2)</sup>



주: 1) 기말 기준  
 2) 대손충당금적립비율=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 2016년 3/4분기까지는 대손충당금에 대손준비금 포함, 그 이후에는 보통주자본에 대손준비금 포함  
 3) 2023년 규제기준: 보통주자본비율 7%, 기본자본비율 8.5%, 총자본비율 10.5%(D-SIB의 경우 각각 8%, 9.5%, 11.5%)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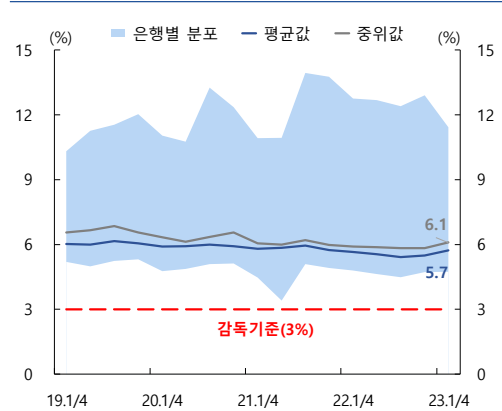
그림 I-3. 자기자본비율 변동 요인<sup>1)2)</sup>



주: 1) 기말 기준  
 2) 2016년 4/4분기 이후 보통주자본에 대손준비금 포함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일반은행의 레버리지비율<sup>4)</sup>은 2023년 1/4분기말 5.7%로 모든 은행이 규제기준(3%)을 크게 상회한 가운데, 당기순이익 확대에 따른 자본 증가 및 환율 하락에 따른 원화환산 총익스포저 감소 등의 영향으로 3/4분기말에 비해서는 0.3%포인트 상승하였다(그림 I-4).

그림 I-4. 일반은행 레버리지비율<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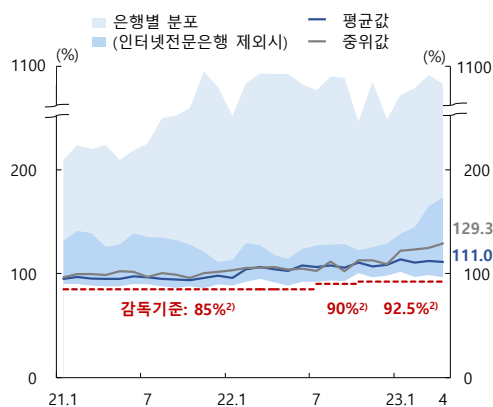
주: 1) 기본자본(보통주자본+기타기본자본)/총익스포저. 기말 기준  
 2) 2017년까지는 보조지표, 2018년부터 규제 시행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4) 레버리지비율은 「은행업감독규정」상 단순기본자본비율을 의미하며, 은행부문의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를 제한함으로써 유사시 급격한 디레버리징으로 인하여 위기가 증폭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동 비율은 총익스포저를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위험가중자산에 기반한 최저자기자본 규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1/4분기부터 보조지표로 공시된 후 2018년부터 동 규제가 시행되었으며, 2020년 1월부터는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적용되었다.

## 유동성 대응능력 대체로 양호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sup>5)</sup>은 2023년 4월중 111.0%로 2022년 9월(106.1%) 대비 4.9%포인트 상승하였다. 이는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범위 확대<sup>6)</sup> 등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은행들이 LCR 규제비율 정상화 및 자금조달시장 불안 위험에 대비하여 정기예금 유치 및 국고채 매입을 확대<sup>7)</sup>함에 따라 고유동성자산이 증가한 데 기인한다. 은행별로 보면 모든 은행들이 감독기준(22년 10월~23년 6월 92.5%)을 상회하고 있으나, 일부 은행의 경우 규제완화 전 감독기준(100%)보다는 소폭 낮은 수준이다(그림 I-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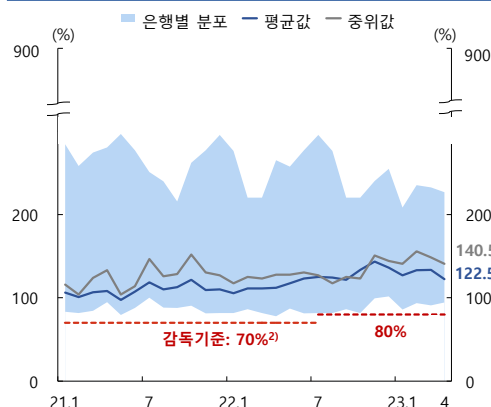
그림 I-5. 일반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sup>8)</sup>



주: 1) 고유동성자산(월 평잔)/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2) 2020년 4월~2022년 6월중 85%, 7~9월 90%, 10월~2023년 6월중 92.5%를 한시적으로 적용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외화 LCR<sup>8)</sup>은 2023년 4월중 122.5%로 2022년 9월(121.7%) 대비 0.8%포인트 상승하였다. 은행별로 보면 모든 은행들이 감독기준(80%)을 상회하고 있다(그림 I-6).

그림 I-6. 일반은행 외화 LCR<sup>9)</sup>



주: 1) 고유동성 외화자산(월 평잔)/향후 30일간 외화 순현금유출액  
 2) 2020년 4월~2022년 6월중 한시적 적용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장기적 측면에서 은행 자금조달 구조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순안정자금조달비율<sup>9)</sup>(NSFR, Net Stable Funding Ratio)은 2023년 1/4분기말 112.2%로 모든 은행들이 감독기준(100%)을 충족하였다(표 I-1).

-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대비 고유동성자산으로 계산되며 분자인 고유동성자산은 월중 평잔 기준이다.
- 2022년 10월 한국은행은 단기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RP 매매 대상증권의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였다.
- 일반은행의 국고채권 잔액은 2022년 9월 69.4조원에서 2023년 4월 77.2조원으로 7.8조원 증가하였으며 정기예금 잔액은 2022년 9월 742.0조원에서 2023년 4월 798.6조원으로 56.6조원 증가하였다.
- 외화 LCR은 바젤III 규제는 아니지만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도 실물부문에 안정적으로 외화를 공급할 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2017년 1월부터 공식 규제도 도입되었다(규제기준 80%). 수출입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및 외화부채 규모가 작은 일부 지방은행(광주은행, 제주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은행에 적용되고 있다.
- NSFR은 은행들이 단기 도매자금조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행태를 제한하기 위하여 장기 운용자산의 일정 부분을 안정적인 부채 및 자본으로 조달하도록 규제한다.

표 I-1. 일반은행 NSFR<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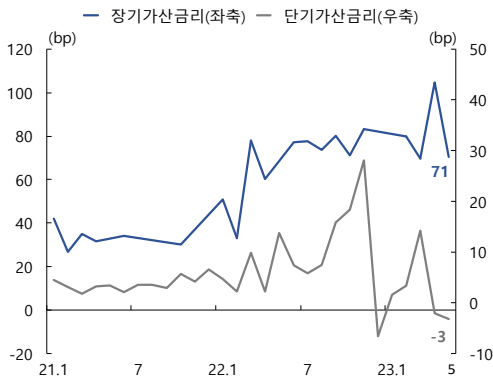
	2021년			2022년			2023년	
	2/4	3/4	4/4	1/4	2/4	3/4	4/4	1/4
평균	111.7	110.1	111.2	108.9	108.2	108.2	111.9	112.2
중위값	109.6	106.9	109.2	107.7	107.7	106.6	109.7	108.6

주: 1) 가용안정자금조달금액/필요안정자금조달금액. 기말 기준  
 2) 감독기준은 100%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대외 외화조달 여건 개선

2022년중 미 연준 긴축 강화에 따른 글로벌 달러유동성 축소 우려, 홍콩생명 사태 등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신용위험 증대 등으로 상당폭 상승하였던 단기 및 장기 외화차입 가산금리가 2023년 중에는 모두 하락하는 등 일반은행의 대외 외화조달 여건은 상당폭 개선되었다. 특히 단기 가산금리의 경우 2023년 3월중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및 크레디트 스위스 사태로 인한 은행 불안 심리 확산 등으로 재상승하였으나 4월 이후 미 연준 등의 적극적인 정책대응 영향으로 빠르게 하락하였다(그림 I-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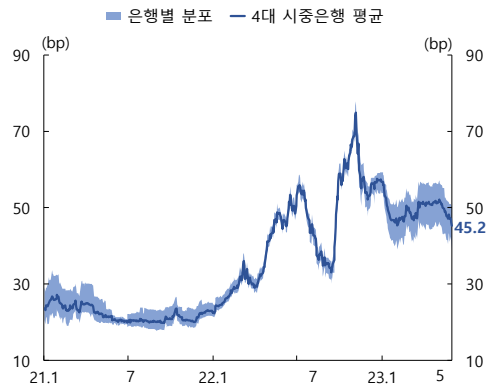
그림 I-7. 대외 외화차입 장·단기 가산금리<sup>1)2)3)</sup>



주: 1) 22.3월 이전은 LIBOR 기준 가산금리, 22.4월 이후는 SOFR 기준 가산금리(국민, 신한, 우리 및 KEB하나은행의 미 달러화 차입금액 가중평균)  
 2) 국내 금융기관 차입 및 본지점 차입 당일 콜ON은 집계대상에서 제외  
 3) 장기 가산금리 중 21년 5월, 7-9월, 11-12월, 22년 12월 및 23년 1월은 차입실적 부재  
 자료: 한국은행

일반은행의 CDS 프리미엄도 작년에 비해 하락하였다. 이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던 2021년(연중 평균 22bp)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2016~19년 중)인 65bp 대비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또한 금년 3월중 SVB·CS 사태 이후에도 대체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I-8).

그림 I-8 일반은행<sup>1)</sup> CDS 프리미엄<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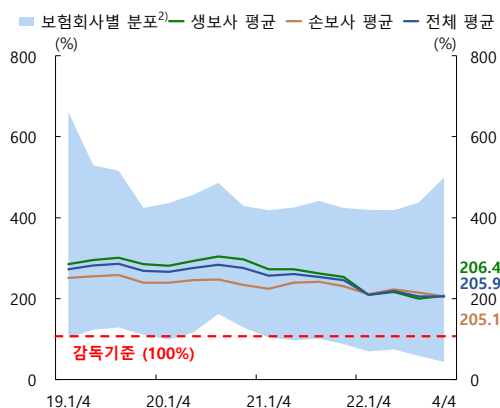
주: 1) 국민, 신한, 우리 및 하나 은행 기준  
 2) 5년물 기준  
 자료: Markit

## 2. 비은행금융기관

### 복원력 업권별로 상이

보험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나타내는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sup>9)</sup>(RBC비율, Risk-Based Capital Ratio)은 2022년말<sup>10)</sup> 205.9%로 전분기말(205.6%)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였다(그림 I-9).

그림 I-9. 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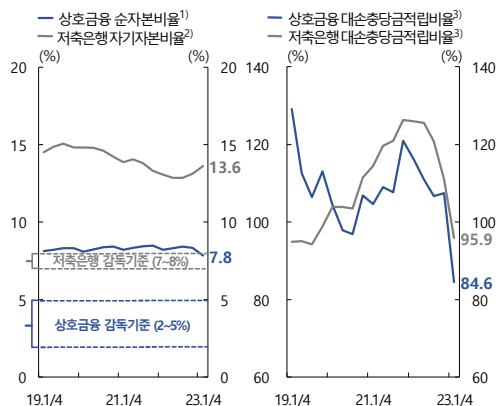
주: 1) 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  
 2) 자산 규모 1조원 이상 보험회사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상호금융조합의 순자본비율은 2023년 1/4분기말 7.8%로 자본이 감소하며 2022년 3/4분기말(8.4%) 대비 0.6%포인트 하락하였다.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고정이하여신의 큰 폭 증가에 기인하여 2022년 3/4분기말 대비 22.2%포인트 하락

한 84.6%를 기록하였다.<sup>11)</sup>

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대출 증가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2022년 3/4분기말(12.9%) 대비 0.7%포인트 상승한 13.6%를 기록하였다.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2021년 4/4분기(126.2%)를 정점으로 매 분기 하락하면서 2023년 1/4분기말 95.9%를 기록하였다(그림 I-10).

그림 I-10. 상호금융조합 및 저축은행 복원력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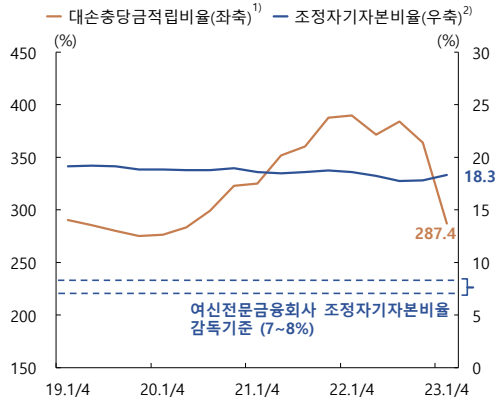
주: 1) 감목기준 2%(새마을금고 4%, 농협 5%)  
 2)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감목기준 7%(자산 1조원 이상은 8%)  
 3) 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대출채권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은 자산증가세 둔화 및 일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sup>12)</sup>의 영향으로 2022년 3/4분기말(17.8%)에 비해 상승한 18.3%를 기록하였다.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2023년 1/4분기말 현재

9)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Risk-Based Capital Ratio)은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을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값이다. 요구자본은 보험위험액, 금리위험액, 신용위험액, 시장위험액 및 운영위험액 규모를 측정하여 산출된다.  
 10) 2023년부터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가 변경(RBC → K-ICS)되면서 자본적정성 관련 공시 기한이 202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분기 종료후 3개월(연 결산의 경우 4개월)로 1개월 연장됨에 따라 현재 입수 가능한 최신 수치는 RBC제도 하의 2022년말 기준이다.  
 11) 2023년 1/4분기말 상호금융조합의 대손충당금 잔액(17.3조원)은 2022년 3/4분기말 대비 16.2% 증가한 반면, 고정이하여신잔액(20.5조원)은 46.6% 증가하였다.  
 12) 부동산PF 등 부동산관련 대출 비중이 높은 일부 캐피탈사는 손실흡수력 제고 및 레버리지배를 관리(규제수준 24년 9배, 25년 이후 8배)를 위해 2023년 1/4분기중 유상증자, 계열사 흡수합병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였으며, 일부 카드사의 경우에도 자본적정성 관리 등을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다.

287.4%로 2022년 3/4분기말(384.0%) 대비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sup>13)</sup>(그림 I-11).

그림 I-11. 여신전문금융회사 복원력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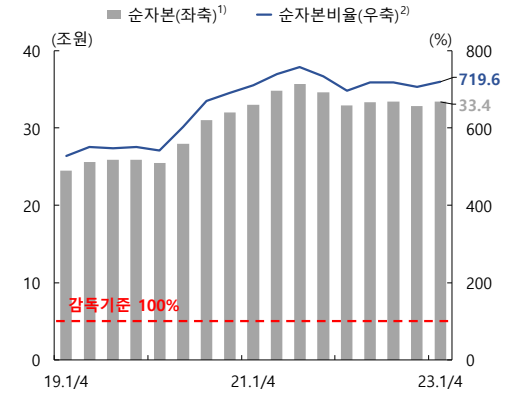
주: 1) 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총채권 기준)

2) 조정자기자본/조정총자산, 감독기준 7%(신용카드회사 8%)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증권회사의 순자본비율은 2023년 1/4분기말 719.6%로 2021년 1/4분기말 이후 700%를 상회하는 수준을 지속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I-12).

그림 I-12. 증권회사 복원력 지표



주: 1)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차감

2)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필요유지자기자본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비은행금융기관 복원력은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저하되었으나, 여전히 자본비율이 규제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다만 최근 고금리 지속에 따른 가계 및 기업의 채무상환부담 증대, 부동산경기 부진 지속 등으로 상기 업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리스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 및 자본확충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13) 업권별로 나누어보면 신용카드회사의 경우 2023년 1/4분기말 619.6%로 고정이하여신의 큰 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포함)이 소폭 증가에 그치며 2022년 3/4분기말 대비 216.9포인트 감소하였고, 캐피탈회사의 경우 123.2%로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정이하여신이 더 크게 늘어나며 2022년 3/4분기말 대비 30.4포인트 감소하였다.

## 참고 6.

### 바젤Ⅲ 규제체계 하의 주요국 완충자본제도 운용사례 및 시사점<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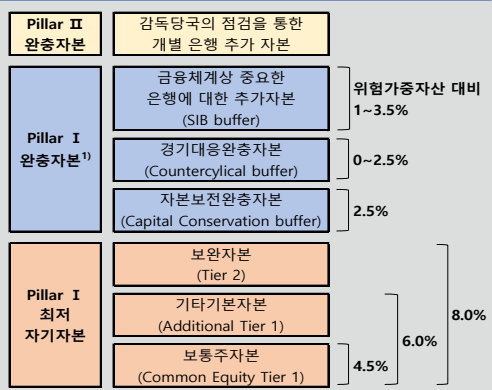
최근 주요국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하향 조정하였던 경기대응완충자본의 적립비율을 재인상하며 향후 발생가능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의 복원력을 제고하고 있다. 금년 들어 발생한 SVB 등 일부 은행의 파산사태 또한 취약한 글로벌 금융시장 환경하에서 은행 손실흡수능력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하에서는 바젤Ⅲ 규제체계 중 자본적정성 규제와 최근 주요국의 완충자본<sup>2)</sup> 운용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시사점을 도출해보기로 한다.

#### 바젤Ⅲ 자본규제체계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이하 'BCBS')에서 제정하는 바젤 규제체계는 글로벌 은행의 복원력 제고를 위한 규제·감독기준으로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바젤 I 및 II를 거쳐 현재의 바젤Ⅲ로 개편되었다.<sup>3)</sup> 바젤Ⅲ 자본규제는 Pillar I, II, III로 구성<sup>4)</sup>되어 있으며, 기존의 최저자기자본비율에 더해 다양한 완충자본 규제가 추가되었다.

규제자본 적립요건을 살펴보면 바젤Ⅲ는 기본적으로 은행 보유 자산에 내재된 리스크(위험가중자산) 대비 복원력(자기자본)을 일정 수준(8%)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Pillar I 최저자기자본규제). 이에 더해 완충자본을 적립하도록 하여 배당금 등 이익금의 재량적 배분을 억제하고 자본 재적립을 유도함으로써 은행의 위기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은행이 미래의 위기 상황에서 발생가능한 손실을 흡수하고(자본보전완충자본, 이하 'CCoB'), 신용사이클에 따른 경기순응성을 완화<sup>5)</sup>하며(경기대응완충자본, 이하 'CCyB'),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sup>6)</sup>의 복원력을 제고(G-SIB 및 D-SIB 추가자본)하기 위해 손실흡수능력이 가장 높은 보통주자본(CET1)을 추가적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Pillar I 완충자본). 또한 감독당국은 개별 은행의 리스크 특성에 따라 추가 자본을 부과할 수 있다(Pillar II 완충자본).

#### 바젤Ⅲ 규제체계에 따른 규제자본



주: 1) 보통주자본(CET1)으로 적립  
 자료: BCBS

1) 본고는 백운아·김지은(금융규제팀)이 작성, 서평석(금융안정연구부장)·권준석(금융규제팀장)이 검토하였다.  
 2) 본고에서는 최저자기자본규제 이상으로 부과되는 모든 규제자본을 완충자본으로 통칭하였다.  
 3) 1980년대 후반 바젤 I 이 도입된 이후 획일적인 위험가중치 적용에 따른 규제회피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 바젤Ⅱ로 개편되었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표출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편된 바젤Ⅲ는 은행 자기자본의 질·양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험 인식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시스템 리스크 및 상호연계성 완화를 위한 다양한 완충자본과 레버리지비율을 도입하였다. 또한 자본적정성 규제 이외에 유동성 관리를 위한 기준과 가액익스포저 한도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4) 바젤Ⅲ에서는 감독대상 은행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자기자본 규제인 Pillar I 과 개별 은행의 리스크 관리 및 감독당국의 점검에 해당하는 Pillar II, 그리고 시장규율 강화를 위한 공시에 해당하는 Pillar III를 통해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관리하고자 한다.  
 5) 금융당국은 신용팽창기에 시스템 리스크가 확대된다고 판단할 경우 시스템 리스크의 축적 정도에 따라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하여 경기 과열을 방지하고 신용축소에 부과 해제를 통해 신용 경색을 방지하고자 한다. 최대 2.5%까지 부과할 수 있다.  
 6)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이하 'G-SIB') 및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이하 'D-SIB')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2022년말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 감독대상 은행은 최저규제자본 8.0%에 더해 CCoB 2.5% 및 국가별 감독당국이 금융·경제상황에 따라 설정한 CCyB<sup>7)</sup> 비율을 적립해야 하며 G-SIB 및 D-SIB 선정여부와 Pillar II 조치에 따른 개별 추가자본 적립 의무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은행은 Pillar I, II에 따른 자기자본규제 비율을 준수하는 가운데 은행의 고유한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리스크를 감안한 내부필요자본비율을 결정·적립하며 이는 통상 규제자본비율을 상회한다.

## 최근 주요국의 완충자본규제 운용 현황 및 평가

### 양(+)<sup>8)</sup>의 경기중립 CCyB 비율 설정

최근 주요국에서는 그간 운용 경험 및 금융경제 상황 변화를 바탕으로 시스템 리스크가 높지도 낮지도 않은 평상시 최적 CCyB 적립비율(이하 ‘경기중립비율’)을 기존의 0%에서 1~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는 위기 시 즉시 부과 해제가 가능한 CCyB 규제의 활용성 증대 의도를 바탕으로 경제·금융사이클의 모든 국면에서 은행이 이익분배에 신중하고 자본비율을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sup>8)</sup>

BCBS는 CCyB를 포함한 완충자본규제의 효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각국이 재량에 따라 양(+)<sup>9)</sup>의 경기중립비율을 설정하는 데 따르는 이점을 인식하고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sup>9)</sup> BCBS는 양(+)<sup>9)</sup>의 경기중립비율을 도입한 금융당국 사례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이 갑작스러운 경제 충격 발생 시에도 완충자본을

보유하는 것이 은행에 이롭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기 발생으로 인한 손실흡수 과정에서 은행의 자본비율이 규제자본비율을 하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의 복원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때 금융당국이 완충자본 적립의무를 명시적으로 해제하면 이러한 평판리스크를 해소시켜 급격한 신용공급 위축을 방지할 수 있다.

영국은 CCyB제도에 양(+)<sup>9)</sup>의 경기중립비율을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로 2015년 11월 동 비율을 1%로 설정하였으며, 2019년 말에는 2%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시스템 리스크 측정의 어려움 및 CCyB 비율 결정 후 이행까지의 시차(12개월)를 고려하여 CCyB 비율을 사전에 인상하는 것이 경제적 비용 측면에서 낫다는 판단이 있었다.

스웨덴은 2021년 3월부터 CCyB의 경기중립비율을 2%로 설정하였는데 이러한 결정에는 코로나19 시기의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스웨덴은 코로나19 발생 전에 2.5%로 운용하던 CCyB 비율을 2020년 3월에 0%로 인하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및 금융시장 변동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스웨덴은 (1) 시스템 리스크가 통계에 반영되기까지의 시차, (2) CCyB 비율 결정 후 이행까지의 시차, (3) 갑작스러운 자본 축적(주식 발행 등) 보다 점진적인 자본 축적(배당금 보류 등)이 용이한 점을 고려하여 완충자본을 조기에 구축하도록 하였다.

호주는 2021년 11월부터 CCyB의 경기중립비율을 1%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전반적인 자본규제 체계 개편의 일환이었다. 동 개편은 바젤III 규제체계를

7) 금융위는 우리나라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2024.5월부터 CCyB 적립수준을 0%에서 1%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결정」(금융위 보도참고자료, 2023년 5월 24일)을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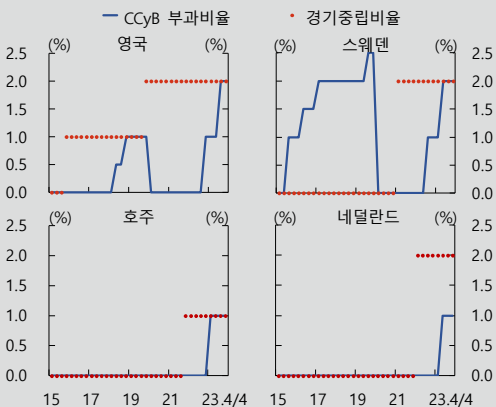
8) ECB(2023), “A positive neutral rate for the CCyB – state of play in the banking union”, Macroprudential Bulletin, Issue 21

9) 자세한 내용은 BCBS 뉴스레터(BIS, 2022년 10월 5일), 「Early lessons from the Covid-19 pandemic on the Basel reforms」(BIS, 2021년 7월) 및 「Evaluation of the impact and efficacy of the Basel III reforms」(BIS, 2022년 12월)를 참고. 다만 동 보고서에서는 현재까지 CCyB의 활용 사례가 풍부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CCyB 규제의 단독 효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부족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충족할 뿐만 아니라 ‘의심할 여지 없이 강건한’ 수준의 자본을 통해 국내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기중립비율을 인상하였다.

네덜란드는 2022년 2월부터 CCyB의 경기중립비율을 2%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양(+)의 CCyB 설정 필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경기중립비율을 2%로 설정한 것은 예상치 못한 충격 발생 시 필요한 인하 여력과 자본적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한 데 따른 것이다. 양(+)의 경기중립비율 도입 이후 GDP 대비 신용 지표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환경, 비금융부문 및 금융시장 관련 변수 등도 CCyB 비율 조정 시 고려지표에 추가되었다.

#### 주요국의 CCyB 부과비율<sup>1)</sup> 및 경기중립비율



주: 1) 2023.4월말 현재 공표·예정된 부과비율을 감안하여 작성  
 자료: 각국 금융당국

#### 기타 완충자본제도 도입·운영

한편 캐나다, 미국 등은 Pillar I을 통해 포착되지 않는 시스템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개별 은행에 적

용되는 기타 완충자본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8년 6월부터 국내안정성완충자본(Domestic Stability Buffer, 이하 ‘DSB’)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동 제도는 자국의 금융체계상 중요한 행(D-SIB)에 대해 동일한 비율로 추가 자본을 적립하게 하는 것으로 현재 3%로 설정되어 있다. DSB 부과 비율은 반기별(6월, 12월) 또는 필요시 위험가중자산의 0~4%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CCyB와 마찬가지로 인상 결정 후 시행까지 시차가 있는 반면 인하 시에는 즉각 반영된다. 가계 및 기업 부채, 자산시장 불균형, 외부시스템 관련 취약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취약성에 대한 탄력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DSB를 인상하고, 취약성이 감소하거나 위험이 현실화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용공급을 유지시키기 위해 DSB를 인하한다.

미국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별 은행의 복원력 강화를 위해 2020년 3월부터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완충자본(Stress Capital Buffer, 이하 ‘SCB’)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SCB는 매년 미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은행마다 다르게 결정<sup>10)</sup>되며, 적립 규모는 부정적 시나리오 상황에서 요구되는 자본과 향후 1년간 지급 예정인 배당금의 합으로 계산된다.

유로존의 완충자본제도는 CCoB, CCyB 등을 포함하는 CBR(Combined Capital Buffer), P2R(Pillar II Requirement) 및 P2G(Pillar II Guidance)로 구분된다. P2R은 Pillar I으로 포착하지 못한 리스크에 대하여 은행이 파산을 피하고 모든 손실을 흡수할 수 있도록 추가 자본적립을 요구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 P2G는 은행이 스트레스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개별 은행에 예상되는 자본손실비율에 따라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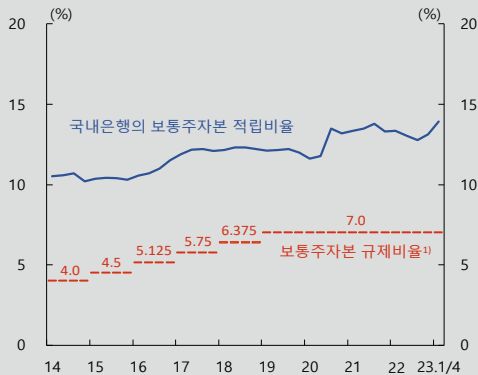
10) 2022년 기준 최저 2.5%(뉴욕멜론, 찰스슈왈, 스테이트스트리트 등)부터 최대 9%(크레디트 스위스)까지 부과되었다.

4.5%(2021년 기준)의 추가 자본 적립을 권고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ECB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자본규제 완화조치<sup>11)</sup>가 은행이 위험이 확대된 상황에서도 손실을 감수하고 신용공급을 지속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였다.

### 국내은행의 자기자본비율 및 자본여력

국내은행(은행지주 및 은행)의 보통주자본(CET1) 비율은 우리나라에서 바젤Ⅲ 이행을 시작한 2013년 이후 대체로 상승하여 2023년 1/4분기말 현재 13.9%<sup>12)</sup>를 기록하였다. 이는 국내 규제자본 비율을 월등히 상회하는 수준이다. 향후 국내 CCyB 비율이 1% 부과되는 경우에도 모든 기관에서 규제비율과 실제 자본비율의 차인 자본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다.<sup>13)</sup> 다만 은행지주의 자본여력은 3.1~4.7%포인트 수준이고 외국계은행은 8.4~18.1%포인트로 은행 그룹별 편차가 존재한다.

####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CET1) 비율 적립 추이



주: 1) 바젤Ⅲ의 단계적 도입에 따라 보통주자본 규제비율이 최저규제비율 4.5%와 CCoB 2.5%를 합친 7.0%까지 점진적으로 인상되었다. (D-SIB은 1% 추가적립)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CCyB 규제비율 상황에 따라 은행들은 향후 발생가능한 리스크, 여타 은행 및 주요국과의 수준 차이 등을 감안하여 자본여력을 얼마나 보유할지 결정할 것이다. 자본 여력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은행은 배당금을 줄이거나 위험가중자산을 축소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시사점

최근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 고려 등 자본적정성 제도 정비 계획<sup>14)</sup>을 발표하고 CCyB 비율을 1%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은행의 복원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CBS 및 주요국의 완충자본제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양(+)의 경기중립비율 개념을 도입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국내은행의 자본확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Pillar I 을 통한 규제자본적립 외에도 미국, 유럽 등 일부 국가와 같이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감독당국의 판단에 따라 개별 은행의 리스크 특징에 부합하는 선별적 자본적립을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바젤Ⅲ의 완충자본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국내은행의 복원력을 더욱 향상시킬 경우 대외 평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글로벌 경쟁력 및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1) 기타기본자본(AT1) 및 보완자본(Tier2)으로 보통주자본(CET1) 적립요건을 부분 대체하여 P2R을 충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CBR도 완화하였으며 감독당국에서 은행의 자본비율이 P2G 수준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하였다.

12) 자본비율이 월등히 높은 카카오뱅크(34.1%)와 아직 바젤Ⅲ 완전 적용대상이 아닌 토스뱅크를 제외하고 은행지주 및 은행 총 26개 기관을 기준으로 단순평균하였다.

13) 개별 은행에 부과되는 CCyB 비율 계산 시 엄밀하게는 각 은행의 국가별 민간부문 신용 익스포저에 대해 해당국에서 부과 중인 CCyB 수준을 반영하여 계산해야 하나 본고에서는 자본여력이 1%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단순하게 계산하였다.

14)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금융위·금감원 보도참고자료, 2023년 3월 16일)을 참고.

## 참고 7.

### 국내 금융기관의 자본성증권 발행 현황 및 잠재리스크 점검<sup>1)</sup>

은행, 은행지주회사 및 보험회사 등 국내 금융기관들은 그간 자본관리 수단으로 자본성증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크레디트 스위스의 정리과정 중 조건부신증자본증권이 전액 상각<sup>2)</sup>되면서 자본성증권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되어 국내 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 관리에 대한 우려가 증대된 바 있다.

자본성증권은 금융기관이 배당 지급에 대한 재량권을 갖고 영구채로 발행되는 신증자본증권과 이자를 의무적으로 지급하고 만기 5년 이상으로 발행되는 후순위채로 구분<sup>3)</sup>된다. 또한, 특정요건(trigger event) 발생시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부자본증권과 이러한 조건이 없는 비조건부자본증권으로 나뉜다.

이하에서는 국내 금융기관의 자본성증권 발행 현황 및 잠재리스크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 자본성증권 구분 및 주요 특징

	신증자본증권	후순위채
만기	30년 이상(영구)	5년 이상
이자(배당)지급	재량	의무
회계처리	자본(자본증권)	부채(채무증권)
상각/전환 여부	조건부 <sup>1)</sup> (특정요건 발생시 상각 또는 보통주 전환) 비조건부 <sup>2)</sup> (상각 또는 전환 조건 없음)	
자본유형	기본자본 또는 보완자본	
변제순위	후순위채보다 후순위	예금 및 일반채권보다 후순위

주: 1) 은행은 2013년 12월 도입된 바젤III기준에 따라 조건부자본요건으로 발행된 신증자본증권과 후순위채를 자본으로 인정

2) 2022년말 현재 비은행금융기관 발행 자본성증권은 모두 비조건부

#### 자본성증권 발행 현황

2022년말 현재 국내 전체 금융기관의 자본성증권 발행잔액은 신증자본증권 42.6조원, 후순위채 46.8조원 등 총 89.4조원이다. 발행주체별로 살펴보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발행잔액이 총 62.3조원<sup>4)</sup>이며, 그 중 신증자본증권(31.5조원)과 후순위채(30.8조원)가 각각 절반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8년 이후 고수익증권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대되는 가운데 레버리지비를 규제(2018년 도입) 준수수를 위한 기타기본자본 확충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은행권의 신증자본증권 발행이 꾸준히 늘고 있다.<sup>5)</sup>

비은행금융기관의 자본성증권 발행잔액은 2022년말

1) 본고는 유재원·박서정·홍준의(은행리스크팀)·권윤정·안준기(비은행리스크팀)이 작성, 이종한(금융리스크분석부장)·박장호(은행리스크팀장)·신준영(비은행리스크팀장)이 검토하였다. 본고에서는 국내 금융기관 중 은행, 은행지주회사 및 보험, 증권,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중 은행, 은행지주회사 및 보험회사의 신증자본증권과 후순위채를 중심으로 자본성증권의 발행 현황과 잠재리스크를 점검하였다.

2) 2023.3.19일 스위스 금융감독청(FINMA)은 크레디트 스위스가 발행한 약 160억프랑(172억달러) 규모의 조건부신증자본증권(AT1)을 완전 상각하기로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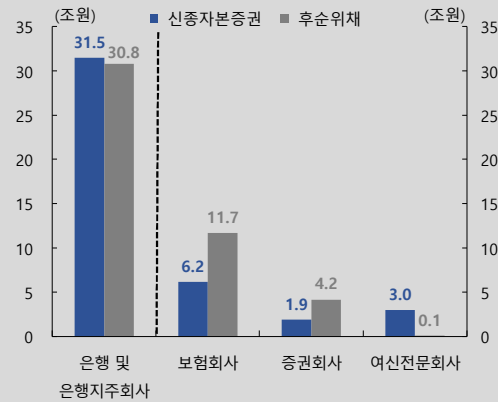
3) 규제목적상 자본성증권 자본유형을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바젤III기준에 따른 인정요건을 갖추어 발행하는 신증자본증권은 기타기본자본(Additional Tier 1)으로, 후순위채는 보완자본(Tier 2)으로 분류된다. 보험회사가 발행한 신증자본증권은 기본자본, 후순위채는 보완자본으로 분류되며, 증권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신증자본증권과 후순위채 구분 없이 각각 영업용순자본 및 보완자본으로 분류된다.

4) 2022년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은행 등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의 잔액은 6,530억달러이다(블룸버그).

5) 2022년말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자본성증권 발행잔액은 2017년말(신증자본증권 8.8조원, 후순위채 11.9조원으로 총 20.7조원) 대비 세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해당 기간중 은행은 주로 후순위채(16.6조원 증가)를, 은행지주회사는 신증자본증권(16.8조원 증가)을 중심으로 자본성증권을 발행하였다.

현재 27.1조원으로 보험회사(17.9조원)<sup>6)</sup>가 가장 많으며, 증권회사(6.1조원), 여신전문금융회사(3.1조원) 순이다. 증권 종류별로는 후순위채가 전체 자본성증권의 60%가량을 차지하며, 특히 보험회사의 경우 신종자본증권에 비해 후순위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보험회사 자본규제상 기본자본에 대한 별도의 규제비율이 없어<sup>7)</sup>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증권보다 보완자본이더라도 발행금리가 낮은 후순위채권을 더욱 선호하기 때문이다.<sup>8)</sup>

### 국내 금융기관의 자본성증권 발행잔액<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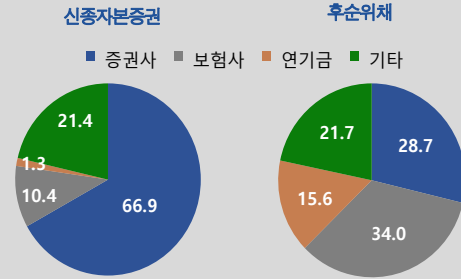


주: 1) 2022년말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사업보고서, 경영공시

국내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성증권의 투자자별 보유 규모를 살펴보면,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투자는 주로 증권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후순위채는 보험회사의 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성증권 유형별로 투자자 분포가 상이한 점은 보험회사 등에 비해 위험회피성향이 낮은 증권사가 후순위채보다 상대적으로 리스크는 크나 수익률이 높은 신종자본증권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때

문으로 해석된다.

### 국내 금융기관 발행 자본성증권의 투자자 현황<sup>1)</sup>



주: 1) 2022년말 국내발행 기준으로 각 자본성증권에서 해당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 잠재리스크

자본성증권은 금융기관 부실시 공적자금을 통한 지원(bail-out)에 앞서 투자자의 손실분담원칙(bail-in)을 통해 금융기관의 복원력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및 납세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최근 국내 금융기관의 자본성증권 발행이 크게 확대되면서 관련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점증하고 있다. 이에 자본성증권 관련 잠재리스크를 발행 금융기관 및 투자자 입장에서 살펴보았다.

### 조기상환 여부에 따른 자본비용 관리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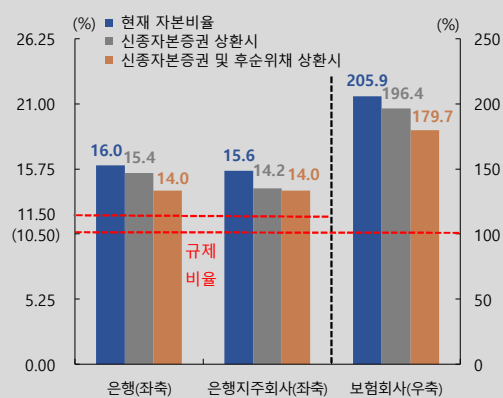
발행 금융기관은 기발행 자본성증권에 대한 조기상환<sup>9)</sup>, 차환발행, 대체수단 활용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본비용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조기상환 시점에서 유상증자 등

6) 보험회사의 자본성증권 발행잔액은 2017년말 6.0조원에서 2022년말 17.9조원으로 약 세 배 증가하였다. 특히 2022년중 보험회사의 자본성증권 발행액이 크게 확대(2021년 2.9조원 → 2022년 5.7조원)되었는데, 이는 금융당국의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이전 발행 자본증권에 대한 경과조치와 K-ICS 시행을 앞둔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수요가 맞물린 결과이다.  
 7) 자본을 계층화하여 계층별 자본비율(보통주/기본/BIS총자본비율)이 적용되는 은행과 달리 보험회사는 K-ICS비율(구 RBC비율)에 대한 규제 및 권고기준(각각 100%, 150%)만 적용되고 있으며, 기본자본비율은 경영실태평가의 계량평가지표로만 활용되고 있다.  
 8) 신종자본증권은 변제순위의 후순위성, 30년 이상의 명목 만기, 이자 미지급 가능성 등으로 후순위채 대비 높은 금리로 발행된다.  
 9) 자본성증권은 대체로 발행 5년 혹은 10년 후 조기상환을 옵션으로 하여 발행되며, 자본비용 규제 준수를 위한 자본성증권 발행

의 자본확충이 여의치 않은 금융기관은 높은 발행 금리 등 비우호적인 조건으로 자본성증권을 차환해야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투자심리 위축으로 자본성증권에 대한 수요가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차환발행 대신 현금성자산 등을 활용하여 상환<sup>10)</sup>함으로써 자본적정성 유지 뿐만 아니라 유동성관리 측면에서도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내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성증권 전체에 대한 차환발행이 어려워지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자본성증권 상황에 따른 자본비율 하락 정도를 시산해 보았다. 분석 결과, 자본확충 관련 자본성증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보험업권의 자본비율이 더 크게 하락하며, 특히 자본비율이 규제기준(100%)을 하회하는 일부 보험회사들은 리스크관리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금융기관 자본성증권 상환시 자본비율<sup>1)</sup> 하락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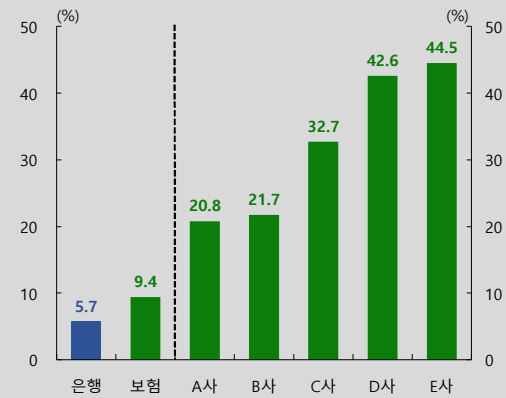
주: 1) 2022년말 기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는 BIS총자본비율(D-SIB: 11.5%, 이위는 10.5%), 보험회사는 RBC비율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한국은행 시산

## 이자(배당)지급 부담 가중

국내 금융기관의 자본성증권 발행 확대에 따른 이자(배당)지급액 증가는 발행 금융기관의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의 감소를 통해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2년중 국내 금융기관의 자본성증권 이자(배당)부담률을 보면, 은행권이 5.7%, 보험업권이 9.4%로, 은행권에 비해 보험업권의 이자(배당)부담 비용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일부 보험회사는 세전당기순손실을 기록하거나 이자(배당)부담률이 20%를 상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금융기관 자본성증권 이자(배당)부담률<sup>2)</sup>



주: 1) 자본성증권 관련 이자(배당)지급액(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 + 자본성증권 관련 이자(배당)지급액)으로 정의(2022년 기준)  
 2)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보험회사는 제외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한국은행 시산

수요가 높은 금융기관은 시장의 기대와 투자자와의 신뢰 유지를 위해 조기상환 시기 도래시 대부분 자본성증권의 차환발행을 통해 조기상환을 실시한다.

10) 2022년 11월 1일 흥국생명(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2017년 발행한 5억 달러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조기상환을 미 실시(골육선 미행사)할 예정임을 통지한 바 있다. 그러나 11월 7일 조기상환 실시(골육선 행사)로 입장을 번복하였으며, 함매조건부채권(RP) 발행 등으로 조기상환한 후 대주주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한 바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자본성증권은 특정요건(trigger event) 발생시 원금이 상각되거나 이자지급이 제한 되는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리스크가 부각된 사례가 있으나,<sup>11)</sup>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원금 상각 및 이자미지급 요건의 엄격성, 양호한 경영현황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관련 리스크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원금 상각 가능성을 보면,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현재 발행된 자본성증권이 모두 비조건부여서 원금 상각 가능성은 없으며,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도 원금 상각과 관련된 특정요건<sup>12)</sup>이 다른 나라<sup>13)</sup>에 비해 엄격한 데다 금융당국이 국제기준과 동일한 보통주 우선의 손실보전원칙을 견지하고 있어 원금 상각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한편, 이자 미지급은 신종자본증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부실금융기관 지정,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사전에 지정된 경영성과 및 재무구조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자지급이 제한<sup>14)</sup>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내 금융기관은 최근 자본성증권을 자본확충 수단 의 하나로 활발히 활용하고 있으나, 금융경제 여건 에 따라 발행 금융기관과 투자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 기관들은 자본성 강화를 위해 우선 보통주 자본을 통한 자본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자본성증권 발행 은 보통주를 통한 자본확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자본성증권은 발행시 부여되는 콜옵션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스텝업(step-up) 조 항<sup>15)</sup>이 조기상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 자본을 구성하는 여타 항목에 비해 자본성이 열위에 있다. 이에 자본성증권의 영구채 성격을 강화하여 자본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적 여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한편, 개인고객 투자자가 앞서 살펴본 자본성증권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금 융기관은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자본성증권에 내재 된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여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가운데 자본성증권 공시자료에 대 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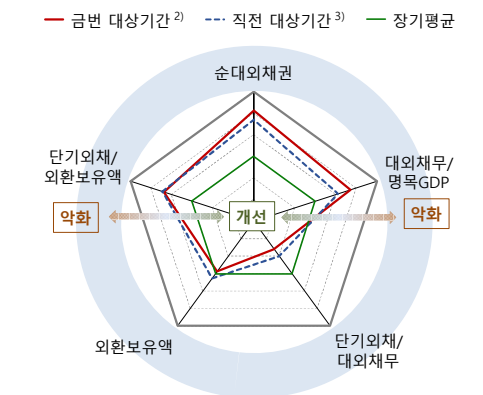
11) 금년 3월 크레디트 스위스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원금이 전액 상각되었으며, 2016년 2월에는 도이치뱅크의 대규모 적자 등 으로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이자 미지급 우려가 부각된 바 있다.  
1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발행 은행이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당시 발행 은행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구조와 관련하여 미리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가 해당한다. 2022년말 국내 은행 및 은행 지주회사의 보통주자본비율은 각각 13.5%, 12.6%로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 선정기준(2.3%)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13)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활발한 유럽은행은 보통주자본비율 5.125%(Low trigger 기준) 등이 특정요건으로 사용된다.  
14) 2022년말 일부 보험회사가 신종자본증권 발행 당시 지정한 조건 중 하나의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부족으로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바 있다.  
15) 채권발행 이후 일정기간(통상 5~10년)이 경과하면 금리를 상향조정하는 조항으로 신용도가 낮은 회사의 채권이나 만기가 긴 채 권 발행시 종종 적용된다.

## II. 대외지급능력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외환보유액이 전년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대외채무중 단기외채의 비중이 소폭 하락하였다. 순대외채권이 감소하였으나 직전 대상기간 대비 감소세는 둔화되었다. 다만, 명목 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은 다소 상승하였다(그림 II-1).

그림 II-1. 대외지급능력 지표 변화 지도<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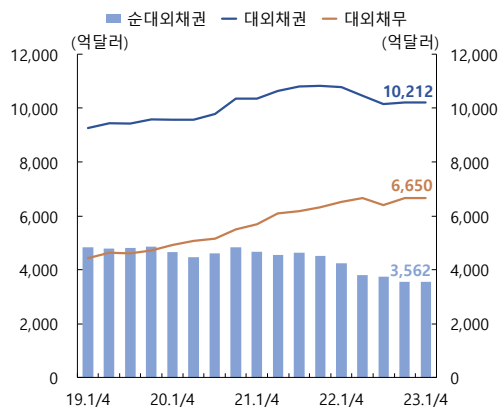


주: 1) 각 지표별 장기 평균(5년)을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금번 대상기간과 직전 대상기간 지표의 상대적 수준을 지도에 도시  
 2) 2023년 1/4분기말(외환보유액은 2023년 5월말)  
 3) 2022년 3/4분기말  
 자료: 한국은행 시산

## 순대외채권 감소

우리나라의 순대외채권(대외채권 - 대외채무)은 2023년 1/4분기말 3,562억달러로 전년도 3/4분기말 대비 180억달러 감소하였다. 다만 직전 대상기간(2022년 1/4분기말 대비 3/4분기말, -511억달러) 대비 감소세는 둔화되었다(그림 II-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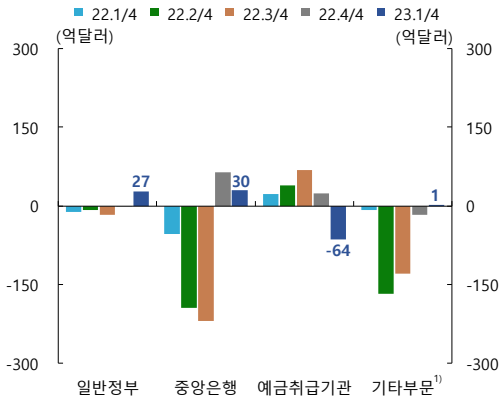
그림 II-2. 순대외채권<sup>1)</sup>



주: 1) 분기말 잔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대외채권은 금년 1/4분기말 1조 212억달러로 전년도 3/4분기말 대비 64억달러 증가하였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일반정부와 중앙은행은 해외증권투자 확대 및 외환보유액 증가 등으로 각각 26억달러 및 94억달러 증가했다. 예금취급기관은 40억달러 감소하였는데 주로 국내은행이 SVB·CS 사태 등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라 대외외화조달 및 운용을 축소한 데 기인한다. 기타부문은 무역신용 감소 등으로 15억달러 감소하였다(그림 II-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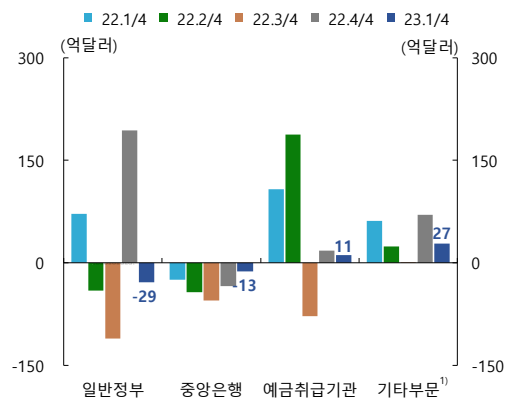
그림 II-3. 부문별 대외채권 증감



주: 1)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등의 기타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 등으로 구성  
 자료: 한국은행

대외채무는 2023년 1/4분기말 6,650억달러로 전년도 3/4분기 대비 245억달러 증가하였다. 일반정부는 외국인의 국공채 투자 증가 등으로 165억달러 증가한 데 비해 중앙은행은 통안증권 발행물량 축소(기간중 통안증권 순발행 -0.9조원) 등으로 47억달러 감소하였다. 3월중 차익거래유인 상승에 따른 외은지점의 본지점차입 확대 등으로 예금취급기관은 29억달러 증가하였다. 기타부문은 기업의 외화증권발행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채무상품직접투자 확대도 지속되어 98억달러 증가하였다(그림 II-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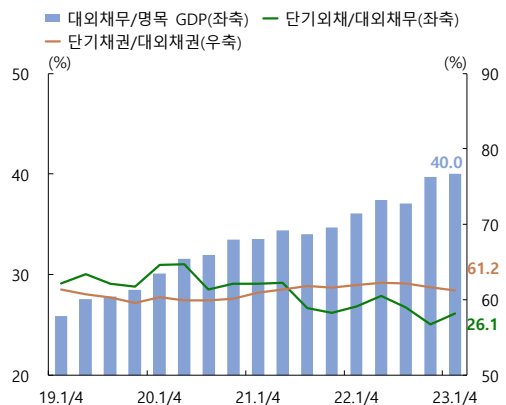
그림 II-4. 부문별 대외채무 증감



주: 1)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등의 기타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 등으로 구성  
 자료: 한국은행

명목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은 2023년 1/4분기말 40.0%로 전년도 3/4분기(37.1%) 대비 상승하였다. 대외채무중 단기외채 비중은 26.1%로 전년도 3/4분기(26.8%) 대비 감소하였다. 대외채권중 단기채권 비중은 61.2%로 전년도 3/4분기(62.2%) 대비 하락하였다(그림 II-5).

그림 II-5. 단기 대외 채무·채권 비중<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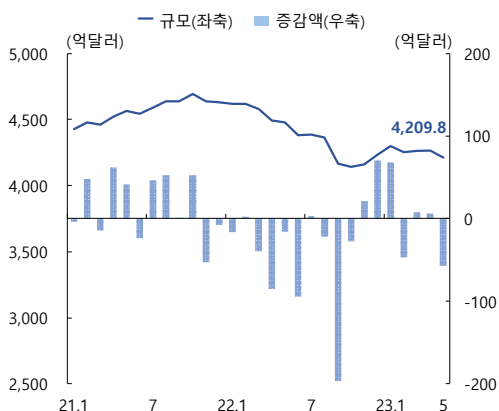


주: 1) 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 외환보유액 증가

2023년 5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4,209.8억달러로 지난해 4/4분기중 미달러화 약세에 따른 기타 통화 외화자산 증가 등으로 늘어났다가, 금년 들어 소폭 감소하였다(그림 II-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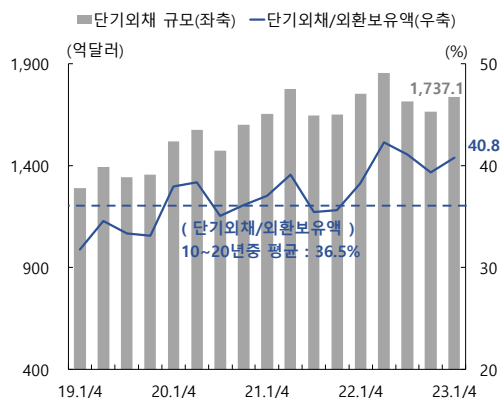
그림 II-6. 외환보유액 규모 및 증감액<sup>1)</sup>



주: 1) 규모는 월말, 증감액은 월중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편 2023년 1/4분기말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40.8%로 전년도 3/4분기말(41.1%) 대비 0.3%포인트 감소하였다(그림 II-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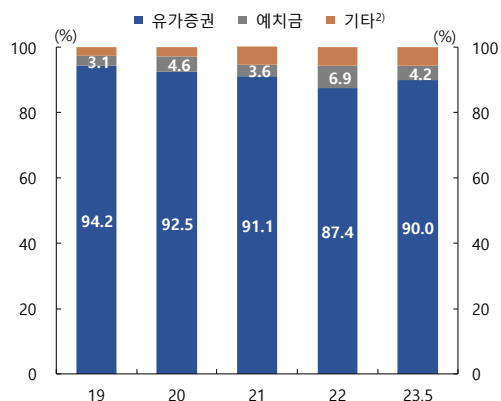
그림 II-7.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sup>1)</sup>



주: 1) 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2023년 5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의 구성을 보면 유가증권(90.0%) 및 예치금(4.2%)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유가증권은 국채, 정부기관채, 자산유동화채 등 유동성이 높은 안전자산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II-8).

그림 II-8. 외환보유액 구성<sup>1)</sup>



주: 1) 연월말 기준  
2) 금, SDR 등  
자료: 한국은행

### Ⅲ. 금융시장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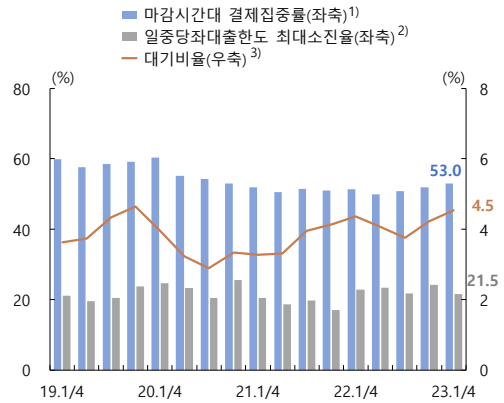
한은금융망 등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결제 규모는 금융기관의 증권결제, 개인 및 기업의 전자자금이체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결제리스크도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 한은금융망

금융기관 간 채권·채무를 최종 결제하는 한은금융망의 일평균 결제금액은 2023년 1/4분기중 548.0조원으로 지난해(524.3조원)에 이어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관련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확보수준을 나타내는 일중당좌대출한도 최대소진율 및 자금이체지시 대기비율은 2023년 1/4분기중 각각 21.5%, 4.5%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였다. 전체 결제금액 중 마감시간대(16:00~17:30) 결제 비중은 1/4분기중 53.0%로 전년동기(51.2%)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그림 III-1).

그림 III-1. 한은금융망 관련 리스크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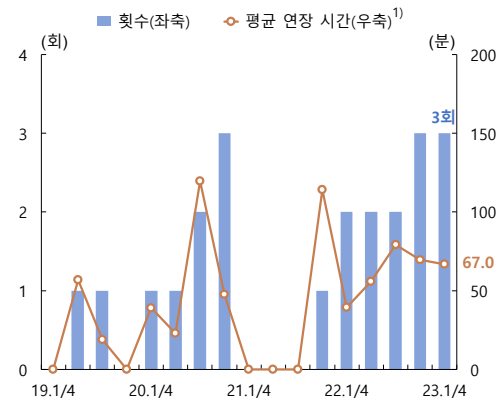


주: 1) 해당 기간 중 16시 이후 결제금액/총결제금액  
 2) 참가기관들의 일별 일중당좌대출한도 최대소진율의 평균  
 3) 참가기관들의 대기금액/총결제금액(유동성절감을 위한 대기제외)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한편 한은금융망 마감시간 연장은 2023년 1/4분기중 3회 발생하였으며, 이는 일부 참가기관의 전산시스템 장애 등에 따른 것이었다(그림 III-2).

그림 III-2.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 현황



주: 1) 해당 기간 총 연장시간/연장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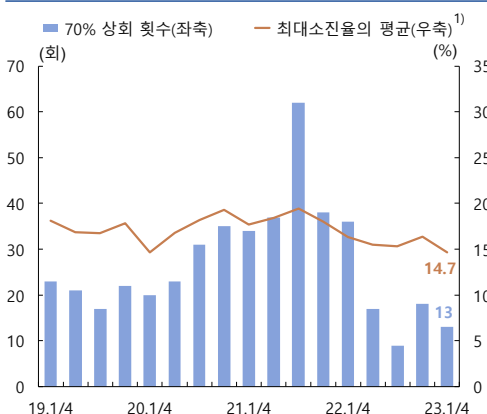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소액결제시스템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의 일평균 결제금액은 2023년 1/4분기중 101.2조원으로 개인 및 기업의 전자자금이체 증가 등으로 지난해(99.3조원)보다 늘어난 가운데 관련 결제리스크는 원활히 관리되었다.

소액결제시스템의 리스크 지표를 보면 차액결제 참가기관들의 순이체한도<sup>1)</sup> 소진율이 주의 수준(70%)을 상회한 횟수는 1/4분기중 13회로 전년 동기(36회)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순이체한도 소진을 평균은 2023년 1/4분기중 14.7%로 전년 동기(16.3%) 대비 소폭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에서 관리되었다(그림 III-3).

그림 III-3. 순이체한도 소진율



주: 1) 해당 기간 중 참가기관들의 일별 순이체한도 최대소진율의 평균 기준  
 자료: 한국은행

## 증권결제시스템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결제시스템의 결제 규모는 확대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동시스템의 일평균 결제금액은 2023년 1/4분기중 259.7조원으로 기관간 RP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236.8조원)에 이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 1/4분기중 장내주식, 장내국채 및 장외주식기관투자자 거래는 모두 기준시한(각각 16:00, 17:00, 16:50) 이전에 결제가 모두 완료되었다(표 III-1).

표 III-1. 기준시한 이후 증권결제 비중<sup>1)</sup>

	기준시한 <sup>2)</sup>	비중(%)				
		2022년				2023년
		1/4	2/4	3/4	4/4	1/4
장내주식	16:00	-	-	-	-	-
장내국채	17:00	-	-	-	-	-
장외주식 기관투자자	16:50	-	-	-	-	-

주: 1) 해당 기간 중 기준시한 이후 결제금액/총결제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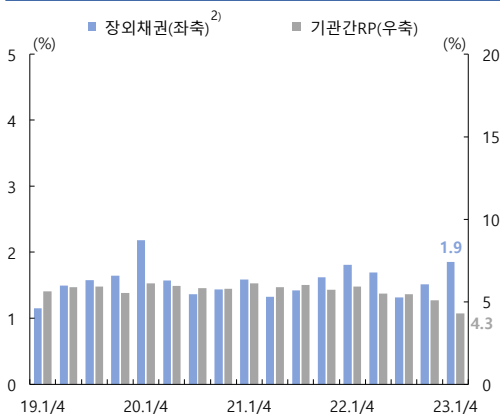
2) 결제지연손해금 부과기준

자료: 한국은행

1) 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등 소액결제시스템의 경우 수취인에 대한 지급은 즉시 이루어지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금융기관 간 채권·채무는 한은금융망을 통해 익영업일 지정시점(오전 11:00)에 결제되므로 금융기관이 신용리스크에 노출된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소액결제시스템의 차액결제리스크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참가기관들이 미결제순이체액의 상한, 즉 순이체한도를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장외채권 및 기관간RP 거래의 경우 증권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분리결제 비중이 2023년 1/4분기중 각각 1.9% 및 4.3%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였다(그림 III-4).

그림 III-4. 분리결제 비중<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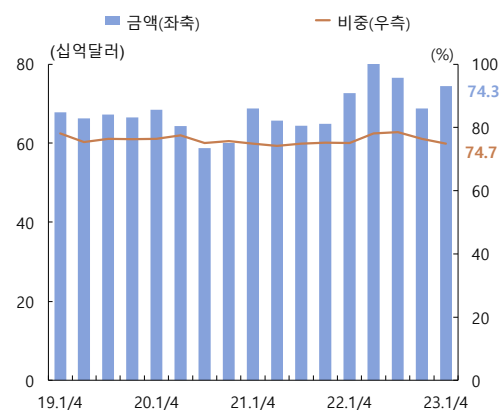
주: 1) 장외채권 및 기관간RP 거래 결제금액 중 증권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결제금액 비중  
2) 연쇄결제 차감 후 최종결제 기준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 외환결제시스템<sup>2)</sup>

CLS은행이 운영하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CLS시스템)<sup>3)</sup>의 결제액은 2023년 1/4분기중 일평균 743.3억달러로 지난해(748.4억달러)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CLS시스템을 통한 외환동시결제 비중이 2023년 1/4분기중 74.7%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외환거래 관련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그림 III-5).

그림 III-5. CLS시스템 이용 금액<sup>1)</sup> 및 비중<sup>2)</sup>



주: 1) 분기중 일평균,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 거래분  
2) 대상 외환거래 중 CLS시스템을 통해 결제된 비중,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 거래분  
자료: 한국은행

- 2) 외환결제는 은행간 환거래 네트워크, CLS은행이 운영하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 국내 외환자금이체시스템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결제 규모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CLS시스템을 통한 외환동시결제에 중점을 두었다.
- 3)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은행은 외환결제리스크의 근본적 발생 원인이 되는 각 국가간 시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통 결제시간대(중부유럽시간 기준 07:00~12:00)에 집중하여 결제를 처리한다. CLS는 동 시간대에 각 통화별 중앙은행에 개설된 결제 회원은행과 CLS은행 계좌간 실제 자금이체(자금 납입 및 지급)가 연속적으로 연계되어 결제됨을 의미한다. 현재 미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18개 CLS 결제통화의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한은금융망 포함)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

# 종합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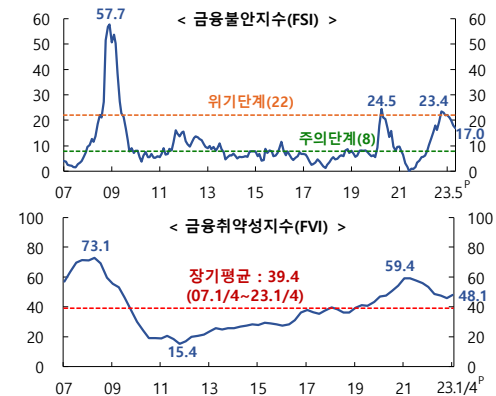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금년 상반기중 글로벌 은행 불안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였다. 금융시장은 주요국 통화긴축 속도 조절 기대 등으로 금리가 하락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등 안정세를 보였고, 금융기관의 양호한 손실흡수력을 바탕으로 금융중개기능도 원활하게 작동하였다. 다만 무역수지 적자 등 성장세가 둔화되고 가계 및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저하되고 있다.

단기적인 금융시스템 불안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sup>1)</sup>는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위기단계까지 상승(23.4) 하였으나 금년 2월 주의단계로 하락한 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편 금융시스템 내 잠재 취약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기준금리 인상, 경제주체의 위험선호 약화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하락하는 등 그간 누증된 금융불균형<sup>2)</sup>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금년 들어 국내외 통화정책 긴축기조 완화 기대 등에 영향을 받아 주식 가격이 상승하고 부동산가격 하락폭이 축소되는 가운데 4월 이후 가계대출이 다시 늘고 있어 금융불균형 누증의 축소가 제약되는 모습이다.

이를 반영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반적인 금융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sup>3)</sup>(FVI)는 2023년 1/4분기 48.1을 기록하며 2022년 4/4분기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 금융불안지수(FSI)<sup>1)</sup> 및 금융취약성지수(FVI)<sup>2)</sup>



주: 1) 단기적 금융시스템 불안 상황을 나타내는 금융 및 실물 부문의 20개 월별 지표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종합지수(0~100). 주의 및 위기 단계 임계치는 'noise-to-signal ratio' 방식에 따라 각각 8과 22로 설정

2) 중장기적 금융취약성 상황을 나타내는 3개 평가요소(자산가격, 신용축적 및 금융시스템 복원력)와 관련된 39개 지표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종합지수(0~100)

자료: 한국은행

## 취약성 평가

금융시스템 내 취약성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신용시장에서는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민간신용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명목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다만 4월 이후 주택시장 부진이 완화되고 주택관련 가계대출이 다시 늘고 있어 금융불균형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업신용은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기업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지난해 하반기와 달리 회사채·CP 등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양호한 모습이다. 다만 대출금리 상승, 영업실적 저하 등으로 기업의 이

1) 금융불안지수(FSI: Financial Stress Index)는 금융불안 관련 실물 및 금융 부문의 20개 월별 지표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종합지수(0~100)이며, 주의 및 위기 단계 임계치는 '잡음/신호 비율(noise-to-signal ratio)' 방식에 따라 각각 8과 22로 설정되었다.

2) 금융불균형에 대해 중앙은행, 학계 등에서 공식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대체로 과도한 레버리지, 자산가격 고평가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실물 부문에 비해 부채 규모나 자산가격이 과도하게 커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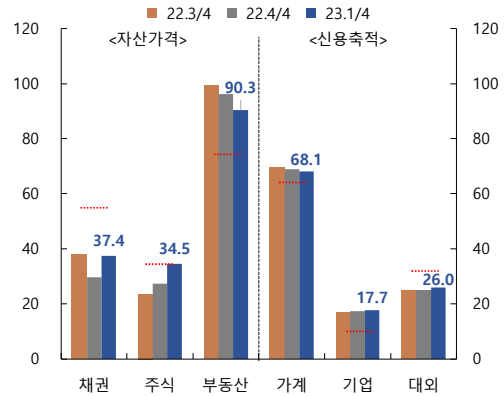
3) 금융취약성지수(FVI, Financial Vulnerability Index)는 3개 평가요소(자산가격, 신용축적 및 금융시스템 복원력)와 관련된 39개 지표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종합지수(0~100)이다.

자기급능력이 약화되었고, 특히 코로나19 기간 중 대출을 크게 늘린 자영업자의 경우 채무상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자산시장에서는 주식 및 채권 가격이 글로벌 은행 불안 등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였으나 국내의 통화긴축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정부의 시장안정화대책 등으로 신용경계감이 완화되면서 큰 폭 축소되었다. 주택가격의 경우 기초경제여건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인 가운데 금년 들어 하락 폭이 축소되고 있다. 향후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부동산 정책 등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금융기관의 경우 대부분의 업권에서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상승하는 등 자산건전성이 저하되었다. 이는 그간의 금리상승에 따른 차주의 채무부담 증대, 부동산경기 부진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요인에 더해 향후 높아진 금리가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가계와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조치가 정상화되면서 자산건전성이 추가로 저하될 수 있다. 다만 대내외 충격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는 복원력은 자본비율이 규제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금융불균형 관련 부문별 지수<sup>4)</sup>



주: 1) 점선은 장기평균(2007년 1/4분기 ~ 2023년 1/4분기중)  
자료: 한국은행

### 리스크 요인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글로벌 은행 불안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 요인<sup>4)</sup>이 잠재해 있다.

향후 높은 금리수준 유지, 실물경기 회복 지연, 부동산시장 부진 지속, 국제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등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저해하는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시장금리 상승으로 그간 누증된 금융불균형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원리금상환부담이 확대되어 취약차주의 부실이 빠르게 높아졌다. 여기에 더해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될 경우 취약차주,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채무상환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코로나19 기간중 저금리 기

4) 2023년 상반기 국내외 금융·경제전문가 80명을 대상으로 한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 부담(53.9%), 부동산시장 침체(48.7%), 금융기관 대출 부실화 및 우발채무 현실화, 대규모 자금인출 가능성(43.4%), 기업의 업황 및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위험 증가(42.1%) 등이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 상반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한국은행 보도자료, 2023년 5월 3일)를 참고.

조, 정부의 금융지원조치 등의 영향으로 아직까지는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닌<sup>5)</sup> 것으로 보이나,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잠재부실 위험이 표면화되면서 취약차주 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자산건전성과 복원력이 저하될 수 있다.

또한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하락, 미분양 증가 등 부동산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부담 증가, 부동산·건설업 관련 대출 부실 확대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sup>6)</sup> 특히 최근 PF-ABCP 발행을 통해 부동산 PF사업과 자본시장간 연계성이 높아진데다,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은행금융기관의 부동산PF 대출 규모가 확대된 상황에서 부동산경기 부진 지속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저하와 함께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

아울러 주요국 통화긴축 기조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주요국 은행시스템 부실 우려가 재차 확대되는 등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은 자본유출입 및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더해 주금공 MBS 등 우량물 발행이 확대될 경우 회사채, 은행채 등의 신용채권 투자수요가 위축되면서 채권발행금리가 상승할 수 있어 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 대응 방안

우선 높은 금리수준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부진 등으로 실물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될 경우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가계·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채무상환능력이 있는 가계·기업 차주의 경우 대출 상환을 유도하여 부채누증 압력을 축소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가계와 기업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재조정 및 필요한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경기 부진은 가계부채 누증압력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대출 부실화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책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하면서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동산PF와 관련해서는 사업장별 미시적 대응책을 통해 사업진행을 지원하거나 신속한 정리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자의 과도한 위험 및 수익 추구 성향이 완화될 수 있도록 PF 관련 규제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리스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자본확충기 등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축은행 등 예금수신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부실우려 부각시 건전성 악화는 물론 수신 이탈 가능성도 높아지므로<sup>8)</sup> 안정적인 수신구조

5) 자세한 내용은 <현안 III> 「기업 부문 잠재 신용리스크 점검 및 국내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를 참조.

6) 자세한 내용은 <현안 I> 「주택시장 관련 주요 금융안정 리스크 점검」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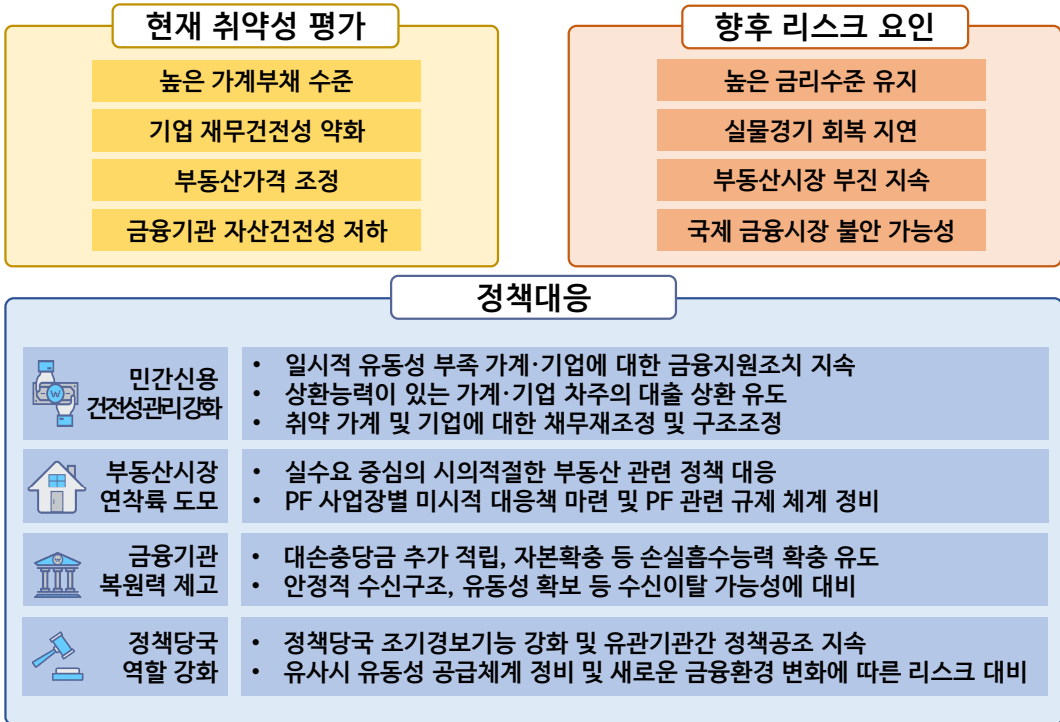
7) 최근 금융당국은 자본 적정성 제도 정비 계획을 발표하고 CO<sub>2</sub>B 비율을 0%에서 1%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은행의 복원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6> 「비젤III 규제체계 하의 주요국 완충자본제도 운용사례 및 시사점」을 참조.

8) 특히 코로나19 기간 중 비대면 경로를 통한 수신이 크게 증가하여 건전성에 대한 부정적 정보가 확산될 경우 빠른 속도로 예금을 인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국내 금융기관은 SVB 사태와 같은 대규모 예금이탈 가능성이 높지 않고 만일의 사태가 발

를 유지하고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이들 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sup>9)</sup>

아울러 정책당국은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간 정책공조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바일 뱅킹 등 새로운 금융환경 하에서 디지털 뱅크런 등에 대응한 금융기관들의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사전에 유동성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고 유사시 신속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시장에 과도한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장기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필두로 향후 유사한 무역규제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정책당국과 기업들은 수출 차질로 발생할 수 있는 단기자금 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sup>10)</sup>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생하더라도 양호한 대응여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현안 II>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잠재리스크 점검」, <참고 3>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 현황 평가 및 시사점」을 참조.

9) 자세한 내용은 <참고 8> 「SVB·CS 사태의 주요 내용과 정책당국 대응 사례 및 시사점」을 참조.

10) 자세한 내용은 <참고 9> 「수출산업 내재 탄소배출량 현황 및 기업 취약요인」을 참조.

## 참고 8.

### SVB·CS 사태의 주요 내용과 정책당국 대응 사례 및 시사점<sup>1)</sup>

2023년 상반기중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일부 금융기관의 부실 우려로 촉발된 금융시장 불안 상황이 수차례 발생하였다. 2023년 3월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 은행(이하 'SVB') 등 일부 은행이 파산하였으며, 비슷한 시기 유럽에서도 글로벌 은행인 크레디트 스위스(이하 'CS')가 파산 위험을 겪은 후 UBS에 인수되었다. 각국 금융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적절한 대비책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유사한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시장참가자들의 우려 또한 높은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SVB, CS 등의 금융기관이 최근의 시장 불안을 유발하게 된 경위와 이에 대한 각국의 대응 방안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금융기관 및 정책당국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SVB 등 미 은행 파산 사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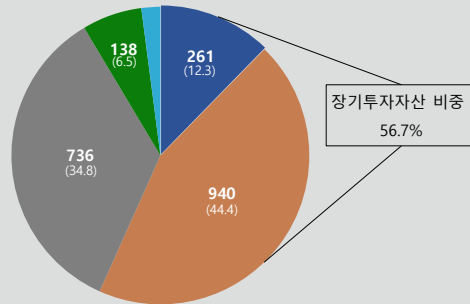
SVB<sup>2)</sup>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설립된 스타트업 기업 금융 특화 은행으로 특히 코로나19 이후 투자가 늘어난 바이오 및 첨단기술기업들의 거액 예금을 바탕으로 자산 규모가 급증하였다. 2020년 3월말 620억 달러 규모였던 예금수신 규모가 2022년말에는 1,754억 달러로 약 2.8배 급성장한 것이다. SVB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저금리 환경하에서 수익성

제고를 위해 조달 자금의 상당수를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미 장기국채에 투자하였다.

#### 파산 사태 전 SVB 은행 자산구조<sup>1)2)</sup>

■ 매도가능증권 ■ 만기보유증권 등 ■ 대출 ■ 현금 ■ 기타

(억달러, %)



주: 1) 2022년말 기준  
2) ( ) 안은 총자산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SVB(Silicon Valley 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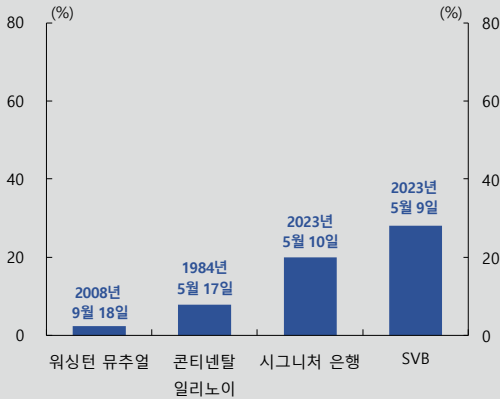
그러나 2022년 이후 글로벌 공급망 차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보상소비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미 연준이 급속도로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SVB는 거액의 미국채 평가손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시장에서 SVB의 재무건전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예금주들의 인출 요구가 급증하였고 SVB는 뱅크런 사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파산절차에 돌입(3.10일)하였다. 또한 SVB 파산의 영향으로 뱅크런 현상이 여타 은행으로 확산되면서 시그니처 은행(Signature Bank)이 추가로 파산(3.12일)하였으며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First Republic Bank)은 민간 대형은행들의 긴급자금지원 조치(300억 달러 공동예금 예치, 3.16일) 등에도 불구하고 회생에 실패하여 결국 파산 처리되었다.<sup>3)</sup>

1) 본고는 김혜연·허정(안정분석팀)이 작성, 박구도(금융안정기획부장)·이정연(안정분석팀장)이 검토하였다.

2) SVB는 자산 규모가 2022년말 기준 2,090억 달러로 미국 내 자산기준 16위 규모의 은행이었다.

3) 시그니처 은행과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2022년말 기준 미국내 은행 자산 순위에서 각각 29위(1,104억달러)와 14위(2,126억달러)를 차지하였다.

SVB 및 시그니처 은행의 일중 예금인출률<sup>1)</sup>



주: 1) 뱅크런 이전 총예금 대비 일중 예금인출액 최고치 기준  
 자료: 미 연준 재인용(Financial Stability Report, May 2023)

미 금융당국은 신속한 개입을 통해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먼저 규제당국에 의해 임시 인수자로 지정된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SVB 및 시그니처 은행 등의 자산·부채를 각각 인수<sup>4)</sup>하여 가교은행을 설립하고 예금보호대상이 아닌 예금까지 완전히 보호하는 조치를 발표<sup>5)</sup>하였다. 연준은 파산은행 예금자들의 예금인출 등에 소요되는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교은행의 보유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sup>6)</sup>하였으며 FDIC는 동 대출 전액에 대한 상환을 보증하였다.

또한 미 연준은 SVB 파산 직후 여타 은행시스템으로의 리스크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새롭게 은행기간대출프로그램(BTFP, Bank Term Funding Program)을 마련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예금취급기관을 대상으로 미 국채나 MBS 등 안전자산으로 한정된 적격 담보에 대해 액면가로 최대 1년까지 자금을 대출하는 제도로 투자심리 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로 평가받고 있다.

BTFP와 기존 대출 프로그램 비교

	BTFP	기존 대출 프로그램
대상기관	예금취급기관(은행, 저축·신용조합, 외은지점) 중 재할인창구(Discount Window) Primary 기관	대상기관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Primary와 Secondary 등으로 구분
적격담보 <sup>1)</sup>	미 국채, 정부 기관채, 정부기관 MBS (안전자산으로 한정)	미 국채, 정부 기관채, 정부기관 MBS, 외국정부 채권, 국제기구 채권, 회사채, ABS, CDO, CLO, CD, ABCP 등
담보평가	액면가 (par value)	시가 (fair market value)
담보인정비율	100%	100 <sup>2)</sup> -59% (종류·만기별 상이)
대출기간	최대 1년	최대 90일 (primary 기준)
이자율	OIS(1년물) + 10bp	미 연준 정책금리 (primary 기준)

주: 1) BTFP 적격담보 범위는 연준 규정(12 CFR 201.108(b)) 상의 공개시장운영(OMO) 대상 채권에 한함  
 2) 밑줄친 국채, 정부기관채, 정부기관 MBS(BTFP 적격담보 증권과 동일)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100%로 적용(3.13일 이후)  
 자료: BTFP "Frequently Asked Questions(FAQs)"

SVB 등이 파산하게 된 1차적 원인으로 자금 조달 및 운용 측면에서 특정 부문에 대한 집중도가 지나치게 높아 위험분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들 수 있다. SVB의 경우 국채 일변도의 투자로 금리 급등에 따른 대규모 손실 발생이 불가피했으며, 소수 벤처기술기업의 거액예금 의존도가 높아 뱅크런에도 더 취약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2018년 이후 자산 규모 2,500억 달러 미만 은행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sup>7)</sup>되면서 감독당국이 SVB 등의 은행에 대해 적절한 감시·감독을 수행하

4) FDIC의 임시 인수를 거쳐, SVB는 퍼스트 시티즌 은행(3.26일)에, 시그니처 은행은 뉴욕 커뮤니티 은행(3.19)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JP모건 체이스 은행(5.1)에 각각 인수되었다.  
 5) 동 조치로 인한 FDIC의 손실은 약 225억 달러(SVB 200억 달러, Signature 25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향후 부보은행에 대한 추가 예금보험료 부과로 충당될 계획이다(미 연준 2023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6) 미 연준은 도드-프랭크법안에 따라 개별 금융기관의 구제(bail-out)를 위한 직접 대출이 불가능하나, 예금취급기관인 가교은행에 대해서는 적격 담보에 대한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지 못했던 점도 이번 사태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위기 국면에서 소셜미디어 확산과 금융 서비스 혁신의 결합으로뱅크런이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던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8)</sup>. 은행 손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마자 이 소식이 SNS를 통해 급속히 전파되었고 이에 예금주들이 모바일 뱅킹 등을 이용해 동시다발적으로 인출을 시도하면서 자산 규모 수천억 달러 규모의 은행들이 단 수 일만에 파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정책당국이 재할인창구 등 통상적인 유동성 공급 방식으로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이유다.

## CS 등 유럽 은행 부문 위기

스위스 대형은행인 크레디트 스위스(CS)<sup>9)</sup>는 지난 수년간 거액투자손실 등의 내부 경영문제<sup>10)</sup>로 경영 여건과 시장 평판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던 상황에서 SVB 사태 등에 따른 불안심리 확산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결국 스위스 정부와 금융당국은 유동성 지원을 통해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한편, 정책적 지원을 통해 스위스 1위 은행인 UBS가 CS를 인수하도록 조치하였다.

## 인수 직전 CS 주가 및 CDS 프리미엄



자료: Bloomberg

스위스 당국의 빠른 대응으로 CS 위기가 여타 유럽 은행으로 확산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으나, UBS 인수를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몇가지 이슈가 부각되었다. 먼저 UBS가 CS를 인수하면서 스위스 감독당국이 CS의 조건부자본증권(AT1 채권)을 전액 상각 처리하도록 결정함으로써 해당 증권을 보유한 채권자들이 주주보다도 먼저 손실을 감수<sup>11)</sup>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에서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었다.

또 한가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마불사(Too Big to Fail)’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 규제당국이 마련해 놓았던 은행정리계획이 현재의 금융환경 하에서는 실행이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상호연계성이 더욱 심화되고 자금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시장참가자들의 군집행

7) 미 정부는 2018년 제정된 경제성장·규제완화·소비자보호 법안(EGFRCPA)에서 자산 규모 2,500억 달러 미만 은행(Category IV)을 유동성 규제 및 자체 스트레스 테스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8) 미 연준의 2023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뱅크런으로 파산한 워싱턴 뮤추얼(Washington Mutual)의 경우 일중 최고 인출률(뱅크런 이전 총예금 대비)이 2% 수준이었으나, SVB와 시그니처 은행의 경우 동 비율이 20%를 상회하였다. 1984년 파산한 콘티넨탈 일리노이(Continental Illinois)의 경우 일중 최고인출률이 7.8%를 기록한 바 있다.

9) CS는 2022년말 총 자산 5,314억 스위스프랑 규모의 스위스 2위(1위는 UBS) 은행으로, FSB가 지정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G-SIB) 중 하나이다.

10) CS는 2021년 헤지펀드社 아케고스의 파산으로 54억 달러의 손실을 입은 바 있으며, 그 밖에도 뇌물(2021년), 자금세탁 및 세금 탈루(2022년), 고객정보 유출(2022년) 등 불법행위에 연루되어 평판이 크게 악화되었다.

11) 이에 반해 CS은행의 주주들은 CS주식 22.8주당 UBS주식 1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일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동의 규모와 강도가 커진 만큼 시장 불안 없이 질서있는 정리를 도모할 시간적 여유를 갖기 힘들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의 정리가 아닌 인수·합병 위주의 처리로 일부 금융기관이 더욱 대형화된다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스템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 정책적 시사점

최근의 SVB, CS 등 은행 위기 상황은 개별 국가와 글로벌 금융시장 구분없이 위기 상황의 전파 속도가 과거에 비해 크게 빨라졌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IT기술 발달로 모바일·인터넷 금융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는 만큼 주요국 사례를 통해 나타난 취약성에 더욱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각 부문별 시장 상황을 미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징후 발생시 이를 조기에 포착하여 대응함으로써 시장에 과도한 불안심리가 조성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최근의 위기 상황에서 각국의 정책당국은 전례없이 신속하고 전격적인 조치를 활용해 위기를 조기 진화하였다. 발표 당시 해당 조치들에 대해 투자자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지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시장 심리를 조기에 안정시킴으로써 당초 예상보다 적은 지원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보다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책당국은 금융기관의 복원력과 유동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최근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금리변동 등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는 기존의 규제와 대비가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또한 디지털뱅킹 활성화, SNS를 통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새롭게 나타나는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정책당국도 금융기관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등을 통해 복원력을 수시로 점검하고 금융기관들이 유사시를 대비하여 충분한 자본 여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들이 디지털 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구조를 점검하고 SNS를 통한 뱅크런 발생시 신속하게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참고 9.

### 수출산업 내재 탄소배출량 현황 및 기업 취약요인<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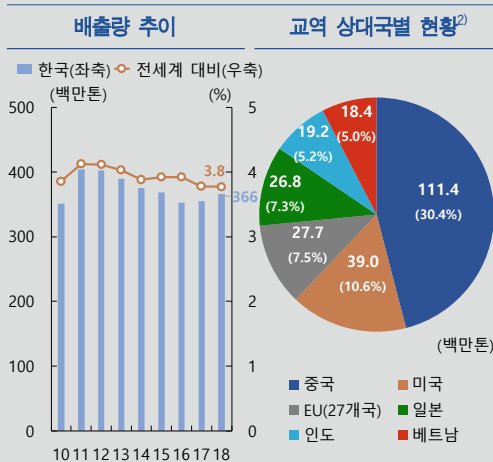
2023년 10월부터 유럽연합(EU)은 수입품의 생산과정 등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이하 ‘내재 탄소배출량’)을 규제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sup>2)</sup>(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를 시행한다.<sup>3)</sup> 2025년말까지는 시범 운영기간으로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기업은 수출품 내재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 등이 포함된 CBAM 신고서를 수입업자를 통해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본격 시행되는 2026년 1월부터 수출기업은 수출품 내재 탄소배출량의 기준초과분 만큼 유럽연합에서 발급하는 CBAM 인증서를 구입해야 한다. 현재 CBAM에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시범 운영성과에 따라 그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sup>4)</sup>

향후 유럽연합의 CBAM에 대응한 유사한 무역규제를 도입하는 국가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하에서는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내재 탄소배출량 현황 및 기업 취약요인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수출산업 내재 탄소배출량 현황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내재 탄소배출량은 2018년 3.7억톤으로 전 세계 내재 탄소배출량(97.0억톤)의 3.8%를 차지한다.<sup>5)</sup> 국가별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중국 20.1%(19.5억톤), 미국 6.3%(6.1억톤), 러시아 5.2%(5.1억톤), 인도 5.0%(4.8억톤), 독일 4.1%(4.0억톤) 다음으로 내재 탄소배출량이 많다.<sup>6)</sup>

#### 국내 수출산업의 내재 탄소배출량 현황<sup>1)</sup>



주: 1) 전세계는 66개국과 나머지 국가의 합  
2) 2018년 기준  
자료: OECD(Carbon dioxide emissions embodied in international tr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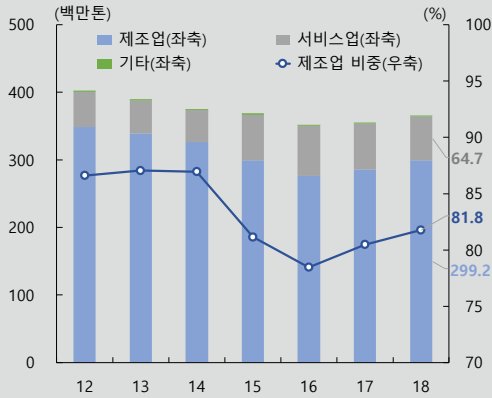
우리나라 전체 수출산업의 내재 탄소배출량 중 대 유럽연합(27개국) 비중은 2018년 7.5%(27.7백만톤)로 대 중국(30.4%, 111.4백만톤), 대 미국(10.6%, 39.0백만톤)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유럽연합 회원국별로

1) 본고는 송병현(지속가능성장연구팀)이 작성, 서평석(금융안정연구부장)·송길성(지속가능성장연구팀장)이 검토하였다.  
2) CBAM 시행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탄소배출원이 탄소배출 감축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규제가 약한 국가로 이동하거나 탄소 비용이 낮은 해외로부터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지는 이른바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억제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3) 2022년 12월 유럽연합 집행위·의회·이사회는 CBAM 법률안에 대해 3년간 잠정 합의하였으며, 2023년 4월 유럽연합 이사회가 최종 승인하였다. CBAM은 유럽연합이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당초 40%에서 55%로 상향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한 연계 입법안(‘Fit for 55’) 중 핵심 부분에 해당된다. 동 연계법안에는 CBAM 이외에 승용차·소형차량의 탄소배출 규제, 배출권거래제 강화, 온실가스 감축 노력 분담규제 등 13개 부문의 환경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4) 2차 가공품은 대부분 제외되나 나사 등 일부 철강 부품은 포함되며, 시범 운영기간 중 화학제품 등의 추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5) 직접적인 CBAM 규제대상은 개별 수출품 내재 탄소배출량이나 통계자료 미비로 본고에서는 수출산업의 내재 탄소배출량을 기반으로 점검하였다. 2018년까지 수출산업 내재 탄소배출량은 산업별 자료를 제공하는 OECD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동 배출량은 66개국과 나머지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로 2018년 이후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내재 탄소배출량은 2019년 3.5억톤, 2020년 3.3억톤, 2021년 3.8억톤으로 추산되어 큰 변화가 없다(IMF Dashboard).  
6) 전 세계 탄소배출량(371.2억톤, 2021년 기준) 중 우리나라 비중이 1.7%(6.2억톤)임을 감안하면 수출산업 내재 탄소배출량은 높은 편이다.

보면 독일로 수출되는 내재 탄소배출량 비중이 23.0%(6.4백만톤)로 가장 많고, 이탈리아(11.4%, 3.2백만톤), 프랑스(8.5%, 2.3백만톤) 순으로 주요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이다.<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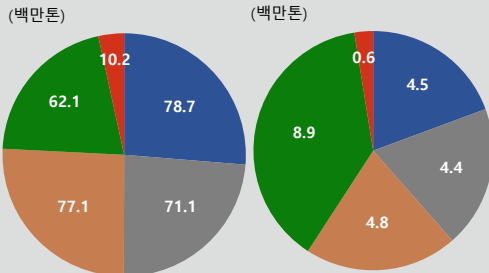
국내 수출산업별 내재 탄소배출량 현황

국내 수출산업의 내재 탄소배출량 추이



국내 주요 수출산업별 현황<sup>1)</sup> 대 EU 주요 수출산업별 현황<sup>1)</sup>

■ 유기화학 ■ 1차금속 ■ 컴퓨터전기전자 ■ 기계·운송장비 ■ 기타



주: 1) 2018년 기준  
자료: OECD(Carbon dioxide emissions embodied in international trade)

전 세계로 수출되는 내재 탄소배출량(2018년 기준)을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81.8%(299.2백만톤)로 대부분인 가운데 서비스업이 17.7%(64.7백만톤)를 차지한다. 제조업 중 유기화학(78.7백만톤), 1차 금속(71.1백만톤), 컴퓨터·전기전자(77.1백만톤), 기

계·운송장비(62.1백만톤)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이 전체 수출산업 내재 탄소배출량의 79.0%(289.0백만톤)를 차지하고 있다.

대 유럽연합 수출산업(2018년 기준)만 보면 기계·운송장비의 내재 탄소배출량이 8.9백만톤으로 가장 많고, 컴퓨터·전기전자(4.8백만톤), 1차 금속(4.4백만톤) 순이다. 이들 3개 업종은 대부분 CBAM 대상 품목이 속한 업종들로 대 유럽연합 수출산업 내재 탄소배출량의 65.4%(18.1백만톤)를 차지한다. 유기화학(2018년 기준, 4.5백만톤) 등이 CBAM 대상 품목에 추가되는 경우 대 유럽연합 수출산업 내재 탄소배출량에서 이들 4개 업종 비중이 81.6%(22.6백만톤)까지 확대되므로 우리나라 수출기업 대부분이 CBAM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됨을 의미한다.

수출기업의 취약요인

CBAM 시행이 국내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시범 운영기간 중에는 내재 탄소배출량 측정 및 검증을 위한 추가 행정비용과 신고서 준비 부족 등으로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 유럽연합 수출기업(2021년 기준, 17,914개사) 중 중소기업 비중이 90.5%(16,206개사)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당수 수출 중소기업이 경영상 애로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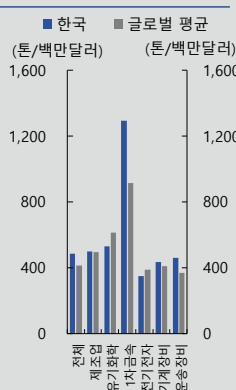
CBAM이 본격 시행되는 2026년 이후에는 국내 수출 제조업의 배출집중도가 높은 점과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ystem) 강화 움직임 등에 비추어 CBAM 인증서 구매 등에 따른 기업의 재무부담 확대가 우려된다.<sup>9)</sup> 먼저 우리나라의 대 유

7) 유럽연합 역외 수입으로 인해 역내 유입되는 탄소배출량(2018년 기준)은 22.1억톤으로, 역외 국가별로 보면 중국 유입비중이 12.2%(2.7억톤)으로 가장 많고, 러시아(1.7억톤, 7.9%), 미국(1.0억톤, 4.4%), 인도(0.7억톤, 3.1%) 등이 한국보다 높은 편이다.  
8) 이외에 대기업이 2.9%(527개사), 중견기업이 6.6%(1,181개사)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 통계청)  
9) 수출산업 배출집중도는 일정 수출금액 당 탄소배출량(톤/백만달러)으로 산정되며 배출집중도가 높을수록 수출산업의 탄소다배출 업종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럽연합 수출 산업별 배출집중도(톤/백만달러, 2018년 기준)는 제조업이 498.7로 글로벌 평균(66개국, 496.1)과 비슷한 수준인 가운데 CABM 대상 품목 중에서는 1차 금속제조업(1,291.2)이 글로벌 평균(915.7)을 다소 큰 폭으로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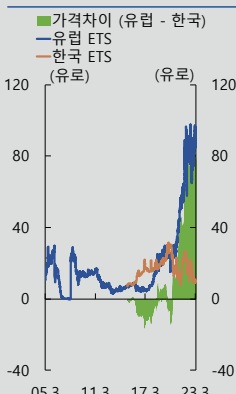
한편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은 유럽과 국내 탄소 배출권 가격 차이가 클수록, 유럽의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비율이 낮을수록 늘어나게 된다.<sup>10)</sup> CBAM 인증서 비용은 유럽의 탄소배출권 가격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국내에서 매입한 배출권 비용만큼 차감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유럽과 국내 배출권 가격 차이는 그대로 기업의 비용으로 전가된다.

대 EU 주요 수출산업의 배출집중도<sup>1)</sup>



주: 1) 2018년 기준  
자료: OECD(Carbon dioxide emissions embodied in international trade)

EU-국내 간 탄소배출권 가격차이 추이<sup>1)</sup>



주: 1) 유럽연합은 선물가격, 한국은 현물가격 기준  
자료: International Carbon Action Plan

원(10.5유로)으로 유럽(89.2유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다. 또한 유럽의 무상할당 비율(2022년 기준)은 43%이나 2034년까지 0%로 낮아질 계획으로 향후 CBAM에서 무상으로 허용하는 배출량이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이처럼 유럽에서의 무상할당 배출량이 축소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의 CBAM 인증서 구매 필요량과 함께 수출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 정책적 시사점

CBAM 시행 초기에는 단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CBAM의 시범 운영기간 동안 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 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특히 영세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절차 등의 컨설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MRV(측정·보고·인증, 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 관련 국내 인증기관의 국제인 증기구 가입 확대를 통해 CBAM 검증에 있어 수출기업의 행정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sup>11)</sup>

금융기관뿐 아니라 정부와 한국은행은 대 유럽연합 수출기업들의 자금사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 차질로 발생할 수 있는 단기 자금부족 등에 대응한 선제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기관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최근 추진하고 있는 차주 기업의 탄소배출량 데이터 베이스에 CBAM 신고 내용도 추가하여 개별 차주 단위의 환경데이터를 추적해나갈 필요가 있다.

2023년 3월말 현재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은 14,650

10) 현재 CBAM 인증서 비용 산정시 필요한 무상할당량 및 탄소배출권 가격 적용 방식 등 세부 기준은 발표된 바 없으나, 기본 산식은 다음과 같다: CBAM 인증서 비용 = [(수출품 내재 탄소배출량 - 유럽 무상할당량) × (유럽 배출권 가격)] - [(수출품 내재 탄소배출량 - 상대국 무상할당량) × (상대국 배출권 가격)]. 따라서 국내 무상할당 비율이 97%인 점, 배출권 가격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CBAM 인증서 비용은 유럽의 무상할당 비율(양)이 낮을수록(줄어들수록), 유럽 배출권 가격이 높아질수록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구조이다.

11) 정부는 2022년 12월 「EU 탄소국경제도(CBAM) 현황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크게 i) 탄소저감 기술개발, ii) 대 유럽연합 수출기업 대응 역량 강화, iii) 제품 탄소배출량 측정 등의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동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영세기업에 대한 행정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

# 주요 현안 분석

I. 주택시장 관련 주요 금융안정 리스크 점검	101
II.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잠재리스크 점검	111
III. 기업 부문 잠재 신용리스크 점검 및 국내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122



## 1. 주택시장 관련 주요 금융안정 리스크 점검<sup>1)</sup>

1. 검토 배경
2. 주택가격 하락 관련 리스크
3. 미분양 누증 관련 리스크
4. 주택보증 건전성 관련 리스크
5. 시사점

### 1. 검토 배경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2022년 하반기 중 가격 및 거래량이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2023년 들어서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등으로 부진의 정도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고금리, 실물경기 위축에 따라 부진의 정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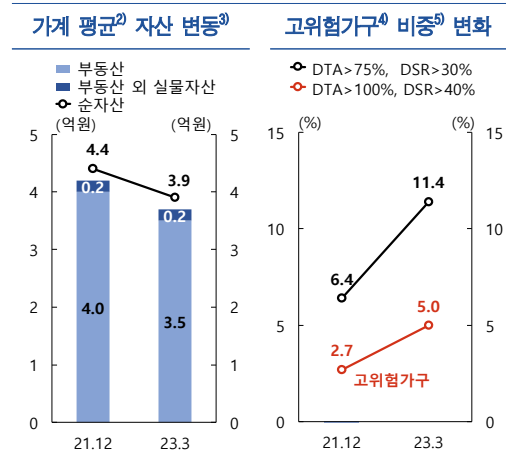
주택시장 부진은 주택가격 하락, 거래 부진, 매수심리 위축, 미분양주택 증가 등의 형태로 주로 나타난다.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담보가치와 전세보증금 하락은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축소 및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요인인 반면 가계의 대출 상환 및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압력 증대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분양가-거래가간 갭 축소 및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면서 관련 기업대출 및 부동산PF 등의 부실 위험도 높아지게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주택시장 관련 금융안정 리스크를 주택가격 하락, 미분양 누증 및 주택보증 건전성 측면에서 살펴보고 가계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였다.

## 2. 주택가격 하락 관련 리스크

### 가. 주택 보유 가구의 순자산 축소

우리나라 가구는 전체 자산의 약 78%(2022년 3월말 기준)를 주택 등 실물자산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조정될 경우 보유 자산 규모가 축소되면서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최근 가계의 자산 변화를 추정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이어진 주택가격 조정으로 가계의 평균 순자산은 2021년말 4.4억원에서 2023년 3월말 3.9억원으로 약 0.5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환능력이 취약한 고위험가구<sup>2)</sup>의 비중(금융부채 보유 가구 대비)도 2.7%에서 5.0%로 확대<sup>3)</sup>되었다(그림 I-1).

그림 I-1. 가계 자산 구성 및 고위험가구 비중 변화<sup>1)</sup>



주: 1) 2023년 3월말 기준(2022년 3월말 기준 자료에 기간중 자산 가격·부채 잔액 변화 등을 반영하여 추정)

2) 전체 가구 평균 기준

3) 순자산 = 금융자산+실물자산-금융부채

4) DTA>100%, DSR>40%인 가구

5) 금융부채 보유가구 수 대비 고위험가구 수 비중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금융복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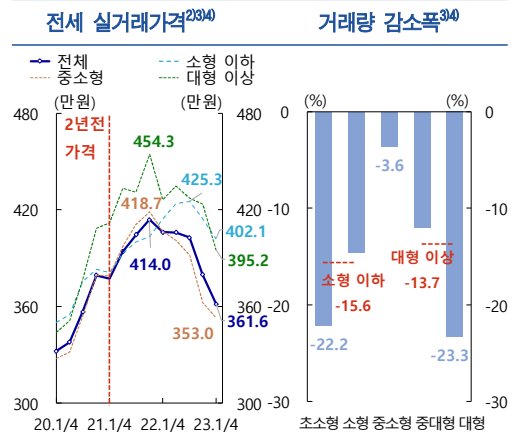
- 1) 본고는 박재현·편도훈·정운재·허정(인정분석팀)이 작성, 박구도(금융안정기획부장)·이정연(인정분석팀장)·김경섭(금융안정국)이 검토하였다.
- 2) 고위험가구를 금융부채 보유가구중 원리금상환 부담이 크고(DSR>4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상환이 어려운(DTA>100%, 자산 대비 부채 비율 Debt-To-Asset ratio)가구로 정의하였다.
- 3) 주택담보대출 보유가구 중 고위험가구의 비중은 같은 기간 5.2%에서 9.6%로 확대되었다.

## 나. 주택 임대 가구의 보증금 반환부담 증대

보유 주택을 임대한 가구의 경우 주택 매매가격 하락에 따른 순자산 축소에 더해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보증금 반환부담이 증대될 수 있다. 전세 거래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아파트의 단위면적(㎡)당 중위 전세가격(전국 기준)은 2023년 1/4분기 361.6만원으로, 고점(21년 4/4분기 414.0만원) 대비 12.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소형 이하보다는 중소형(60~85㎡) 이상 아파트에서 전세가격 하락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소형 이하<sup>4)</sup> 아파트의 경우 고점 대비 전세가격 하락폭이 5.4%(425.3→402.1)에 그친 반면, 중소형 및 대형 이상<sup>5)</sup> 아파트의 경우 각각 15.7%(418.7→353.0), 13.0%(454.3→395.2) 하락하였다. 특히 2022년말 이후 중소형 이상 규모에서 중위 전세가격이 2년전 가격을 하회하면서 임대 가구들이 신규 전세보증금만으로는 기존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워졌으며, 이는 임차 가구 입장에서 만기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전세가격 하락에 더해 전세 주거수요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임대 가구의 전세보증금 반환부담이 더욱 증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의 전국 아파트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금년 1/4분기중 모든 규모에서 전세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월세 전환이 용이한 초소형 주택(-22.2%)과 전세보증금 조달 규모가 큰 대형 주택(-23.3%)의 거래량이 더 큰 폭 감소하였다(그림 I-2).

그림 I-2. 규모별 전세 가격 및 거래 동향<sup>1)</sup>



주: 1)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세 실거래 데이터 기준  
 2) 단위면적당 전세 중위가격 기준  
 3) 소형 이하는 초소형+소형, 대형 이상은 중대형+대형의 단순평균  
 4) 2023년 1/4분기 기준,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실거래 건별 자료(국토교통부)를 활용하여 전세 가격 하락에 따른 예상 전세보증금 반환 규모를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규모별 중위 전세가격(보증금)과 거래량을 월별로 분석하여 전세 만기(2년 가정)에 임대 가구가 세입자<sup>6)</sup>에게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 차액 규모를 시점별로 산출하였다.

$$rd_t = \sum_i (md_{i,t} - md_{i,t-24}) * tr_{i,t-24}$$

$rd$  : 전세보증금 반환 규모  
 $md$  : 중위 전세가격(보증금)  
 $tr$  : 전세 거래량  
 $i$  : 주택규모  
 $t$  : 시점(월), 전세 만기는 2년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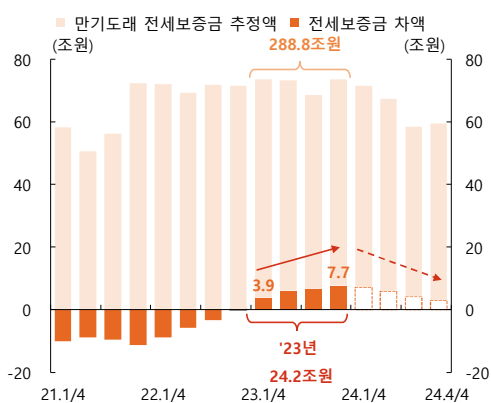
4) 초소형(40㎡ 이하), 소형(40㎡ 초과 60㎡ 이하) 중위가격을 단순평균하였다.

5) 중대형(85㎡ 초과 135㎡ 이하), 대형(135㎡ 초과) 중위가격을 단순평균하였다.

6) 다만 동 기간중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존 전세보증금의 5% 이내로 증액하여 계약을 갱신한 거래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향후 전세가격이 2023년 3월 수준을 지속(가할 경우, 전세 임대 가구가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차액 규모는 2023년중 연간 24.2조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동 기간중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추정되는 전체 전세보증금(288.8조원)의 약 8.4% 수준이었다. 시점별로는 전세가격이 2년전 수준을 하회하였던 2022년 4/4분기에 보증금 반환 규모가 처음 (+) 값으로 전환된 이후 2023년 4/4분기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전세가가 높고 거래량이 많은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부담이 크게 나타났다<sup>8)</sup>. 다만, 향후 전세가가 회복될 경우에는 반환부담이 예상수준보다 축소될 수 있다(그림 I-3).

그림 I-3. 향후 전세보증금 반환부담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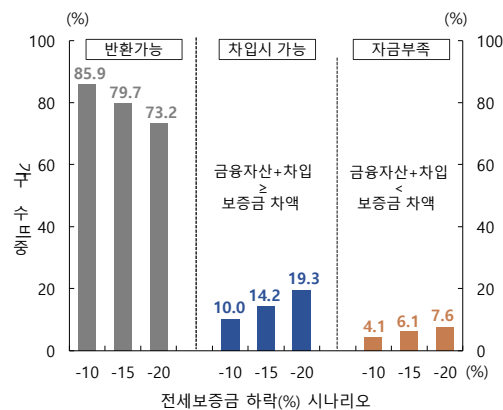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시산, 국토교통부

임대 가구의 전반적인 보증금 반환 능력은 보유 자산 규모 및 차입능력 등을 감안할 때 대체로 양호한 상황인 것으로 평가된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의 보증금 반환능력

을 시뮬레이션<sup>9)</sup>한 결과, 2023년말 전세가격이 2022년 3월 대비 10~20% 하락할 경우에도 전세 임대 가구(116.7만가구)의 대다수가 보유 금융자산과 추가 차입 등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차입 후에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가구의 비중은 약 4.1~7.6%(4.8~8.8만가구)로 추정되었다(그림 I-4). 이와 같은 전세보증금 반환 자금의 부족은 임대 가구의 경우 부채 증가 및 순자산 축소로, 임차 가구의 경우 보증금 손실 가능성 증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임대가구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차입은 임차인이 반환된 보증금액의 상당 부분을 기존 전세대출 상환에 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림 I-4. 전세가격 하락폭<sup>1)</sup>에 따른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별 가구 비중<sup>2)</sup>



주: 1) 시나리오는 2022년 3월대비 전세보증금 하락폭

2) 전체 전세 임대 가구 수 대비 비중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금융복지조사)

7) 23.3월 전국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 지수 기준으로 고점(22년 6월) 대비 약 14% 하락한 수준이다.

8) 전체 보증금 차액에서 서울, 경기 지역이 각각 30.1%, 35.6%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인천과 대구가 각각 6.7%를 차지하였다.

9) 전세 임대가구의 보유 금융자산 처분 및 차입을 통한 보증금 차액(현재 보증금 - 하락 후 보증금) 반환 능력을 점검하였다. 금융자산을 초과하는 보증금 차액 규모만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이 필요하다고 가정하였으며, 가구별 차입 가능 규모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LTV 50% <다주택자 40% >) 및 차주단위 DSR 규제(1억원 이상 대출시 DSR 50%)를 적용하여 시산하였다.

### 3. 미분양 누증 관련 리스크

#### 가. 미분양주택 증가 및 분양률 하락

2023년 4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7.1만호로 2021년 9월말 1.4만호<sup>10)</sup>를 기록한 이후 빠르게 증가하였다. 다만, 과거 PF부실사태 시기와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대구 등 비수도권의 미분양주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체 미분양 증가를 주도하였다. 수도권 외 미분양주택이 2021년 3월말 0.2만호에서 2023년 4월말 1.2만호로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같은 기간중 1.4만호에서 6.0만호로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I-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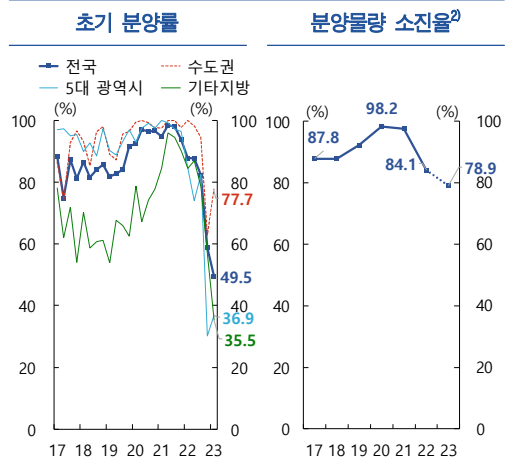
그림 I-5. 최근 미분양 동향<sup>1)</sup>



주: 1) 기말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전국 민간아파트의 초기 분양률<sup>11)</sup> 추이를 살펴 보면, 2017년 이후 약 90% 수준을 유지하던 초기 분양률이 2023년 1/4분기에 49.5%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든 지역에서 초기 분양률이 크게 하락한 가운데, 5대 광역시와 기타지방의 초기 분양률이 각각 36.9%, 35.5%를 기록하면서 수도권(77.7%)에 비해 더 큰 폭 하락하였다. 분양물량 소진율<sup>12)</sup>도 2022년 이후 점차 하락하여 2023년 4월에는 78.9%(연율<sup>13)</sup> 기준)까지 하락하면서 분양시장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그림 I-6). 향후 주택수요가 개선되지 않아 현 수준의 초기 분양률 및 분양물량 소진율이 지속될 경우 연중 미분양주택 물량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I-6. 초기 분양률 및 분양물량 소진율<sup>1)</sup> 추이



주: 1) (전년말 미분양(준공후 미분양제외)+분양물량-기말 미분양) / (전년말 미분양(준공후 미분양제외)+분양물량)  
2) 23년은 1-4월중 소진율을 연율화  
자료: 한국은행 시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10) 2021년 9월말 1.4만호는 통계작성 이래 최저 수준이다.

11)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 분양보증서와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 분양한 30가구 이상의 민간아파트 사업장에서 총 분양 가구 수 대비 초기 분양기간(분양 개시일 이후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중 실제 계약을 체결한 가구 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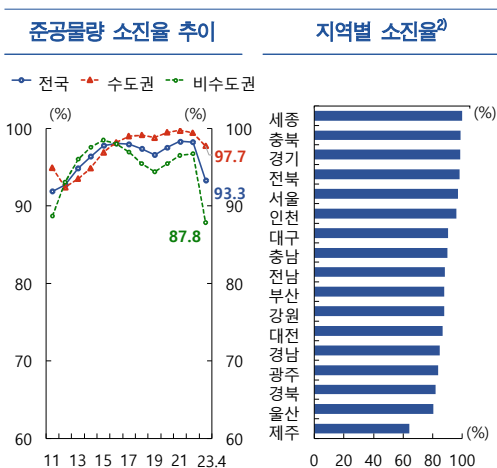
12) 전년도 미분양물량과 해당연도 분양물량 중에서 분양완료된 물량의 비중으로 정의하였다.

13) 23.4월까지 4개월 누적 소진율은 41.0%이며, 연말까지 미분양이 더 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산출하였다.

다만, 최근 주택수요가 소폭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 데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부진한 주택수요를 감안하여 분양일정을 연기<sup>14)</sup>하고 지자체별로 인허가 보류, 후분양 유도 등의 정책적 대응도 이어지고 있어 미분양주택이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설사와 금융기관 입장에서 더욱 큰 부담이 되는 준공후 미분양의 경우 2023년 4월말 기준 0.9만호 수준으로 과거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sup>15)</sup>을 유지하고 있다. 준공물량 소진율<sup>16)</sup>의 경우 2023년 들어 93.3%로 상당폭 하락했으나 수도권<sup>17)</sup>의 경우 97.7%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주 지역의 소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준공물량이 적어<sup>17)</sup>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된다(그림 I-7).

그림 I-7. 준공물량 소진율<sup>1)</sup>



주: 1) (전년말 준공후 미분양 + 당해 준공물량 - 연말 준공후 미분양) / (전년말 준공후 미분양 + 당해 준공물량)

2) 23년 1-4월중 지역별 준공물량 소진율

자료: 국토교통부

## 나. 미분양으로 인한 건설사 재무건전성 저하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면 건설사는 분양수입(분양사업), 공사비용(도급사업) 등 대금 회수가 지연되면서 운전자금 조달을 위한 유동성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사는 부동산PF 사업에 참여하면서 책임준공 등의 보증을 제공하는데, 이 경우 분양실적과 무관하게 약정 기간까지 자체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면 건설사의 완성 및 미완성 주택 재고자산이 늘어나고, 분양 및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관련 미수금이 증가하게 된다. 건설사별 평균 미분양주택 재고액은 2022년 총자산의 약 3.4%에 해당하는 66.0억원(완성주택 24.2억원, 미완성주택 41.7억원)으로, 코로나19 기간중 소폭 감소하였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건설사별 평균 분양 및 공사 미수금이 2022년 234.7억원(분양미수금 31.9억원, 공사미수금 202.8억원)으로 2021년(175.1억원)에 비해 34.1% 증가하였으며, 총자산 대비 비중도 10.6%에서 12.2%로 상승하였다(그림 I-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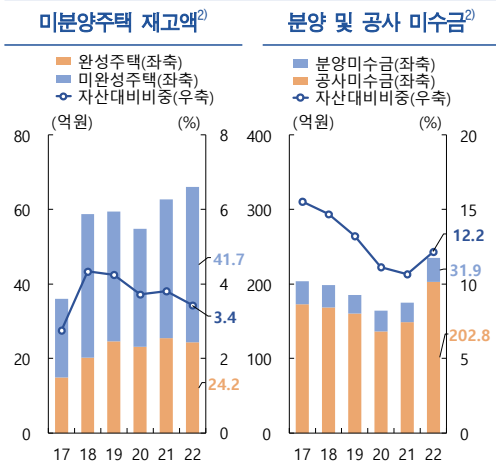
14) 10대 건설사의 1-4월중 아파트 분양실적은 1.6만가구로 지난해 12월 계획물량(5.5만가구)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부동산 114)

15) 준공후 미분양 물량 추이(기말, 만호): 2009년 5.0 → 2015년 1.1 → 2020년 1.2 → 2022년 0.8

16) 전년말 준공후 미분양주택과 당해 준공된 물량 중에서 당해 분양이 완료된 물량의 비중으로 정의하였다.

17) 2023년 1~4월중 제주 지역의 준공주택 물량은 1,453호로, 전국 준공물량(123,083호)의 1.18%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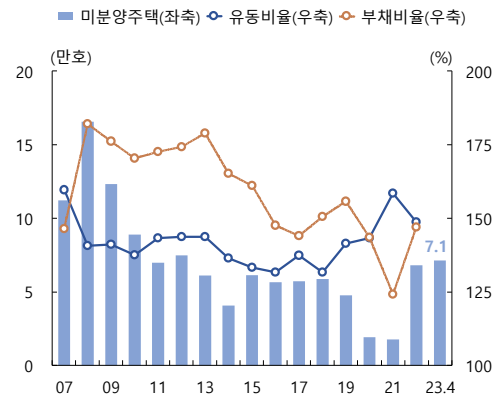
그림 I-8. 건설사<sup>1)</sup> 미분양주택 관련 재고 및 미수금



주: 1) 외부감사대상 종합건설업체 기준(22년 기준 1,254개)  
 2) 재고액 및 미수금의 업체당 평균(연말 기준)  
 자료: KIS-Value

과거 2007~08년중 미분양주택이 급증했던 시기에 건설사의 유동비율이 하락하고 부채비율이 큰 폭 상승하는 등 유동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었다. 지난해부터 미분양주택이 다시 상당폭 증가하면서 유동비율은 하락하고 부채비율은 상승하였다(그림 I-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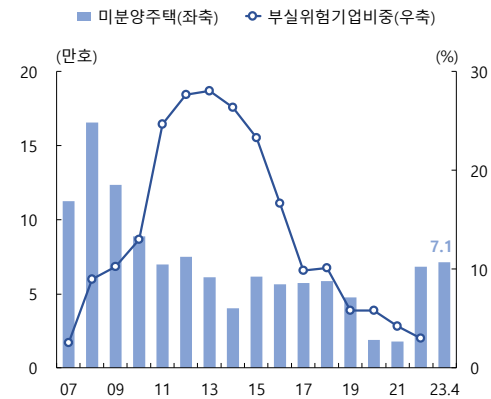
그림 I-9. 미분양주택 및 건설사<sup>1)</sup> 재무건전성<sup>2)</sup> 추이



주: 1) 연도별 상장 종합건설기업 기준  
 2) 연말 유동비율 및 부채비율의 중위값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KIS-Value

미분양주택 증가에 따른 건설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시차를 두고 이들 기업의 부실위험에 반영되면서 금융기관의 관련 대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 2007~08년에도 미분양이 급증한 이후 약 3년에 걸쳐 건설기업의 부실위험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으며, 건설업 부실위험기업 비중이 큰 폭 상승하였다. 따라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빠르게 증가한 미분양주택의 영향이 2023년중 건설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저하시키고 관련 대출의 연체 위험을 높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그림 I-10).

그림 I-10. 건설업 부실위험기업<sup>1)</sup> 비중<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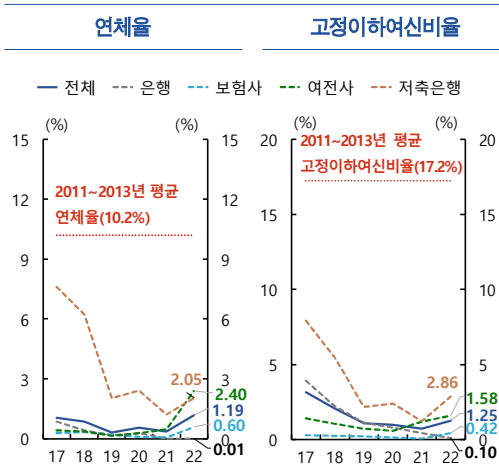
주: 1) 1년 후 부도상태(폐업, 자본잠식)로의 전환 확률 5% 초과 기업  
 2) 연도별 상장 종합건설기업 수 대비 부실위험기업 수 비중  
 자료: 한국은행 시산, 국토교통부

그러나 현재 건설기업의 전반적인 재무상황 및 금융기관의 건설업 대출 건전성이 과거에 비해 크게 양호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관련 정책대응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미분양주택 증가가 과거와 같은 양상으로 건설기업 및 관련 대출의 대규모 부실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부동산PF 부실 확대 가능성

분양실적 저조 등에 따른 주택사업 수익성 악화는 부동산PF 대출의 부실 확대에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일부 브릿지론 부동산PF 사업장의 본PF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관련 리스크가 점차 증대되는 모습이다. 2022년 12월말 기준 부동산PF 대출의 연체율이 1.19%로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PF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부동산PF 대출 잔액 증가세가 크게 둔화<sup>18)</sup>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부동산PF 관련 건전성 지표도 과거 부동산PF 부실사태 당시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그림 I-11).

그림 I-11. 부동산PF 대출 건전성 지표 추이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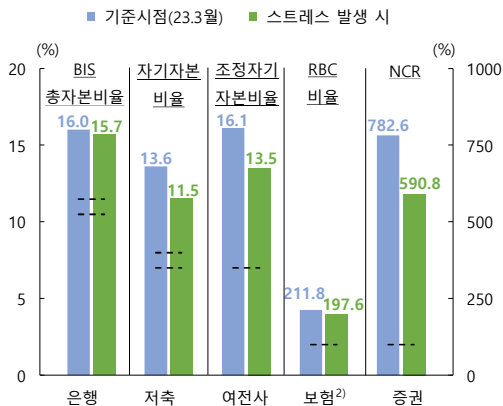
또한 향후 주택시장 부진 장기화 및 미분양 증가 등에 따른 부동산PF 대출 부실이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평가<sup>19)</sup>한 결과, 금융기관의 자본비율이 다소 하락하나, 모든 업권에서 여전히 규제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1, 그림 I-12). 또한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감독기관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어 현 시점에서 부동산PF 관련 부실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I-1.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

	스트레스 상황
주택가격 하락폭 <sup>1)</sup>	-10%
부진 지속기간	향후 2년 이상

주: 1)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23.3월)

그림 I-12. 부동산PF 대출 부실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sup>1)</sup>



주: 1) 부동산PF 대출을 보유한 금융기관 기준

2) 보험회사의 경우 K-ICS 도입 이전 기준

자료: 한국은행 시산,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18)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2019년말 79.6조원 → 2020년말 92.2조원 → 2021년말 112.6조원 → 2022년 6월말 120.4조원 → 9월말 129.1조원 → 2022년말 129.8조원으로 2022년 하반기 들어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되었다.

19) 금번 스트레스 테스트는 2022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의 「최근 부동산 기업금융의 주요 특징 및 잠재리스크 평가」에서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 방식을 차용하여 실시하였다. 이전 스트레스 테스트에서의 주택가격 하락 시나리오가 대체로 현실화된 점을 감안하여, 금번 테스트에서는 주택시장 부진이 2023년 3월 이후 2년 이상 지속되면서 주택가격(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한국부동산원 기준)이 10% 추가 하락하고 준공후 미분양 등이 크게 확대되는 상황을 시나리오로 가정하였다.

## 4. 주택보증 건전성 관련 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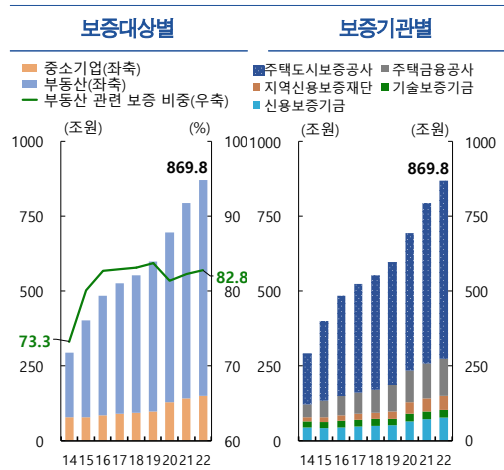
2020년 이후 부동산시장 호황과 정부의 임대사업자 책임 강화 등으로 부동산 관련 공적보증<sup>20)</sup>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부동산 관련 보증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미분양 증가 등의 리스크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 및 기업 부문의 부실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 다만 주요 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정부의 관련 재정 부담이 증대될 수 있다.

### 가. 주택 관련 공적보증 규모 증가

과거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었던 공적보증은 2015년 이후 분양, 전세 및 주택구입 자금 보증 등이 크게 늘어나면서 부동산시장에서도 그 역할이 크게 증대되었다. 2022년말 현재 공적보증 잔액은 869.8조원(부동산보증 719.9조원, 중소기업보증 149.9조원)으로 2014년말(293.3조원) 대비 약 3배 증가하였는데, 부동산 관련 보증의 비중이 2014년말 73.3%에서 2022년말 82.8%로 크게 확대되었다. 보증기관별로는 2015~22년중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가 각각 424.7조원, 80.3조원을 추가로 공급하면서 전체 공적보증의 확대(+576.5조원)를

주도하였다(그림 I-13).

그림 I-13. 공적보증 잔액 추이



자료: 각 보증기관

부동산 관련 공적보증의 증가세는 주택분양시장 활성화, 전세가격 상승 등에 따른 보증수요 증가, 정부의 임대사업자 정책 등에 주로 기인한다. 2017~18년중 분양 관련 규제 강화<sup>21)</sup>로 인해 감소하였던 분양보증<sup>22)</sup>은 2020년 이후 분양시장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증가세로 전환하였다. 전세대출 및 전세보증금반환 보증(개인보증)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등으로 전세가격이 급등<sup>23)</sup>하면서 보증 규모가 증가하였다. 한편, 정부의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임대보증금보증(사업자보증)<sup>24)</sup> 규모도 크게 증가<sup>25)</sup>하였다(그림 I-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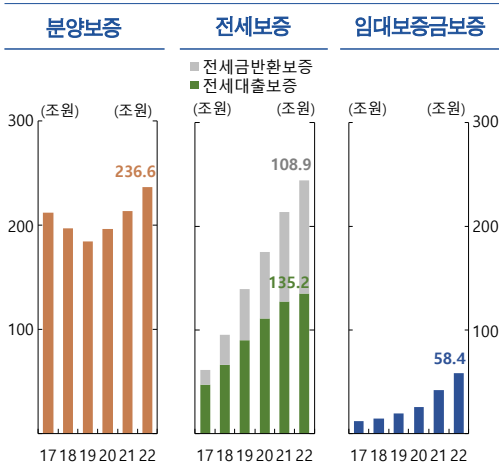
20) 본고에서는 공적보증을 보증 대상에 따라 중소기업보증과 부동산보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중소기업보증에는 신용보증기금(공동화회사보증 포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등이 포함되고, 부동산보증은 주택금융공사(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구입자금보증, 전세자금대출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분양보증 등이 포함된다.

21) LTV, DTI 규제 강화(투기과열지구 LTV한도 60% → 40%, DTI 50% → 40%), 분양권 전매시 일괄 양도세 50% 적용,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등 관련 규제가 강화되었다.

22) 분양보증 잔액(말잔, 조원): 17년 211.9 → 18년 196.5 → 19년 184.2 → 20년 196.1 → 21년 213.7 → 22년 23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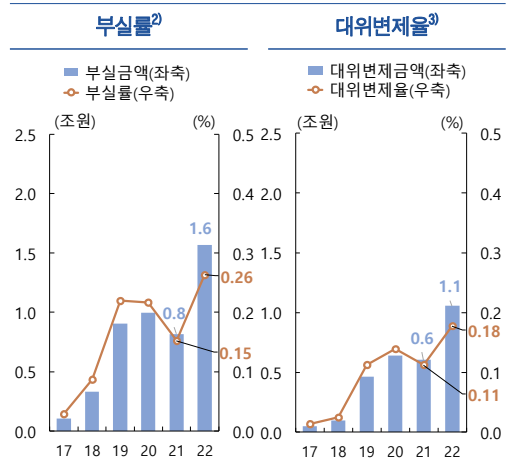
23) 2020년 8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과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요건(2년) 등이 신설되면서 전월세물량이 감소한데 기인한다.

그림 I-14. 종류별 부동산 관련 공적보증 잔액 추이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그림 I-15. 부동산 관련 보증의 건전성 추이<sup>1)</sup>



주: 1) HUG 기준  
 2) 부실금액/보증잔액  
 3) 대위변제금액/보증잔액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나. 보증기관의 건전성 저하 우려 증대

2022년 이후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해 부동산 관련 공적보증의 건전성 지표들이 다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공적보증기관의 재무상황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HUG의 보증 부실금액<sup>26)</sup> 규모는 2021년 0.8조원에서 2022년 1.6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실률(부실금액/보증잔액)도 0.15%에서 0.26%로 상승하였다. 대위변제액<sup>27)</sup>도 같은 기간 0.6조원에서 1.1조원으로 확대되면서 대위변제율(대위변제액/보증잔액)도 0.11%에서 0.18%로 상승하였다(그림 I-15). 특히 동 대위변제액 중 전세관련 보증<sup>28)</sup>의 비중이 2022년 현재 92.1%로, 2017년(10.4%)에 비해 크게 증대<sup>29)</sup>된 것으로 나타났다.

5. 시사점

현재까지는 지난해 하반기 중 주택시장 부진으로 인해 실제 현실화된 대출관련 부실 규모가 크지 않고 일부 비은행업권을 제외하면 금융기관의 복원력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금융안정 리스크가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주택가격이 질서있게 조정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전세대출 수요 둔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점진적 축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시일내 주택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임대인의 전세

24) 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는 2020.8월부터, 기존 임대사업자는 2021.8월부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다.  
 25) 임대보증금보증은 2015~19년중 15.6조원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공적 의무 강화 정책 시행 이후 2020~22년중 38.8조원 증가하였다.  
 26) 보증 부실금액은 채무자가 보증으로 빌린 대출금에 대해 이자 납입 또는 원금 상환을 제대로 하지 않는 채권 금액을 의미한다.  
 27) 보증 대위변제액은 보증사고로 인해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한 금액을 의미한다.  
 28) 전세자금대출보증과 전세금 반환보증을 의미한다.  
 29) HUG의 대위변제액 중 전세관련 보증의 비중: 17년 10.4% → 19년 64.7% → 21년 87.9% → 22년 92.1%

보증금 반환부담 증대, 미분양주택 물량 증가, 부동산PF 부문의 부실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먼저 실수요자에 대한 신축적인 규제 적용을 통해 주택시장의 매수심리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미분양주택이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분양가 수준에 따라 분양실적이 차별화되는 등 일부 지역의 경우 고분양가가 미분양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할인분양 등 적절한 분양가 조정을 통해 매입수요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세시장의 경우 전세 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대책<sup>30)</sup>과는 별개로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에 직면한 전세 세입자 보호방안 마련 등의 대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PF 대출 부실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금융당국이 기 추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업 전망이 양호한 정상 사업장의 경우 다양한 금융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반면 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행사 및 시공사, 대주단 등 사업 관계자 간 합리적 책임 분담을 통해 사업 진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유도하고, 필요시 정리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민간 및 공공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아울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실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및 자본확충 등을 통해 사전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권준석, 남명훈(2022), “금리와 자산가격 변화가 가계부채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연구, 23(2), pp. 119-158.

김진유(2022), “고위험 전세와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의 상관관계 분석 - 서울시 전세보증사고를 중심으로”, 부동산학연구, 28(4), pp. 55-69.

안영빈(2022), “한국 전세가율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시장을 악화시키는 요인 분석”, 시장경제 연구, 51(2), pp. 1-18.

정상철, 성주한(2019), “미분양 아파트 결정모형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76, pp. 61-77.

정화영(2022), “부동산가격 상승이 가계의 자산·부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이슈보고서 22-27,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은행(2022), “최근 부동산 기업금융의 주요 특징 및 잠재리스크 평가”, 「금융안정보고서(2022.12)」, pp. 125-139.

한국신용평가(2023), “증권사 부동산금융 손실 시나리오 테스트: 브릿지론 위험 부담 수준이 자본적정성 차별화 핵심 요인”, KIS Special Report

한국은행(2022), “금융안정 상황(2022년 9월)”, 한국은행 보도자료(2022년 9월)

30) 정부는 최우선변제금액 상향(현재 시행중), 임차인 대항력 보강(현재 시행중), 관련 처벌 강화(관련 법 개정 추진중) 등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국토교통부 2022년 9월, 2023년 2월).

## II.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잠재리스크 점검<sup>1)</sup>

1. 검토 배경
2. 비은행예금취급기관 현황
3. 잠재리스크 및 대응 여력
4. 종합평가 및 시사점

### 1. 검토 배경

2022년 4/4분기 이후 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sup>2)</sup>의 자산 건전성이 빠르게 저하되면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신용경계감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2023년 3월초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하 'SVB')의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bank run)가 발생<sup>3)</sup>하자 그간의 신용경계감과 맞물려 미국 중소기업과 규제환경이 유사한 비은행예금취급기관<sup>4)</sup>의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경계감도 일시적으로 고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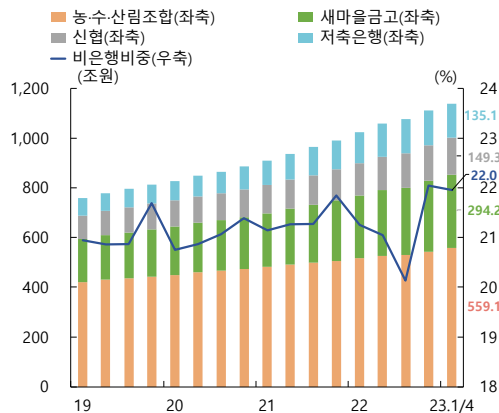
이에 본고에서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 현황을 살펴보고 부동산 관련 익스포져, 취약차주 대출, 유가증권 투자 및 유동성과 관련된 잠재리스크를 점검해 보았다. 그리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잠

재리스크가 현재화될 경우 시스템 리스크로의 전이가능성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대응 여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 2. 비은행예금취급기관 현황

2023년 1/4분기말 기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총자산 규모는 1,137.7조원으로 세부 업권별로는 농·수·산림조합(559.1조원), 새마을금고(294.2조원), 신협(149.3조원) 및 저축은행(135.1조원) 순이다. 은행<sup>5)</sup>을 포함한 전체 예금취급기관 대비 비은행 부문의 비중은 2022년 3/4분기중 일시적으로 축소<sup>6)</sup>되었으나 2023년 1/4분기말 22.0%로 확대되었다(그림 II-1).

그림 II -1.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자산 규모<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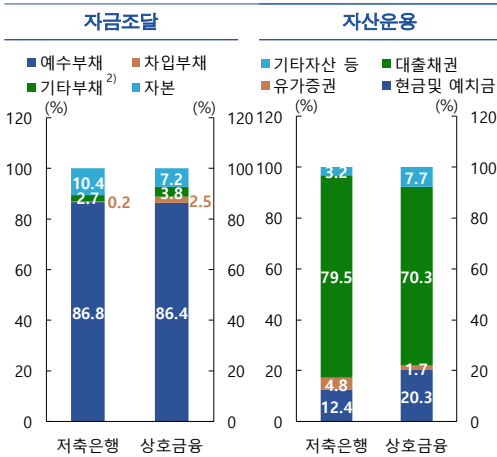
주: 1) 분기말 잔액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새마을금고 중앙회

- 1) 본고는 나성오·송수혁·남승희(비은행리스크팀), 박지수·이영재·염기주·이병호(시스템리스크팀)가 작성, 이종현(금융리스크 분석부장)·신준영(비은행리스크팀장)·임호성(시스템리스크팀장)·우신욱(금융기획팀장)이 검토하였다.
- 2)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 산림조합의 신용사업부문(통칭하여 '농·수·산림조합')과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 및 새마을금고를 포괄한다.
- 3) 관련 정책당국의 빠른 대응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제한적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8> 「SVB·CS 사태의 주요 내용과 정책당국 대응사례 및 시사점」을 참조.
- 4)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은행과 유사한 여수신업무를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지만 지역 서민 금융 등 보다 제한적인 목적으로 설립되어 자금조달 및 운용 등에서 은행과는 상이한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이다. SVB는 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 국제 기준(바젤 III)이 적용되지 않는 중소 은행으로서, 우리나라의 비은행예금취급기관과 규제환경이 유사하다. 우체국도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포함되나 국영 금융기관이면서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등 상이한 특성으로 인해 본고의 주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5) 일반은행, 특수은행 및 외은지점을 모두 포괄한다.
- 6) LCR 규제 비율 정상화 계획(22년말까지 92.5%로 상향 예정이었으나 22년 10월말 정상화를 6개월간 유예)에 따라 시중은행이 고 유동성자산 보유 비중 및 은행채 발행을 빠르게 확대한 것에 기인한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은행에 비해 영위 가능한 업무의 범위가 넓지 않고 여신 취급에 있어 업권 별로 영업구역 또는 조합원 자격 등에 따른 제한이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은 예수부채를 통해 자금의 대부분을 조달하고 이를 주로 대출채권으로 운용하고 있다(그림 II-2).

그림 II -2 업권별 자금조달·자산운용 현황<sup>1)</sup>



주: 1) 2022년말 기준  
 2) 퇴직급여충당부채, 미지급비용 등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새마을금고 중앙회

### 3. 잠재리스크 및 대응 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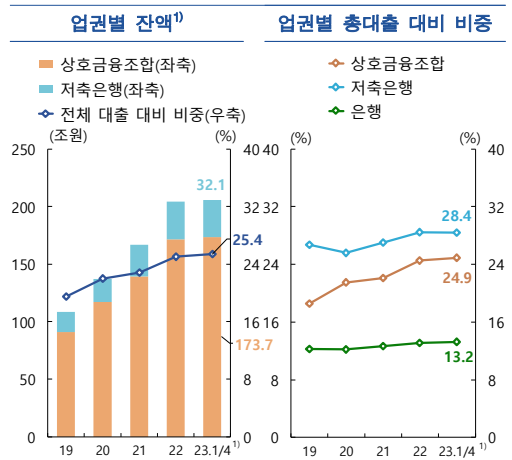
향후 높아진 금리 수준이 유지되고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연체율 상승, 수익성 악화 지속 등으로 예금취급기관의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확대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신용, 시장 및 유동성 리스크 측면에서 최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잠재리스크를 평가하고 각 업권의 손실 발생 또는 유동성 부족 상황시 대응 여력을 점검해보았다.

## 가. 신용 및 시장 리스크

###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 확대 및 건전성 저하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규모는 2023년 1/4분기말 약 205.8조원(상호금융조합 약 173.7조원, 저축은행 32.1조원) 규모로 추산되며, 전체 대출잔액 대비 비중은 2019년말 대비 5.9%포인트 증가한 25.4% 수준이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이 28.4%, 상호금융조합이 24.9%로서 은행(13.2%) 부문의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그림 II-3).

그림 II -3 부동산·건설업 대출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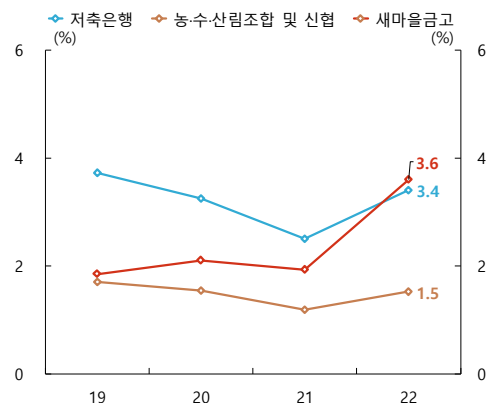
주: 1) 새마을금고는 2023년 1월말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시산

7) 특히 상호금융조합의 경우 복수의 조합이 참여하는 공동대출을 활용하여 부동산 관련 대출 취급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동대출은 2개 이상의 단위 조합이 동일 채무자를 대상으로 동일 물건에 대해 동일 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담보대출 방식으로서 차주는 개별 조합 수준의 여신 한도를 적용 받지 않고 동일 상호금융권 내에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가 확대된 가운데 부동산 경기가 부진해지면서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 전반의 건전성도 저하되었다. 2022년말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3.6%로 2021년말(1.9%) 대비 큰 폭 상승한 가운데 여타 업권의 연체율도 저축은행 3.4%, 농·수·산림조합 및 신협이 1.5%로 상승하였다<sup>8)</sup>(그림 II-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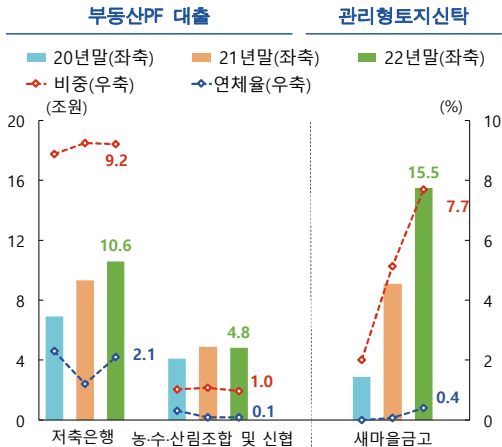
한편 최근 부실 우려가 높아진 부동산PF<sup>9)</sup>에 대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잔액은 2022년말 기준 농·수·산림조합 및 신협이 4.8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소폭 감소한 반면 저축은행은 10.6조원으로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관리형토지신탁<sup>10)</sup> 방식으로 취급한 부동산 PF 관련 대출이 총대출의 7.7%(15.5조원) 수준까지 확대되었으나 연체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sup>11)</sup>(그림 II-5).

그림 II-4. 업권별 연체율 추이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새마을금고 중앙회

그림 II-5. 부동산PF 관련 대출 규모 및 연체율 추이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행정안전부 등

8) 2023년 1/4분기말 연체율은 저축은행(5.1%)과 농·수·산림조합 및 신협(2.4%) 모두 증가하였다.

9)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고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금융방식이다.

10)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과 사업시행자 명의를 신탁회사로 이전하여 신탁회사가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으로서 부동산 소유자 및 여타 채권자에 의한 권리 침해 없이 사업 진행이 가능하고 시공사 및 신탁사 책임준공 약정을 통해 준공리스크가 낮아지는 장점이 있다.

11) 다만 2023년 1월말 기준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잔액과 연체율은 각각 15.8조원과 0.7%로 2022년말 대비 모두 증가하였다.

## 취약차주 대출 확대

가계부채DB에 따르면 2019년말 대비 2022년말 취약차주<sup>12)</sup>에 대한 대출 규모가 저축은행은 증가(+32.5%)하고 상호금융조합은 감소(-24.3%)한 가운데 저축은행의 경우 20~30대 청년층(+51.6%)의 증가폭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3)</sup> 이는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태도 강화<sup>14)</sup>, 비대면 경로를 중심으로 한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확대<sup>15)</sup> 영향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II-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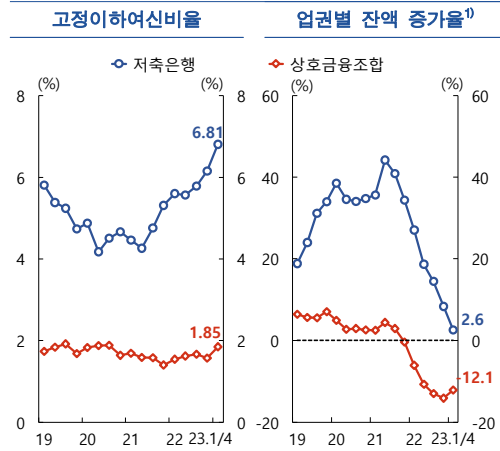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1년 3/4분기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여 2023년 1/4분기말 6.81%까지 상승하였다. 다만 가계 부실에 대한 우려<sup>16)</sup>가 높아지면서 2021년 3/4분기 이후부터는 모든 업권에서 신용대출 규모의 증가폭이 둔화되거나 감소로 전환된 모습이다(그림 II-7).

그림 II-6. 취약차주 연령별 대출 규모 추이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그림 II-7. 신용대출 건전성 및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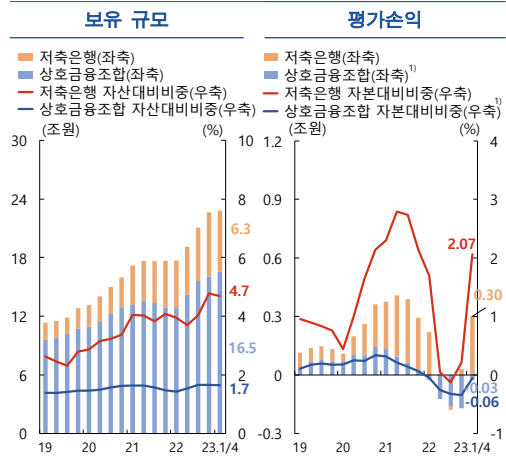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새마을금고 중앙회

- 다중채무자(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 이용)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이거나 저신용(NICE 기준 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차주로 정의하였다.
-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중 취약차주 대출 비중은 2022년말 기준 24.7%(전년말대비 1.3%포인트 상승)로 은행권이 낮은 수준(3.3%)을 유지해 온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다중채무자 비중도 저축은행이 77.4%로서 은행(27.3%)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 한국은행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주로 상호금융조합의 대출 태도 강화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2년말 기준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신용대출 잔액은 54.9조원으로서 저축은행(27.2조원)과 농·수·산림조합 및 신탁(24.2조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저축은행 신용대출 중 비대면 경로를 통한 잔액 비중은 2022년말 34.5%로서 2020년 6월말(23.8%) 대비 10.7%포인트 상승하였다. 한편 가계부채 DB에 따르면 2019년말 대비 2022년말 청년층에 대한 신용대출 잔액은 상호금융조합(-4.9%)은 감소한 가운데 저축은행(85.0%)이 은행(17.0%)에 비해 큰 폭 확대되었다.
-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30대 이하 청년의 개인회생신청 비중은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46.6%로 전년(45.1%) 대비 1.5%포인트 상승하였다.

## 유가증권 투자관련 손실은 미미한 수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유가증권 투자는 코로나 19 이후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익성 하락<sup>17)</sup>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확대되었으나 투자 비중 제한<sup>18)</sup> 등으로 인해 2023년 1/4분기말 기준 업권별 유가증권 보유 규모의 총자산 대비 비중은 저축은행(4.7%)과 상호금융조합(1.7%) 모두 크지 않은 수준이다. 2022년중 금리 상승 등으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sup>19)</sup>이 발생하였으나 저축은행의 경우 3/4분기 이후 이익으로 전환되었고 상호금융조합은 손실 규모가 축소되는 가운데 2023년 1/4분기말 기준 자본 대비 미미한 수준(-0.06%)에 그치고 있다(그림 II-8).

그림 II-8. 유가증권 보유 규모 및 평가손익 추이



주: 1) 농·수·산림조합 및 신탁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새마을금고 중앙회

##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신용리스크 현재화로 인한 손실 발생이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부정적 시나리오<sup>20)</sup>하에서도 모든 비은행 업권에서 자본적정성이 규제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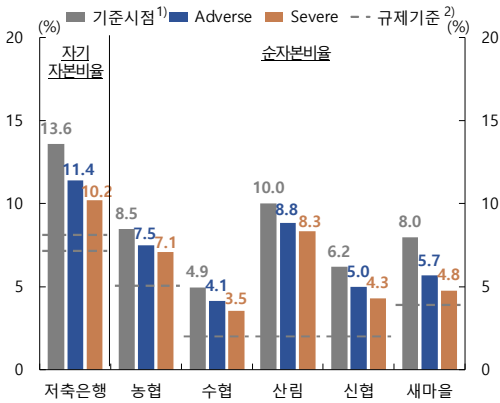
- 17) 한편, 인터넷전문은행과의 경쟁 심화, 법정 최고금리 인하(21.7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21.10월) 등도 수익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18) 저축은행의 주식투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제한되며 비상장주식 및 회사채 투자도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제한된다(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농협의 경우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유가증권 보유 잔액은 전 영업일 여유자금(총조달액에서 현금, 대출채권 등 운용자산을 차감한 금액)의 20% 미만으로 제한된다.
- 19)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의 분기말 보유 유가증권의 시가에서 취득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였다.
- 20) 스트레스 테스트를 위한 시나리오별 전제치는 향후 1년간 나타날 수 있는 경제성장률 하방리스크(GaR)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 전제치

	경제성장률 <sup>1)</sup>	주택가격 <sup>2)</sup>	주가 <sup>3)</sup>
Adverse	-2.0%포인트(2023년 기준 GaR 10%)	-10%	-40%
Severe	-2.9%포인트(2023년 기준 GaR 1%)	-20%	-50%

주: 1) 전년 동기 대비 2) 최고점(2022년 2/4분기) 대비 3) 최고점(2021년 2/4분기) 대비

그림 II -9. 시나리오별 자기자본비율 변동



주: 1) 2023년 1/4분기말 기준  
 2) 저축은행 7%(자산 1조원 이상 8%), 농협 5%, 수협·산림 조합·신협 2%, 새마을금고 4%  
 자료: 한국은행 시산

한편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신용 및 시장 리스크의 현재화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경우 여타 금융업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시스템 리스크 관점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상호거래를 살펴봄으로써 시스템 리스크로의 전이여부를 평가해보았다.

먼저 상호거래를 대상기관별로 살펴보면 조달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65.0%), 신탁(13.8%), 은행(9.4%), 투자펀드(3.3%) 순이며, 운용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45.0%), 은행(20.0%) 및 투자펀드(10.4%)<sup>21)</sup>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II-1).

표 II -1. 대상기관별 상호거래 규모<sup>1)</sup>

(조원, %)

상대기관	조달		운용	
	규모	비중	규모	비중
비은행예취 <sup>2)</sup>	213.7	65.0	213.7	45.0
은행	30.7	9.4	95.1	20.0
외은지점	6.7	2.0	6.0	1.3
신탁	45.3	13.8	20.7	4.3
투자펀드	10.7	3.3	49.5	10.4
보험	10.1	3.1	5.2	1.1
증권	7.3	2.2	23.4	4.9

주: 1) 2022년말 기준  
 2) 대부분 상호금융조합중앙회와 회원 기관간 거래로 구성  
 자료: 한국은행

다음으로 상호거래를 금융상품별로 살펴보면 조달과 운용 모두 예금(각각 71.7%, 50.8%) 비중이 높다. 특히 조달의 경우 2017년도 대비 채권 비중(0.6%→7.0%)이 증가하였다.<sup>22)</sup>(표 II-2).

표 II -2. 상품별 상호거래 규모<sup>1)</sup>

(조원, %)

상품	조달		운용	
	규모	비중	규모	비중
예금	235.7	71.7	241.2	50.8
채권	23.1	7.0	65.6	13.8
대출	20.9	6.4	56.9	12.0
주식 <sup>2)</sup>	7.0	2.1	49.0	10.3
FP	5.1	1.6	6.1	1.3
파생	3.0	0.9	1.8	0.4

주: 1) 2022년말 기준  
 2) 주식에는 투자펀드지분, 주기연계증권(ELS) 등이 포함  
 자료: 한국은행

상호연계 통계를 활용하여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신용 및 시장 리스크 관련 손실 발생 충격이 타업권으로 전이되는 리스크를 시산하였다. 구체적으로, 타업권으로 전이되는 손실 규모 및 이에

21) 투자펀드 운용 비중이 2017년말 8.1%에서 2022년말 10.4%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상호금융조합 중앙회 등에서 최근 대체투자를 크게 늘린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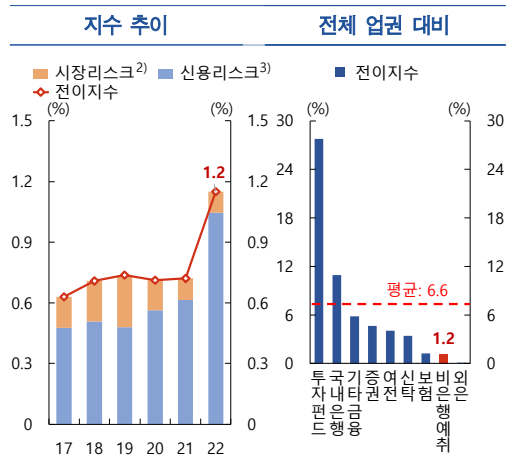
22) 이는 일부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이 자본확충 등을 위해 후순위채 등을 발행한 데 주로 기인한다.

따른 연쇄손실 가능성 등을 반영한 자본손실 규모<sup>23)</sup>를 추정하고 전이지수<sup>24)</sup>를 분석해 보았다.<sup>25)</sup>

리스크 산출결과 2022년말 기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전이지수는 1.2%로 2017년말(0.6%) 대비 0.6%포인트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22년 중 타금융업권이 신탁계정을 통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예치한 자금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도산시 신탁계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증대될 수 있어 전이지수가 상승하였다(그림 II-10).

다만 금융업권내 전체 상호거래 규모에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비중(17.6%)<sup>26)</sup>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 전이지수는 전체 업권 평균(6.6%)<sup>27)</sup>대비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상호거래의 상당 부분(36.2%)<sup>27)</sup>이 중앙회와 회원 기관간의 거래로 타 금융업권으로부터의 조달 비중이 낮아 연쇄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작은 데다, 영업구조 특성상 부도시 손실률이 낮은 예금의 조달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sup>28)</sup>

그림 II - 10.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전이지수<sup>1)</sup>



주: 1) 연말 기준  
 2) 도산 업권(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부터 조달한 단기 부채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이 자산 급매 등으로 입을 수 있는 처분손실  
 3) 거래상대방이 도산 업권(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운용하고 있는 자산에 발생한 손실  
 자료: 한국은행 시산

### 나. 유동성리스크

#### 비대면 수신 확대

2023년 1/4분기말 기준 저축은행의 총수신 중 비대면 경로<sup>29)</sup>를 통한 수신 비중은 33.2%(38.5조원)로서, 2022년 3/4분기 이후 빠르게 상승하였다. 이는 저축은행 통합 어플리케이션 출시 등<sup>30)</sup>으로 비대면 거래 편의가 제고된 상황에서 작년 하반기

23) 도산(손실)자기자본) 업권이 거래 상대 업권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전이하는) 신용리스크(거래상대방이 손실 업권에 직접 투자한 자산으로 입을 수 있는 손실)와 시장리스크(도산 업권으로부터 조달한 단기 부채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이 자산 급매 등으로 입을 수 있는 처분손실)를 합산하였다.

24) 전이지수 =  $\frac{\text{비은행예금취급기관 도산이 유발하는 타업권 총 자본손실}}{\text{타업권 총 자기자본}} \times 100$

25) 동 분석은 ECB의 「CoMap: mapping contagion in the euro banking sector(Covi et al., 2021)」를 활용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2021년 12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금융안정 현안 분석> 「IV. 최근 금융부문의 상호연계성 추이 및 리스크 점검」을 참고.

26) 금융업권내 전체 상호거래 규모는 3,357.3조원이며, 이중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규모는 589.9조원이다.

27) 금융업권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상호거래(589.9조원)에서 중앙회와 회원기관 등 업권내 규모는 213.7조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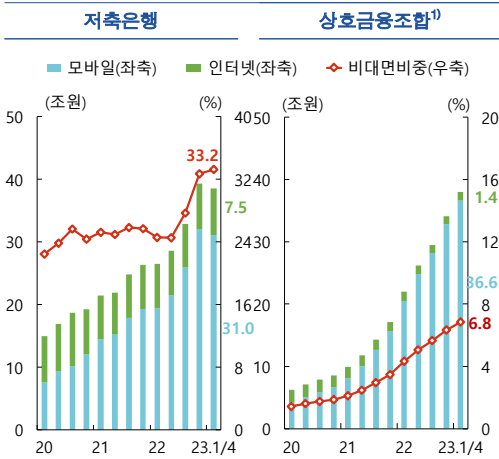
28) 자본손실 산정시 바젤Ⅲ 기본내부등급법상 부도시 상품별 손실률(LGD)를 적용하였으며, 예금의 손실률(10%)이 여타 시장성 조달(채권 45%, 주식 75% 등)보다 낮아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도산이 여타 업권에 미치는 평균 손실률이 여타 업권에 비해 낮다.

29) 모바일앱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입을 의미하며 이중 모바일앱을 이용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저축은행, 농협 및 신탁)의 신규 수신 비중은 2020년 1/4분기중 63.5%에서 2023년 1/4분기중 90.3%로 증가하였다.

30) 66개 저축은행의 금리 비교, 예적금 가입, 대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저축은행 통합 어플리케이션(SB특독 플러스)이 출시(2019년 9월)되었으며, 정기예금 가입 전용 보통예금 계좌가 도입(2020년 7월)되었다.

기 예금유치 경쟁이 심화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상호금융조합의 비대면 수신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수신대비 비중은 6.8%(38.0조원)로 아직 낮은 수준<sup>31)</sup>이다(그림 II-11).

그림 II -11. 비대면 수신 규모 및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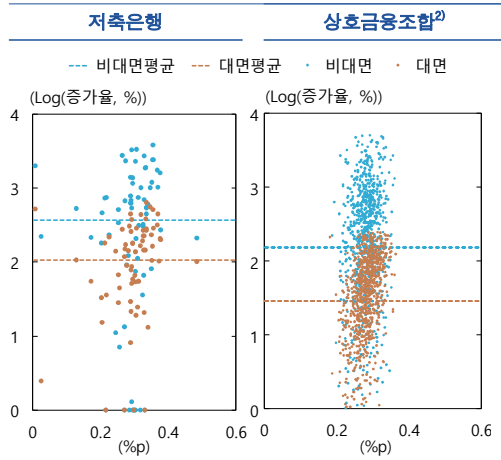


주: 1) 농협 및 신한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각 중앙회

특히 코로나19 기간(2020년 1/4분기부터 2022년 4/4분기) 중 개별 기관의 예수금리 인상폭에 따른 경로별 수신 증가율을 점검해 본 결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농협) 모두 비대면 경로가 대면 경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sup>32)</sup>(그림 II-12). 이는 모바일 앱을 활용하는 예금자의 경우 금융 정보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부정적 정보가 확산될 경우에도 여타 예금자에 비해

보다 빠른 속도로 예금을 인출할 가능성이 높다.

그림 II -12. 경로별 수신 증가 속도<sup>3)</sup>



주: 1) X축은 2020년 1/4분기말부터 2022년 4/4분기말까지 매분기별 저축은행 또는 개별 조합의 직전 분기말 대비 예수금리 상승폭의 단순평균(%포인트), Y축은 동기간중 매분기별 각 저축은행 또는 개별 조합의 직전 분기말 대비 예수금 증가율 기하평균(%의 로그값)  
2) 농협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농협중앙회, 한국은행 시산

### 저축은행의 퇴직연금 이동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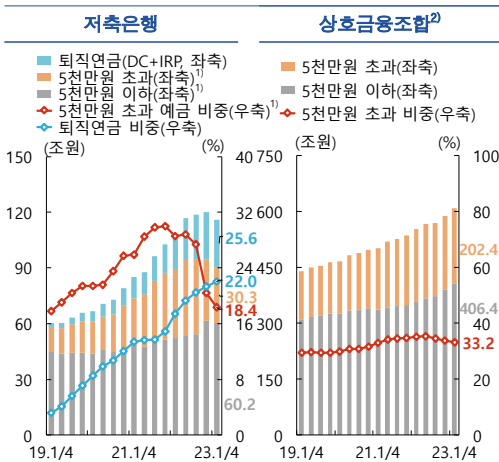
저축은행에 예치된 퇴직연금 규모는 퇴직연금 취급 가능(2018년 9월)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1/4분기말 기준 전체 수신의 22.0%(25.6조원)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2023년 7월부터 DC 및 IRP 퇴직연금<sup>33)</sup>에 대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sup>34)</sup>가 시행될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사전지정 운용상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만기도래 이후<sup>35)</sup> 여타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상품

31)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경우 대면 경로를 통해 신용카드 가입, 보험상품 판매 등에 따른 비이자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저축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대면경로를 통한 예금 모집 유인이 크지 않은 편이다.  
32) 저축은행의 경로별 전분기 대비 신규 예금 증가율 평균은 비대면 경로가 17.2%, 대면 경로가 7.8%이며, 농협은 비대면 경로가 10.2%, 대면 경로가 4.7%로 분석되었다.  
33) 퇴직연금 자금은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34)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진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디폴트옵션)되도록 하는 제도로서, 2022년 7월 12일부터 도입 예정이었으나 시행이 1년 유예되었다.  
35) 퇴직연금감독규정에 따라 저축은행에 예치된 DC형 및 IRP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은행 등 여타 금융기관의 운용상품과는 달리 가입자별 금액 한도(1인당 5천만원 이내, 예금보호한도와 동일)를 적용하고 있다. 사전지정운용제도 시행을 위해 2022년 12월

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그림 II-13).

퇴직연금을 제외한 여타 수신의 경우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한도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액예금 비중이 2022년 하반기 이후 크게 감소하여 2023년 1/4분기말 18.4% 수준이며, 상호금융조합(33.2%)은 동 비중이 저축은행 보다 높지만 은행(81.2%)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II -13. 예금종류 및 규모별 추이



주: 1) 퇴직연금(DC형 및 IRP) 제외  
 2) 농·수·산림조합 및 신탁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시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자금조달 경로가 비대면(A그룹) 또는 퇴직연금(B그룹)에 편중되어 있는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예금유출 확대에 따른 유동성리스크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표 II-3).

표 II -3. 저축은행 그룹별 수신 편중도<sup>1)2)</sup>

그룹	비대면 수신 <sup>3)</sup>	퇴직연금 <sup>3)</sup>
A	62.7	9.2
B	12.8	55.1
업권 전체	33.2	22.0

주: 1) 2023년 1/4분기말 기준  
 2) 비대면경로 또는 퇴직연금 수신 비중이 전체 예수금의 50% 이상인 저축은행을 각각 그룹 A와 B로 분류  
 3) 각 그룹의 총수신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 중앙회 유동성 지원 여력 양호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지급 준비 또는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각 중앙회에 예수금 일부를 예치하고 있으며, 중앙회는 개별 저축은행, 조합 또는 금고의 유동성 부족 상황 발생시 동 자금을 이용하여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다.<sup>36)</sup> 2022년말 기준 각 중앙회가 보유한 예치금과 상환준비금<sup>37)</sup> 총액은 약 193.9조원 규모로 추정<sup>38)</sup>되며 운용상품은 각 업권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유가증권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II-4).

표 II -4. 중앙회 자산 운용 비중<sup>1)2)</sup>

	현금및예금	유가증권	기타
저축은행	17.6	82.4	-
상호금융조합	6.3	87.8	5.9

주: 1) 2022년말 기준  
 2) 예치금과 상환준비금 총액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각 중앙회, 새마을금고 공시자료 등을 활용하여 시산

은행, 보험 및 증권사의 총 259개 사전지정 포트폴리오가 승인되었으나 해당 예치 한도로 인해 저축은행 예금은 운용사들의 해당 포트폴리오(최대 3개 상품)에서 제외되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기존 상품의 만기 도래 이후 최대 6주 이내 근로자의 운용 지시가 없을 경우 해당 퇴직연금 자금을 사전지정된 포트폴리오로 운용한다.

36) 개별 금융기관은 유동성 부족시 우선 중앙회에 예치한 예치금 또는 상환준비금을 인출하여 유동성 수요에 대응할 수 있으며, 부족시 중앙회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본고의 유동성 지원 여력 점검에서는 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예치금 및 상환준비금 전액을 유동성이 부족한 개별 조합 지원을 위해 사용 가능한 것으로 상정하였다.

37) 저축은행의 경우 지급준비자산을 의미한다.

38) 각 중앙회의 재무상태표, 공시자료 등을 이용하여 추산하였으며 예금자보호기금의 경우 회원기관 파산으로 인한 예금지급 불능 상황에서 사용되는 재원이라는 측면에서 유동성 지급 여력 평가시에는 제외하였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불안 발생시 업권별 대응 여력을 평가하기 위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중앙회의 유동성 지원 여력을 점검하였다. 시나리오는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및 예금 인출 규모에 따라 세 가지 상황<sup>39)</sup>을 상정하였다 (표 II-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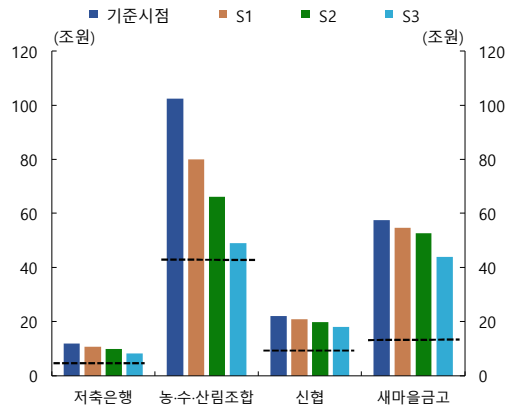
표 II-5. 예금 인출 시나리오

시나리오	S1	S2	S3
대상 기관	각 업권 <sup>1)</sup> 내 자본비율 하위 5% 기관		
규모	50%	80%	
추가인출 <sup>2)</sup> 확산	-		5% <sup>3)</sup>

주: 1) 저축은행, 농·수·산림조합 및 신협, 새마을금고  
 2) 업권 전반의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 확산으로 인해 여타 기관에도 예금인출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  
 3) SVB 사태 전후(2022년 3월 8일과 3월 22일간) 미국의 전체 소형은행 예금잔액 감소 규모(4.2%) 등을 고려

대규모 예금 인출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대응여력을 점검해 본 결과 각 시나리오 하에서 중앙회 예치금과 상환준비금이 감소하더라도 잔액은 모두 2022년말 기준 상환준비금 규모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앙회의 유동성 공급 여력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추정된다<sup>40)</sup>(그림 II-14). 다만 보유 유가증권의 평가손실 발생시 유동성 공급 여력이 저하되거나 유동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보유 유가증권을 일시에 매각할 경우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II-14. 유동성 지원 여력 평가 결과<sup>1)2)3)</sup>



주: 1) 2022년말 기준  
 2) 각 중앙회의 예치금 및 상환준비금 잔액 합계  
 3) 점선은 업권별 2022년말 상환준비금 규모 (농·수·산림조합은 각 조합별 시산후 결과를 합산)  
 자료: 한국은행 시산

#### 4. 종합평가 및 시사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꾸준한 성장은 지역금융 수요의 대응을 통해 금융포용에 기여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가 확대되면서 신용리스크도 늘어나고 있다. 다만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경우 여타 금융업권과의 상호연계성이 높지 않아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의 유동성 지원 여력 등을 고려하면 예금 인출 규모가 확대되더라도 SVB 사태와 같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39) SVB파산 사태 당시 2022.3.9일 420억 달러 이상이 대규모로 인출되었으며, 폐쇄 결정으로 미처 인출되지 못한 1천억 달러를 고려하면 이를 동안 총예금 1,731억달러(2022년말 기준) 중 약 82% 가량이 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고려하면 다수금융기관에서 동시에 80% 예금이 인출되는 본고의 S2 및 S3 시나리오는 매우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0) 2022년말 기준 각 업권의 예수부채 총액 대비 중앙회 보유 상환준비금 비중은 저축은행 4.2%, 농·수·산림조합 9.5%, 신협 6.8%, 새마을금고 5.0% 수준이다.

중앙회가 유동성 공급을 위해 보유 유가증권을 대량 매각해야 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시장 가치 하락을 유발하여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또한 예상치 못하게 빠른 속도로뱅크런이 발생할 경우 중앙회가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앙은행의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정보 접근성 확대 및 모니터링 수단 확충 방안<sup>41)</sup>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유사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뱅크런 등으로 중앙회의 일시적 유동성 조달 수요가 급격히 확대될 경우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유동성 공급 체계를 모색할 필요<sup>42)</sup>가 있다.

## 참고문헌

한국은행(2021), “최근 금융부문의 상호연계성 추이 및 리스크 점검”, 「금융안정보고서(2021.12)」, pp. 148-159.

Covi G., Gorpe M. Z., and Kok C.(2021), “CoMap: Mapping Contagion in the Euro Banking Sector”, Journal of Financial Stability, Volume 53, April 2021, Article 100814

Financial Stability Board(2017),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Non-bank Depository Institutions”, Chapter 3 in Peer Review of Korea

International Monetary Fund(2023), “Nonbank Financial Intermediaries: Vulnerabilities Amid Tighter Financial Conditions”, Chapter 2 in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2023(April)

41)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우리나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규제체계에 대한 동료평가(2017.12월)에서 중앙회에 대한 감독 강화를 권고한바 있다.

42) 한편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리스크가 확산될 경우에 대비하여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 등이 적절한 상황이나 조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IMF의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2023.4월)는 비은행금융기관의 금융중개 기능이 중요해짐에 따라 필요시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 대상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금융기관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해 대상 기관에 대한 적절한 감독 필요성, 적격 담보의 확대 가능성 등을 언급하였다.

### Ⅲ. 기업 부문 잠재 신용리스크 점검 및 국내은행 스트레스 테스트<sup>1)</sup>

1. 검토 배경
2. 기업 부문 잠재 신용리스크 점검
3. 국내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4. 시사점

#### 1. 검토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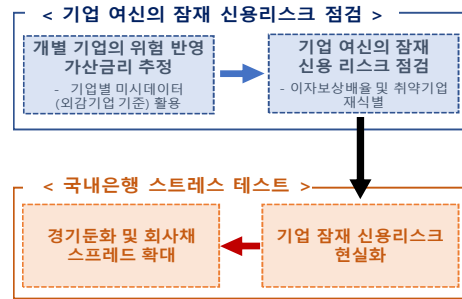
2022년 이후 가계 부문의 신용/명목GDP 갭<sup>2)</sup>이 상당폭 축소된 반면, 기업대출은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기업 부문의 신용/명목GDP 갭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기업대출의 신용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다.

한편 기업대출의 건전성 지표는 아직 팬데믹 이전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팬데믹 기간중 저금리 기초, 정부의 금융지원조치 등으로 기업여신의 부실 위험이 현재화되지 않고 지연되어 온 데 기인할 수 있다. 원리금 상환유예, 대출 만기 연장 등의 코로나19 금융지원조치가 종료<sup>3)</sup>되고 이에 더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거시경제 여건까지 급변할 경우,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잠재 신용위험이 표면화되

면서 대출 건전성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기업 미시데이터를 통해 금융지원 조치 등으로 잠재되어 있는 기업 부문의 신용리스크를 추정하였다. 아울러 동 부문의 리스크가 드러나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 악화가 나타나고, 이에 더해 경기둔화, 회사채 스프레드 상승 등의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내은행 복원력을 점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그림 III-1).

그림 III-1. 분석 개요



#### 2. 기업 부문 잠재 신용리스크 점검

##### 가. 건전성 지표와 잠재리스크의 괴리

기업여신의 건전성 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기 충격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여 왔다. 2023년 1/4분기말 국내은행 기업대출 연체율은 0.34%로 팬데믹 직전인 2019년말 0.49%에 비해 낮고, 고정이하여신비율도 0.51%로 2019년말 1.12%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그림 III-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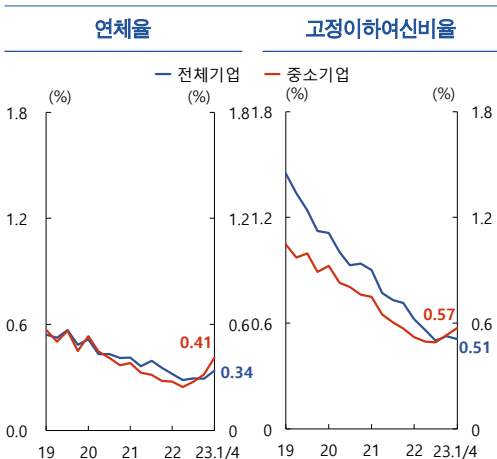
1) 본고는 이도경·염기주·이병호(시스템리스크팀)가 작성, 이종한(금융리스크분석부장)·임호성(시스템리스크팀장)·정동재(정책총괄팀)가 검토하였다.

2) 신용/명목GDP 갭에 대한 설명 및 부문별 추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안정 상황> 「1. 신용시장 - 1. 신용 레버리지」를 참고.

3) 원리금 상환유예의 경우 금년 9월에 종료 예정이며 차주는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상환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거치기간을 설정하고 최장 2028년 9월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대출 만기 연장의 경우 2025년 9월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기업대출의 건전성 지표가 양호하게 나타난 것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중 저금리 기조 하에 기업의 자금 조달금리가 낮게 유지되어 온 데다 정부의 금융지원조치, 금융기관의 완화적인 대출태도 등에 힘입어 잠재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은 데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4) 중소기업 대출의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들어 상승세로 전환하였는데(그림 III-2), 이는 작년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기업의 이자비용이 점차 늘어나면서 건전성 지표와 잠재리스크간 괴리가 축소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이에 더해 그동안의 금융지원들이 종료될 경우 잠재되어 있던 신용위험이 빠르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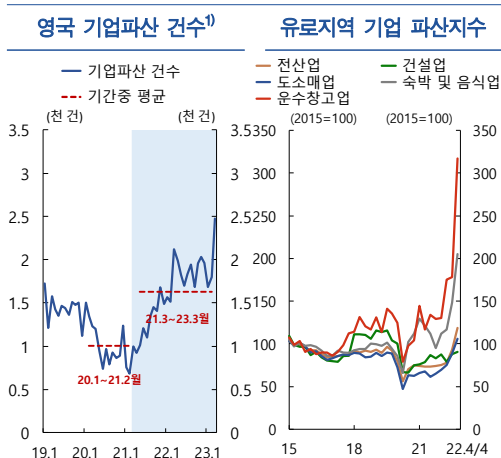
그림 III-2. 은행의 기업여신 건전성 비율



자료: 국내은행 업무보고서

다른 나라에서도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기업의 부실 위험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보증 대출<sup>5)</sup> 등의 기업 지원대책이 비교적 조기에 종료(2021년 3월)된 영국에서는 기업 파산건수가 급증하였으며,<sup>6)</sup> 유럽에서도 코로나19 정책지원이 철회되면서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았던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에서 기업 파산지수가 2019년 4/4분기 대비 29.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I-3). 캐나다의 경우에도 기업 파산신청 건수가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sup>7)</sup>

그림 III-3. 주요국의 기업 파산 현황



주: 1) 음영은 코로나19 지원조치가 종료된 이후 시점

자료: 영국 Insolvency Service, European Commission(2023)

이하에서는 기업 부문의 잠재 신용리스크를 보다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기업의 조달금리가 실제 위험에 비해 낮아 개별 기업의 이자보상 능

4) Banerjee et al.(2020)는 코로나19로 인한 상당한 경기 충격에도 부실여신이 늘어나지 않는 현상을 부도 갭(bankruptcy gap)으로 표현하였다.

5) 정부보증 100%로 중소기업에 최대 £5만 대출(1년간 이자·수수료 면제)하는 회복지원대출제도, 정부보증 80%로 중소기업에 최대 £2.5만~£500만 대출(1년간 이자·수수료 면제)하는 기업대출제도 등이 있다.(박상욱 2020)

6) 영국 기업 파산 건수는 2022년 4월 1,991건으로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4월에 비해 39% 이상 증가하였다.(강득록 2022)

7) 한편, 캐나다 기업경기조사(Canadian Survey on Business Conditions)에서 팬데믹 기간중 정부보증대출 등의 지원을 받았던 기업의 절반 정도가 2023년말까지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응답하였다.(BOC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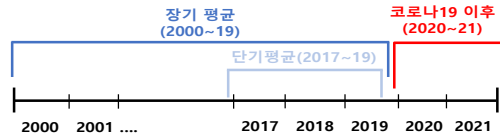
력이 과대평가 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팬데믹 기간인 2020~21년중 금융지원 등이 없었을 경우의 이자율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이자율을 통해 재시산된 각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을 바탕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이하 '취약기업'<sup>8)</sup>)을 식별하고 이를 통해 기업여신에 잠재된 신용리스크를 점검하였다.

### 나. 개별 기업의 위험 반영 가산금리 추정

코로나19 금융지원조치 등으로 잠재되어 있는 기업여신 부문의 신용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들이 2020~21년중 팬데믹 이전에 비해 실제로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sup>9)</sup> 개별 기업의 신용위험은 대출금리 산정의 준거금리에 더해 각 기업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가산금리에 반영된다. 따라서 개별 기업의 가산금리를 측정하고<sup>10)</sup>, 팬데믹

이전 장기(2000~19년) 또는 단기(2017~19년) 평균 가산금리와 팬데믹 동안(2020~21년)의 가산금리를 비교함으로써 기업들이 실제 위험 대비 더 낮은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그림 III-4).<sup>11)</sup>

그림 III-4. 평균 가산금리 계산시 장·단기 산정 기간



먼저 각 기업의 차입 부채(차입금 + 발행채권)에 적용되는 이자율(이하 '차입금평균이자율',  $r_{i,t}$ )<sup>12)</sup>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해 역산하였다. 준거금리는 개별 기업의 위험이 반영되지 않은 시장금리를 사용하였으며 차입 부채의 차입 시점 및 만기(장·단기)를 고려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각 기업의 평균 준거금리( $r_{i,t}^*$ )<sup>13)</sup>를

- 8) 본고에서는 당해연도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을 '취약기업'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는 3년 연속 취약기업 상태인 '한계기업'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 9) 중소기업 금융증개지원대출 금리 인하,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로 인한 연체 발생의 이연, 금융기관의 완화적인 대출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기업여신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 10) 개별 기업 데이터는 KIS-Value를 통해 입수하였으며 외강기업 기준으로 개별 기업의 2022년 데이터는 아직 충분히 입수되지 않아 제외하고 2000~21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팬데믹 전후의 가산금리 비교를 위해 2020년 이후에 영업을 시작하였거나, 2020년 이전에 영업을 종료한 기업의 데이터는 제외하였다. 또한 극단치(outlier) 데이터를 제거하기 위해 연도별 가산금리를 계산한 후 상·하위 1%를 벗어난 기업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총 분석대상 기업수는 2만여개로 그 중 대기업이 15%, 중소기업이 85%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규모(대/중소)에 따른 분류는 KIS-Value에 나타난 개별 기업의 최근 정보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대·중견기업으로 분류된 기업과 함께 미분류 기업중 자산 규모가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기업으로, 그 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하였다.
- 11) 본고에서는 각 기업의 장기 평균 가산금리를 경기순환 및 금융 여건과 상관없는 장기 균형 위험도를 나타내는 대리변수(proxy)로 사용하였다. 이는 각 기업의 위험수준 변화가 크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실제로 KIS-Value의 KIS신용평점(1~10등급 기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개별 기업 신용평점의 표준편차는 1.3등급(기업 평균) 정도로 분석기간 중 신용평점 변동이 크지 않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 기업에 최근 신용위험 변화(감소)가 있는 경우를 고려하기 위해 장기 평균 가산금리 이외에도 단기 평균 가산금리를 함께 비교하여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는지 확인하였다.
- 12) 차입금평균이자율은 개별 기업이 총차입부채에 대해 부담하는 이자비용의 비율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차입금평균이자율<sub>*t*</sub> ( $r_{i,t}$ ) = 이자비용<sub>*t*</sub> ÷ 총차입부채<sub>*t-1*</sub>
  - 총차입부채<sub>*t-1*</sub> = (단기차입금 + 단기사채)<sub>*t-1*</sub> + (장기차입금 + 장기사채)<sub>*t-1*</sub> + (유동성장기차입금 + 유동성장기사채)<sub>*t-1*</sub>
- 13) 은행 차입시 및 채권 발행시 일반적으로 각각 다른 준거금리가 사용되나 본고에서는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장기 부채(장기 차입 및 장기 채권)에 대해서는 회사채(3년, AA-) 금리를, 단기 부채에 대해서는 CP금리를 준거금리로 사용하였다. 대출 시점의 준거금리(시장금리)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Caballero et al.(2008)이 개별 기업의 이자비용 하한(minimum required interest payment)을 추정한 방법론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평균 준거금리'를 산정하였다.
  - 평균 준거금리<sub>*t*</sub> ( $r_{i,t}^*$ ) = 시장이자비용<sub>*t*</sub> ÷ 총차입금<sub>*t-1*</sub>
  - 시장이자비용<sub>*t*</sub> = (단기차입금 + 단기사채)<sub>*t-1*</sub> × CP금리<sub>*t-1*</sub> + (장기차입금 + 장기사채)<sub>*t-1*</sub> × (회사채(3년, AA-)금리<sub>*t-1*</sub> + 회사채(3년, AA-)금리<sub>*t-2*</sub>) ÷ 2 + (유동성장기차입금 + 유동성장기사채)<sub>*t-1*</sub> × 회사채(3년, AA-)금리<sub>*t-3*</s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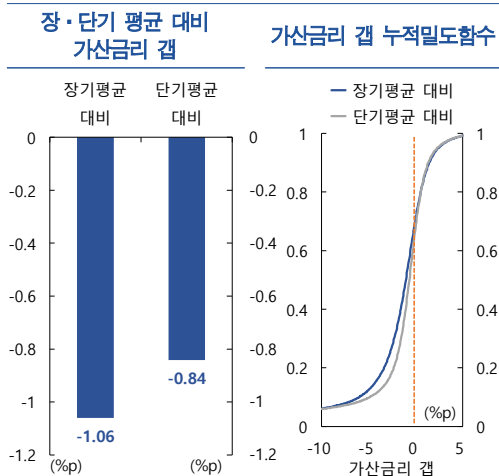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도별 개별 기업의 가산금리( $s_{i,t}$ )는 개별 기업의 차입금평균이자율과 평균 준거금리의 차이로 계산하였다.

$$s_{i,t} = r_{i,t} - r_{i,t}^*$$

추정 결과, 2020~21년에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실제 위험에 비해 더 낮은 가산금리를 적용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기업들의 2020~21년 중 가산금리는 장기(2000~19년) 평균 가산금리 대비 평균적으로 1.06%포인트 낮았으며, 비교적 최근인 단기(2017~19년) 평균 가산금리에 비할 경우에도 0.84%포인트 낮았다<sup>14)</sup>(그림 III-5).

개별 기업의 가산금리 갭<sup>15)</sup>의 분포를 살펴보면, 가산금리 차이가 0보다 작은, 즉 2020~21년 중 완화된 금융 여건의 수혜<sup>16)</sup>를 입은 기업이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더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장기 및 단기 평균과의 비교에서 모두 약 70% 내외의 기업이 더 낮은 가산금리를 적용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I-5).

그림 III-5. 가산금리 갭<sup>1)</sup> 추정결과



주: 1) 2020~2021년 중 가산금리 - 장·단기 평균 가산금리  
자료: KIS-Value, 한국은행 시사

기업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금융 여건 완화의 혜택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금리 갭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보다 더 크게 나타나 평균적인 혜택의 정도가 더 컸음을 알 수 있다. 2020~21년 중 대기업, 중소기업의 가산금리는 장기 평균에 비해 각각 0.25%포인트, 1.20%포인트, 단기 평균 대비로는 각각 0.29%포인트, 0.97%포인트 낮았다.<sup>17)</sup> 기업수 기준으로 장기 평균 대비 대기업 63%, 중소기업 72%, 단기 평균 대비 대기업 69%, 중소기업의 74%가 2020~21년 중 더 낮은 가산금리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나 금리수혜를 받은 중소기업의 비중이 좀 더 높은 편이다(그림 III-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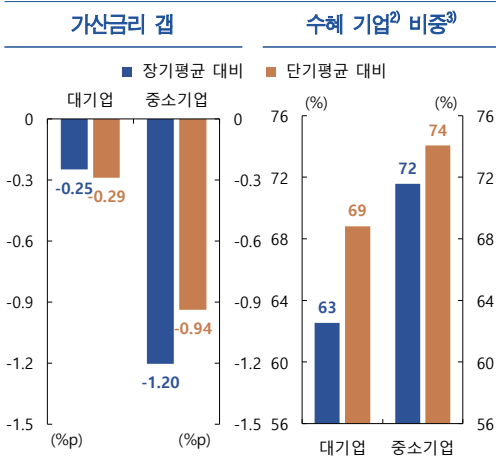
14) 해당 기간 중 데이터가 누락된 일부 기업들에 대해서는 2015~19년 평균을 적용하였다.

15) 2020~21년 중 가산금리와 장·단기 평균 가산금리의 차이를 말한다.

16) 개별 기업의 신용위험 감소가 이와 같은 가산금리 하락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다. 실제로 KIS 신용평점 측면에서 보면 가산금리 차이가 0보다 작은 기업들의 최근 신용평점(2020~2022년 평균)이 2000~2019년에 비해 소폭 개선(신용위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산금리 차이가 0보다 큰 기업들의 KIS 신용평점의 개선 정도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신용위험 감소가 가산금리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7) 대기업의 경우와 달리 중소기업에서 장기평균 대비 가산금리 갭보다 단기평균 대비 가산금리 갭이 더 작은 것은 해당기간(2017~19년) 중 가산금리 측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이미 주어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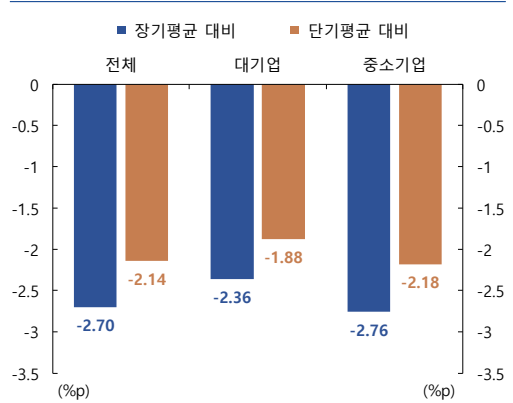
그림 III-6. 기업규모별 가산금리 갭<sup>1)</sup> 추정결과



주: 1) 2020-21년중 가산금리 - 장·단기 평균 가산금리  
 2) 2020-21년중 가산금리가 장·단기 평균 가산금리 보다 낮은 기업  
 3) 기업규모별 수혜 기업수/전체 기업수  
 자료: KIS-Value, 한국은행 시산

한편, 2020~21년중 더 낮은 가산금리를 적용받은 기업(이하 '수혜 기업')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해당 기업의 2020~21년중 가산금리 평균은 장기 평균 대비 2.70%포인트, 단기 평균 대비 2.14%포인트 낮았다. 기업규모별로는 장기 및 단기 평균 대비 가산금리가 대기업은 각각 2.36%포인트, 1.88%포인트, 중소기업은 각각 2.76%포인트, 2.18%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I-7).

그림 III-7. 수혜 기업의 가산금리 갭<sup>1)</sup>



주: 1) 2020-21년중 가산금리 - 장·단기 평균 가산금리  
 자료: KIS-Value, 한국은행 시산

다. 기업 부문 잠재 신용리스크 점검

코로나19 금융지원조치 등으로 실제로 기업들이 신용위험 대비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업 부문의 잠재 신용리스크 측정을 위해 금융지원 없이 실제 위험을 반영한 이자율(이하 '잠재위험 반영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취약기업의 비중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점검하였다.

2020~21년중 개별 기업의 잠재위험 반영 이자율( $\hat{r}_{i,t}$ )은 개별 기업의 평균 준거금리( $r_{i,t}^*$ )와 장기 평균 가산금리( $\bar{s}_i$ )의 합으로 계산하였다.<sup>18)</sup>

$$\hat{r}_{i,t} = r_{i,t}^* + \bar{s}_i, \quad i=\text{기업}, \quad t=2020, 2021$$

이후, 잠재위험 반영 이자율을 적용하여 각 기업의 이자비용 및 이자보상배율을 계산한 후,<sup>1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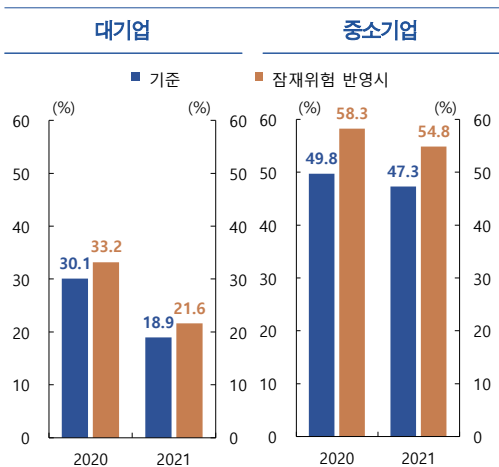
18) 각 기업의 장기 평균 가산금리는 2000-19년중 가산금리의 평균으로 계산하였다.

$$\bar{s}_i = \frac{1}{T} \sum_{t=1}^T (r_{i,t} - r_{i,t}^*), \quad i=\text{기업}, \quad t=1, 2, \dots, T$$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취약기업의 총차입금이 전체 기업의 총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하 '취약기업 여신 비중')을 추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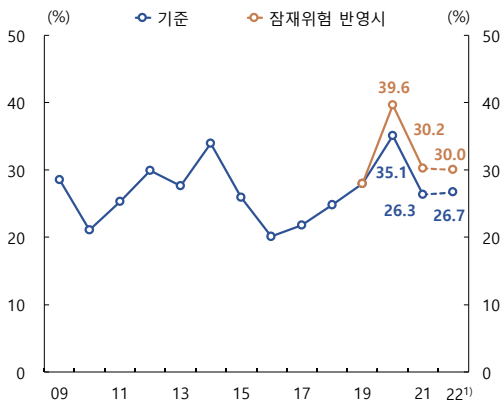
추정결과, 잠재위험을 반영할 경우 2020년 및 2021년중 취약기업에 대한 여신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취약기업 여신비중이 대기업의 경우에는 2020년 및 2021년 중 각각 3.1%포인트, 2.7%포인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각각 8.6%포인트, 7.5%포인트 증가하였다(그림 III-8). 전체 취약기업 여신비중은 각각 4.5%포인트, 3.9%포인트 증가하였으며(그림 III-9)<sup>20)</sup>, 일부 2022년 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된 결과에서도 취약기업 여신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잠재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III-8. 기업규모별 취약기업 여신 비중 변화



자료: KIS-Value, 한국은행 시산

그림 III-9. 잠재위험 반영 취약기업 여신 비중 추이<sup>1)2)</sup>



주: 1)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취약기업의 총차입금(차입금/발행채권)이 전체 기업의 총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2) 2022년의 경우 일부 기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  
자료: KIS-Value, 한국은행 시산

### 3. 국내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앞서 식별된 기업여신의 리스크를 바탕으로 은행의 잠재 신용위험이 현실화되는 시나리오 및 경기가 둔화되고 회사채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 가. 기업 부문 잠재 신용리스크 현실화시 은행 신용손실 추정

코로나19 금융지원조치 종료,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 강화 등을 계기로 기업의 잠재 부실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은행 신용손실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은행의 기업여신 건전성 등급 전이 행렬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sup>21)</sup>

19) 잠재위험 반영 이자비용 및 이자보상배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잠재위험 반영 이자비용<sub>t</sub> = 잠재위험 반영 이자율( $\hat{r}_{i,t}$ ) × 총차입금<sub>t-1</sub>

· 잠재위험 반영 이자보상배율<sub>t</sub> = 영업이익<sub>t</sub> ÷ 잠재위험 반영 이자비용<sub>t</sub>

20) 단기 평균 가산금리를 적용할 경우에는 2020년 및 2021년중 취약기업 여신비중이 각각 3.8%포인트, 3.2%포인트 증가하였다.

우선 기업 여신의 신용위험을 나타내는 지표인 취약기업 여신비중 증가가 은행의 기업 여신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팬데믹 이전인 2010~19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된 결과, 경제 전체의 취약기업 여신비중이 늘어날수록 다음 분기 기업대출의 건전성 등급이 악화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2)</sup>

다음으로 기업 여신의 잠재위험이 현실화되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그림 III-8)에서 기존 데이터를 대신하여 증가된 취약기업 여신 비중 (2020~22년중)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은행의

전이행렬이 변화되어 여신 건전성 등급이 악화될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된 기업 여신 부도율을 시산하였다.<sup>23)</sup> 마지막으로 증가된 부도율 적용시 은행 기업 여신의 예상손실 및 예상외손실<sup>24)</sup>을 추정함으로써 잠재위험 반영시 은행 신용손실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점검하였다.

추정 결과, 기업 부문의 잠재 신용위험을 반영할 경우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부도율은 2022년 말 기준 0.24%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은행의 잠재 신용손실은 추가 대손충당금 적립이 필요한 예상손실이 1.5조원, 자

21) 여신 건전성 등급 전이행렬은 전분기에 건전성 분류 기준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이하'로 분류되었던 여신이 이 번 분기에 각각 '정상', '요주의',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될 확률( $P_{ij}$ )을 나타낸다.

		t+1 시점		
		정상(1)	요주의(2)	고정이하(3)
여신 건전성 등급 전이행렬 <sub>t,t+1</sub>	t 시점	정상(1)	요주의(2)	고정이하(3)
	정상(1)	$P_{11}$	$P_{12}$	$P_{13}$
	요주의(2)	$P_{21}$	$P_{22}$	$P_{23}$
	고정이하(3)	$P_{31}$	$P_{32}$	$P_{33}$

각 은행의 시점별 전이행렬에 담긴 정보는 Gross et al.(2020)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요인( $Z_t$ )과 개별요인( $\varepsilon_{it}$ )으로 구분하여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요주의(2)로 분류된 기업대출의 다음 분기 여신 건전성은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X_{2t}$ 라는 확률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면,  $X_{2t}$ 는 공통요인( $Z_t$ )과 개별요인( $\varepsilon_{2t}$ )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X_{2t} = \sqrt{\rho} Z_t + \varepsilon_{2t}, \quad \begin{bmatrix} Z_t \\ \varepsilon_{2t} \end{bmatrix} \sim N \left( \begin{bmatrix} 0 \\ 0 \end{bmatrix}, \begin{bmatrix} 1 & 0 \\ 0 & 1 - \rho \end{bmatrix} \right)$$

$Z_t$ 가 알려졌다고 가정하면, 요주의 여신이 다음 분기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될 확률( $P_{23}$ )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Phi(\cdot)$ )는 표준정규분포의 누적밀도함수를 의미한다.)

$$P_{23|Z} = \Pr(X_{2t} < x_{23}|Z_t) = \Pr(\sqrt{\rho} Z_t + \varepsilon_{2t} < x_{23}|Z_t) = \Pr(\varepsilon_{2t} < x_{23} - \sqrt{\rho} Z_t | Z_t) = \Phi \left( \frac{x_{23} - \sqrt{\rho} Z_t}{\sqrt{1 - \rho}} \right)$$

따라서 각 시점의  $Z_t$ 는 은행의 원래의 전이확률과  $Z_t$ 를 바탕으로 계산된 전이확률의 차이의 제곱합을 가장 작게 하는 값으로 추정할 수 있다.

$$Z_t = \arg \min_{Z_t} \sum (P_{ij} - P_{ij|Z_t})^2, \quad i, j = 1, 2, 3$$

22) 취약기업 여신비중이 각 은행 기업여신 건전성 등급 전이행렬의 공통요인( $Z_t$ )에 미치는 영향을 팬데믹 이전인 2010-2019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패널 회귀분석으로 추정하였다.

$$Z_{i,t} = \beta_0 - 3.8777 \times \text{취약기업 여신비중}_{t-1} + \gamma X_{i,t-1} + D_1 + D_2 + D_3 + u_i + e_{i,t}, \quad i=\text{은행}, \quad t=2010.1/4-2019.4/4$$

(1.019)

$X_t$ 는 통제변수(GDP 증가율, 회사채 금리, 환율 상승률, 주가 상승률),  $D_{1,2,3}$ 은 분기 더미변수,  $u_i$ 는 고정효과를 의미한다. 또한 ( ) 안은 설명변수 '취약기업 여신비중'의 추정된 계수값(-3.8777)에 대한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3) 은행 전이행렬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고 건전성 등급 분류 기준상 고정이하여신 분류 확률과 부도율 간의 차이를 보정할 필요가 있어 Gross et al.(2020)를 참조하여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에 더해 각주 22)에서 추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전이행렬의 공통요인 값( $Z_t$ )을 수정하였다. 새로운  $Z_t$ 를 기반으로 하는 전이행렬( $P_{11Z}, \dots, P_{33Z}$ )을 이용하여 각 등급별 여신이 향후 1년 동안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될 확률을 추산하고 부도율의 대리변수로 활용하였다.

24) 예상손실은 대출의 현재 리스크를 감안할 때 확률적으로 발생하리라고 예상되는 손실의 평균으로 부도율, 부도시손실률, 대출 규모(익스포저)의 곱으로 계산한다. 부도시손실률은 한국은행 스트레스테스트 모형내 S&P(2010)를 기반으로 한 신용손실 모형을 이용하여 부도율 변화에 따른 부도시손실률 변화량을 추정하였다. 예상외손실은 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발생 시 예상손실을 초과하는 손실로 99.9% 유의수준에서 발생가능한 최대손실(VaR) 규모에서 예상손실을 차감한 값을 의미한다. 바젤III의 내부등급법에 따라 산출하였다.

본금 적립이 필요한 예상외손실이 3.4조원 증가하고<sup>25)</sup>, 그 결과 은행의 BIS자본비율은 0.47%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표 III-1).

표 III-1. 은행 잠재 신용손실 추정 결과<sup>1)</sup>

추정 항목	추정 결과
부도율	+0.24%포인트
예상손실(충당금 추가 적립 필요)	+1.5조원
예상외손실(자본금 추가 적립 필요)	+3.4조원
BIS자본비율	-0.47%포인트

주: 1) 2022년말 기준

## 나. 경기 둔화 및 회사채 금리 상승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금융지원의 종료 등으로 잠재 신용리스크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 둔화 및 금융부문 리스크 증대 등 국내외 거시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부실 위험이 추가 상승할 경우의 은행 복원력을 점검하기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기업 부문의 부실 위험이 증대되는 상황을 설정하기 위해 경기가 둔화되어 영업이익이 감소하거나 회사채 스프레드(AA- 등급 회사채 금리 - 국고채 금리, 3년)가 확대되는 총 8개의 시나리오를 상정하였다<sup>26)</sup>(표 III-2).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기업의 신용리스크 확대 등으로 회사채 금리가 상승하면 이자비용이 증대되어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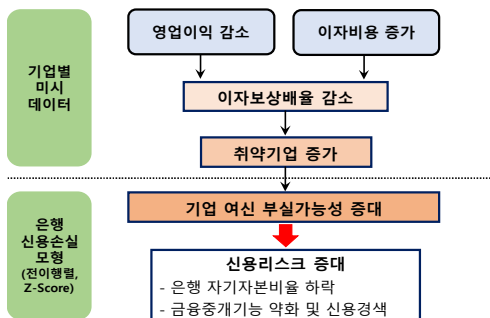
취약기업이 늘어난다. 이러한 취약기업 비중 증가는 은행 기업 여신 전이행렬에 영향을 미쳐 부도율이 증가하고 신용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그림 III-10).

표 III-2.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sup>1)</sup>

		영업이익의 증감률		
		-	-5.0%	-10.0%
회사채 스프레드	-	(0)	(1)	(2)
	+50bp	(3)	(4)	(5)
	+100bp	(6)	(7)	(8)

주: 1) 시나리오 (0)은 “3. 가. 기업 부문 잠재 신용리스크 현실화시 은행 신용손실 추정”에서 잠재리스크가 반영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림 III-10.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 충격 반응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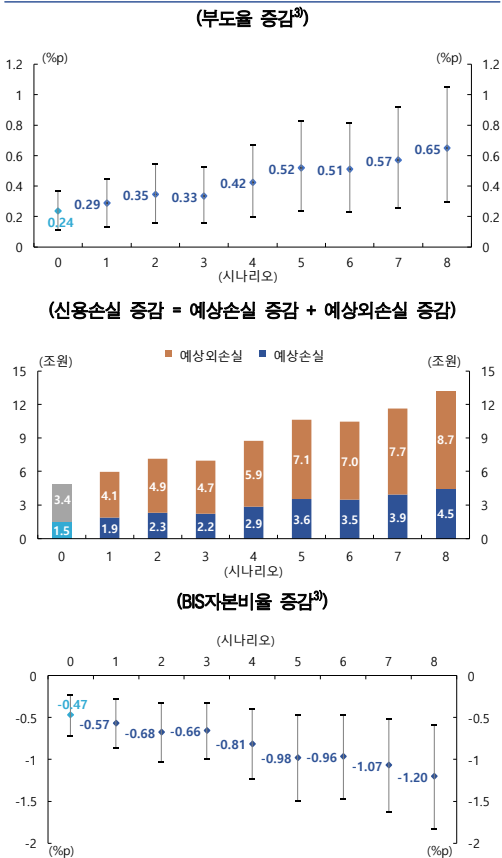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각 시나리오(1~8) 하에서 취약기업 여신비중이 증대되고 은행의 기업대출 부문에서 상당폭의 신용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나리오 하에서 부도율은 2022년 말 현재 대비 0.29%포인트(시나리오 1)에서 최대 0.65%포인트(시나리오 8)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예상손실은 1.9~4.5조원, 예

25) 은행의 잠재 신용손실 추산을 위해, 본고에서는 개별 기업의 장기 평균 가산금리를 바탕으로 계산된 3.9%포인트의 취약기업 여신비중(2021년 기준) 증가분(잠재 신용리스크 증가분)을 반영한 은행의 전이행렬을 구하고 동 전이행렬에서 추정된 부도율을 이용하여 예상손실 및 예상외손실을 추산하였다. 또한 IFRS-9 기준을 적용하여 정상 여신은 향후 1년간 부도율, 요주의 및 고점 이하 여신의 경우 전체 기업대출의 평균만기를 고려한 부도율을 이용하여 예상손실 및 예상외손실을 추산하였다.

26) 향후 1년중 영업이익의 증감률은 2009-21년중(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영업이익이 감소했던 5개년도의 평균(약 -8%)을 고려하여 -5%~10% 수준으로 상정하고, 회사채 스프레드는 2022.12월중 스프레드(약 1.76%포인트)가 12개월 이동평균(2000.1월~2023.4월중) 스프레드의 상위 1%(+75bp)를 고려하여 +50bp~+100bp 상승하는 경우를 스트레스 시나리오로 상정하였다.

상외손실은 4.1~8.7조원 증가하고 이에 따라 BIS 자본비율도 0.6~1.2%포인트 하락<sup>27)</sup>하여 스트레스 상황에서 은행의 신용손실이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이 스트레스 상황하에서도 은행의 복원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충당금 및 자본금의 추가 적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8)</sup>(그림 III-11).

그림 III-11. 시나리오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sup>1)2)</sup>



주: 1) 시나리오 (0)은 “3. 가. 기업 부문 잠재 신용리스크 현실화시 은행 신용손실 추정”에서 잠재리스크가 반영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2) 2022년말 기준

3) 그래프의 상하단은 95% 신뢰구간, 표식은 평균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시산

## 4. 시사점

기업여신의 잠재 신용위험을 점검한 결과, 2020~21년중 개별 기업이 실제 위험 대비 낮은 금리를 적용받음으로써 기업의 신용위험이 실제에 비해 과소평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로 인한 은행의 잠재 신용손실을 감안할 때 현재의 기업대출 건전성 지표는 신용리스크를 과소 반영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기업 부문의 신용/명목GDP 갭의 누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잠재리스크 현실화, 경기둔화 및 회사채 금리 상승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기업 여신의 부도율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은행 부문의 신용손실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은행은 경기 하방위험 증대, 신용손실 확대 등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 및 자본금 적립을 확대함으로써 손실 흡수 능력을 더욱 확충할 필요가 있다.

기업 부문의 잠재위험 및 국내은행의 영업이익 측면을 모두 감안할 때 감독당국이 은행에 경기 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은 기업여신의 취약성 완화 및 잠재위험의 현실화 가능성 대응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sup>29)</sup> 아울러 감독당국과 한국은행은 공동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정보 공유 등을 강화함으로써 금융 시스템 내 잠재리스크 분석의 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27)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BIS자본비율 하락폭은 금융위기 당시 -1.87%포인트(2007.3/4분기말 대비 2008.3/4분기말)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8) 본고에서는 영업이익 감소로 인해 기업의 신용리스크가 상승하여 회사채 금리가 상승하는 2차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회사채 금리 상승의 효과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시나리오와의 중복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 참고문헌

- 강득록(2022), “최근 영국 기업파산 급증 배경 및 향후 전망”, 한국은행 런던사무소
- 박상욱(2020), “주요국의 코로나19 위기 정책 대응 및 시사점”, 「KIF VIP 리포트」, 2020-09
- 한국은행(2022), “코로나19 정책지원 종료시 기업대출의 잠재 신용손실 추정 및 평가”, 「금융안정보고서(2022.6)」, pp. 59-64.
- 한국은행(2022),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 현황 및 영향 점검”, 「금융안정보고서(2022.6)」, pp. 97-101.
- Banerjee R. N., Cornelli G., and Zakrajšek E.(2020), “The outlook for business bankruptcies”, BIS Bulletins, No. 30
- Bank of Canada(2023), “Financial System Review-2023”, <https://www.bankofcanada.ca/2023/05/financial-system-review-2023/#A-severe-recession-could-lead-to-credit-losses-for-banks>
- Caballero R. J., Hoshi T., and Kashyap A.(2008), “Zombie Lending and Depressed Restructuring in Japan”, *American Economic Review*, 2008, 98:5, pp. 1943-1977.
- European Commission(2023), “Recent developments in bankruptcy declarations in the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 Part I*, pp. 25
- Garvin N., Kurian S., Major M., and Norman D.(2022), “Macrofinancial Stress Testing on Australian Banks”, Reserve Bank of Australia Research Discussion Paper, 2022-03
- Gross M., Laliotis D., Leika M., and Lukyantsau P.(2020), “Expected Credit Loss Modeling from a Top-Down Stress Testing Perspective”, IMF Working Paper, WP/20/111

29) 과거 자본비율 관련 규제가 기업대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하면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스트레스 완충자본 적용이 급격한 신용경색 대신 기업여신의 감내가능한 디레버리지를 유도하여 기업신용/명목GDP 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김자혜 외(2022)에서는 은행 규제자본비율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기업대출 증가율이 -1.3%포인트 축소되는 한편, 가계대출은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 부 록

1. 그림 및 통계표	135
2. 부문별 담당 부서 및 집필자	141



# 1. 그림 및 통계표

## 그림 차례

### [금융안정 상황]

그림 I -1.	신용시장 상황 변화 지도	11
그림 I -2.	민간신용/명목GDP 비율	11
그림 I -3.	부문별 신용 레버리지 및 신용 증가율	12
그림 I -4.	부문별 민간신용/명목GDP 비율 및 갭	12
그림 I -5.	가계신용	13
그림 I -6.	가계대출 대출유형별 변동	13
그림 I -7.	금융업권별 가계대출 변동	14
그림 I -8.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4
그림 I -9.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15
그림 I -10.	취약차주 비중	15
그림 I -11.	신용도 및 소득수준별 가계대출 구성비	16
그림 I -12.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 연체율	16
그림 I -13.	금융기관 기업대출	17
그림 I -14.	기업규모별 기업대출	18
그림 I -15.	주요 업종별 금융기관 기업대출 증가율	18
그림 I -16.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기업대출 연체율	18
그림 I -17.	기업의 직접금융시장 조달 동향	19
그림 I -18.	기업규모별 부채비율	19
그림 I -19.	기업규모별 매출액 증가율 및 매출액영업이익률	20
그림 I -20.	기업규모별 이자보상배율	20
<hr/>		
그림 II -1.	자산시장 상황 변화 지도	29
그림 II -2.	국고채 및 미국 국채 금리	30
그림 II -3.	기준금리 및 국고채 금리	30
그림 II -4.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및 신용등급 간 스프레드	31
그림 II -5.	회사채 순발행	31
그림 II -6.	회사채 등급별 수요예측참여율	31

그림 II-7.	코스피 및 글로벌 주가	32
그림 II-8.	주가 변동성 지수	32
그림 II-9.	PER 및 PBR	33
그림 II-10.	주요국의 PER 및 PBR	33
그림 II-11.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	33
그림 II-12.	주택매매가격 추이 및 상승률	34
그림 II-13.	가격소득비율 및 가격임대료비율	34
그림 II-14.	월별 주택매매거래량	35
그림 II-15.	주택전월세가격 상승률	35
그림 II-16.	월별 주택전월세거래량	36
그림 II-17.	아파트 입주 및 분양 물량	36
그림 II-18.	상업용부동산 임대가격지수 및 공실률	37
그림 II-19.	상업용부동산 자본수익률 및 거래량	37
그림 III-1.	금융기관 건전성 상황 변화 지도	38
그림 III-2.	일반은행 총자산 규모	38
그림 III-3.	일반은행 대출 증감 규모 및 대출 증가율	39
그림 III-4.	부실채권 발생·정리 실적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40
그림 III-5.	일반은행 차주별 고정이하여신비율	40
그림 III-6.	일반은행 주요 업종 고정이하여신비율	40
그림 III-7.	일반은행 수익성	41
그림 III-8.	일반은행 당기순이익 구성요소	41
그림 III-9.	비은행금융기관 총자산 규모 및 증가율	42
그림 III-10.	비은행금융기관 업권별 총자산증가율	43
그림 III-11.	비은행금융기관 고정이하여신비율	43
그림 III-12.	비은행금융기관 총자산순이익률(ROA)	44
그림 III-13.	비은행금융기관 당기순이익	44
그림 III-14.	금융기관·업권 간 상호거래 현황	45
그림 III-15.	금융업권 간 상호연계 구조	45
그림 III-16.	금융업권 간 상호거래 관련 부실전염 및 집중도 리스크	46

그림 IV-1.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증감	55
그림 IV-2.	차익거래자금 유출입	55
그림 IV-3.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투자주체별 증감	56
그림 IV-4.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투자주체별 증감	56
그림 IV-5.	거주자 해외증권투자 증감	57
그림 IV-6.	거주자 해외 주식투자자금의 투자주체별 증감	57
그림 IV-7.	거주자 해외 채권투자자금의 투자주체별 증감	57

### [복원력]

그림 I-1.	금융기관 복원력 지표 변화 지도	65
그림 I-2.	일반은행 바젤Ⅲ 기준 자본비율 및 대손충당금적립비율	66
그림 I-3.	자기자본비율 변동 요인	66
그림 I-4.	일반은행 레버리지비율	66
그림 I-5.	일반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67
그림 I-6.	일반은행 외화 LCR	67
그림 I-7.	대외 외화차입 장·단기 가산금리	68
그림 I-8.	일반은행 CDS 프리미엄	68
그림 I-9.	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	69
그림 I-10.	상호금융조합 및 저축은행 복원력 지표	69
그림 I-11.	여신전문금융회사 복원력 지표	70
그림 I-12.	증권회사 복원력 지표	70

그림 II-1.	대외지급능력 지표 변화 지도	79
그림 II-2.	순대외채권	79
그림 II-3.	부문별 대외채권 증감	80
그림 II-4.	부문별 대외채무 증감	80
그림 II-5.	단기 대외 채무·채권 비중	80
그림 II-6.	외환보유액 규모 및 증감액	81
그림 II-7.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	81
그림 II-8.	외환보유액 구성	81

그림 Ⅲ-1.	한은금융망 관련 리스크 지표	82
그림 Ⅲ-2.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 현황	82
그림 Ⅲ-3.	순이체한도 소진율	83
그림 Ⅲ-4.	분리결제 비중	84
그림 Ⅲ-5.	CLS시스템 이용 금액 및 비중	84

### [주요 현안 분석]

그림 I -1.	가계 자산 구성 및 고위험가구 비중 변화	101
그림 I -2.	규모별 전세 가격 및 거래 동향	102
그림 I -3.	향후 전세보증금 반환부담 규모	103
그림 I -4.	전세가격 하락폭에 따른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별 가구 비중	103
그림 I -5.	최근 미분양 동향	104
그림 I -6.	초기 분양률 및 분양물량 소진율 추이	104
그림 I -7.	준공물량 소진율	105
그림 I -8.	건설사 미분양주택 관련 재고 및 미수금	106
그림 I -9.	미분양주택 및 건설사 재무건전성 추이	106
그림 I -10.	건설업 부실위험기업 비중	106
그림 I -11.	부동산PF 대출 건전성 지표 추이	107
그림 I -12.	부동산PF 대출 부실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107
그림 I -13.	공적보증 잔액 추이	108
그림 I -14.	종류별 부동산 관련 공적보증 잔액 추이	109
그림 I -15.	부동산 관련 보증의 건전성 추이	109
그림 Ⅱ -1.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자산규모	111
그림 Ⅱ -2.	업권별 자금조달·자산운용 현황	112
그림 Ⅱ -3.	부동산·건설업 대출 규모 추이	112
그림 Ⅱ -4.	업권별 연체율 추이	113
그림 Ⅱ -5.	부동산PF 관련 대출 규모 및 연체율 추이	113
그림 Ⅱ -6.	취약차주 연령별 대출 규모 추이	114
그림 Ⅱ -7.	신용대출 건전성 및 증가율 추이	114

그림 II-7.	신용대출 건전성 및 증가율 추이	114
그림 II-8.	유가증권 보유 규모 및 평가손익 추이	115
그림 II-9.	시나리오별 자기자본비율 변동	116
그림 II-10.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전이지수	117
그림 II-11.	비대면 수신 규모 및 비중 추이	118
그림 II-12.	경로별 수신 증가 속도	118
그림 II-13.	예금종류 및 규모별 추이	119
그림 II-14.	유동성 지원 여력 평가 결과	120

---

그림 III-1.	분석 개요	122
그림 III-2.	은행의 기업여신 건전성 비율	123
그림 III-3.	주요국의 기업 파산 현황	123
그림 III-4.	평균 가산금리 계산시 장·단기 산정 기간	124
그림 III-5.	가산금리 갭 추정결과	125
그림 III-6.	기업규모별 가산금리 갭 추정결과	126
그림 III-7.	수혜 기업의 가산금리 갭	126
그림 III-8.	기업규모별 취약기업 여신 비중 변화	127
그림 III-9.	잠재위험 반영 취약기업 여신 비중 추이	127
그림 III-10.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 충격 반응 경로	129
그림 III-11.	시나리오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130

---

**통계표 차례****[금융안정 상황]**

표 III-1. 금융업권 간 업권별 상호거래 규모	46
표 III-2. 금융업권 간 상품별 상호거래 규모	46

---

**[복원력]**

표 I -1. 일반은행 NSFR	68
표 III-1. 기준시한 이후 증권결제 비중	83

---

**[주요 현안 분석]**

표 I -1.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	107
-----------------------	-----

---

표 II -1. 대상기관별 상호거래 규모	116
표 II -2. 상품별 상호거래 규모	116
표 II -3. 저축은행 그룹별 수신 편중도	119
표 II -4. 중앙회 자산 운용 비중	119
표 II -5. 예금 인출 시나리오	120

---

표 III-1. 은행 잠재 신용손실 추정 결과	129
표 III-2.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	129

## 2. 부문별 담당 부서 및 집필자

부문	집필자	
작성총괄	금융안정국	이정연(안정분석팀장)
[개관]		김혜연·허 정(안정분석팀)
<b>[금융안정 상황]</b>		
I. 신용시장		
1. 신용 레버리지		정천수·이도홍·이해인(안정총괄팀)
2. 가계신용		정천수·이도홍·이해인(안정총괄팀)
3. 기업신용		편도훈·허 정(안정분석팀)
참고1. 최근 가계대출 연체율 상황 점검		노유철·이도홍·이해인(안정총괄팀)
참고2. 자영업자 부채의 취약요인 및 연체가능성 점검		김재영·신정후(안정분석팀)
II. 자산시장		
1. 채권시장	금융시장국	최강욱·김종원·지성민(채권시장팀)
2. 주식시장		김선임·이진섭(주식시장팀)
3. 부동산시장	금융안정국	박재현·정운재(안정분석팀)
III. 금융기관		
1. 은행		유재원·박서정(은행리스크팀)
2. 비은행금융기관		권윤정·남승희(비은행리스크팀)
3. 상호연계성		박지수·이영재(시스템리스크팀)
참고3.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 현황 평가 및 시사점	금융안정국 금융검사실	김자혜·홍준의·박서정(은행리스크팀) 임영주(인터넷전문은행팀)
참고4. 신 회계기준 도입이 보험회사 재무현황에 미치는 영향 및 평가	금융시장국	이영선·최 신·도지윤(금융시장연구팀)
IV. 자본유출입		
참고5. 최근의 글로벌 은행 불안이 달러화 자금 흐름에 미친 영향	국제국	손승화·윤승안·박진우·정성우(자본이동분석팀) 권나은·김동욱·이한새·김상희(국제총괄팀)
<b>[복원력]</b>		
I. 금융기관		
1. 은행	금융안정국 국제국	김자혜·홍준의(은행리스크팀) 박혜진·박상우(자본이동분석팀)
2. 비은행금융기관	금융안정국	권윤정·남승희(비은행리스크팀) 백윤아·김지은(금융규제팀)
참고6. 바젤III 규제체계 하의 주요국 완충자본제도 운용사례 및 시사점		
참고7. 국내 금융기관의 자본성증권 발행 현황 및 잠재리스크 점검		유재원·박서정·홍준의(은행리스크팀) 권윤정·안준기(비은행리스크팀)
II. 대외지급능력		
	국제국	박혜진·박상우(자본이동분석팀) 윤태영·서수경(외환회계팀)
III. 금융시장인프라		
	금융결제국	이한별·오건우(결제안정팀)
<b>[종합평가]</b>		
	금융안정국	김혜연·허 정·신정후(안정분석팀) 김혜연·허 정(안정분석팀)
참고8. SVB·CS 사태의 주요 내용과 정책당국 대응 사례 및 시사점		
참고9. 수출산업 내재 탄소배출량 현황 및 기업 취약요인		송병현(지속가능성장연구팀)
<b>[주요 현안 분석]</b>		
I. 주택시장 관련 주요 금융안정 리스크 점검		
		박재현·편도훈·정운재·허 정(안정분석팀)
II.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잠재리스크 점검		
		나성오·송수혁·남승희(비은행리스크팀) 박지수·이영재·염기주·이병호(시스템리스크팀)
III. 기업 부문 잠재 신용리스크 점검 및 국내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이도경·염기주·이병호(시스템리스크팀)

